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박경철 · 성태규 · 고승희 · 김용현 · 김진영 · 윤향희

김병준 · 전지훈 · 이홍택 · 장창석 · 목소리 · 신혜지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다양화, 중층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초국경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래 다문화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분단국가로 인해 야기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대외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부문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유입되었고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 또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들에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통합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열된 우리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포용사회 구현을 표방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과 분열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내재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남’,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도 자체적인 사회통합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선 7기 충남도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양승조,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충남도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연구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적 포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 분석과 실태분석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방안,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기존 연구자료 분석

사회통합의 현황을 이해하고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사회통합 의식조사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OECD 사회지표체계, EU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¹⁾ 등도 분석해 본 연구의 지표설정에 참고했다. 또한 사회통합, 포용사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했으며 소득, 복지, 교육, 생활, 환경 여건 등 충남도 사회통합 현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사회지표(사회조사)> 등도 참고했다.

1)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참여, 장기거주, 국적취득 접근성, 차별금지)

2) 설문조사

사회통합 정도와 인식, 그리고 정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 1) 충남도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 및 정책 요구 파악
 - 2)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 수준 및 정책 요구 파악
- 대상 지역: 충남도내 각 시군
- 조사 기간: 2020년 5월 20일~6월 30일(*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조사 기간 연장)
- 조사 대상: 충남도민 1,050명
- 조사 방법: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전문리서치업체에 의뢰해 1대1 면접을 통한 조사

[표 1] 사회통합관련 설문조사 내용

부문	세부 조사 내용
사회포용	우리나라 및 충남의 통합수준, 국민 및 도민으로서 자긍심, 이주민 포용수준 및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사회신뢰	우리나라 및 충남, 주변 이웃의 신뢰수준, 이주민 신뢰수준, 우리나라 기관 신뢰도, 사회신뢰도를 위해 필요사항 등
사회참여 및 지원	우리나라 및 충남의 사회참여도, 충남 이주민의 사회참여도,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충남 이주민의 지원정도, 기관 및 단체의 참여 수준, 사회참여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사항 등

- 조사 결과

우리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통합정도는 6.2점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자긍심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사회통합과 국민 그리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시 된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용수준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는 약 6.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는 약 5.32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포용정도에 있어서는 지역적이고 물리적 여건보다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제도를 수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에 있어서도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의 신뢰도 및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도 모두 6점 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이웃과 충남지역사회, 우리사회 전체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신뢰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의 성격이 상이해 신뢰도 향상 정책이 필요시 된다.

사회참여수준 또한 다른 영역과 비슷한 6점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참여도는 4.6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화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포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 및 포용 등에 대한 개념과 학습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사회 및 충남도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제도 및 문화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이주민 대상별 사회적응을 위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합 및 포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포용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주민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신뢰하는 주체로서 주민들이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신뢰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들이 필요시 된다. 일곱째,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이주민들을 위한 참여방식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의 사회참여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방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

4) 인터뷰조사

본 연구는 충남도의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인터뷰조사 대상 및 방법이다.

- 대상1: 사회통합, 포용사회 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이주민 관련 지역활동가 등
 - 대상2: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 실시 방법: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개별 혹은 그룹 인터뷰 실시)
 - － 인터뷰조사는 대면 인터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인터뷰조사가 어려울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인터뷰도 병행
 - 인터뷰 대상 인원: 분야별 10~15명(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관계자)
- * 주로 차별과 배제 차원에서 조사

[표 2]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내용

대분류	가치 통합 영역	체제 통합 영역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중분류	사회적 관계, 다문화수용	노동형태, 경제활동	시민권
소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소속감 ·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 정체성 인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기회, 소득 수준 · 근로 환경, 고용 안정성 · 직업교육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 인식 · 정치참여 형태 · 정보 접근성

2. 결론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연구와 정책동향, 사례분석,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인식조사,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인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충남도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기본방향은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방안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충남도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기본 정책 방향	주요 정책 방안	세부 정책과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 사회통합지표의 필요 논리 강화	-
	· 사회통합지표 구성 및 개발	-
	· 사회통합지표 활용 및 관리	① 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② 사회통합지표의 조사 및 운영 방안 강구 ③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도민의 인식전환 유도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① 충남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으로서의 다문화이해 ② 국제결혼이주자의 충남도 사회통합으로의 노력 ③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진입 ③ 한국어 교육 강화 ④ 기본적인 법률, 제도에 대한 교육 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
	·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정착초기 생활비 지원 ② 주거비 지원 방안 마련 ③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 ④ 기본적 생활환경 개선
	·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 실행 ②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③ 지역 차원의 다문화축제 개최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강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①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선주민-북한이탈주민 간 상호교류프로그램 확대
	·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내실화 ② 법률·경제·재무교육 실시
	·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지역사회 모임활동 및 참여 기회 보장 ② 북한이탈주민 자조단체 지원 및 공생적 정책 마련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	·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① 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의 법·제도 마련

	· 주체별 역할 강화	①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②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③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 단계별 실행 방안	① 충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②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④ 외국인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동안 사회통합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이뤄져 왔다. 사회통합지표(지수)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하고 한 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런 점에 본 연구는 충청도라는 지방정부를 사례로 본 연구의 연구진이 개발한 사회통합지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지는 외국인이주민, 그리고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야기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및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의 개념 정립의 미흡이다. 사회통합의 개념은 서구에서 가져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social integration,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으로 표현되듯이 그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크게 사회통합, 사회 포용, 사회 참여와 지원으로 규정해 충청도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했으나 여전히 사회통합의 개념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통합의 범위의 한계이다. 한 사회의 갈등양상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연구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 설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이주민은 다문화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설문조사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통합 대상 집단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외국인이주민은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부족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적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 사회통합은 그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을 거론해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구체성이 부족했다. 충남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1) 문헌 및 언론자료 분석	4
2)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 분석	4
3) 설문조사	4
4) 인터뷰조사	7
4.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8
1) 내용적 범위	8
2) 공간적 범위	8
3) 시간적 범위	9
5. 분석틀	10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	11
1. 개념 정의 및 의의	11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의	11
2) 의의 및 필요성	13
3) 사회통합의 대상	17
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17
2.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논의	19
1) 국내 사회통합지수	19
2) 국외 사회통합지수	25
3) 한국인의 사회통합인식 실태	28
4)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	30
3. 분야별 연구 동향	31
1) 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연구 및 논의 동향	31
2)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논의 동향	37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2

제3장 사회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43

1. 사회통합의 연구 및 정책 동향	43
1) 사회통합의 정책 연구 경향	43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과 연구	44
3)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	46
2. 충청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52
1)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52
2)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53
3. 국내 지자체 사례 분석	54
1) 서울시	54
2) 전남도	63
4. 국외 사례	67
1)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이주민 정책 사례	67
2)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76
3)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	84

제4장 충청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분석 88

1. 충청남도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의의와 구성	88
2. 충청남도 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89
1) 응답자 일반사항	89
2) 사회포용	91
3) 사회적 신뢰	97
4)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103
3. 요약 및 시사점	110

제5장 충청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조사 분석 113

1. 충청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조사 개요	113
2. 충남 외국인근로자 실태 분석	114
1) 현황	114
2) 심층면담(인터뷰) 분석	115
3) 실태와 문제점	127
3. 충남 결혼이주자 실태분석	128
1) 현황	128

2) 심층면담분석	130
3) 실태와 문제점	138
4. 충남 북한이탈주민 실태 분석	139
1) 현황	139
2) 인터뷰조사 분석	141
3) 실태와 문제점	165
제6장 충청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69
1. 기본 방향	169
2. 세부 정책 과제	171
1)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171
2)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176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185
제7장 충청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향	190
1.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	190
1) 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190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법·제도 마련	191
2. 주체별 역할과 과제	192
1)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192
2)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93
3)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193
3. 단계별 실행 방안	194
1) 충청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194
2) 충청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96
3) 충청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199
4) 외국인이주민을 충청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200
제8장 요약 및 결론	202
1. 연구 요약	202
2. 결론	205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7
부 록	214

표 목 차

[표 1] 사회통합관련 설문조사 내용	III
[표 2]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내용	V
[표 3] 충청남도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VI
[표 1] 사회통합 핵심지표 및 세부지표 설정 방법	6
[표 2] 사회통합관련 설문조사 내용	6
[표 3]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내용	7
[표 4] 사회통합의 의미와 장애요인	15
[표 5] 사회통합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	16
[표 6] 주요 사회통합 지표	20
[표 7]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	21
[표 8] 국민통합지표체계	22
[표 9] 사회통합지수체계	24
[표 10] 사회통합지수 지표	24
[표 11] 사회통합 지표(베델스만 재단, 2013)	26
[표 12] 사회통합지표(Americas Quarterly, 2012)	27
[표 13] 구로구 다문화 실태조사	35
[표 14] 북한이탈주민 현황	38
[표 15]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구성	46
[표 16] 서구 국가별 사회통합의 정의	47
[표 17] 국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기별 정책 목표	48
[표 18] 중앙부처 사회통합정책 사업 및 예산(2017년)	50
[표 1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51
[표 20] 충청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53
[표 21] 충청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54
[표 22] 서울시 포용도시 관련 주요정책	55
[표 23]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58
[표 24] 서울시 이주민 대상 정책 현황(2020)	60
[표 25] 서울시 이주자 지원조직 현황	61
[표 2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2020년)	63
[표 27] 2018년도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65
[표 28] 2005년 이민법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	70

[표 29] 독일 이주민정책 거버넌스	73
[표 30]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75
[표 31] 프랑스 시기별 이민정책 주요 내용과 변화	81
[표 32] 일본의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	85
[표 33] 일본 지역사회의 외국인 지원 내용	87
[표 34] 사회통합 인식조사 문항구성	89
[표 35] 응답자 일반사항-1	90
[표 36] 응답자 일반사항-2	90
[표 37]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91
[표 38] 부문별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92
[표 39] 이주민 포용수준	93
[표 40] 부문별 이주민 포용수준	94
[표 41]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95
[표 42] 부문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95
[표 43] 부문별 이주민 포용의 중요정도	97
[표 44] 사회적 신뢰정도	97
[표 45] 부문별 사회적 신뢰정도	98
[표 46] 이주민 신뢰수준	99
[표 47] 부문별 이주민 신뢰수준	100
[표 48] 주요기관 신뢰수준	101
[표 49]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102
[표 50] 부문별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102
[표 51] 사회참여도 수준	103
[표 52] 부문별 사회참여도 수준	104
[표 53]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105
[표 54] 부문별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106
[표 55] 주요단체에 참여정도	107
[표 56] 사회참여와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107
[표 57] 부문별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	108
[표 58] 부문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109
[표 59]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114
[표 60]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현황	115
[표 61]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 기본사항	116
[표 6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117
[표 63] 외국인근로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119
[표 64] 이웃과의 관계	120

[표 65] 이웃에 대한 신뢰	121
[표 66]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및 구직 시 어려운 점	122
[표 67]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123
[표 68] 임금 차별 경험	124
[표 69] 업무의 난이도 등 차별 경험	126
[표 70]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128
[표 71]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	130
[표 72] 조사대상 결혼이주자 기본사항	131
[표 73] 결혼이주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132
[표 74] 결혼이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이웃과의 관계	134
[표 75]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135
[표 76]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139
[표 77]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140
[표 78]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이해관계자 기본사항	141
[표 7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	142
[표 80]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143
[표 81]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144
[표 82]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한지	145
[표 83] 북한이탈주민 채용 과정에 경험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	146
[표 84]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취업과정 또는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는지	147
[표 85]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참여 또는 관련단체 활동이 어려운 점	148
[표 86]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지	149
[표 87]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기본사항	150
[표 88]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활동 참여 경험	151
[표 89] 나는 이곳에 소속 혹은 이곳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152
[표 90] 주변 이웃들은 나를 이웃으로 인정	154
[표 91] 나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	155
[표 92]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생각	157
[표 93]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58
[표 94] 취업 과정에서 차별 경험 시 차별 내용	160
[표 95] 취업 이후 차별 경험 내용	161
[표 96] 북한이탈주민이기에 어려운 일 또는 위험한 일 경험 여부	162
[표 97] 남한에서 투표 경험 여부	162
[표 98] 남한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 여부	164
[표 99]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의 도움 여부	164
[표 100] 충남도 이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정도	166

[표 10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 및 이유	166
[표 10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의식	167
[표 103]	남한에서 취업 시 어려운 점	167
[표 104]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68
[표 10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해결문제	168
[표 106]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충남도 사회통합방안	185
[표 107]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195
[표 108]	충남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198
[표 109]	충남도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206
[표 110]	충남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도	252
[표 111]	국민으로서 자긍심	253
[표 112]	충남 도민으로서 자긍심	254
[표 113]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255
[표 114]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256
[표 115]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257
[표 116]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258
[표 117]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259
[표 118]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260
[표 119]	허용수준 (1)결혼이주자	261
[표 120]	허용수준 (2)외국인근로자	263
[표 121]	허용수준 (3)북한이탈주민	265
[표 122]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1)한국에서 출생	267
[표 123]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2)한국인 부모	268
[표 124]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3)생애 대부분 한국 거주	269
[표 125]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4)한국어 수준	270
[표 126]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5)한국 문화의 이해 및 수용	271
[표 127]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6)한국의 법, 제도 존중	272
[표 128]	우리 사회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	273
[표 129]	동의정도_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274
[표 130]	동의정도_충남의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275
[표 131]	동의정도_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이웃을 신뢰한다	276
[표 132]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277
[표 133]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278
[표 134]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279
[표 135]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280
[표 136]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281

[표 137]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282
[표 138] 기관 신뢰도 (1)중앙정부	283
[표 139] 기관 신뢰도 (2)충청남도	284
[표 140] 기관 신뢰도 (3)국회	285
[표 141] 기관 신뢰도 (4)지방의회	286
[표 142] 기관 신뢰도 (5)법원	287
[표 143] 기관 신뢰도 (6)검찰	288
[표 144] 기관 신뢰도 (7)경찰	289
[표 145] 기관 신뢰도 (8)종교단체	290
[표 146] 기관 신뢰도 (9)시민단체	291
[표 147] 기관 신뢰도 (10)교육기관	292
[표 148] 기관 신뢰도 (11)의료기관	293
[표 149] 기관 신뢰도 (12)언론	294
[표 150] 우리 사회를 신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95
[표 151]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 참여도	296
[표 152] 충남 도민의 사회 참여도	297
[표 153]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1)결혼이주자	298
[표 154]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2)외국인근로자	299
[표 155]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3)북한이탈주민	300
[표 156]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301
[표 157] 충남에서 경제적·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302
[표 158]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1)결혼이주자	303
[표 159]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2)외국인근로자	304
[표 160]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3)북한이탈주민	305
[표 161] 기관 및 단체 참여도 (1)정당 등 정치단체	306
[표 162] 기관 및 단체 참여도 (2)종교단체	307
[표 163] 기관 및 단체 참여도 (3)시민단체	308
[표 164] 기관 및 단체 참여도 (4)문화단체	309
[표 165] 기관 및 단체 참여도 (5)친목단체	310
[표 166] 기관 및 단체 참여도 (6)행정기관	311
[표 167] 사회참여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12
[표 168]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13

그림 목 차

[그림 1] 충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진행 절차	5
[그림 2] 연구진행 흐름도	10
[그림 3] 사회통합의 종합적 정의	13
[그림 4] 그림 다문화수용성 구성 개념	34
[그림 5] 북한이탈주민관련 발표연도별 연구 동향	40
[그림 6]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2018년)	64
[그림 7] 2018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	65
[그림 8] 사회통합모델 비교	69
[그림 9] 일본의 외국인 지원 체계	86
[그림 10] 충남도 사회통합정책 기본 방향	171
[그림 11] 충남도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196
[그림 12]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20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오히려 적당한 갈등과 분열은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하고 고질적이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데에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 국가와는 달리 오랫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이후 해방과 함께 시작된 좌우 이념 분열, 남분 분단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극심한 사상 통제와 억압 등 인권이 유린되어 왔고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어 왔다. 197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 문제, 부자와 빈자 간 빈부 격차문제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특정지역 출신의 권력집단이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산업 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왔다. 지역 간 갈등은 이념 간 갈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박영민, 2013) 이러한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가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압도적으로) 높고 출산율이 가장(압도적으로) 낮은 것도 사회불평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불평등 문제는 이제 시대의 핵심적 화두이자 과제가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다양화, 중층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초국경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 다문화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분단국가로 인해 야기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과 무역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국경 없는 연결사회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문제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대외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부문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유입되었고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 또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들에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통합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열된 우리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포용사회 구현을 표방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사회통합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국내외 많은 연구 및 정책기관에서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부터 <사회통합 의식조사>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사회통합 관한 지수 연구(노대명 외, 2009; 정해식 외, 2016)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실태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 OECD에서는 매년 발간되는 OECD 사회지표인 <Society at a Glance>에서 ‘사회통합’을 중요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EU에서는 2007년부터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발표를 통해 각국의 이민자 정책 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충남도 또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갈등과 모순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해안시대를 맞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들의 반발,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갈등,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도농 간 소득격차로 인한 불만,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북부 산업지대와 남부농업지대 간 발전격차로 인한 주민의 불만, 화력발전소와 폐광산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산업폐기물 등 유해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등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내재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남’,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도 자체적인 사회통합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선 7기 충남도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양승조,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충남도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연구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적 포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 분석과 실태분석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방안,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및 내용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통합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헌 및 언론자료 분석

현재까지 사회통합 연구는 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 ‘사회통합’의 개념 설정과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기관 중에서도 최근 연구를 많이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등을 활용해 사회통합지표와 분석 방법을 참고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통합 통계자료도 활용했다. 그 외 많은 보고서와 논문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고했다.

2)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 분석

사회통합 현황을 이해하고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사회통합 의식조사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OECD 사회지표체계, EU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²⁾ 등도 분석해 본 연구의 지표설정에 참고했다. 또한 사회통합, 포용사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했으며 소득, 복지, 교육, 생활, 환경 여건 등 충남도 사회통합 현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사회지표(사회조사)> 등도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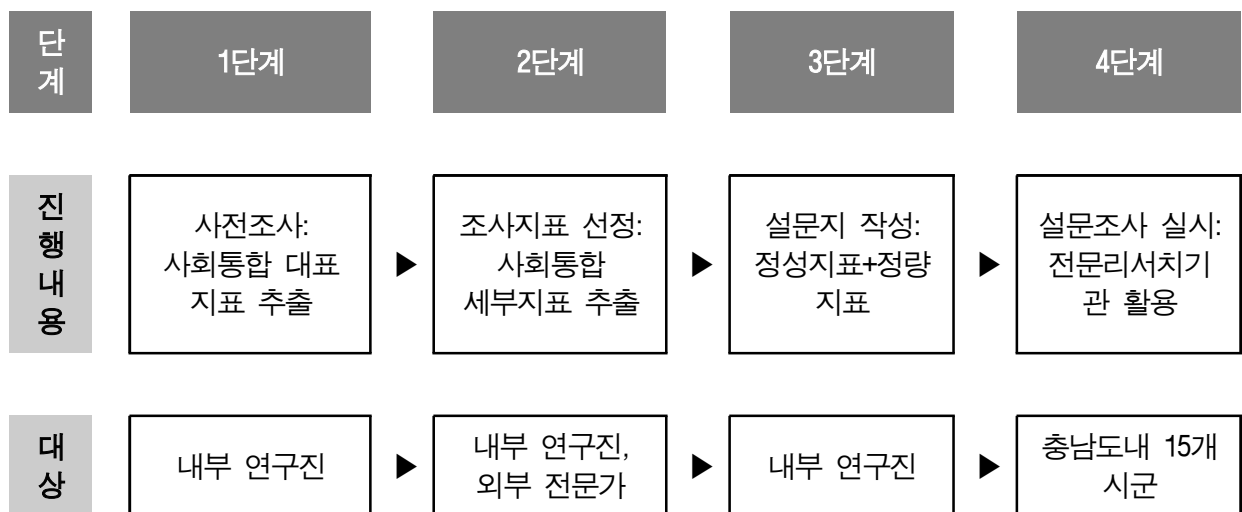
3) 설문조사

사회통합 정도와 인식, 그리고 정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참여, 장기거주, 국적취득 접근성, 차별금지

- 조사 목적
 - 1) 충청도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 및 정책 요구 파악
 - 2)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 수준 및 정책 요구 파악
- 대상 지역: 충청도내 각 시군
- 조사 기간: 2020년 5월 20일~6월 30일(*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조사 기간 연장)
- 조사 대상: 충청도민 1,050명
- 조사 방법: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전문리서치업체에 의뢰해 1대1 면접을 통한 조사

[그림 1] 충청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진행 절차



[표 1] 사회통합 핵심지표 및 세부지표 설정 방법

핵심 지표	세부 지표안(정량 및 정성 지표)	방법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이동, 상대적/절대적 박탈,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통합역량, 사회적 관계 등	정부 신뢰, 국가에 대한 소속감, 대인/이웃 신뢰, 법률 신뢰, 공동체 신뢰, 사회 참여, 정치에 관심, 정치에 대한 결사, 투표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기부/자원봉사, 경제적 기회, 사회적 기회, 사회적 형평, 소득 격차, 계층 이동, 가치관(성장과 분배), 취약계층 지원, 다양성 수용, 이주민 차별, 북한 이탈주민 차별, 이념대립, 종교 갈등, 법과 질서 유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노사분규 정도, 환경 분쟁, 세대 갈등, 지역불균형발전, 교육, 부패 정도, 성차별, 표현의 자유 등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진 회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3개 핵심 지표 선정: 사회포용, 사회신뢰,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핵심지표별 세부 지표 선정: 아래 [표 2] 참조	내부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 평가

[표 2] 사회통합관련 설문조사 내용

부문	세부 조사 내용
사회포용	우리나라 및 충남의 통합수준, 국민 및 도민으로서 자긍심, 이주민 포용수준 및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사회신뢰	우리나라 및 충남. 주변 이웃의 신뢰수준, 이주민 신뢰수준, 우리나라 기관 신뢰도, 사회신뢰도를 위해 필요사항 등
사회참여 및 지원	우리나라 및 충남의 사회참여도, 충남 이주민의 사회참여도,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충남이주민의 지원정도, 기관 및 단체의 참여 수준, 사회참여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사항 등

4) 인터뷰조사

본 연구는 충남도의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인터뷰조사 대상 및 방법이다.

- 대상1: 사회통합, 포용사회 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이주민 관련 지역활동가 등
 - 대상2: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 실시 방법: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개별 혹은 그룹 인터뷰 실시)
 - － 인터뷰조사는 대면 인터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인터뷰조사가 어려울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인터뷰도 병행
 - 인터뷰 대상 인원: 분야별 10~15명(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관계자)
- * 주로 차별과 배제 차원에서 조사

[표 3]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내용

구분	가치 통합 영역	체제 통합 영역	
대분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중분류	사회적 관계, 다문화수용	노동형태, 경제활동	시민권
소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소속감 ·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 정체성 인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기회, 소득 수준 · 근로 환경, 고용 안정성 · 직업교육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 인식 · 정치참여 형태 · 정보 접근성

4.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1) 내용적 범위

(1) 총론 부분

사회통합 연구는 크게 주제 중심(불평등, 이념갈등, 차별과 배제 등)과 대상 중심(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빈곤층 등)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대상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의 총론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인식과 수준 그리고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각론 부분

본 연구의 각론에서는 사회적 소외 및 배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³⁾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초 사회통합 대상으로 장애인도 고려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이주민이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는 배제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포괄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자는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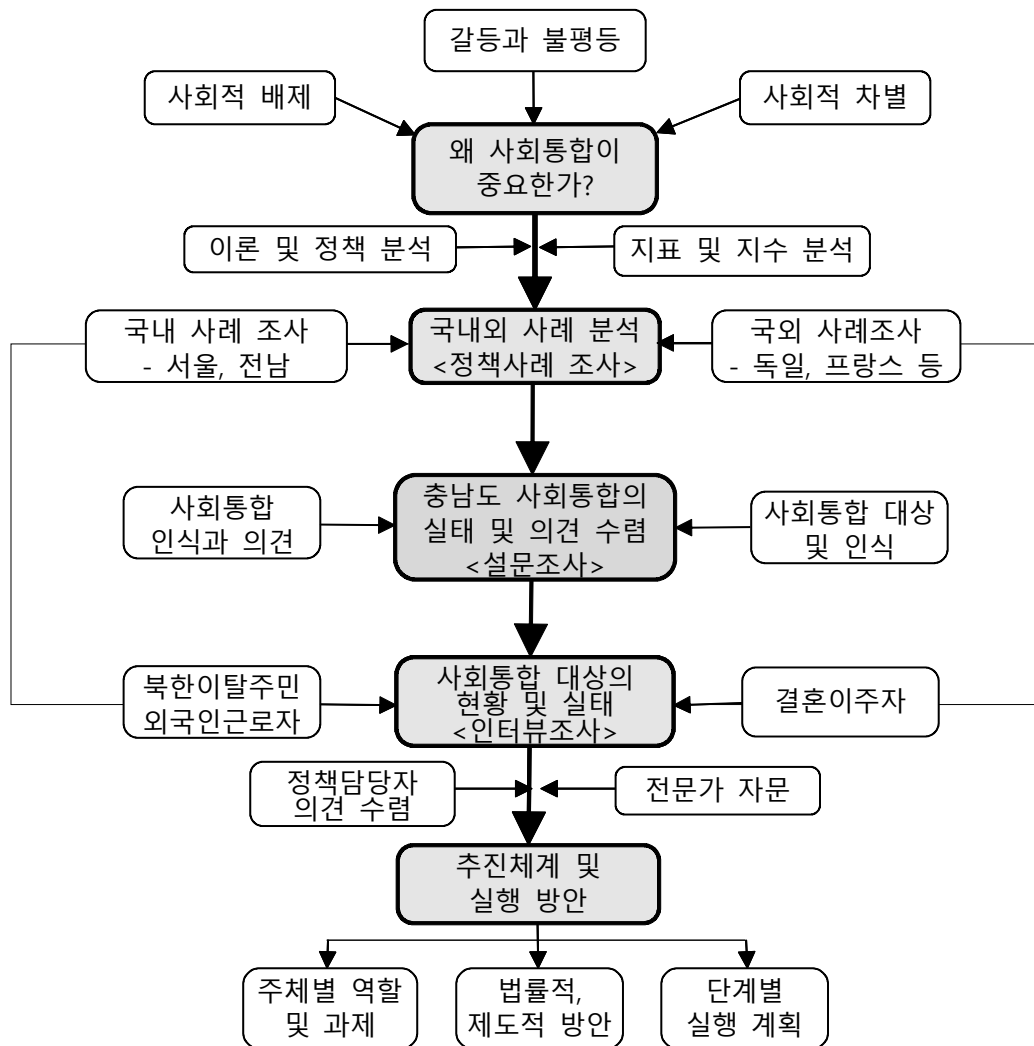
3) 주영기(2009)는 사회통합의 구체적 과제와 대상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시대적 과제는 소득격차, 이념과 사상의 대립, 편견·선입견, 신체적 차이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합의 대상은 소득격차가 사회적 차이로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 신체적 결함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장애인의 문제, 이념적 차이로 나타나는 탈북자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문제 등이다.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터뷰조사는 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정책과제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포괄한다.

5. 분석틀

본 연구는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기부터 시작해 제9장 결론까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2] 연구진행 흐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

1. 개념 정의 및 의의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의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는 개념을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이다. 학자마다 규정하는 정의가 다르고 관련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의 개념에서 온 용어이지만 영어에서도 하나의 용어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회통합’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영어에서는 사회통합을 좀 더 세분화해 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용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용어는 ‘사회통합’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주디스(Judith, 1996)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하여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부와 소득의 격차를 축소하고, 신체적 차이와 이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주영기, 2009 재인용) 즉, 사회통합은 개인, 집단, 민족, 국가의 단위가 억압적 구조의 틀 속에서 경직화 편견·선입견 등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분열을 극복하여 이들을 하나의 기능 및 동질 체계로 편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자유로운 사유와 휴머니즘 그리고 열린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창의적으로 결합연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창조해 가는 사회변동의 개방적·역동적 양태를 말한다.(주영기, 2009)

유엔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CA)에 따르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송은화·설진배, 2013)

송은화·설진배(2013)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Lockwood(1964), Habermas(1981), Giddens(1984), Kreckel(1999) 등의 연구를 토대로 전체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은

미시적 차원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거시적인 차원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individuals)이나 집합적 행위자(actors)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말하고,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은 한 사회나 사회체계들의 하위체계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박영민(2013)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역량과 그 결과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이념적 갈등과 지역적 갈등을 꼽았다. 그는 이념적 갈등은 해방 이후 좌우의 분열로 인한 대립, 이후 분단과 냉전의 지속으로 정치적 균열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역적 갈등은 소수 정치엘리트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실리를 독차지하고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앞서 실시한 노대명 외(2009)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용어로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등 세 가지를 들며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 개념인 social inclusion은 social exclusion의 상대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되는 개인과 집단을 포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포용사회’는 영어로 ‘inclusive society’로 번역된다. 두 번째 social integration은 사회통합을 영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개념으로 보통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cial cohesion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귀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회통합과 관련 한 용어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확정된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재열 등(2014)은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연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부하적이며 국제비교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잠재적 갈등소지와 사회적 통합역량 간의 비율로 개념화하였다. 즉, 갈등소지가 많고 통합역량이 적다면 사회통합은 어려워지는 반면, 갈등소지가 많더라도 통합역량이 풍부하다면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 갈등은 그 수준에 따라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념·문화적 자원의 양극화 정도로 나누었고, 사회통합역량은 복지와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체계 역량,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역능화할 수 있는 생활세계역량,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의 작동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역량으로 개념화하였다.

$$\text{사회통합} = \frac{\text{사회적 통합역량}}{\text{잠재적 갈등소지}} = \frac{\left(\begin{array}{c} \text{체계역량} \\ \text{복지제공역량} \\ \text{회복탄력성}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생활세계역량} \\ \text{사회적 역능성} \\ \text{정치적 역능성}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규범역량} \\ \text{공정성} \\ \text{투명성} \end{array} \right)}{\left(\begin{array}{c} \text{경제자원 양극화} \\ \text{소득, 고용,} \\ \text{자산, 빈곤}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사회자원 양극화} \\ \text{사회적 거리,} \\ \text{이동, 이혼, 자살}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이념 양극화} \\ \text{신뢰, 관용, 가치관,} \\ \text{탈물질주의} \end{array} \right)}$$

[그림 3] 사회통합의 종합적 정의

자료: 이재열 외(2014), p.1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역량과 그 결과 상태”로 규정짓고자 한다.

2) 의의 및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 차이와 배제가 고착화 내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통합의 의의와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주영기(2009)는 사회통합의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사회적 의미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기본사상으로 ‘조화 속의 개성’을 추구하고 ‘동질 속의 이질’을 살리는 것인데 이러한 화이부동의 사상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

평등을 극소화하는 사회정의를 촉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약자가 지위의 상승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제적 의미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즉, 사회통합은 시민적 연대감과 협력을 증진시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암묵적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힘은 기회와 능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영기(2009)는 또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마음의 분열’, ‘정의의 부족’, ‘반 선진화 사상’을 들었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마음의 분열’이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수정주의적 좌파적 역사관이며, 수정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의 역사였고 이러한 좌파적 역사관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과 반목의 원인이라는 관점이다.

두 번째, ‘정의의 부족’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나타난 인식의 오류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극단적 이기주의, 부정한 방법이라도 출세만 하면 된다는 도덕 불감증, 법치주의 무시, 불법과 탈법의 일상화, 공권력의 무력화, 단지 예산 증액만을 통한 빈곤해소정책 등과 같은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반 선진화사상은 연고주의에 의한 정실주의, 결과 평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문화에 바탕을 둔 편견과 차별 등을 말한다.

주영기의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의 관점은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통합’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진보와 보수에서 모두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들 또한 사회통합에 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관한 시각도 달라서 합의에 이르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영기가 앞서 사회통합의 사회적 의의와 경제적 의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이부동(和而不同) 사상과 연대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차이보다는 공동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사회통합의 의미와 장애요인

구분	부문	내용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적 의미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기본사상으로 ‘조화 속의 개성’ 추구하고 ‘동질 속의 이질’을 살리는 것
	경제적 의미	-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치적·경제적 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 - 시민적 연대감과 협력을 증진시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암묵적 생산요소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마음의 분열	-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수정주의적 좌파적 역사관: 반 민중, 반 민주, 반 민족의 역사관
	정의의 부족	-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잘못, 즉 인식의 오류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 극단적 이기주의, 출세지상주의, 법치주의 무시, 불법과 탈법의 일상화, 공권력의 무력화, 예산 증액만을 통한 빈곤해소정책
	반 선진화 사상	- 연고주의에 의한 정실주의, 결과평등주의, 배타적 민족 중심주의

출처: 주영기(2009)

황준성(2009)은 현재 우리사회는 고용이 양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면서 양극화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성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편익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성장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난 효과적인 사회정책으로 ‘인본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인본적 자유주의’의 주된 개념은 자유주의에 기초를 하되 개인을 위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자유주의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본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사회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이 성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며 동시에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이념이다.

황준성의 관점은 앞의 주영기의 관점과는 상반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도 건강한 공동체 자본주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정책을 통한 분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박순일(2009)은 한국사회의 갈등이 사회와 경제의 발전 격차를 주요 배경으로 이해의 대립과 이념의 갈등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다면, 사회통합의 방향은 사회갈등의 사안별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발생의 배경을 개선하여 갈등 발생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사회통합 논리의 제시했다. 첫째, 국가의 비전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정책 갈등과 이를 둘러싼 이념의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발전격차의 축소는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인 각 이해 관계 대상들 사이의 대립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서도 필요하다. 즉, 사회 발전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 혹은 악화시키느냐는 사회발전이 각 구성원 간의 이익을 어떻게 귀착시키느냐에 의존한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방안, 추진전략,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순일은 사회통합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표 5] 사회통합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

부문	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상생	기본정책	① 국민의 경제활동은 보다 자유롭게, 기본생활보장은 보다 확실하게 하여 사회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성장력 제고 ② 사회적 갈등의 주도자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꿈과 이익이 포함되는 비전 제시 ③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의 전환 ④ 국가비전을 추진할 리더십 강화
	경제정책	① 1998년 이후 한국의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적 요인보다는 산업 및 경제적 요인이 중요함으로 고용 및 임금구조의 개선 추진 ② 구조조정의 경제정책에 의해 이익을 본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성장과 형평의 가치 구현 ③ 증대되는 노인들이 분배의 하위계층에 물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스스로 안정화시킬 고용정책 강화 ④ 노인의 소비수요를 충분한 양과 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발
	사회정책	① 인본주의 실현으로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 빈곤문제 해결 ②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주의의 실현 ③ 성장과 분배의 상생을 위한 고용 안정화 ④ 민간 복지활동의 활성화
균형	-	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② 법과 규칙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하에 '이해조정위원회' 에서 조정

출처: 박순일(2009)의 내용을 요약 정리

3) 사회통합의 대상

사회통합의 대상은 크게 물질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차별, 신체적 차이로 인한 차별, 문화적·민족적 차이로 인한 차별로 구분될 수 있다.(주영기, 2009) 먼저, 물질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대표적인 차별은 빈곤문제이다. 빈곤은 개인의 사회적 생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인 불평등의 문제도 근본적 원인은 물질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차이로 인한 대표적인 차별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라는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많은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민족적 차이로 인한 사례는 인종, 민족, 종교, 문화, 체제 등 다양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자유로운 경제교류체계 하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문제, 북한체제의 불안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등은 사회통합의 중요 대상이 되고 있다.

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타 지역, 타 국가에서 일(노동)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을 가리키지만 보통은 타 국가에서 일(노동)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을 가리킨다. 법률적으로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은 없고 '외국인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비전문·단순노무 근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 행정적·실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된다.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C-4(단기취업),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홍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현재 실질적인 “노동”을 하고 자신의 삶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지자체 조례에서는 해당 지역에 등록해야 외국인근로자로 인정을 한다. 예를 들어, 당진시 관련 조례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란 당진시에 외국인 등록한 근로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결혼이주자의 개념

타 국가에서 결혼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을 가리킨다. 보통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으로도 많이 쓰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결혼이민에 해당하는 자는 ① 국민의 배우자, ②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자는 상기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인 자로 정의한다.

4)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근로는 체류자격 B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정한 조건에 의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그 외의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외에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실향민, 귀순자, 새터민, 탈북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한다.

2.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논의⁵⁾

1) 국내 사회통합지수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는 2000년대 말 들어 본격화 되었다. 노대명 등 (2009)은 기존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검토하여 OECD의 사회지표와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지표 (Social Inclusion Indicators)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과 아동, 근로 빈곤층 등 해당하는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념적 구성 과정을 거친 이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 선정 시 각 영역별로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통합지표의 선정은 대표성과 타당성, 포괄성, 비교성, 분해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표성과 타당성은 사회통합과 저해되는 현상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성은 사회적 상태와 대응정책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교성은 지표를 통해 국가의 실태 파악과 타 국가와 비교가능성이고 분해성은 집단의 특성 및 차이가 나타나도록 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5)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등을 참고해 재정리.

사회통합 분석을 위한 단위 지표로는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정책 영역의 주요 집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통합의 영역과 차원, 그리고 21개의 대표적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6] 주요 사회통합 지표

	절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	주요 집단	주요 지표
소득	빈곤	소득격차 중산층비중 감소	노인, 아동 근로빈곤층	빈곤율 5분위 소득배율 지니계수
금융	신용불량	고금리 부담 상환연체	고부채 실업자 신용불량자	고용률 실업률 임시일용직 비율
고용	실업자	비정규직 증가 임금격차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가계대출 금리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불량자 비율
교육	학교미진학 중도탈락	사교육비 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출 비중 학력별 임금격차 중도탈락률
건강	의료소외계층 주요 질환 사망	의료비 부담	건보 체납자 빈곤층 비수급자	의료소외계층 비율 주요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과부담 가구율
주거	주거상실	주거비 과부담 자산격차	노숙자 저소득층 월세자	5분위 재산배율 주택전세가격지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율
가족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자본 격차	저소득 단독가구	이혼율 자살률 사회적 연계망

자료 : 노대명 외(2009)의 내용을 재구성

이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연구로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통합성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지수는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를 나타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반적인 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회통합 지수가 낮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강신욱 외(2012)의 연구는 노대명(20209)의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발굴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노대명(2009)의 연구를 발전시켜 인구학적 요인들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 되는 위치 등에 따른 집단으로 분석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사회통합을 상태(state)와 조건(conditions)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상태 지표를 의식 지표와 행위 지표로 구분하고, 조건 지표를 삶의 영역별(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상태지표는 사회통합의 주관적 측면과 사회적 참여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건지표는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요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종합지수 작성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지표체계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측정데이터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사회통합개념과 지표구성을 바탕으로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강신욱 외(2012)의 연구는 지수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표선정 시 측정데이터의 확보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 선행 연구들이 사회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면, 강신욱 외(2012)의 연구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중요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강신욱 외(2012)는 OECD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지수 값보다는 비교 국가 군에서의 위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즉 결과의 해석에서 OECD 국가 중 각 영역별 사회통합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표 7]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

영역		지표
상태	사회적 결속력	선거참여, 선거 외 참여, 정치적 관심, 사회참여, 집단 간 관계,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조건	사회적 안정성	1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1인당 CO ₂ 배출량,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형평성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공공의료 비지출 비중, 공공사회지출 비중

자료 : 강신욱 외(2012)의 내용을 재구성

조병구 외(2015)는 OECD 회원국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위해 국민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을 사회포용의 하위영역으로 두고 장용석 등(2011)의 ‘공정사회지표’체계에서 자유와 민주, 안전과 보호, 국제사회 참여, 국제협력 등의 영역을 ‘제도기반’이라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민통합에서 국민의 개념을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지향성 개념으로 제시함에 따라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가입률 등과 같은 지표를 반영하고 있어 ‘통합’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연구의 지표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축에서 환경을 제외하고, 제도를 반영하였다. 이는 국민통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통합지표는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경제 및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체계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교차 부분은 ‘사회포용’이라 칭하고, 사회영역은 ‘사회자본’, 사회와 제도와의 교점은 ‘제도기반’으로 정리하였다. 국민통합지표체계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경제 및 제도의 관점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국민통합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정책적 활용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표 8] 국민통합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사회포용	기회균등	경제적 기회	남녀 고용격차
		사회적 기회	남녀 임금격차
	형평	경제적 형평	공교육지출 비율
			지니계수
		사회적 형평	취학률
			노인부양비
			young이 old 부담 느끼는 정도
		정보격차	인터넷 사용자 비율
	안전	경제적 안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실업률
		사회적 안전	임시직 근로자 비율
			도로사망률
		심리적 안전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 안정감

사회자본	관용	대인 관용	타인에 대한 관용
		다문화 관용	다문화에 대한 관용
	신뢰	대인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대기관 신뢰	기관 신뢰
		대외국인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기부		Helping others	
제도기반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언론자유
	법질서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지수
	정부역량	집행	정부효과성
		규제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적연금지출 비중
		보건의료	복지지출액 비중
	글로벌 기여	국제협력	글로벌 공공재 기여
개발협력		ODA비율	
국제환경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자료: 조병구 외(2015)의 내용을 재구성

이재열 등(2014)의 연구에서는 앞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잠재적 갈등소지와 사회적 통합역량 간의 관계로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이를 지수화하였다. 잠재적 갈등은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념·문화적 양극화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역량은 체계, 생활세계, 규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갈등의 잠재적 원천은 경제적 자원에서의 양극화, 관계 수준에서의 양극화, 이념이나 문화 수준에서의 양극화로 규정하였고 사회적 통합역량은 공식적인 체계역량과 실질적인 생활세계 역량과 규범역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체계역량은 복지역량과 회복탄력성 증대 역량 등으로 규정하고, 생활세계 역량은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역능화(신뢰, 자유, 공정성 등)로 측정하였으며 규범역량은 규칙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별 설문조사 자료와 거시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화를 시도하였으며 사회통합수준에 대한 비교를 위해 지표의 활용 범위가 넓고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표 9] 사회통합지수체계

구분(가중치)	조작화(가중치)	
잠재적 갈등 소지	경제적 양극화(33%)	지니계수
	사회적 양극화(33%)	불신 비율
	가치 양극화(33%)	비혼합형 비율
사회적 통합 역량	체계역량(33%)	공공교육지출(33%), 고등교육이수율(33%), 공적사회지출(33%)
	생활세계역량(40%)	언론자유(25%), 여성불평등지수(25%), 투표율(25%), 민주주의(25%)
	규범역량(20%)	제도투명성

자료 : 이재열 외(2014)

정해식 등(2016)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고자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수개발 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설정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시민·제도 역량이라는 사회통합의 4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1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통합지표체계에는 사회적 격차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지표 개발 이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를 측정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30개국을 비교하였으며 해외의 사회통합모니터링 사례를 통해 지표의 활용과 관리체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사회통합지수 지표

하위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지표	상대적 빈곤율 성별 격차 비정규직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공교육지출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십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격차 노동소득비율

자료 : 정해식 외(2016)의 내용을 재구성

2) 국외 사회통합지수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은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나 그 측정이 단편적임을 인식하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13년 유럽 27개국과 OECD 7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한 ‘Social Cohesion Radar’를 발간하였다.

재단은 사회통합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소속감(Connectedness), 공동선 지향(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평등/불평등 (Equality/Inequality)이라는 여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텔스만재단은 사회통합의 여섯 가지 측면을 세 가지 영역(Social relationship, Connectedness,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평등/불평등 측면은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구성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의 명확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사회통합 지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적절한 지표를 선별하고 각 영역을 3개의 하위 요소(총 9개)로 구성하였다 (Dragolov et al., 2013; 정해식 외, 2016. 재인용).

지표의 선정은 활용 가능한 자료에서 대상국가 대부분의 포함여부와 해당지표가 포함된 자료가 국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유럽 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갤럽국제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Social Program),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등이다.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표는 다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보다 사회적 자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표 11] 사회통합 지표(베델스만 재단, 2013)

영역		지표
1. 사회적 관계	1.1 사회적 네트워크	지난주 얼마나 많은 시간 외로움을 느꼈는가?
		얼마나 친구, 친지, 직장동료들과 친교를 위해 만나는가?
		개인, 가족의 문제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친척이 있는가?
	1.2 대인신뢰	사람들은 믿을 만한가?
		사람들은 공정하려고 노력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도움을 주려 하는가?
	1.3 다양성의 수용	만족 갈등의 수준은?
		게이와 레즈비언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가?
		이민자들은 나라의 문화를 훼손하는가?
		종교갈등의 수준은?
		인종 및 민족 소수자가 살기에 좋은 곳인가?
2. 연결성	2.1 정체성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 살기에 좋은 곳인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의 수준은?
	2.2 기관신뢰	이상적으로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가?
		경찰, 의회, 정당,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수준은?
		건강보호체계에 대한 신뢰수준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2.3 공정성 인식	선거의 투명성은?
		부패, 경제영역 부패, 상위 지위를 위한 부패수준은?
		정부는 소득격차를 감소해야 하는가?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절한가?
3. 공동선 지향	3.1 연대 및 도움	빈부 간의 갈등 수준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도왔는가?
		지난달 기부를 하였는가?
	3.2 사회규칙 준수	지난달 도움을 요청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도왔는가?
		교통규칙 위반 수준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수준은?
	3.3 시민참여	지하경제의 규모는?
		정치관심도는?
		지난 1년 동안 캠페인 배지나 스티커 부착여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서명운동 참여 여부는?
		지난달 정부에 의견 제출 여부는?
		지난달 자원봉사 여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조직 또는 협회 활동 여부는?
		국민투표 및 총선 참여율은?

자료 : Dragolov et. al.(2013), 장해식 외(2016: 47) 재인용.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미주지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22개의 지표(2015년 기준)를 측정하는 사회통합 지수(Social Inclus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시민들의 참여 능력 보유를 의미하며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공식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정치적 참여와 견해,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통합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사회통합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입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조건, 국가정책, 사회통합 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지표로 구성하고, 산출부문은 정책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치·경제 및 정책적 산출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권리와 경제적 조건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Americas Quarterly, 2012)

2012년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2015년에는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GDP 성장률, GDP 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중고등(Secondary School) 취학률, 정치적 권리, 시민권,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LGBT) 권리, 인종 간 통합, 시민사회 참여, 금융포용성,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개인 역량, 정부 대응성,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 등이다.(Alidadi et al., 2015)

[표 12] 사회통합지표(Americas Quarterly, 2012)

투입(input)	
GDP 성장률	경제적 성장이 빈곤과 불평등 감소로 연결
GDP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출수준
중고등 취학률-성별, 인종별	중고등 취학률
정치적 권리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성과 참여, 정부의 기능
시민권	표현과 신념, 결사, 법의 지배, 개인자유성 및 개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산모사망률, 출산권, 정치권의 여성, 여성폭력을 범죄화, 아동양육 세금규정
성소수자 권리	동성관계의 허용성 반영
인종 간 통합	교육 및 노동부문에서의 평등 조치 및 통합관련 법의존재
시민사회 참여-성별, 인종별	참여하는 협회의 평균 수
금융 포용성	공적제도 계좌 접근성 측정

산출(output)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빈곤의 기준을 1일 4달러 미만으로 정의
개인역량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정부 대응성	정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적절한 주택에 대한 대응성	물에 대한 접근, 전기에 대한 접근, 심각한 과잉 사용이 아닌 상태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	향후 연금을 받게 되는 일자리에 있는 25-65세 인구수로 추정

자료 : Americans Quarterly(2013), 정해식 외(2016), pp.52 재정리.

OECD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귀속감을 반영하는 사회통합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귀속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배제라는 유럽의 사회정책에 논의되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제도로부터 국민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지표에서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적 귀속감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OECD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대응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 사회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만으로 구성된다.

자살, 생활만족도, 범죄피해, 직업만족도,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위험한 행동, 사회적 고립, 집단소속, 10대 출산, 약물복용 및 그와 관련된 사망, 파업과 직장폐쇄, 투표참여, 청소년 범죄,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작업장 사고, 수감자 등이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항목은 자살이 유일하며 그 외 항목들은 변화되어진다. 이 지표들은 사회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와 사회통합의 부재를 표현해 주는 지표들로 크게 나누어진다.

3) 한국인의 사회통합인식 실태⁶⁾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정해식 외

6) 정해식 외.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재정리

(2016)의 목적이었다.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지할지에 대한 내용과 이를 밝혀내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사회통합의 하위요소를 OECD(2011)의 내용에 더하여 국내 연구의 사회적 갈등을 더하여 19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전국의 성인 남녀 3,669명으로 대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통합 수준에 4.18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적인 상태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성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식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태를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 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가구 소득 만족도는 2.8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인 3.1점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도 우리나라는 6.2점으로 평균 7.2점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37.4점으로 대상국 평균인 51.1점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32.2점, 39.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은 비교 대상국가중 가장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사회집단들 간의 갈등 수준도 최상위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있어서는 3.7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인 3.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사회적 신뢰 및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이를 반영하는 행복도는 평균 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적인 강도나 신체적 위협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 또한 비교 대상국 중 평균 이하였다.

국가 간 비교결과에서는 객관적 상태 지표의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인식 수준의 지표들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사회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지표 이외에도 상태에 대한 인식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인식과 사회통합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도 필요시 되나 자체적인 조사 자료를 축적하여 시계열적인 변화 파악도 매우 중요시 된다. 향후 충남도에서도 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정책적 과정들이 요구된다.

4)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회통합의 원인과 상태를 명확한 인과관계 하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통합의 상태는 개인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행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조건은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진단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 연구들은 사회통합지수의 개발 목적에 따라 지표체계를 달리 구성하였으나, 대체로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와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지표들은 모든 연구의 지표 체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각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자본의 측면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지수를 논의하거나 이를 활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 및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차례의 지수화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낮은 사회통합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특징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용된 지표가 진정 사회통합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논의적 한계도 있다. 즉 삶의 질 지표와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주관적 지표의 경우 어떠한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개념과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지표들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함께 이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의 사회통합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살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은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적 병폐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지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적 상황을 중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시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사회통합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표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충남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지표의 의미와 성과를 구체화시키며 그 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지수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지표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통합지수의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찾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충남의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과 관리방법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충남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지수는 어느 하나의 부서와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총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하여 충남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분야별 연구 동향

1) 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연구 및 논의 동향

(1) 이민자(이주민)에 대한 정의

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UN의 정의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은 이민의 목적과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3개월을 초과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체류할 의사를

가진 자를 단기이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가진 자를 장기이민자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이민자 관련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에서는 이민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련법의 해석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UN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 접근으로 보면, 문병기 외(2015)⁷⁾는 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자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할 필요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민자’라고 하면 편의상 ‘1년 이상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주로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문병기 외, 2015)⁸⁾.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국적의 동포
- 외국인근로자(제조업체근로자, 농어촌근로자, 선원 등 포함)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사는 사람
- 외국인유학생
-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전문가 등(교수, 연구원, 기술자, 외국어 회화강사 등)
- 상기의 사람과 함께 동반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가족을 포함

(2)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의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역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이선 외(2011)⁹⁾는 이민자의 체류조건(자격)에 따라 기본적 사회통합과 적극적 사회통

7) 문병기·라휘문·한승준(2015).

8) 문병기·라휘문·한승준(2015).

9)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2011)

합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 사회통합은 비정주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 사회통합은 정주가능자나 정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 사회통합정책은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등과 같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생활정보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관계 증진, 인권피해자 보호 및 긴급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은 취업이나 사회진출, 자녀세대의 성장 및 교육지원, 정책과정의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병기 외(2015)¹⁰⁾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의 목적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초기적응적 사회통합, 도입적 사회통합, 정착(정주)적 사회통합의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초기적응적 사회통합(orientational social cohesion)은 입국 직후 이주민의 초기적응 차원의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도입적 사회통합(introductory social cohesion)은 초보적 수준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언어능력 습득과 정주를 준비하는 차원의 사회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착(정주)적 사회통합(settling social cohesion)은 취업과 각종 사회분야에 대한 진출 및 자녀에 대한 온전한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고차원적 사회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주민(국민) 및 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연구

이주민과 관련한 설문조사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조사로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들 수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는 2012¹¹⁾, 2015¹²⁾, 2018¹³⁾년에 이루어졌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개 차원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8개 하위 구성요소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

10) 법무부(2015), 문병기·라휘문·한승준(2015)

11) 안상수·민무숙·김이선·김금미·이명진(2012)

12)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화영·이명진(2015)

13)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화영·이명진·양계민(2019)

지를 설정하고 있다(아래의 [그림 4] 참조).



[그림 4] 그림 다문화수용성 구성 개념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18년 조사의 경우, 일반국민 조사와 청소년 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대한 개요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일반국민 19세-74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전국단위가구조사 형태로 수행이 되었다. 2018년 조사는 2015년 조사와 동일하게 4,000명을 조사하여 표본 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주요 항목은 다음의 박스와 같다.

일반국민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35개 문항,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이주민 접촉 경험, 다문화 교육 및 활동 경험, 다문화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 인식, 외국인·이주민 접촉 및 관계 경험, 국민정체성, 한국인 자긍심,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지향성, 단일문화지향성, 이주민·다문화사회 관련 각종 태도, 일반적 사항 등

이주민을 포함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연구로는 경인행정학회 외(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경인행정학회 외(2014)¹⁴⁾는 구로구 주민, 구로구 교원, 구로구거주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여, 구로구민과 구로구 거주 이민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4개의 설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각 대상 집단의 특징에 맞는 질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는 것이다(아래의 [표 13] 참조).

14) 경인행정학회·화원종합사회복지관·구로구 다문화사회 실태조사 기획추진단(2014)

[표 13] 구로구 다문화 실태조사

설문항목	구로구 주민	구로구 교원	중국동포	결혼이민자
일반적 상황	0	0	0	0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0	0		
한국인으로의 인정	0	0		
중국동포와의 갈등	0	0		
자원봉사	0	0	0	0
기부문화	0	0	0	0
이타심	0	0	0	
구로구치안및안전	0	0	0	0
다문화교육		0		
가족생활			0	0
자녀양육			0	0
학교생활				0
경제상황			0	0
취업상황			0	0
보건 및 의료			0	0
구로구 적응			0	0
사회통합			0	0
매스미디어이용			0	0
사회복지서비스욕구				0
친정생활				0
자기계발 및 학업욕구				0

(4) 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설동훈·김명아(2008¹⁵⁾)는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대상 집단을 8개의 이민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 이민자 집단별로 적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범위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 사회통합의 중요도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전문직 근로자, 난민, 외국인 유학생, 생산기능직근로자, 불법 체류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영태 외(2014)¹⁶⁾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이민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민자 유형 및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즉,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민자의 유형 및 범위를 귀화자, 영주자, 귀화자·영주자의 자녀, 전문취업 외국인

15) 설동훈·김명아(2008)

16) 정영태·이진영·박천웅·윤상진(2014)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이국국적동포, 가족결합 본국가족,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 인정자, 취학중인 불법체류자 자녀,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방문취업자, 불법 체류자, 취학중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 16개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문병기 외(2015)는 대표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부처가 실시하는 정책들이 어떠한 이론적 모형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각 부처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서로 다른 이론적 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무부의 사회통합정책은 주로 입국 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용광로 동화모형에 입각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사회통합정책(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용광로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주의모형에 입각해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배제모형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 연구에서 문병기 외(2015)는 이민자의 거주지를 고려한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사회통합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도시지역이 경우, 같은 출신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집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체류기간이 지나면 출신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이민자의 구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자가 다수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보다는 용광로 동화모형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초기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이지만, 지향점은 우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호 문화적 요소가 흡수되는 모형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희·전영평(2008)은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의 급속한 증가세와 더불어 결혼이주자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간의 결혼이민자를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 시행되는 정책들이 인구 관리적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권보호 차원의 정책들이 부족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원숙연(2008)의 연구는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대상을 결혼이민자,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불법 외국인근로자, 화교, 남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소수자 정책이

차별적 포섭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책대상의 정체성의 형성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짐을 논의하고 있다.

한승준·박치성(2011)의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으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집단을 상정하고, 이 두 집단의 사회적 형성의 차이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정부가 대상 집단을 언제 누구로 결정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 설계에 있어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권익을 높여주려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규제, 즉 부담을 주는 정책설계를 하는 경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최무현(2008)은 참여정부에서의 다문화정책 내용의 주요 정책대상을 결혼이민자, 국내 혼혈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별로 정책수단 유형분류,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수혜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수단에서 차이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논의 동향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과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50~60년대는 고향을 떠난 ‘실향민’이라는 단어가, 60년 이후는 ‘귀순자’라는 용어를 쓰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급증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 2005년 통일부에서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새터민’이란 용어를 제안해 사용하게 되었으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통일부가 2008년 11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통계 및 국가정책

2000년대 들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2012년 이후 연간 1,000명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3,523명이다.

[표 14]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 15	' 16	' 17	' 18	' 19	합계
남(명)	6,379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9,363
여(명)	1,402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24,160
합계	20,400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33,523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통계 (2019.12)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1단계.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2단계.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국내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조사 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3단계.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4단계. 하나원의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초기정착지원(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5단계. 거주지 보호(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취업지원(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교육지원(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 운영(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북한이탈주민 국가 지원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해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는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통해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지원하다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정으로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왔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남한사회의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국가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러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은 5대 분야 핵심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사회통합’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은 기존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방향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원활한 통합 촉진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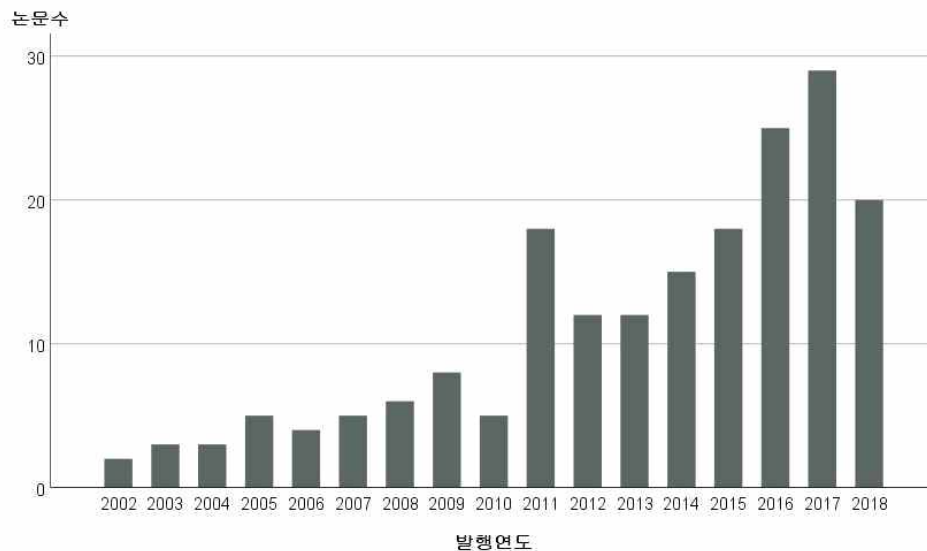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2차(2018~2020) 기본계획의 특징

-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 방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따뜻한 이웃이 되는 정책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은 과거에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실태(특히 경제활동 현황을 중심으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김안나·이은미(2019)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국내 입국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진 현상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출처 : 김안나·이은미(2019)

[그림 5] 북한이탈주민 관련 발표연도별 연구 동향

김화순·최대석(2011)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가의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남북 주민이 같은 생활공간에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초기 문제의식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분화 된 구도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원 중심의 정착정책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짐’ 또는 ‘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만들었고 이는 남북 주민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의 기본 구도가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주은주·오정수(2011)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인식 증진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해숙·이현숙(2014)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현재 남한의 사회통합은 공존이 아닌 ‘동화’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남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없이 소수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동화적 문화전략’으로 소수 문화를 배제하고 소멸시키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으며, 소수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은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게 하는 내면의 압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타문화를 배척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쌍방향의 ‘공존적 문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수정·양계인(2013)은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이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북 주민들의 접촉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지역사회 내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친밀감이 증대되어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라 집단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남북 주민 간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접촉의 지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숙도(2014)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으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주변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그동안 사회통합 연구가 국가 간 비교, 이론과 지표 연구, 지표를 통한 정량 연구 위주로 실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논의와 동향을 분석해 실제 지역 단위에서 사회통합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충청도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사회갈등, 불평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충청도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실태와 수준, 그리고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충청도 차원의 사회통합 연구의 필요성 인식 및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둘째, 충청도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수준 파악을 통해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셋째, 충청도 핵심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충남 지자체에서 등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향후 이들이 충남의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사회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1. 사회통합의 연구 및 정책 동향

1) 사회통합의 정책 연구 경향

(1) 사회통합의 측정과 지수개발

사회통합 연구는 현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국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과 지수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사회적인 사회통합 지수의 개발과 측정은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공공활동으로 정책적인 도구 활용을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차원에서 종합지표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이후 사회통합지수를 통한 측정결과를 매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2011년 이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외 차원에서는 바르셀로나 국제센터(2004)의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호주 스캔론재단(2007)의 사회통합지수(Social Cohesion Index)가 사회통합 연구의 초기에 실시된 연구결과들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 간 비교의 국제연구로는 OECD(2009)의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ex), UNDP(2013)의 사회통합평화지수(Social Cohesion and Reconciliation Index)를 거론할 수 있다.

특히 OECD는 2001년부터 「Society at a Glance」 보고서의 한 챕터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지표 조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다양한 사회지표들을 유형화 하여 'Social Cohesion Indicator'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되어 2005년 첫 조사에서 사회통합지표는 주관적 행복, 사회적 고립, 집단소속, 미혼모, 마약, 자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상으로 OECD의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응집력

(cohesion)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조건이나 결과를 위한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사회의 계층 간 포용적 관점에서 사회통합 정책현황

사회통합에 대한 포용적 관점의 접근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참여, 사회적 기회 박탈 등과 같은 배제(exclusion)의 계층을 찾아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계층으로 연구들은 빈곤층(최재성 외, 2009), 장애인(이익섭·최정아, 2005), 청소년(강영배, 2009), 노인(최재성 외, 2007), 여성(배미애, 2007),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김순양 외, 2008)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을 포용성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배제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참여 및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의 다양한 층위의 개념 중에서도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성의 가치를 강조하여 사회적 포용을 통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방향이 강조된다. 이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포용은 관용(tolerance)⇒수용(acceptance)⇒변용(transformation)의 단계를 거쳐 ‘사회통합’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의 질적 도약을 도모함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정책의 방향은 국정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용성의 개념은 ‘보호’의 소극적 의미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과 연구

사회통합 측정과 평가의 필요성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정확한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측정은 주민의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및 행복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차원의 사회통합연구는 필요성에 비해 연구결과와 축적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국가차원과 다른 맥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진행된 사회통합 논의와 지수들을 지역에 적용시키려는 연구와 측정이 대다수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영역으로는 지역사회 내 ‘사회의 질’이나 ‘삶의 질’, ‘행복’ 등에 관한 연구를 거론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의 주관적 인식을 근원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의 사회통합적 인식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김성근, 2018).

현재 가장 직접적인 지역사회통합지표는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지표연구를 지역사회차원으로 확장시킨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통합의 연구는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지표들이 지역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연구로는 차미숙·임은선·김혜승·윤은정(2012)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통합지수에 대해 해외, 국내 지표의 개발과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차미숙 외(2012)의 연구를 비롯한 지역사회통합의 연구들은 국가차원의 물리적 정량적 지표의 한계를 적극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주관적인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객관적인 지표들(주거,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개선이 주관적 인식의 만족도와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주관적인 지표들이 조절과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구혜란·정민수, 2013).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통합의 정책방향에 대해 갈등과 격차 최소화, 지역 내 분열 극복,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 등의 과제들을 객관적 지표향상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이성근, 2018). 특히 차미숙 외(2012)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지표는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하여 다음 [표 15]처럼 지역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하였는데, 지역사회의 맥락적 의미를 최대한 포함시켜 사회통합의 정책적 유의미성을 도출하고자 한 대표적 연구로 볼 수 있다.

[표 15]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구성

영역	세부영역	최종지표	
		객관지표(18개)	주관지표(7개)
지역사회 안정	가족안정(해체)	이혼율, 자살률, 독거노인비율	
	지역사회 안정 (갈등)	범죄율, 고소고발건수	지역개발분쟁 인지도
지역사회 형평	지역사회 형평 (격차)	빈곤율, 실업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지역격차/불균형 인지도
	지역사회 포용 (배제)	외국인거주비율, 사회적기업수, 여성경제활동 비율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신뢰 협력		지역사회협력활동 이웃관계만족도 지방행정기관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	지역주민 자원봉사 참여율, 투표율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사회 제도역량	제도적 지원	인구1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비중, 지역갈등조정제도 운영실적,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적	

출처: 차미숙 외(2012)

3)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

(1) 서구 중심의 사회통합의 방향

우선 국가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차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구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의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적으로 사회통합을 수행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도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이슈 및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다양함을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6] 서구 국가별 사회통합의 정의

국가	사회통합의 정의
캐나다	캐나다 국민 간에 희망, 신뢰, 상호이해를 중심으로 캐나다 사회 안에서 구성원간의 가치와 균등한 기회를 가진 공동체 개발을 위한 과정
프랑스	개개인에게 동일한 공동체의식과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원을 제공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
호주	집단적 신뢰, 관심 및 상호간 공존, 상호작용 및 지원하는 구성원들과 공동체간의 유대관계 형성 과정
독일	합법적으로 함께 사는 이민자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

출처: 한민영(2019)

위의 정의처럼 국가별로 사회통합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해당 국가의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계층과 공동체의식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북미권 및 호주는 국가 출범부터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국가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문화, 인정, 지역, 언어 등 다양한 분절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극복을 위해 서구 국가들은 사회통합의 기본이 되는 근로, 교육, 복지부터 통합정책을 지원 및 추진하였고 특히 인식적 통합의 기반이 되는 언어통합정책에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이 있다.

(2)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배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고임금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국민의정부(1998년) 출범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경제적 빈곤악화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의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화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2007년 참여정부 시기에 대표적인 사회통합 관련 법령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들이 실행되었으며 본 법안에 근거하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국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기별 정책 목표

시기	정책목표
1차 (2008-2012)	1.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2차 (2013-2017)	1.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3차 (2018-2022)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원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 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출처: 한민영(2019)

우선 외국인 정책 1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다문화 이해증진과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이 중요한 가치로 기초적인 사회통합의 차원을 보여주며 2차 계획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의 융합과 문화다양성 존중 및 공동발전을 강조하는 보다 진화된 가치추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공감과 다양성 존중의 정의, 협력과 거버넌스의 관계적 의미를 강조하는 실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2009~2012)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12월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초대 위원장으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성 인종 다문화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갈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정책 활동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박근혜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통합 관련 종합정책개발 및 실행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다문화 등 이민자, 노동 및 사회양극화, 성평등 등 주요 부문으로 사회통합의 논의가 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박근혜 정부 이후 국제 이민자 중심의 사회통합 정책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사회통합의 논의는 이민자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말부터 증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이주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적 갈등의 해결 모색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주외국인정책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사회통합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송민혜·양승범, 2017).

박근혜정부인 2016년 발표에 의하면 합법적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하면 최대 30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된 사회통합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16). 이후 매년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유입의 증가와 결혼이민자 및 동포 대상 취업 및 방문증가 등 다문화권 출신 이민자들의 국내유입이 급증하였다.

이처럼 국내유입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통합의 문제가 사회통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을 통해 관련된 사회통합의 법적 근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9년에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의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며 이민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김현주, 2017)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사회통합 자체에 대한 정책의 가치와 철학의 담론이 부재하고 외국인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형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총괄부처의 부재로 인해 대상별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앙과 지방의 다른 전달체계로 지원 시스템의 미흡함도 한계로 지적된다.(김현주, 2017)

(4) 정부부처의 사회통합정책 규모

현재 사회통합정책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태이며 법무부를 비롯해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대표적 수행 부서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민배경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이민배경자녀는 중도입국 자녀와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포함하는 단위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체류 및 국적과 관련된 사업이 중심으로 위에서 거론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대표적이고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창출, 취업교육, 직업교육 관련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책지원이 중심이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부처별 사회통합지원정책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중앙부처 사회통합정책 사업 및 예산(2017년)

부 처	사 업 수	예 산
교육부	6	5,675
법무부	27	6,861
행정자치부	2	비예산
문화체육관광부	1	100
농림축산식품부	2	1,666
보건복지부	1	비예산
고용노동부	6	11,780
여성가족부	7	9,904

출처: 송민혜·양승범(2017)

(5)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¹⁷⁾

이민자 중심의 사회통합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확산되면서 관련된 제도적 지원과 정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이민자 관련 정책프로그램인 KIIP가 있다.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인 KIIP는 국내에 입국한 이민자가 우리말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사업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신청 시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고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입증과 실태조사를 면제하며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및 한국어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사증(VISA) 신청 시 한국어 능력입증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KIIP에서 실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과 이수시간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음						

이처럼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내국인과의 통합 정책을 의미하며 이들의 국내생활 적응 및 안정적 정책의 지원이 중심이 된다. 이주 및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사회통합정책은 차이가 있으나 본 대상들은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되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17)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참조(<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정책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원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영역을 보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1)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와 논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사회통합의 중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 정책 등은 실행되어 왔다.

최병학(2011)은 충청남도 갈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을 통해 충남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장창석·고승희·임다정(2018)은 충남 공공갈등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성태규(2014)는 도민들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충남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또한 성태규(2017)는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증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운성(2019)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충남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표 20]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연구자	제목	분야	내용
최병학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갈등	충남 갈등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을 통해 충남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
장창석·고승희·임다정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갈등	충남 공공갈등과 관련된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
성태규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인권	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제시
성태규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연구	인권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증진계획 기본방향 제시
백운성	충청남도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	불평등 (사회양극화)	충남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방향 설정

2)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최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이 이주민정책으로 수렴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성태규(2005)는 충남 이주외국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우복남(2015)은 충남 이주민들의 통합관련 현실과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우복남(2016)은 충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한편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수도권 위주 거주에서 점차 남하해 충남도 전역에서도 거주를 시작하면서 충남도 차원의 정착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박현선(2018)은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남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21]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저자	제목	분야	내용
성태규	귀화·이주자 실태분석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외국인 근로자	충남 이주 외국인의 실태분석 및 사회적 통합 방안 모색
우복남	충남 외국인근로자 인권 실태 조사개요	외국인 근로자	충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실태 조사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정책 방향 설정
우복남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이주민	충남 이주민들의 통합관련 현실과 정책육구 파악 및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정책 방향 설정
우복남	충남 결혼이주자 생활 실태와 정책방향	결혼이주자	충남지역 결혼이주자 생활실태조사 및 지역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
박현선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북한이탈 주민	충남형 정착지원 특성화모델 수립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제시

3. 국내 지자체 사례 분석

1) 서울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의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사회를 향한 다양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각 시정 영역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사회혁신 수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체계 재편, 인권도시 지향 등 기존 도시정책의 질적 전환을 꾀하였다. (조권중, 2016)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강조와 사회적경제 등의 육성은 서울의 도시정책이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서울을 세계 7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2015년)한 사실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포용정책은 ①배제 극복, ②보편적 접근성, ③혜택 공유, ④시민 참여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권중, 2016). ‘배제 극복’은 배제에서 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자 권리 존중,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시민역량 강화 교육, 복지사각지대 포용, 모든 시민이 건강할 권리, 시민의 주거안정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편적 접근성’은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시설 접근성 향상이다. ‘혜택의 공유’는

도시의 공유,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새로운 가치창출과 그 성과의 지역사회 공유를 강조한다. ‘시민 참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협치행정이다.

①배제 극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교육, 건강, 복지, 주거 등의 실생활의 배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동행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특화일자리사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 직업훈련 및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대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확대, 직업교육센터 및 창업센터 등을 설치하여 시장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14년 교육복지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서울혁신교육박람회 개최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복지사각지대의 포용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희망은돌 따듯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의 건강한 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건강 주치의·우리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건강증진센터 구별 설치,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설치 등 서울시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의료안심주택, 공공원룸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표 22] 서울시 포용도시 관련 주요정책

구분	정책분야	주요사업
배제에서 포용으로	노동자 권리 존중	- 노동존중 행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 청년, 여성, 장·노년층 일자리 기회 지원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 보편적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지역사회 균형과 상생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복지도시
	복지사각지대 포용 모든 시민이 건강할 권리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보편적 공공의료 정책
	시민의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취약계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
보편적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 사람·공유·환경 중심의 교통정책

접근	조성	- 보행친화도시 조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시설 접근성 향상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 시민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확충
혜택의 공유	도시의 공유	- 글로벌 공유도시 서울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도시재생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추진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	- 서울혁신파크 조성 - 서울투자기금과 사회혁신채권 운영 - 마을공동체 사업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협치행정 추구	- 열린 시정과 정보소통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행정 추구

출처 : 조권중(2016)

②보편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등 도시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람·공유·환경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신촌, 세종로 차 없는 보행전용거리 운영, 어린이 보행전용 거리 아마존 조성, 서울역 고가 7017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창작공간인 서울거리예술센터, 신촌 문화발전소, 지역도서관 확대 등에 힘쓰고 있다.

③혜택의 공유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포를 시작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주거공유, 나눔카, 아이웃을 공유하는 키플 등의 공유모델 확산을 통해 세계의 공유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새로운 방식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시민참여는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실험, 시민 중심의 협치행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또는 사회)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크레이티브랩, 칼폴라니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집정시켜 다양한 혁신실험을 펼치고 있다.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등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현장시장실, 정책토론회, 도시계획의 시민참여 확대 등 협치행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을 통해 자체역량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는 도시의 모든 시민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변미리, 2018).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사람, 공간, 거버넌스 3대 부문, 6개 영역 3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 서베이 등을 통해 개발되었다. 사람 부문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분배의 포용성을 다루는 영역으로 경제적 역량, 사회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은 지역적 형평성과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포용도시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생활인프라 접근성, 공공서비스 접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시민참여, 투명성과 책임 등 제도와 절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표 23]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구분			개념
사람 포용성	경제적 역량	지니계수 (or 빈곤율)	* 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 (완전평등: 0, 완전불평등: 1) * 상대적 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15~6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의 비율
		장애인 고용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사회적 웰빙	사회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
		기대수명 격차	연령 0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의 지역 간 차이
		공공문화예산 비율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문화서비스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서비스 등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건강 만족도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을 나의 가족,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주관적 허용성 정도
공간 포용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 비율
		주거비부담률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동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녹지율	지역 내 가로 면적 중 살아있는 식물 잎의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녹지환경 만족도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숲, 공원)에 대한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등)에 대한 만족도
	공공 서비스 접근성	공공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경험률
		안전서비스	공공기관 CCTV 설치 대수
		응급대응 서비스	119 구조 처리 건수 및 119 구조활동의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밤거리 안전 만족도	서울시민의 야간보행환경 만족도
거버 넌스 포용성	시민 참여	투표율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한 사람의 비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사회단체 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지역사회 참여율	지역사회 모임 또는 단체활동 참여율
		이웃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지역 자부심	본인이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정도
		자원봉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투명성 과 책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서울시 예산 중 사회단체 지원예산액
		공공기관 신뢰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신뢰 정도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건 중 비공개로 결정된 건을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건의 비율
		공공기관 청렴도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출처 : 변미리(2018)

이러한 지표를 통해 자체 진단한 결과 서울시의 부문별 포용성 정도는 영역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 포용성 부문에서는 경제적 역량은 지속 향상되고 있으나, 사회적 웰빙은 답보상태이다.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상 완화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의 비율은 늘고, 실업률과 취업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 수는 지속감소,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험 가입률과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공간 포용성 부문에서는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나아지는 추세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증가하나, 주거비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다. 녹지·교통·주거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비해 야간보행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은 이웃 신뢰도는 낮은 편이며, 자원봉사 참여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행정정보의 높은 공개율에 비해 공공기관 신뢰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사회적 배제의 극복과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향상,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의 공유, 시민 참여 촉진 등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진단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한울타리’ 통합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울타리’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다문화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상담, 폭력피해자 지원 등),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사업,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표 24] 서울시 이주민 대상 정책 현황(2020)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부서
위기다문화가족안 전망 구축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단기 보호시설 운영 - 다문화가족의 전문종합상담, 폭력피해자 지원 등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 운영	- 가정폭력, 성매매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게 숙식제공, 긴급보호, 각종 상담 등	여성권익담당관
다문화가족자녀 보육시설 운영	- 다문화자녀 통합보육시설 중 서울시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을 지정 및 지원	보육담당관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만2~12세) 대상 - 한국어 및 기초학력(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 택 1) 방문학습 및 심리검사 지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 다문화가족의 자녀성장, 가족관계 향상, 역량강화 및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다 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보건의료 정책과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 서울시립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에 다문화 자녀의 지원기회 제공	시립대학교 입학관리과
120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서비스	- 외국어 상담서비스 - 외국인 행복콜 서비스 실시	시민봉사 담당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행사경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자조모임 활동지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 대상: 서울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생) - 기간: 년중(방학기간 제외) - 방법: 다양한 국적의 외국강사(40개국 51명) 학교 방문·교육 - 내용: 다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출처: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mcfamily.or.kr/>)

또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25개소가 설치되어 한국어 교육,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기관으로 한국어, 진로 및 취업교육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부부갈등, 위기상황 등에 처해있는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외국인의 창업지원과 상담, 교육, 의료 등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표 25] 서울시 이주자 지원조직 현황

사업명	센터개요	주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서울에 25개소가 설치되어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 방문교육서비스(1:1지도)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교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서울온드림 교육센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어, 진로 및 취업교육 등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 귀화대비, 취업지도, 검정고시대비 · 문화체험 · 멘토링 및 상담서비스
서울이주 여성상담센터	부부갈등, 위기상황 등에 처해있는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를 맞은 이주여성과 동반가족이 입소 가능한 긴급보호시설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 다국어 통·번역 지원
서울 글로벌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교육, 생활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운전면허 취득, 은행업무, 휴대폰 가입, 보험가입 등의 생활안내 서비스 · 결혼이민자 고충상담, 법률상담, 노무상담, 부동산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등을 13개 국어로 제공

서남권 글로벌센터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안정 및 정착을 돕고 외국인주민의 고충상담, 교육(한국어 및 컴퓨터), 의료서비스 지원(내과, 치과, 한방, 대사증후군 상담)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상담은 9개 국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파키스탄어)로 지원 · 통역이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긴급상담을 위해 현장출동상담 지원
동대문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서울시 거주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비즈니스 및 창업상담, 한국어 강좌, 비즈니스 세미나, 무역인 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 · 외국인 창업 활성화 및 국내 중소기업 해외 신규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언어 소통, 창업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글로벌 빌리지센터	서울시내 7개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빌리지센터는 한국어강좌, 문화체험, 생활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 정착 지원	
외국인 노동자센터	서울시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료 등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 수행기관	
서울글로벌 문화체험센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관광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민화그리기, 한지공예 등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존, 코인라커 등이 있어 서울 관광 중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 서울특별시 한울타리(<https://www.mdfamily.or.kr>)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인건비, 초기집중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신규전입자 생활지원이다. 서울시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월 20세대)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물품 맞춤형 지원(세대당 70만 원)하고 있다. 셋째, 의료지원사업이다.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건강증진사업(시·자치구·산하기관 근무자 등 힐링 워크숍,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등)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정착지원관계자 교육이다. 시, 자치구 지역적응센터 관련기관 정착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착지원사업 현황,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집합교육 및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행사 등을 통해 서울시 정착지원사업 및 민원발급 등 안내, 전입 축하카드 전달, 청사 투어 등, 신규전입자 신청자포함 북한이탈주민 남한가족체험 실시하고 있다.

[표 2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2020년)

사업추진절차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912,200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전액국비)	1,316,000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교육,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 등
신규전입자 생활지원	168,000	맞춤형 기초생활물품 지원
의료지원사업	404,640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시·자치구·산하기관 근무자 등 힐링워크숍, 정신보건사업,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정착지원관계자 교육	3,000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토론 등
신규전입자 행사운영 등	10,560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민원서류 발급안내, 축하카드 전달, 청사투어 등 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10,000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종합 안내서 등 제작 및 배부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2) 전 남 도

전라남도는 2018년 기준 다문화 혼인 비중 10.6%이며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한다.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다문화 출생비중 역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부부와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며, 따라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6]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2018년)

출처: 통계로 본 2018년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 및 분석

전라남도의 다문화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 자녀에게 부모나라 문화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엄마아빠나라말 경연대회’를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 적응유연성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에서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가족갈등, 부부관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긴급한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쉼터를 통한 임시 보호처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긴급지원, 부부대상 성평등 교육,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2018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

출처: 전남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8)

[표 27] 2018년도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지원	2018. 1.~12.	단일형(6개소) 센터 지원, 전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2018. 1.~12.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2018. 2.~12.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018. 1.~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언어교육, 지원대상 아동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2018. 1.~12.	의사소통 지원,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기관 이용 시 통·번역 제공, 위기 상황 긴급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2018. 1.~12.	위기·일반형·통합형 관리 가구 대상 사례 발굴, 초기상담, 실행계획 수립, 평가, 사후관리 등
한국어교육(집합) 운영	2018. 3.~12.	중도입국과정·심화과정 등 개설, 한국어 교육 평가를 통한 단계 승급
결혼이주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018. 1.~1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내 보호, 숙식 제공 및 의료 지원, 수사기관 등 조사 협조 및 출국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2018. 1.~12.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대상 1인당 3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인터넷요금 지원	2018. 1.~6.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용요금 (월 23천원 이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018. 1.~12.	1인당 월 7만원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2018. 1.~12.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사 채용 지원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	2018. 1.~12.	이중언어코치 채용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2018. 3.~12.	도내 어린이집 아동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수업 실시
다문화가족 가족교육(가족통합 및 부부훈련)	2018. 5.~12.	다문화가족 부모·시부모 통합교육프로 그램, 다문화가족 부부공동체 훈련 등
결혼이민여성 취업 지원	2018. 1.~12.	전남광역새일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연계 취업 지원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2018. 1.~12.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 1:1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2018. 6.~12.	이중언어 교수법, 수업지도안 작성법, 모국어 활용방법, 현장실습 등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2018. 8.~12.	상담능력,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올바른 인식 교육 등
다문화가족문화예술경연대회 지원	2018. 6.	국가별 전통무용, 합창, 시상 등 문화 예술경연대회 실시
다문화가족 한글대회 지원	2018. 9.~10.	한글 쓰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글 퀴즈 및 축하공연 등
각종 위원회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2018. 1.~12.	도 및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2018.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기업체 사회공헌사업 연계	2016. 6. ~	삼성전자(광주자원봉사센터), 화순전남 대학병원 연계 지원 사업
공무원 다문화 이해교육	2018. 1.~12.	다문화가족 지원과정, 이해과정

4. 국외 사례

1)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이주민 정책 사례

(1) 독일의 사회통합 필요성

지구화(globalization)가 확산되면서, 상품 및 자본뿐 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상품과 자본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이동을 촉진하게 되었고,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과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지역·국가로의 인구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문화의 교류도 왕성해 지고 있다. 이전에는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활발한 교류로 인해 주류 문화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람, 문화의 배제, 분리 상태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였지만 강한 민족주의와 속인주의의 전통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구정착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을 활용하면서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약기간 이후 그들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귀화도 못하고 귀국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을 재고하게 된다.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모델

외국인에 대한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은 첫째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둘째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에서는 시민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시민권은 국적 취득 권리이다. 시민권이 부여되는 원칙은 차별배제모델, 동화모델, 다문화모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차별배제모델은 속인주의 원칙으로 외국인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 후 그들을 귀국시키는 정책이다. 둘째 동화모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되, 국적 취득국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다문화모델은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수월하게 부여하나, 이민자들이 자국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모델이다. 사회통합정책에서는 차별배제모델을 제외하고 동화모델, 다문화 모델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¹⁸⁾

다문화모델은 주로 이민국들이 추진하였다. 다문화모델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하여 이민정책을 수용한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였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다. (고상두 2012, 245) 다문화정책에서는 인종,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인정되었고, 이주자는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받았다. 유럽에서 다문화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네덜란드의 다문화모델은 실패로 평가된다. 네덜란드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통합을 저해하여 소수자인 외국인의 하층 계층화를 야기하였다. 네덜란드 국가정책위원회도 지나치게 문화적으로 접근한 자국의 통합정책을 향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접근하여 외국인의 경제적 자립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네덜란드의 다문화모델이 동화모델로 이동하면서, 동화모델은 유럽에서 확산되었다. (고상두 2012, 244)

동화모델은 이상적 유형과 현실적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적 유형은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강조하는데 비하여, 현실적 유형은 구조적 동화 상태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제시된 모델이 상호문화주의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다문화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 교류를 강조한다. 다문화모델의 한계는 이주자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적 편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¹⁹⁾ 상호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매개로 현지인과 이주자 문화 간에 교류와 상호작용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상두 2012, 245)

상호문화주의에서는 통합교육을 중시한다. 문화 중에서도 특히 언어통합을 증진하고 거주국의 정치·사회·역사·경제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통합정책을 강조한다. 이런 통합정책의 변화는 시민권·영주권 취득 요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자동적인 국적 부여가 아니라 귀화시험, 교육 등이 국적 취득의 조건으로 변화였다. (고상두 2012, 246)

사회통합모델은 민족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의 원칙에서 모델을 구분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속인주의에 의해 통합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차별배제 모델은 통합정책에서 제외된다. 다문화 모델에 의한 사회적 통합에 한계를 노정하자 서구권에서는 동화주의 원칙에 따른 동화

18) 고상두(2012).

19) 오정은(2011), pp.189-191.

모델과 상호문화모델이 주요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동화모델과 상호문화모델은 시민권 정책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교육정책에서 차이점이 있다. 상호문화모델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문화모델과 유사하지만, 이주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상두 2012, 247)

원칙	민족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
정책 모델		상호문화 모델	
	차별배제 모델		다문화 모델
		동화 모델	

출처 : 고상두(2012), 246쪽

[그림 8] 사회통합모델 비교

세계화의 틀 안에서 독일,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원주의에서 동화주의로 패턴이 변화하였고, 이후 정책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동화모델과 상호문화모델의 스펙트럼에서 추진되고 있다.

(3) 독일 이주정책의 기본방향

독일의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은 2005년에 개정된 이민법(Zuwanderungsgesetz)에 설정되어 있다. 독일은 1999년 국적법을 개정하고 2005년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을 제정하여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이민법 제정의

배경으로는 이주민 비율의 급속한 증가, 이주민들의 언어능력 부족과 종교 갈등, 범죄율 증가, 이주민의 높은 실업율과 빈부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같이 강한 민족주의와 속인주의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 들였지만, 영구정착이 없는 단기 외국인 인력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²⁰⁾

2005년 이민법에 구성된 기본방향과 세부원칙은 [표 28]와 같다. 통합성, 관리성, 안보성 등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원칙으로 이주민 관리 거버넌스(통합성), 관리방식의 차별화와 인도주의 원칙(관리성), 국가안보와 이주정책의 정당성 강화(안보성) 등의 세부원칙이 반영되었다.²¹⁾

[표 28] 2005년 이민법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

기본 방향	통합성	관리성		안보성	
	독일의 합법적인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성공적으로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야 함	독일의 경제 및 통합정책을 위하여, 이민은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이주와 관련해서 국가안보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됨	
세부 원칙	이주민 관리 거버넌스	관리방식의 차별화	인도주의 원칙 입각	국 가 안 보 우 성 확립	이 주 정 책 의 정당성 강화
	연방정부, 주,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전체의 주요 정책 목표는 법적,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통합 추구, 국가는 이주민들을 지원 하되, 이주민들 스스로가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합에 참여하도록 함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민을 관리 하고 통제함	독 일 헌 법 , 국제 규약 및 협력에 명시된 인도 주의적 의무 를 이행함	독일의 번영과 안보 및 국민을 보호	EU 및 유엔 내에서 독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침

출처 : 강휘원·강성철(2010), p.299

통합성과 관련하여 이민법은 언어와 독일사회에 대한 통합을 강조한다. 이민법은 언어강좌와 법, 문화, 역사에 관한 시민강좌에의 참여 의무를 이주민에 규정하고 있다. 강좌를 수강하지 않거나 강좌를 종료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신청의 거절 혹은 독일에서의 체류 연장을

20) 강휘원·강성철(2010)

21) 강휘원·강성철(2010), p.299

받지 못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성에서는 자국민 우선 원칙 아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안보성에서는 이민정책과 안보를 연계하고 있다. 독일 정보기관에 의해 이민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추방조치를 간소화하였다.

독일은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가의 언어 지원을 포함한 통합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강좌는 독일 이민난민청(BAMF)의 위탁사업 중 하나로서 체류법(Aufenthaltsgesetz)의 제43조(통합과정), 제44조(통합강좌 참여권한), 제44조a(통합강좌 참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으로 통합강좌에 관한 규정(“통합강좌령”)이 제정되었다.²²⁾

통합강좌는 독일어 강좌, 독일사회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독일의 법질서, 역사,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강좌는 이민자의 이전 학습 배경과 학습 속도에 따라 알파강좌, 일반 통합강좌, 속성강좌로 나뉘어 있다. 또한 참여자의 요구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성, 부모, 청소년 그리고 구 이민자를 위한 강좌를 특수 통합강좌에 포함시키고 있다.²³⁾

(4) 독일 이주정책의 거버넌스

독일 이주정책의 정책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양분되어 있다.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은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주민 관리 권한은 주정부에 주어졌다. 이주민에 대한 관리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이들 각 주정부의 외국인관리청들이 이주민의 거주 및 비자 관련 결정에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민정책을 집행하는데 주정부의 장관들과 연방내무성 고위관리들의 상설회의 등 연방과 주, 주 정부 간 협의와 협력 절차가 강조된다.²⁴⁾

가. 연방정부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연방내무성(Bundesministerium des Innern)이 주관하며, 산하 연방이주난민청Bundesa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 주무부서이다. 연방내무성을 EU 국가 간 단일정책에 관한 협의와 연방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을 결정하며, 연방이주난민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지닌다. 특히 이주민 사회통합 교육, 고용, 사회복지 관련 제도 등을

22) 김이천(2012), p.168

23) 통합강좌의 종류와 이수시간, 평가체계에 관해서는 김이천(2012), pp.168~174 참조.

24) 강휘원·강성철(2010), p.300

결정한다. 또한 지역 간, 부문 간,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한다.

연방이주난민청은 독일 내 망명과 추방을 결정한다. 또한 통합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제공한다. 일시적 보호, 장기거주, 유학생 입학허가 등 EU차원에서의 지침을 협의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성은 노동시장에서의 통합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편입방안, 직업 훈련과 직업재교육, 기술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주민의 직업 통합을 위한 독일 전역의 정보 및 상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노동고용을 획득하기 위한 거주권리를 부여한다. 고용목적의 거주자격의 발급은 지방정부의 외국인사무소, 해당 지역의 연방고용청 지부 사이의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²⁵⁾ 이루어진다. 이외 연방가족여성노인청소년성은 해당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²⁶⁾

나. 지방정부

주(州)는 특정 책무권한이 지정된 외국인관리청을 설치할 수 있다. 주의 외국인관리청은 추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거주법에 명시된 모든 합법적 거주 및 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기초지방정부에도 외국인 담당 행정사무소나 관리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주 및 지방정부들은 이주민들의 거주 및 정착문제의 해결 외에도 사회통합정책에 관하여 연방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다.

다. 비정부조직 및 NGO

다양한 비정부조직 및 시민단체가 망명 소송절차 지원, 홍보,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난민위원회는 16개 주(州)와 여러 지방정부에서 자치적 등록단체라는 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은 난민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에 대항하고 있다. 외국인위원회는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일종의 이주자 대표단으로 시 의회나 시장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⁷⁾

라. 연구기관 및 정책자문기관

독일의 다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주민, 망명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빌레펠드

25) 강휘원·강성철(2010), p.305

26) 강휘원·강성철(2010), pp.303-305

27) 강휘원·강성철(2010), p.305

(Bielefeld), 콘스탄츠(Konstanz)대학 등에서는 이들에 관해 연구하고 있고,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소에서도 관련 연구 및 조사, 분석을 하고 있다.

[표 29] 독일 이주민정책 거버넌스

유형	조직	역할
정책결정 기관	연방내무성(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연방 이민 및 통합정책 총괄, 조정, 감독
	연방노동사회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외국인 고용 법적 기준, 노동시장 통합 촉진
	외국인 관리청/외교공관(Auswärtiges Amt)	해외에서 여권 및 비자 사항
	이주, 난민, 통합을 자문관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이주정책 관련 자문 및 법안 형성에 참여, 국내 외국인 통합 증진, 외국인 혐오증 불식
	송환자, 소수집단 문제 관련 자문관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Aussiedlerfragen und nationale Minderheiten in Deutschland)	독일 재외동포의 송환 및 관련 정책수단 조정 및 관리, 연방내무성 소속
정책집행 기관	연방이주난민청 (Bundesamt für Migration un Flüchtlinge)	연방내무성 감독 하 이주, 망명, 통합 최고 운영지관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	이주자의 입국과 허가 관리, 외국인 자료 처리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mt)	제3국 국민의 노동고용 거주권리 부여 담당
	연방경찰(Bundespolizei)	연방내부성 감독 하 외국인의 불법, 밀입국 통제
	연방범죄경찰청(Bundeskriminalamt)	외국기인의 지문자료 분석으로 이주난민청 지원
	주경찰	주내의 외국인 단속 및 불법 인국통제
	주외국인관리청	주내 외국인의 합법적 거주 관리 및 지자 발급 업무
	기초자치단체 외국인관리부서	지방정부 관내 외국인의 관리 및 정책 시행
국제기구	유엔고등난민판무관	망명자의 면접 참석과 변호, 관련 법개정 자문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e Organisation für Migration)	이주민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시행
시민단체 (NGO)	Pro Asyl	난민에게 법률소송 및 개별적 지원 인권 단체
	난민자치위원회	난민들의 자치적 결성 등록단체, 난민 지원

	외국인위원회	주 및 기초자치단체 현안 논의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표단
	이주, 시민권 센터 (www.uni-bielefeld.de/(de))	국가 간 교류, 초국가 이동성, 국가개발 등 연구
	이주연구에 관한 유럽 포럼 (Europäisches forum für Migrationsstudien)	유럽의 이주와 통합에 관한 주제
	연방이주난민처 내 연구집단	이주 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통합방안 연구
	이민, 망명에 관한 국제법 및 유럽법 연구센터 (migration. uni-konstanz.de)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유럽, 국제법, 독일 법 법안 분석
	이주, 문화 연구기관 (Institut für Migrationsforschung und Interkulturelle Studien)	공간 이동성 및 문화 간 충돌, 갈등 등 경험문제 분석
정책자문 기관	함부르크 국제경제연구소 이주문제 연구소 (Hamburgisches Weltwirtschaftsinstitut)	이주의 경제적 관점 등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이주와 통합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 연구
	독일 이주에 관한 독립위원회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연방내무성 내 외국인 관련 법제 연구 자문위원회
	이민, 통합 전문가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Zuwanderung und Integration)	연방내무성 내 이민노동의 필요성 등 연간보고서 작성
	통합과 이주를 위한 독일재단 전문가 회의 (Sachverstä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ür Integration und Migration)	8개 독일 재단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 이주와 통합의 전개, 평가 등에 관한 연간 보고서, 설문 등

출처 : 강휘원·강성철(2010), pp.300-301 재정리

(5) 시사점

독일의 사례는 다문화 시대 이주민에 사회통합은 단순 복지가 아닌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를 보여 준다.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교육차원의 틀에서도 추진되었다.

현행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제도화에 그쳤을 뿐 이를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체계적인 사회통합이 요구된다.²⁸⁾ 즉, 이들의 사회통합을 한국사회로의 적응에 국한하고 있어 단순히 한국어 지원교육과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일시적인 통합이 아니라 이주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체계적인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이민자와 자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의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결성 및 지원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민자와 자국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과 독일간의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초기정책	-산업연수생제(1993) -고용허가제(2004, 2007) -산업연수생제(2004) -방문취업제(2007)	-손님노동자제도(1945-1974) -그린카드제도(2000) -이중국적제도(2000)
국적	체류허가/정착허가/국적취득	체류허가/정착허가/시민권
법적 기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훈령(2009)	-이민법(2005, 2007) -국적법(2000)
대상	한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독일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 재외독일인, 유럽연합시민

28) 이성순(2011), pp.196-197

통합 조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귀화필기시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통합코스 -독일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선점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평적 통합거버넌스 미흡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약으로 지역의 특수현안이 국가정책의제에 함몰	-수용사회와 이민자 간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잔존, 이민자의 적극적·자발적 통합의지 결여 -양방향 의사소통 장치 필요 -정부와 시민사회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직적·수평적 파트너십 구현

출처 : 이성순(2011), pp.197-198

2)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1) 프랑스의 사회통합 정책²⁹⁾

가.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의 개요

프랑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유럽이나 동유럽으로부터 이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세기 남짓하지만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모든 인간이 신분, 종족, 지역과 같은 ‘부분적인’ 소속감을 넘어 프랑스 및 프랑스 민족이라는 ‘전체’에서 하나가 되는 소위 ‘공화주의’ 이념을 표방해왔다. 이 때 ‘프랑스 민족’은 근대 프랑스 사회의 주류 종족인 ‘골족’과 같은 특정 종족이 중심이 되는 ‘종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이 표방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모든 개인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공동체로 여겨졌다. 물론 현실에서는 동일한 역사,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진 ‘종족적’ 민족관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식민지정복 및 통치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즉 본국에서와 달리 식민지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이 상징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전도사로서, 그리고 인류전체 교화의 사명을 지닌 위대한 가톨릭국가이자 선택받은 제일 위대한 민족(une Grande nation)으로서 행동했던 것이다.

원초적인 소속집단을 초월한 사회통합의 원리는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되어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모델은 전형적인 공화주의 모델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통합’이 본격적으로 프랑스 이민 논의 및 정책의 핵심 개념이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그 배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1974년

29) 프랑스 사례는 엄한진(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학술총서, p.106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노동이민 금지조치가 의도치 않게 이민자들의 정주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노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기한 프랑스에 살게 된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1세기 전 초창기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정주화 현상과 달리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등 비유럽 출신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의 정주화는 적응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반발이 훨씬 심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주의 모델의 위기가 ‘통합’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프랑스 이민역사의 태동기였던 19세기 말 공화주의 이념의 목표는 모든 소수민족을 산업화, 도시화, 병역의무, 정교 분리적인 공교육체제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1세기전과 달리 위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의 소수민족 통합 역량이 약화됨에 따라 모델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나.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형성

프랑스는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국가이다. 프랑스를 ‘문명의 용합처(creuset de civilisation)’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사시대부터 북방형(type nordique)과 산악형(type alpin) 그리고 지중해형(typerméditerranéen) 인종이 프랑스에 정착했고, 이들은 골족(Gaulois)이라 불리며 프랑스 민족의 기본을 이루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제국이 골 지방을 정복하면서 라틴족이 대거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4세기부터는 게르만족들이 남하하여 프랑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11세기에는 노르만족이 침입하여 대규모로 노르망디 지방에 정착했다.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의 유입은 프랑스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을 증가시켰으며, 프랑스는 ‘유럽 문명의 축소판(raccourci de la civilisationeuropéenns)’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켈트족으로부터는 개인주의를, 라틴족으로부터는 법과 단호한 질서에 대한 사랑을, 게르만족으로부터는 건설적 재능을, 노르만족으로부터는 진취적인 기상을 물려받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복, 전쟁, 이주, 합병 등에 의해서 코르시카, 카탈랑, 브르타뉴 등이 프랑스에 통합되었다. 프랑스에는 여전히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지닌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이들은 자코뱅주의적 전통에 문제를 제기하며 코르시카처럼 정치적인 분리나 독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브르타뉴처럼 고유한 문화, 언어 보존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기존 문화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고,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었다. 프랑스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프랑스 정신(esprit français)’이라고 불려왔다.

르네상스 이후로도 프랑스는 매력적인 이주지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등지

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문화,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리마티스 등 이른바 ‘기술 이민’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어 프랑스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많은 이주자들이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했다. 1973년 이후로 프랑스는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치적 망명만은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12만 명의 정치 망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4천 명 정도의 정치 망명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는 노동 이주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2제정 시대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수는 8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에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출신이었다. 이후로도 프랑스는 지속적인 출산을 감소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적극적인 국제이주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프랑스는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노동 이민을 받아들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전후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1931년에는 전체 인구의 7%인 3백만 명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이탈리아의 제노바의 지배하에 있던 섬 코르시카는 1768년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프랑스에 편입되었고, 1790년 프랑스의 행정구역인 도로 지정되었다³⁰⁾.

다.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의 특징

톨레랑스(tolerance)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불가분적·통합적·세속적·민주적·사회적인 하나의 공화국에 대한 강조는 프랑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제로 작용. 프랑스는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에 통합하는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따라서 집단적 권리로서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인정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가 적합하지 않은 사회였다. 그러나 1974년 노동이민 금지 조치가 이주민들이 정주화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고, 이후 이들이 개인으로서의 주류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낙후지역에 종족적 소수자들이 밀집되면서 소수민족집단의 존재가 가시화되었다.

최근 프랑스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종족적 이질성에 대한 인정보다 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사회

30) 이산호(2008), p.12, 7-25.

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

그 형태도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개별 문화들 간의 차이의 확인에 그치는 영미권의 다문화주의와 달리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문화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의 양상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은 소수 집단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화를 통하여 그들을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동화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프랑스식 사회통합모델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오늘날의 이민자 집단은 인종,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주류 프랑스인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류 사회와의 동화가 어렵다. 또한 이들이 주류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은 소수 집단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했을 뿐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소수 문화 인정,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퇴치, 주류 집단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프랑스는 동화주의 이념만을 고수하지 않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라.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2000년대 들어 ‘통합’ 개념이 198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되게 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26일 개정된 <이민의 조절, 외국인들의 체류 및 국적 관련 법>(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à la nationalité)은 ‘통합’이라는 기준을 체류증 발급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이민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 특히 출입국이나 보호감호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위 ‘불법이민’의 상당 부분은 불법입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절차, 그리고 보다 엄격해진 체류증 갱신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강경노선의 주역은 사르코지대통령이었다. 우파인 자크 시락 대통령이 재선된 해인 2002년 내무장관이 된 후 그는 매우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했다³¹⁾.

그 내용을 보면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서 여행자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조건을 요구하고,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체류증을 받거나 프랑스 국적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는 식으로 이민을 어렵게

31) 엄한진(2009), p.47.

하는 조치들을 도입한 것이다.

소위 신이민법이라고 불리는 2006년 7월 개정 <이민 및 통합에 관한 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핵심 내용이었던 이 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가족합류이민(regroupement familial)의 조건 강화, 10년짜리 주민증(Carte de Résident) 취득 요건 강화 등이었다.

이 개정 법률은 통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규정의 도입과 더불어 1974년 이후 중단된 외국노동력 수입의 재개를 선언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변화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럽 이민정책의 변화추세를 보면 1950, 60년대는 자유주의적, 개방적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억압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노동력 확보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해 노동이민을 재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정책이 단순히 더 개방적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이민의 재개는 관광, 건설, 계절노동, 무역 등 몇몇 직종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능력과 재능’(Compétence et talents)이라는 이름이 붙은 체류증이 신설된다. 이 ‘신 체류증’(Une nouvelle carte de séjour) 제도는 자국이나 프랑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이나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3년 체류증을 부여하며 재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주창된 ‘선택된 이민’이라는 개념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불어구사능력’이라는 조건이 강화된다. 이러한 최근 경향은 1990년대 초 국적법 개정 논의 당시 프랑스의 국민적 통합성을 강화시키려는 진영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국적 취득과 관련해 속지주의의 자동적 적용을 비판하며 프랑스에서 난 이민자 자녀에게 16세가 되면 통합가능한지 판단하는 선별절차를 추가하려고 시도했다.

참고로 현재 프랑스국적법을 보면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인인 경우(혈통주의), 부모가 없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출생지주의),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지만 그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 등이다. 국적 취득이 가능한 사례를 보면 프랑스인과 결혼한 후 1년이 지난 배우자, 외국인부모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나고 11세에서 18세까지 최소한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한 아이, 프랑스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모든 성인 외국인은 일정 조건하에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³²⁾.

물론 담론과 현실의 괴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바람직한 외국인’ 담론의 예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환영하는 외국인은 전문기술직 노동자와 고급인력”이라는 직업차별적 편견에 입각한 도입 기준과 달리 실제로 일본사회의 외국인근로자는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다.”(외국인근로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26) 프랑스의 경우도 ‘유용한 이민’, ‘선택된 이민’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불황기 국민의 반이민 정서를 만족시킬 정치적 수사의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2018년에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인권 단체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징역 5년과 벌금 7만5000유로(약 9952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식당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일부만 법정에 서게 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추방 요청을 받는 데 그친다. 최근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3%가 ‘프랑스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응답하는 등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고 르몽드지는 전했다. (조선일보, 2018. 02. 21)

[표 31] 프랑스 시기별 이민정책 주요 내용과 변화

시기(대통령)	집권당	주요 정책	관련 법률	특징 / 배경
초기 이민 (1920~1945)		이민 장려 적극적 동화정책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계 이민
2차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 (1945~1974)		프랑스이민국(ONI) 신설(1946) 1년/5년/10년 체류증 제도 마련		전후 재건 및 경제호황으로 노동이민 장려 1960년대 마그레프 출신 이민 급증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1974~1981)	공화국 민주연합 (UDR)	노동이민 공식 중단(1974) 가족재결합이민 허용		신규 노동이민 중단 및 국내 이민자 정주화

32) 김현주(2018), pp.123-158.

		이민노동자사무국(SETI) 설치 및 이민자통합정책 실시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중도우파 (RPR-UDF)	이민자 귀환 보조금 지원		
프랑수아 미테랑 (1981~1995)	사회당(PS)	불법이민자 합법화		유화정책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의 10년 체류증 자동발급 중단	뒤푸아법 (1984)	이민제한
	공화국연합 (RPR)	외국인에게 생계수단 증명 요구 불법체류자 추방 가능	파스카법 (1986)	이민통제 강화
	사회당(PS)	파스쿠아법 완화 고위통합위원회(HCI) 설치		이민통제 완화 및 이민자통합
	공화국연합 (RPR)	외국인 체류 조건 강화 프랑스 출생 외국인의 자동 국적취득권 말소	2차 파스카법 (1993)	1995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전선(FN) 약진
자크 시락 (1995~2006)	공화국연합 (RPR)	파스카법 강화 외국인 숙소 증명서 제출	드브레법 (1997)	이민통제 강화
	사회당(PS)	이민자 반차별 정책 10년 이상 거주 불법이민자 체류증 발급	슈벤느망법 (1998)	반차별
	대중운동연합 (UMP)	가족재결합이민 요건 강화 <선택적 이민> 허용 불어능력시험	사르코지법 (2006)	2002년 대선에서 국민전선(FN) 르펜 결선 진출
니콜라 사르코지 (2007~2012)	대중운동연합 (UMP)	이민 · 통합 · 국가정체성 · 공동성장부 신설(2007) 이민 제한 및 조건 강화(선택적 이민)	베송법 (2011)	이민제한 및 통제 강화
프랑수아 올랑드 (2012~2017)	사회당(PS)	합법/불법이민 구분 삭제 외국인 권리 강화 프랑스국적 획득 기회 확대 불법이민자가족 추방 사실상 금지	외국인권리 법 (2016)	이민자통합 유럽난민위기 (2015)
에마뉘엘 마크롱 (2017~현재)	전진 (LaREM)	불법이민 규제 강화 체류허가 외국인 처우 개선	이민 · 망명 · 통합법 (2018)	이민통제 강화

마. 충남에 주는 시사점

최근 한국의 이민논의에서 ‘사회통합’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구분과 독자적인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당위로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바로 이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의 한 가지라는 점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경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프랑스는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에 통합하는 소위 공화주의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따라서 집단적 권리로서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인정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가 적합하지 않은 사회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장기불황, 인종주의, 정주이민의 증가, 이민자들의 출신 종족의 다양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공화주의 통합모델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통합’ 개념이 198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되었다. 즉 이전과 달리 ‘통합’이 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의 조건으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통합 및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부에서 다문화주의가 세계화에 적합하지 않은 공화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간주의(interculturalism)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었다. 1980, 90년대에는 68혁명 이후 시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프랑스 지식인의 일부가 다문화주의 모델로 개종하게 된다. 이들의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게 된 프랑스식 국민국가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다문화’가 어떤 고정된 차이에 대한 확인에 머문다면 ‘문화 간’은 문화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의 길을 연다.

‘문화간주의’에서는 상호작용이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정의의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또한 문화간주의는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공통의 공적 문화의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문화 간 교육’은 ‘문화간주의’에 입각한 통합의 방법론으로 1970년대 중반 등장하였다. 문화 간 교육은 이질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오히려 동질성을 강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3)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1980년대까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 시행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은 입국과 체류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책 현안이 시급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민자를 통합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졌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화주의, 2) 다문화주의(또는 다원주의), 3) (차별적) 포섭/배제 정책으로 구분된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을 다수 집단의 사회 속(지배적 문화와 가치)에 융해되어 동화되도록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접근을 취한다. 이는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재일 한국-조선인들이나 결혼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새로 유입된 집단들이 가지는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고용, 교육, 주거 등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영역들에서 일정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차별적 포섭(배제) 정책은 어떤 소수집단에 대해 그 존재를 인정하고 포섭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반대로 배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경우 포섭되도록 하지만, 단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능실습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일본 국내에 체류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배제주의(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에게 특정 영역(예로 노동시장)에의 참여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예로 참정권)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 역시 차별적 배제주의의 형태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른바 ‘내향적(또는 내부, 내적) 국제화’또는 ‘민제외교’(民際外交), ‘민제교류’로 불리는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내향적 국제화 정책은 지역사회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내향적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지원을 하며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사회에 촉진된 ‘다문화공생’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일본 내 외국인 수의 증가와 외국인의 정주화 경향이 증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외국인의 인권 침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긴장, 나아가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동질성을 전제로 구축된 기존 일본사회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일본사회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무너뜨리고 점차 포용적, 개방적 사회로 변화하도록 하는 ‘다문화공생’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을 살펴보면 1) 커뮤니케이션 지원, 2) 생활 지원, 3)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4)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체제 정비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것으로 정의하며, 다문화공생 정책의 대상을 국적이나 민족과는 무관하게 일본에 정주하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을 포함해 모든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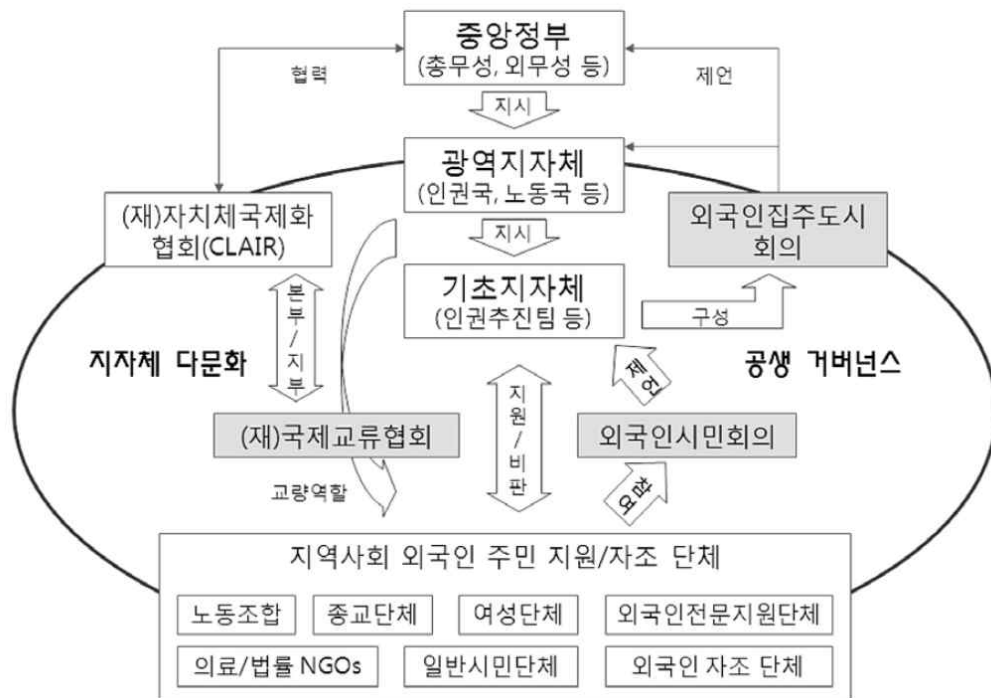
[표 32] 일본의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

구분	내용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지역정보 제공의 다언어화, 생활상담창구 설치, 자원통역자 육성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대한 학습 지원	
2. 생활 지원	거주	다언어 정보 제공에 의한 거주 지원
	교육	학습지원, 미취학 어린이 대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노동환경	직업상담소 및 상공회의소 등과 제휴 취업지원
	의료·보건·복지	병원·약국에 관한 다언어 정보제공, 광역 의료 통역자 파견
	방재	평상시 방재교육과 대책, 긴급 시 소재 파악 및 방재 정보 전달
	기타	상담체제 정비와 인재 육성 및 유학생 지원 등
3.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주민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공생을 위한 교류 모임 등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자조조직 육성, 외국이주민 의견 반영 등
4.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체제 정비	지방자치단체 체제 정비	다문화공생 추진 담당부서 설치, 지침 및 계획 수립
	지역의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제휴, 협력	시구청촌 및 도도부현의 역할 및 지역별 각 주체들 간 제휴 및 협력

출처: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6)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광역지자체 단위인 도도부현과 기초지자체 단위인 시구정촌별로 그 역할을 나누어 시행되었다. 광역지자체는 시구정촌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 과제에 대응하여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과 계획을 세우는 반면,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역 지침과 계획을 입안하며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 광역지자체 및 일부 대도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단위의 (재)국제교류협의회와 이들의 본부격인 (재)자치체국제화협회를 설치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시민회의’를 구성해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지방정부의 시책에 반영한다. 다른 지자체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외국인집주도시회의’라는 협의체를 구축해 외국인 이주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중앙정부(총무성, 외무성)에 제언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최병두(2020)

[그림 9] 일본의 외국인 지원 체계

그러나 일본은 등록 외국인 이주자들만 대상으로 다문화공생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등록(불법) 신분으로 일본 내 지역사회에서 정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당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공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정치·경제적 문제들(예로 참정권 등)을 제쳐 놓은 채, 언어 소통과 같은 문화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가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인재의 유입·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발표하였는데(2018년 12월)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을 처음으로 도모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응책은 크게 ‘외국인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의견청취·계몽활동’,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지원’, ‘외국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대응’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생활편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환경 정비에 머물고 있지만, 외국인의 장기거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육, 정치참여, 반차별 등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3] 일본 지역사회의 외국인 지원 내용

구분	내용
1.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행정·생활정보의 다국어화, 상담체제의 정비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 대처 촉진, 지원
2. 생활환경 개선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의 정비 재해발생시 정보발신, 지원 충실 교통안전대책, 소비자문제, 법률문제, 인권문제 등 생활불편 상담 주택확보를 위한 환경 지원 금융, 통신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3.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일본어 교육의 충실 일본어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관리
4. 교육 지원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 등의 충실
5. 적절한 노동환경 확보	적정한 노동조건과 고용관리의 확보, 노동안전위생의 확보 지역에서의 안정된 취업 지원
6.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 촉진 등

출처 : https://www.kantei.go.jp/jp/singi/gaikokujinzai/kaigi/pdf/taiousaku_honbun.pdf

제4장 충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분석

1.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의의와 구성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노력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 들어 국정 의 핵심과제로 포용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도에서도 타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사회통합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추진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대상 그리고 영역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초기 기초연구로서 연구의 주제에 따라 이주민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사회통합수준과 사회적 신뢰수준, 사회적 참여와 지원수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대하여 각기 우리나라 및 충남도의 수준과 함께 이주민(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충남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0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 조사기간이 다소 연장되었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문리서치업체에 의뢰해 1대1 대면조사로 이뤄졌다.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조사를 위한 주요 설문문항 구성은 다음 [표 34]과 같다.

[표 34] 사회통합 인식조사 문항구성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
사회통합수준	우리나라 및 충남의 통합수준
	국민 및 도민으로서 자긍심
	이주민 포용수준 및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사회적 신뢰수준	우리나라 및 충남, 주변 이웃의 신뢰수준
	이주민 신뢰수준
	우리나라 기관 신뢰도
	사회신뢰도를 위해 필요사항 등
사회참여와 지원수준	우리나라 및 충남의 사회참여도
	충남 이주민의 사회참여도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충남이주민의 지원정도
	기관 및 단체의 참여 수준
	사회참여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사항 등

2.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의 응답자는 총 1,050명으로 이 중 남성 553명(52.7%), 여성 497명(47.3%)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39명(22.8%), 246명(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8명(19.8%), 60대 이상 180명(17.1%), 20대 이하 177명 (16.9%)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77명(45.4%), 대졸이상 400명(38.1%), 중졸이하 174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 일반사항-1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53	52.7	연령	20대이하	177	16.9
	여	497	47.3		30대	208	19.8
	합계	1,050	100.0		40대	239	22.8
학력	중졸이하	174	16.5		50대	246	23.4
	고졸	477	45.4		60대이상	180	17.1
	대졸이상	400	38.1		합계	1,050	100
	합계	1,050	100.0				

거주지별로는 천안시가 334명(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산시 155명(14.8%), 당진시 81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일반회사원이 334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영업자가 228명(21.8%), 농어업종사자가 160명(15.3%),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112명(1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35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대 287명(27.3%), 300만원대 238명(22.7%), 200만원대 이하 190명(18.1%)의 순이었으며 충남에 거주기간은 30년 이상이 465명(44.3%), 15년 미만이 299명(28.5%), 15년~30년 미만이 286명(27.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응답자 일반사항-2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	회사원	334	31.8	거주지	천안시	334	31.8
	공공기관	112	10.7		공주시	53	5.0
	자영업	228	21.8		보령시	49	4.7
	농어업	160	15.3		아산시	155	14.8
	주부	116	11.0		서산시	84	8.0
	학생	86	8.2		논산시	57	5.4
	무직	14	1.3		계룡시	22	2.1
	합계	1,050	100		당진시	81	7.7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90	18.1		금산군	25	2.4
	300만원대	238	22.7		부여군	31	3.0
	400만원대	287	27.3		서천군	25	2.4

거주기간	500만원이상	335	31.9		청양군	19	1.8
	합계	1,050	100		홍성군	48	4.6
	15년 미만	299	28.5		예산군	37	3.5
	15-30년미만	286	27.2		태안군	30	2.9
	30년 이상	465	44.3		합계	1,050	100
	합계	1,050	100				

2) 사회포용

(1) 사회통합 및 자긍심

우리사회의 포용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10점 기준으로 평균 6.22점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지역사회 통합정도는 6.20점으로 우리사회의 수준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포용을 위한 자긍심에 있어서는 통합정도와는 반대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6.38점)보다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6.66)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표 37]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구분	평균점수(10점 척도)
우리사회의 통합정도	6.22점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정도	6.20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6.38점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	6.66점

부문별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에서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우리사회의 통합정도,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정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은 반면,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의 통합정도와 자긍심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면, 시보다 군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천안시의 경우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 정도와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각각 6.42점, 6.85점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당진시는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정도가 6.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논산시와 당진시의 경우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 6.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당진시의 경우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정도와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38] 부문별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구분		우리사회의 통합정도	충남 지역사회의 통합정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성별	남성	6.23	6.24	6.42	6.62
	여성	6.20	6.15	6.33	6.72
연령별	20대이하	5.91	5.85	5.95	6.53
	30대	6.16	6.14	6.32	6.62
	40대	6.25	6.25	6.39	6.61
	50대	6.29	6.31	6.52	6.74
	60대이상	6.43	6.38	6.67	6.82
거주지	천안시	6.37	6.42	6.53	6.85
	공주시	6.13	6.04	6.15	6.43
	보령시	6.06	6.15	6.18	6.47
	아산시	6.11	6.02	6.32	6.62
	서산시	6.14	6.10	6.29	6.36
	논산시	6.11	6.09	6.28	6.65
	계룡시	6.06	6.12	6.20	6.49
	당진시	6.13	6.01	6.24	6.47
	금산군	6.22	6.22	6.44	6.66
	부여군	6.19	6.15	6.35	6.75
	서천군	6.28	6.20	6.42	6.70
	청양군	6.19	6.15	6.53	6.70
	홍성군	6.21	6.13	6.36	6.67
	예산군	6.25	6.18	6.48	6.70
	태안군	6.22	6.15	6.41	6.87
	시	6.14	6.12	6.28	6.54
	군	6.22	6.17	6.43	6.72

주: 점수는 100척도임

(2) 이주민 포용수준

이주민의 포용수준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6.15점으로 다른 이주민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5.32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충남의 포용수준은 6.14점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9] 이주민 포용수준

이주민 포용수준		평균점수 (10점 척도)
전반적인 이주민 포용수준	결혼이주자	6.15점
	외국인근로자	5.32점
	북한이탈주민	5.72점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	결혼이주자	6.14점
	외국인근로자	5.52점
	북한이탈주민	5.83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주민 포용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각각 6.18점, 5.76점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여성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33점으로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결혼이주자에 대해 6.40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55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5.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40대인 중간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 포용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가 결혼이주자에 대해 6.30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40점(보령시와 동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5.79점(보령시와 동일)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안시 다음으로는 보령시가 우리 사회의 이주민 포용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충남도민의 이주민 포용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각각 6.17점, 5.54점, 5.89점으로 모두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의 남성은 여성보다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이 높다는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각각 6.34점, 5.76점, 6.0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체적으로 20대와 60대는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가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각각 6.39점, 5.77점, 5.9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대체로 충남의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민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주민 포용수준에 비해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을 낮게 평가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40] 부문별 이주민 포용수준

구분		전반적인 이주민 포용수준			충남의 이주민 포용수준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성별	남성	6.18	5.32	5.76	6.17	5.54	5.89
	여성	6.13	5.33	5.68	6.09	5.50	5.77
연령별	20대이상	5.87	5.25	5.65	5.98	5.26	5.55
	30대	6.40	5.55	5.78	6.34	5.76	6.05
	40대	6.22	5.33	5.79	6.23	5.57	5.91
	50대	6.15	5.31	5.77	6.13	5.53	5.83
	60대이상	6.07	5.15	5.59	5.94	5.41	5.74
거주지	천안시	6.30	5.40	5.79	6.39	5.77	5.99
	공주시	6.20	5.30	5.76	6.11	5.60	5.76
	보령시	6.21	5.40	5.79	6.14	5.66	5.81
	아산시	6.24	5.35	5.67	6.13	5.53	5.86
	서산시	6.10	5.37	5.73	6.16	5.45	5.79
	논산시	6.09	5.22	5.75	6.09	5.33	5.84
	계룡시	6.18	5.28	5.65	6.01	5.35	5.66
	당진시	5.95	5.24	5.61	5.85	5.23	5.72
	금산군	5.84	5.17	5.74	5.85	5.21	5.58
	부여군	5.98	5.22	5.63	5.85	5.32	5.58
	서천군	6.06	5.23	5.70	6.06	5.29	5.68
	청양군	6.07	5.15	5.69	5.98	5.23	5.65
	홍성군	5.94	5.15	5.67	5.79	5.24	5.69
	예산군	5.96	5.37	5.64	5.90	5.24	5.67
	태안군	5.85	5.20	5.66	5.82	5.34	5.76
	시	6.16	5.32	5.72	6.11	5.49	5.80
	군	5.96	5.21	5.68	5.89	5.27	5.66

주: 점수는 100척도임

(3)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치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치확립’ 17.3%, ‘기회균등’ 17.0%, ‘부패와 특권 타파’ 17.0%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신뢰확보와 법치확립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표 41]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사항	빈도(명)	비율(%)
지역균형발전	153	14.6
정치안정	206	19.7
법치확립	182	17.3
기회균등	179	17.0
시민의식제고	151	14.4
부패와 특권의 타파	179	17.0
합계	1,050	100

부문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조사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정치 안정’ 20.2%, ‘부패와 특권의 타파’ 18.2%로 높았고, 여성은 ‘기회균등’ 19.2%, ‘정치 안정’ 18.9%로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정치 안정을 사회통합의 필요사항을 꼽았지만 남성은 사회정의와 공정을 더 중시한 반면, 여성은 기회 균등을 더 중시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기회균등’ 21.0%, 30대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 19.5%, 40대와 50대는 ‘정치 안정’이 각각 20.1%, 20.0%, 60대 이상은 ‘정치 안정’ 23.9%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는 ‘시민의식 제고’ 24.1%, 공주시는 ‘법치 확립’ 19.1%, 아산시 ‘정치 안정’ 24.3%, 청양군은 ‘부패와 특권의 타파’ 20.9%, 홍성군은 ‘기회균등’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마다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시지역에서는 ‘정치 안정’을, 군지역에서는 ‘법치 확립’을 사회통합의 가장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표 42] 부문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지역균형발전	정치안정	법치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제고	부패와 특권의 타파
성별	남성	15.0	20.2	15.0	16.5	15.1	18.2
	여성	13.9	18.9	16.2	19.2	17.7	14.2
연령별	20대이하	12.8	18.0	12.2	21.0	19.3	16.7
	30대	15.7	15.9	12.0	18.3	18.6	19.5
	40대	13.4	20.1	15.6	16.9	16.5	17.6
	50대	14.6	20.0	18.5	18.0	13.8	15.0
	60대이상	16.0	23.9	19.1	14.8	14.0	12.1

구분		지역균형발전	정치안정	법치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제고	부패와 특권의 타파
거주지	천안시	15.3	17.7	10.6	17.7	24.1	14.6
	공주시	14.8	16.0	19.1	17.6	16.4	16.1
	보령시	14.7	13.9	15.7	15.4	16.6	23.7
	아산시	12.2	24.3	12.2	20.0	15.7	15.7
	서산시	16.2	23.5	15.4	18.9	10.6	15.4
	논산시	12.6	18.6	18.5	20.2	8.5	21.5
	계룡시	8.0	33.9	23.5	5.3	9.1	20.2
	당진시	14.3	17.6	25.0	19.3	11.9	11.9
	금산군	11.1	19.4	23.1	17.9	9.3	19.2
	부여군	15.6	19.0	22.9	10.9	9.7	22.0
	서천군	19.2	28.7	22.4	16.7	4.3	8.7
	청양군	15.1	15.3	20.2	12.1	16.5	20.9
	홍성군	16.9	16.1	20.4	24.6	7.8	14.2
	예산군	10.6	18.6	19.3	17.3	13.6	20.6
	태안군	18.1	19.2	11.6	9.7	20.6	20.7
	시	13.5	20.7	17.5	16.8	14.1	17.4
	군	15.2	19.5	20.0	15.6	11.7	18.0

(4) 이주민 포용의 중요정도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한 사항의 중요도를 보면, ‘한국에서 출생’의 중요도 (중요함+매우 중요함)는 23.4%, ‘한국인 부모’는 24.2%, ‘생애 대부분 한국 거주’는 41.6%, ‘한국어 수준’은 77.6%, ‘한국 문화의 이해 및 수용’은 80.9%, ‘한국 법 및 제도 존중’은 93.7%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이주민의 포용정도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출생하였다거나 한국인 부모를 두었다거나 하는 지역적이고 물리적 요건보다는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등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이며 이에 따른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3] 부문별 이주민 포용의 중요정도

전반적인 이주민 포용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한국에서 출생	명(%)	134(11.8)	409(41.1)	253(23.7)	222(20.7)	32(2.7)	1,050
한국인 부모	명(%)	127(11.7)	343(34.4)	305(29.7)	196(17.2)	79(7.0)	1,050
생애 대부분 한국거주	명(%)	33(2.5)	193(18.8)	378(37.1)	310(29.3)	136(12.3)	1,050
한국어 수준	명(%)	0	28(2.7)	198(19.7)	575(53.4)	249(24.2)	1,050
한국문화 이해, 수용	명(%)	0	53(7.0)	107(12.1)	434(39.1)	456(41.8)	1,050
한국 법, 제도 존중	명(%)	0	10(1.9)	40(4.4)	469(45.5)	531(48.2)	1,050

3) 사회적 신뢰

(1) 사회적 신뢰정도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사회의 신뢰정도는 6.42점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지역 사회의 신뢰정도는 6.51점,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는 6.64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대상이 개인과 가깝고 밀접할수록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충남 지역사회,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는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 사회적 신뢰정도

사회적 신뢰정도	평균점수 (10점 척도)
우리사회의 신뢰정도	6.42점
충남 지역사회의 신뢰정도	6.51점
주변 이웃 신뢰정도	6.64점

부문별 사회적 신뢰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충남 지역사회의 신뢰 정도’ 6.54점으로 여성 6.47점보다 높았고, 여성은 ‘우리사회의 신뢰정도’ 6.47점, ‘주변 이웃 신뢰정도’ 6.69점으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우리사회의 신뢰정도’ 6.62점, ‘충남 지역사회의 신뢰정도’ 6.66점, ‘주변 이웃 신뢰정도’ 6.84점으로 모두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사회적 신뢰 및 충남의 신뢰와 이웃의 신뢰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지역과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부문별 사회적 신뢰정도

구분		우리사회의 신뢰정도	충남 지역사회의 신뢰정도	주변 이웃 신뢰정도
성별	남성	6.37	6.54	6.60
	여성	6.47	6.47	6.69
연령별	20대이하	6.30	6.40	6.55
	30대	6.62	6.66	6.84
	40대	6.40	6.55	6.71
	50대	6.39	6.49	6.57
	60대이상	6.36	6.41	6.52
거주지	천안시	6.62	6.64	6.84
	공주시	6.29	6.46	6.57
	보령시	6.28	6.42	6.50
	아산시	6.33	6.46	6.56
	서산시	6.27	6.40	6.48
	논산시	6.34	6.31	6.50
	계룡시	6.29	6.47	6.43
	당진시	6.31	6.35	6.51
	금산군	6.31	6.46	6.52
	부여군	6.40	6.55	6.60
	서천군	6.32	6.57	6.66
	청양군	6.32	6.59	6.56
	홍성군	6.37	6.51	6.65
	예산군	6.46	6.57	6.69
	태안군	6.33	6.54	6.57
	시	6.34	6.44	6.55
	군	6.36	6.54	6.61

주: 점수는 100척도임

(2) 이주민 신뢰수준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결혼이주자가 5.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 5.54점, 외국인근로자 5.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 5.88점, 북한이탈주민 5.60점, 외국인근로자 5.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사회적 신뢰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주민의 포용을 위한 신뢰도 향상방안과 요인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시 된다.

[표 46] 이주민 신뢰수준

	이주민 신뢰수준	평균점수(10점 척도)
우리사회 이주민 신뢰도	결혼이주자	5.58점
	외국인근로자	5.12점
	북한이탈주민	5.54점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 신뢰도	결혼이주자	5.88점
	외국인근로자	5.26점
	북한이탈주민	5.60점

우리사회 전체 이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성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11점으로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결혼이주자에 대해 5.81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5.58점으로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30대가 6.10점을 가장 높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40대가 5.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역시 40대가 5.8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27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5.57점으로 여성보다 다소 높았고, 여성은 결혼이주자에 대해 5.89점으로 남성에 비해 신뢰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결혼이주자에 대해 5.31점, 30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36점, 40대는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5.69점으로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이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을 보면, 3개 대상 모두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5점대 수준이었으나 군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뢰도가 4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충남도민은 우리사회 전체 이주민에 대한 신뢰수준보다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47] 부문별 이주민 신뢰수준

구분		우리사회 이주민 신뢰도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 신뢰도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성별	남성	5.79	5.16	5.48	5.85	5.27	5.62
	여성	5.81	5.11	5.58	5.89	5.25	5.57
연령별	20대이하	5.53	5.12	5.50	5.87	5.14	5.41
	30대	6.10	5.01	5.31	5.69	5.36	5.69
	40대	5.87	5.25	5.82	6.04	5.31	5.71
	50대	5.79	5.18	5.60	5.96	5.27	5.62
	60대이상	5.64	5.07	5.52	5.86	5.20	5.52
거주지	천안시	5.95	5.25	5.66	5.97	5.42	5.62
	공주시	5.83	5.26	5.65	5.93	5.27	5.68
	보령시	5.90	5.20	5.60	6.01	5.37	5.70
	아산시	5.76	5.20	5.57	5.96	5.40	5.73
	서산시	5.88	5.27	5.55	6.09	5.34	5.59
	논산시	5.69	5.19	5.37	5.76	5.19	5.56
	계룡시	5.62	4.85	5.39	5.63	5.15	5.34
	당진시	5.62	4.92	5.44	5.62	5.04	5.45
	금산군	5.75	4.76	5.39	5.73	4.89	5.60
	부여군	5.59	4.72	5.41	5.80	4.91	5.47
	서천군	5.62	4.64	5.31	5.64	4.95	5.44
	청양군	5.74	4.77	5.27	5.77	5.02	5.51
	홍성군	5.54	4.78	5.35	5.69	4.91	5.41
	예산군	5.72	4.92	5.39	5.63	5.07	5.57
	태안군	5.66	5.05	5.53	5.68	5.13	5.68
	시	5.78	5.14	5.53	5.87	5.27	5.59
	군	5.66	4.81	5.38	5.71	4.98	5.53

주: 점수는 100척도임

(3) 주요기관 신뢰수준

우리나라의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5점 기준) 교육기관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3.63, 종교기관 3.3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등은 3.22점과 3.03점, 3.15점 등으로 교육이나 의료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검찰은 3.02점으로 낮았고, 언론기관은 2.98점으로 유일하게 2점대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신뢰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시 된다.

[표 48] 주요기관 신뢰수준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합계 (평균)
정부	명(%)	23(2.6)	191(20.6)	356(33.2)	442(39.2)	38(4.4)	1,050 (3.22)
충청 남도	명(%)	18(1.7)	156(14.9)	427(40.7)	416(39.6)	33(3.1)	1,050 (3.31)
국회	명(%)	79(6.8)	205(20.9)	408(40.1)	305(27.2)	53(5.0)	1,050 (3.03)
지방 의회	명(%)	18(1.4)	211(19.8)	474(45.8)	300(27.8)	47(5.2)	1,050 (3.15)
법원	명(%)	8(0.5)	274(25.1)	411(39.7)	251(24.8)	106(9.9)	1,050 (3.18)
검찰	명(%)	39(2.8)	358(35.8)	312(30.9)	203(18.0))	138(12.5)	1,050 (3.02)
경찰	명(%)	20(2.3)	258(24.1)	419(38.6)	292(29.1)	61((5.9)	1,050 (3.12)
종교	명(%)	14(1.1)	146(12.6)	427(40.6)	391(38.1)	72(7.6)	1,050 (3.39)
시민 단체	명(%)	27(2.2)	248(21.9)	451(44.8)	286(27.8)	38(3.3)	1,050 (3.08)
교육 기관	명(%)	2(0.2)	64(5.1)	322(32.5)	567(51.4)	95(10.8)	1,050 (3.68)
의료 기관	명(%)	1(0.1)	49(5.7)	334(34.9)	557(50.0)	109(9.3))	1,050 (3.63)
언론	명(%)	30(3.1)	295(28.6)	436(40.5)	244(23.1)	45(4.7)	1,050 (2.98)

(4)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법·제도의 집행이 약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23.1%, 정보의 공정성 제고 1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과 성별 및 연령에 있어 모두 엄격한 법·제도의 집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중요하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신뢰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9]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사회 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빈도(명)	비율(%)
정부의 공정성 제고	204	19.8
엄격한 법·제도 집행	313	30.6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243	23.1
정부 정보의 투명성 강화	179	16.4
시민단체 역할 강화	111	10.1
합계	1,050	100

부문별 우리사회의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엄격한 법·제도 집행’이 각각 31.0%,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가 22.8%, 23.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정부의 공정성 제고’가 25.5%로 가장 높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모두 ‘엄격한 법·제도 집행’이 26.6%, 32.3%, 34.7%,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에서도 시지역, 군지역 모두 ‘엄격한 법·제도 집행’이 각각 29.5%, 29.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0] 부문별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구분		정부의 공정성 제고	엄격한 법·제도 집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제고	정부 정보의 투명성 강화	시민단체 역할 강화
성별	남성	18.9	31.0	22.8	15.7	11.7
	여성	20.9	30.1	23.4	17.2	8.4
연령별	20대이하	25.5	24.4	14.6	24.7	10.8
	30대	26.0	26.6	18.7	17.6	11.0
	40대	18.3	32.3	21.9	16.5	11.0
	50대	16.0	34.7	28.7	12.3	8.3
	60대이상	14.3	33.4	30.5	12.1	9.8
거주지	천안시	18.9	37.0	25.2	12.4	6.4
	공주시	27.5	37.3	20.2	9.3	5.7
	보령시	16.6	28.5	14.1	26.9	13.9

	아산시	23.6	26.8	17.6	14.6	17.4
	서산시	18.7	22.3	26.0	24.8	8.2
	논산시	18.9	28.7	25.9	16.6	10.0
	계룡시	15.3	34.2	25.8	17.1	7.6
	당진시	19.1	21.0	20.6	25.2	14.1
	금산군	18.0	33.3	29.4	13.5	5.9
	부여군	31.6	24.2	22.7	8.0	13.6
	서천군	16.0	28.9	32.4	8.7	14.0
	청양군	23.7	29.8	8.1	22.3	16.1
	홍성군	14.0	25.3	26.4	22.0	12.3
	예산군	14.6	32.8	22.2	25.4	5.0
	태안군	19.0	31.6	31.7	10.5	7.1
	시	19.8	29.5	21.9	18.4	10.4
	군	19.6	29.4	24.7	15.7	10.6

4)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1) 사회참여도

사회참여 및 지원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는 10점 기준으로 약 6.65점이었으며 충청도민의 사회참여도는 약 6.37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참여도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충남의 이주민 사회참여도는 결혼 이주여성이 약 5.41점, 북한이탈주민 약 5.1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65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사회참여도 수준

사회참여도		평균점수(10점 척도)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		6.65점
충남도민의 사회참여도		6.37점
충남이주민의 사회참여도	결혼이주자	5.41점
	외국인근로자	4.65점
	북한이탈주민	5.19점

부문별 사회참여도 수준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에 대해 각각 6.64점, 6.65점으로 비슷했고, ‘충남도민의 사회참여도’에 대해 각각 6.41점, 6.3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충남 이주민의 사회참여도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자-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를 높게 평가했고, ‘충남도민의 사회참여도’에 대해서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와 ‘충남도민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표 52] 부문별 사회참여도 수준

구분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	충남도민의 사회참여도	충남 이주민의 사회참여도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성별	남성	6.64	6.41	5.34	4.70	5.21
	여성	6.65	6.35	5.46	4.59	5.16
연령별	20대이하	6.47	6.41	5.36	4.49	4.96
	30대	6.60	6.17	5.15	4.63	5.21
	40대	6.65	6.28	5.35	4.67	5.20
	50대	6.70	6.37	5.41	4.72	5.23
	60대이상	6.80	6.46	5.53	4.70	5.29
거주지	천안시	6.94	6.57	5.71	5.02	5.44
	공주시	6.61	6.23	5.32	4.52	5.15
	보령시	6.65	6.35	5.39	4.63	5.08
	아산시	6.48	6.33	5.28	4.54	5.05
	서산시	6.49	6.30	5.35	4.62	5.15
	논산시	6.64	6.40	5.45	4.56	5.06
	계룡시	6.61	6.31	5.38	4.59	5.07
	당진시	6.56	6.38	5.32	4.49	5.06
	금산군	6.35	6.17	5.08	4.31	5.03
	부여군	6.44	6.13	5.03	4.21	4.97
	서천군	6.46	6.19	5.25	4.47	5.08
	청양군	6.53	6.18	5.12	4.36	5.06
	홍성군	6.32	6.15	5.12	4.36	5.05
	예산군	6.48	6.25	5.18	4.27	5.10
	태안군	6.42	6.15	5.13	4.13	4.98
	시	6.62	6.36	5.40	4.62	5.13
	군	6.43	6.17	5.13	4.30	5.04

주: 점수는 100척도임

(2)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경제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정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약 6.77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남의 경우는 6.42점으로 우리나라 전체적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충남 이주민의 지원정도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약 5.67점, 북한이탈주민 약 5.41점, 외국인근로자 5.06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필요시 지원정도는 시가 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도는 오히려 군이 시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3]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평균점수 (10점 척도)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6.77점
충남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6.42점
충남이주민의 지원정도	결혼이주자	5.67점
	외국인근로자	5.06점
	북한이탈주민	5.41점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이 필요할 시 지원정도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6.80점, 여성 6.7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았다. 다음으로 충남에서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를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이 6.42점, 6.41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보다 충남에서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는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우리나라와 충남에서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충남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를 보면, 대체로 결혼이주자-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순으로 지원정도가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표 54] 부문별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구분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충남의 경제사회적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충남 이주민의 지원정도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성별	남성	6.80	6.42	5.49	5.08	5.28
	여성	6.75	6.41	5.60	5.05	5.44
연령별	20대이하	6.50	6.30	5.58	4.90	5.37
	30대	6.75	6.39	5.73	5.04	5.19
	40대	6.79	6.41	5.94	5.05	5.36
	50대	6.87	6.46	5.87	5.05	5.39
	60대이상	6.92	6.52	5.50	5.28	5.50
거주지	천안시	7.08	6.59	5.68	5.11	5.53
	공주시	6.61	6.24	5.65	4.97	5.34
	보령시	6.69	6.43	5.56	5.12	5.34
	아산시	6.62	6.38	5.63	5.09	5.26
	서산시	6.65	6.23	5.70	5.02	5.28
	논산시	6.65	6.41	5.63	4.97	5.33
	계룡시	6.65	6.09	5.67	4.68	5.24
	당진시	6.65	6.50	5.60	4.88	5.29
	금산군	6.70	6.51	5.74	4.99	5.35
	부여군	6.66	6.36	5.84	5.08	5.38
	서천군	6.64	6.08	5.73	5.14	5.53
	청양군	6.58	6.15	5.67	5.18	5.52
	홍성군	6.55	6.32	5.67	5.17	5.43
	예산군	6.62	6.26	5.71	5.14	5.58
	태안군	6.54	6.26	5.70	5.20	5.54
	시	6.70	6.36	5.64	4.98	5.33
	군	6.61	6.28	5.72	5.13	5.48

주: 점수는 100척도임

(3) 주요단체에 참여정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의 참여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정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적극적 참여 수준은 약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 수준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단체의 경우에도 약 11%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행정단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로 나타났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나타나 향후 공공기관의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5] 주요단체에 참여정도

구분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매우 적극적 참여	합계
정치단체	빈도(%)	840(79.4)	144(14.9)	51(4.8)	15(0.9)	1,050
종교단체	빈도(%)	520(51.3)	189(16.0)	311(29.4)	30(3.3)	1,050
시민단체	빈도(%)	832(79.7)	170(14.9)	45(4.8)	3(0.6)	1,050
문화단체	빈도(%)	676(66.8)	245(20.4)	115(10.8)	14(2.0)	1,050
친목단체	빈도(%)	235(23.8)	325(30.1)	422(39.3)	68(6.8)	1,050
행정단체	빈도(%)	775(75.2)	207(18.1)	68(6.7)	0(0.0)	1,050

(4) 사회참여와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법제도의 개선’은 21.7%, ‘시민의식 향상’은 2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자치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25.5%로 ‘지방정부의 역할’ 23.8%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제도의 보완’은 17.2%, ‘복지예산의 확대’ 17.0%,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 1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6] 사회참여와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시민의식 향상	216(21.2)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250(23.8)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256(24.0)	중앙정부 역할 강화	268(25.5)
법·제도 개선	238(21.7)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172(16.4)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108(10.5)	복지예산 확대	178(17.0)
관련 사업 지원 강화	126(12.9)	법·제도적 보완	181(17.2)
선거제도 개선	106(9.7)	기타	1(0.1)
합계	944	합계	1,049

부문별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각각 24.6%, 23.3%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0대, 40대는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50대와 60대는 ‘법·제도의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지역별에서도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57] 부문별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

구분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					
		시민의식 향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법·제도 개선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관련사업 지원강화	선거제도 개선
성별	남성	20.4	24.6	24.1	11.7	10.6	8.6
	여성	22.1	23.3	19.0	9.4	15.3	10.9
연령별	20대이하	24.4	27.0	11.2	12.9	12.6	11.9
	30대	20.6	26.4	14.2	13.0	13.5	12.3
	40대	21.4	23.7	23.0	10.2	12.6	9.1
	50대	19.6	22.8	25.2	10.4	13.9	8.1
	60대이상	20.8	20.0	34.0	6.4	11.4	7.4
거주지	천안시	22.4	24.7	19.4	11.7	15.3	6.5
	공주시	25.3	27.0	20.6	7.5	12.1	7.5
	보령시	13.3	23.2	28.3	4.6	18.5	12.0
	아산시	26.2	17.1	19.2	12.2	12.2	13.2
	서산시	16.6	25.9	23.4	10.5	11.8	11.9
	논산시	18.6	23.8	31.6	5.8	11.6	8.5
	계룡시	7.3	28.5	31.4	7.3	15.6	10.0
	당진시	21.1	25.3	16.7	9.6	15.4	11.9
	금산군	25.4	30.0	24.6	11.1	2.0	7.0
	부여군	25.3	28.8	16.1	14.2	10.2	5.5
	서천군	20.4	25.0	25.6	10.7	2.0	16.4
	청양군	23.5	13.9	29.6	10.2	11.6	11.2
	홍성군	21.9	21.8	26.5	11.1	4.9	13.8
	예산군	18.9	26.9	22.1	12.9	12.3	6.9
	태안군	10.0	29.8	21.2	11.5	13.5	14.0
	시	18.8	24.4	23.8	8.7	14.1	10.2
	군	20.8	25.2	23.7	11.7	8.1	10.7

부문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26.0%,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0대, 40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는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가 27.3%,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와 ‘중앙정부 역할 강화’가 각각 25.1%, 25.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군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역할 강화’가 28.2%,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18.3%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지역에서는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방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8] 부문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구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중앙정부 역할 강화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복지예산 확대	법·제도적 보완	기타
성별	남성	26.0	25.5	13.7	17.6	17.3	
	여성	26.9	22.9	19.9	14.6	15.6	0.1
연령별	20대이하	32.5	13.5	21.5	17.8	14.3	0.4
	30대	25.9	21.4	20.5	19.3	12.9	
	40대	27.6	24.7	17.1	16.1	14.5	
	50대	24.8	27.3	14.2	14.4	19.3	
	60대이상	21.5	33.4	9.9	13.6	21.5	
거주지	천안시	34.1	18.8	18.2	13.0	15.8	
	공주시	28.4	21.6	17.7	13.8	18.5	
	보령시	30.9	26.9	8.9	19.2	14.2	
	아산시	26.1	28.7	14.8	18.3	12.1	
	서산시	25.6	23.6	10.7	19.9	20.1	
	논산시	13.0	28.2	18.3	27.7	12.8	
	계룡시	20.5	26.5	16.4	14.4	19.2	3.0
	당진시	22.6	27.5	20.3	12.8	16.7	
	금산군	10.0	36.9	9.1	24.3	19.7	
	부여군	21.4	20.6	19.7	17.8	20.6	
	서천군	16.4	37.3	11.3	20.0	15.0	
	청양군	18.6	23.9	16.5	11.6	29.5	
	홍성군	25.2	19.9	23.5	18.5	12.9	
	예산군	15.6	27.5	16.5	16.5	23.9	
	태안군	20.7	31.4	17.9	6.6	23.3	
	시	25.1	25.2	15.7	17.4	16.2	3.0
	군	18.3	28.2	16.4	16.5	20.7	0.0

3. 요약 및 시사점

우리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통합정도는 6.2점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자긍심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사회통합과 국민 그리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시 된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용수준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가 약 6.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는 약 5.32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포용정도에 있어서는 지역적이고 물리적 여건보다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제도를 수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에 있어서도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의 신뢰도 및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도 모두 6점 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이웃과 충남지역사회, 우리사회 전체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신뢰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의 성격이 상이해 신뢰도 향상 정책이 필요시 된다.

사회참여수준 또한 다른 영역과 비슷한 6점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참여도는 4.6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화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포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 및 포용 등에 대한 개념과 학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포용 및 사회통합 등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우리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및 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학습이 필요시 된다. 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및 아동들에 대하여도 반드시 학습되고 이해되어야 할 내용이다.

둘째, 우리사회 및 충남도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적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밀착도에

따라 통합 및 신뢰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과 밀착되어질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별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들이 필요시 된다. 이러한 사회통합과 신뢰도를 위한 정책들은 다른 복지 정책들과 구분하여 체계화 시킬 필요도 있다.

셋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제도 및 문화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의 포용은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할수록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민 대상별 사회적응을 위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세 가지 유형의 이주민 중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포용과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어떠한 이유로 이주민들의 포용과 신뢰가 문제시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통합 및 포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포용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각기 이주민의 적응과 복지를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틀 하에서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주민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신뢰하는 주체로서 주민들이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신뢰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들이 필요시 된다. 포용하고 신뢰받기 위해 이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 또는 여건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일곱째, 사회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 있어서도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정책과정과 사회의 참여는 우리의 기대보다 미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형식적인 참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이주민들을 위한 참여방식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의 사회참여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방식의 한계 때문

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조사 분석

1.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 대상자로 설정한 계층은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다. 여기서 ‘사회통합 대상자’는 정부와 사회에 의해 강압적인 동화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제와 포용’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 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외국인근로자 10명
- 결혼이주자 13명
- 북한이탈주민 10명 및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6명

■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후 대면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 설문지는 사회통합 대상자용과 관련자용으로 별도 작성

■ 조사시기

- 2020년 8월~12월

2. 충남 외국인근로자 실태 분석

1) 현황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5,275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수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외국국적동포는 17,012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충남 전체 인구의 0.7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비율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충남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가 타 시도에 비하여 인구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시도별 외국인근로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9]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총인구	외국인근로자	(인구대비비율)	외국국적동포	(인구대비비율)
합계	51,629,512	528,063	1.02%	296,023	0.57%
서울특별시	9,673,936	80,567	0.83%	93,067	0.96%
부산광역시	3,395,278	14,779	0.44%	3,911	0.12%
대구광역시	2,444,412	9,718	0.40%	3,172	0.13%
인천광역시	2,936,117	25,539	0.87%	17,295	0.59%
광주광역시	1,490,092	7,515	0.50%	2,829	0.19%
대전광역시	1,511,214	2,903	0.19%	1,821	0.12%
울산광역시	1,150,116	8,818	0.77%	4,948	0.43%
세종특별자치시	312,374	2,013	0.64%	821	0.26%
경기도	13,103,188	205,140	1.57%	118,760	0.91%
강원도	1,520,391	6,553	0.43%	1,818	0.12%
충청북도	1,620,935	20,263	1.25%	8,883	0.55%
충청남도	2,181,416	35,275	1.62%	17,012	0.78%
전라북도	1,818,157	10,863	0.60%	2,158	0.12%
전라남도	1,790,352	17,737	0.99%	2,267	0.13%
경상북도	2,672,902	26,675	1.00%	5,922	0.22%
경상남도	3,350,350	43,665	1.30%	9,305	0.28%
제주특별자치도	658,282	10,040	1.53%	2,034	0.31%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를 말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를 말함

충남의 외국인근로자는 시군별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보령시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외국국적동포는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충남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0]과 같다.

[표 60]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현황

	외국인근로자1)	외국국적동포1)	비전문취업(E-9)2)
충청남도	35,275	17,012	22,247
천안시	9,288	5,977	5,182
공주시	783	199	650
보령시	2,102	186	1,327
아산시	9,050	6,278	4,648
서산시	1,566	1,151	764
논산시	2,474	332	2,166
계룡시	52	26	33
당진시	3,225	1,572	2,227
금산군	979	100	976
부여군	680	73	594
서천군	1,000	43	664
청양군	351	61	305
홍성군	1,372	456	1,153
예산군	1,441	434	1,194
태안군	912	124	364

주 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 2018년도 통계치임

주 2)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의 2018년도 통계치임

2) 심층면담(인터뷰) 분석

충남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영역별 차별(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뷰 대상 :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근로자 10명

- 인터뷰 대상 1-6번: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 7-10번: 건양대학교 이주민 사회통합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³³⁾

② 조사 기간 : 2020년 8월~12월

③ 조사 내용 :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등

④ 조사 방법 : 1-6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1명의 통역사를 대동하여 인터뷰 실시, 7-10번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한국어로 직접 인터뷰하였다.

(1) 응답자 특성

심층면담에 응한 외국인근로자 10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1-6번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통역관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며 7-10번은 한국어 능력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 기본사항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국내 입국년도(거주기간)
1	남성	30대	예산군	몽골	2010년 입국 2015년 본국 귀국 2019년 재입국(6년)
2	여성	40대	천안시	몽골	2011년 입국 2017년 재입국(8년)
3	여성	50대	홍성군	키르기스스탄	2018년 입국
4	여성	60대	홍성군	키르기스스탄	2014년 입국 2015년 본국 귀국 2016년 한국 재입국 2018년 본국 귀국 2018년 한국 재입국(8년)
5	여성	40대	천안시	러시아	2017년 입국(3년)

3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외국인들의 참여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는 건양대학교 이주민 사회통합연구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어 가능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6	남성	20대	아산시	키르기스스탄	2016년 입국(4년)
7	남성	30대	아산시	베트남	2017년 입국(4년 3개월))
8	남성	40대	아산시	중국	2018년 입국(3년 5개월)
9	남성	30대	아산시	베트남	2017년 입국(3년 8개월)
10	남성	40대	공주시	중국	2013년 입국 2018년 귀국 2019년 재입국(6년)

①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사회적 차별과 배제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생활 중 사회단체나 모임 참여에 관한 인식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예산군에 거주하는데도, 아산시의 센터를 찾는 이유는) 몽골어를 사용하는 통역사가 있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천안시에 거주하는데도, 아산시의 센터를 찾는 이유는) 아산센터에 통역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옴. 통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하지 않음. 통역이 필요하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언어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음. 주위에서 누가 모임/활동을 알려주면 가고는 싶음. 그러나 언어가 안 되고, 정보가 없어서 모임이나 활동을 하지 않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센터에 오게 되었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의견 없음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받기 위해 참여함.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기도 하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만난 국적이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남을 갖기도 하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자조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고향의 명절에는 고향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하며, 외국인근로자센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을 하기도 하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하며, 중국인들과의 모임도 자주 함,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곳에 참여하기도 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10명 모두가 “없다”라는 응답을 하였다³⁴⁾. 이렇게 지역사회의 단체/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를 선택하였다³⁵⁾. 다음으로는 ‘거리가 불편해서’를 선택하였다³⁶⁾. 그리고 응답자들은 이러한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이 아닌 ‘언어의 문제’에서 찾고 있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하진 않는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그리고 천안시, 예산군 등에 거주하면서도 주말에 아산의 센터로 나오는 이유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7-10번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러 친구들과 함께 시장이나 마트에 가고 같은 나라 친구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함께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동네)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고향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구미와 평택을 거쳐서 예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예산이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며, 고향과 같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국적의) 남편이 있는 다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일자리로 인하여 이사를 갔음에도, 자신은 홍성에 남아서 가게를 차릴 정도로 홍성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금 거주하는 지역(동네)에 대하여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명의 응답자가 있으나,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아래에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종교상의 이유지만 음식이 안 맞아서 불편하다는 이유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로 인해 한국에서의 고용정보도 공유하고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34) 본 심층면접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2개 센터의 도움을 받은 관계로, 센터 활동에 대한 참여는 제외하였음.

35) 1순위로 4명의 응답자가 응답하였고, 2순위로 1명의 응답자가 응답

36) 1순위로 1명의 응답자가 응답하였고, 2순위로 1명의 응답자가 응답

변경에 대한 내용 등을 서로 공유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거나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들과의 교류로 인해 정보를 교류하여 얻어지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자 외국인근로자(E-9)는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의 교류나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한국어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3] 외국인근로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구미에서 약 2년, 평택에서 약 1년, 예산에서 1년 3개월 거주 중. 예산이 고향과 같다. 제일 따뜻하게 대해준다. 몽골 초원에서 살았는데, 예산의 느낌이 자신의 고향을 생각게 하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8년 정도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 온 곳도 천안이었음. 이제는 거의 고향과 같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홍성에 거주하는데, 사업장(식당)이 여기에 있으며, 가족(남편, 자녀)이 여기에 있다. 안전하고, 기후도 좋고, 생활이 편하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본인은 홍성에 거주한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남았다.(주말부부)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계속 천안 거주하였다.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고향에 있는 것 같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종교상의 이유로 음식이 맞지 않아서 힘들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들을 밑에 있는 노예처럼 생각한다.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아산에서 지내다 보니 아산에서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게 느껴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한국어교육기관에 가서 아산에서 사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 아산에 큰 백화점과 마트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어서 살기에 아주 좋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아산의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모임이 있거나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하는 편이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처음부터 논산에서 일을 하였고 재입국 또한 같은 장소로 하였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고 공부하는 것도 건양대학교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사람(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이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명을 제외하고는 9명의 응답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동네)에 대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산 곳이라는 곳에 대한 정으로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4] 이웃과의 관계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주변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하면서, 좋은 이웃 같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특별한 느낌이 없다. (동네사람들과) 그냥 어울리지 않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배려를 안 하고 무시한다. 외손자 2명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한 경우 있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나를 이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근무 시간 및 활동 시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름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주변의 이웃들과 만나면 인사도 하고 잘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면 잘 지낸다고 한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처음에는 만나면 말도 잘 하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듯 하였지만 지금은 잘 대해준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인사를 먼저 시작한 후부터 동네 어른들이 잘 대해준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물건을 사러가면 친절히 대해주고 인사도 잘 받아준다.

인터뷰 대상자 3번과 4번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주변 사람/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이웃과 잘 어우러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터뷰 대상자 4번의 경우에는 소속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인터뷰대상자 4번은 지역(동네)의 (한국)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배려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신의 외손자가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차별(배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이 아팠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자신을 도와준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5] 이웃에 대한 신뢰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아프거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주변 이웃들이 도와 준다. 평상시에도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처음 한국에 와서 아팠을 때, 이웃분이 전화로 구급차도 불러 주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준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작년에 아이가 다친 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줌. 그때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다. 남편이 연령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전에 아시던 분이 직장을 소개해준다. 언어만 통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많이 어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집주인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의견 없음. 근무 시간 및 활동 시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른다.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회사에서 함께 지내는 한국 사람들이 잘 대해줌.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오랜만에 슈퍼에 가면 오랜만에 왔다고 말을 먼저 시작하며 친절히 대해줌. 가끔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준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줌. 가끔 한국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사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해주기도 한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나는 한국사람처럼 생활함. 사람들은 중국사람인 나에게 잘 대해준다.

이웃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인터뷰대상자 6번을 제외하고는 9명 모두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대화를 통해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힘든 생활에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자신들의 타국에서의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서로간의 신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②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경제적 차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및 구직 시 어려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6]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및 구직 시 어려운 점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E-9 비자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E-9 비자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언어문제 사업체 관련 정보 부족 창업당시 자금 부족(대출 안 됨)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언어문제 사업체 관련 정보 부족 창업당시 자금 부족(대출 안 됨)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나이가 많아서 취업에 어려움 겪음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E-9 비자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E-9 비자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F-4 비자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E-9 비자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F-4 비자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근로자 10명의 업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8명, 자영업이 2명이었다. 자영업은 (러시아)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으로는 비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E-9비자(비전문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의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은 한국으로의 근무지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한 후 자신의 근로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구직 시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언어문제, 사업체 관련 정보의 부족과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대출이 되지 않아 창업당시 자금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F-4비자(재외동포)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의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7]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 처음에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욕을 많이 들었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언어 장벽이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

10명의 외국인근로자 모두 취업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처음에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욕을 많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부족으로 일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큰소리로 다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한국인들이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응답자는 언어 장벽이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차별 경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8] 임금 차별 경험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최저임금 180만원 정도를 받는데 한국인 노동자들은 260만원~300만원 정도 받았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외국인근로자가 100만원 정도를 받으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3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E-9 비자로 들어오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재가 다른 경우가 많음.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바뀌는 경우에 다시 작성할 수 있지만, 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가 없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한국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한국인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받는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임금 차별 경험 없었다.

한국에서의 임금차별 경험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7명의 답변은 임금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3명은 한국에서의 임금차별을 경험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임금의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상여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등과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한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6명의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과의 임금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처음 계약이 이루어진 후 계약서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인과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근로현장에서 오래된 경력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문제로 지적한 것은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센터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70~80%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며, 퇴직금과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많다고 한다.

상여금에 있어서도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간의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주는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난이도 등의 차별 경험은 다음과 같다.

[표 69] 업무의 난이도 등 차별 경험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30대, 예산거주)	이전 회사의 경우, 철을 녹이는 회사였는데, 사업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다.
2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고, 더럽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기 싫고, 안하는 일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넘어간다. 항상 본인이 정신 차리고 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일한다.
3번 (여성, 50대, 홍성거주)	의견 없음
4번 (여성, 60대, 홍성거주)	직장생활 초기에 작업장 청소 같은 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한다.
5번 (여성, 40대, 천안거주)	의견 없음
6번 (남성, 20대, 아산거주)	공장마다 다르지만 지금 공장은 힘든 일은 외국인근로자만 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며칠하고 관둬버린다.
7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8번 (남성, 40대, 아산거주)	일이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한다.
9번 (남성, 30대, 아산거주)	처음보다는 괜찮아졌으며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은 없다.
10번 (남성, 40대, 공주거주)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같이 일하고 있고 차별은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의 난이도와 근로현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1, 2, 4, 6번의 외국인근로자의 답변으로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으며, 근무시간이 맞지 않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공장을 바꾼 경우가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국인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근로현장에서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번과 5번은 업무의 난이도 등에 대한 차별 경험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7번-10번의

외국인근로자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이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같은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과의 차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③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정치적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대다수의 경우 해당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근로자 10인 모두 투표권이 없었으며, 정치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 경험도 없었다. 정치 단체 등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서 가입 또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고,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언어가 되지 않고, 정보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인 관계로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3) 실태와 문제점

외국인근로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이 아닌 언어의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의 부족으로 정보수집에 능숙하지 않으며 소극적 행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종 제 수당 및 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으며, 이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웃이 자신을 도와 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차별이 발생하는 정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충남 결혼이주자 실태분석

1) 현황

한국체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은 F-2, F-5, F-6로 분류할 수 있다. 2011년 12월 15일 전과 후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이 달라진다. 2011년 12월 15일 전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자는 F-2-1이며 후 입국한 결혼이주자는 F-6로 나누어진다.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체류자격인 F-6이 신설된 것이다. F-2-1로 한국으로 입국한 결혼이주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하여도 F-2-1의 체류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F-5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생활하는 결혼이주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2020)의 <2019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충남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다음 [표 70]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70]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총합계	F2	F5	F6
총계	총계	8,819	97	1,701	7,204
	남성	948	3	143	802
	여성	7,871	94	1,558	6,219
계룡시	남성	12		3	9
	여성	57	2	13	42
공주시	남성	49		7	42
	여성	385	8	58	319
금산군	남성	5			5
	여성	247	4	40	203
논산시	남성	32		3	29
	여성	455	8	55	392
당진시	남성	67		16	51
	여성	773	6	185	626
보령시	남성	21	1	1	19
	여성	341	4	44	293
부여군	남성	8			8
	여성	296	9	40	247

서산시	남성	69		13	56
	여성	625	6	150	469
서천군	남성	5			4
	여성	192	5	25	162
아산시	남성	247		43	204
	여성	1,387	13	279	1,095
예산군	남성	20			20
	여성	288	3	34	251
천안시 동남구	남성	154	2	17	135
	여성	934	8	224	702
천안시 서북구	남성	218		33	185
	여성	1,202	7	297	898
청양군	남성	4		1	3
	여성	150	3	11	136
태안군	남성	4		1	3
	여성	216	2	32	182
홍성군	남성	33		5	28
	여성	323	6	71	246

출처: 법무부(2020), 2019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이와 같이 충남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자의 수는 8,8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여성 결혼이주자는 7,871명, 남성 결혼이주자는 948명이다. 체류자격별로 국민의 배우자는 F-2는 여성 94명, 남성 3명으로 97명이고, F-5는 여성이 1,558명, 남성이 143명으로 1,701명이다. 그리고 F-6은 여성이 6,219명, 남성이 802명으로 7,02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수를 시·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7,028명,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1,791명으로 5,237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는 천안시 2,508명, 아산시 1,634명, 당진시 840명, 서산시 694명, 논산시 48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다문화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2019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세부 과제 수는 총 78개이며 소요예산은 1,754.36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단위 : 개, 백만원)

5대 정책목표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비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1	26.9%	554.2	31.6%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21	26.9%	281.36	16.0%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8	23.1%	557.5	31.8%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3	16.7%	261.9	14.9%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	6.4%	99.4	5.7%
계	78		1754.36	

출처: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크게 ①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지원, ②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의 다섯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지원”과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는 결혼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는 정책·환경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층면담분석

충남 거주 결혼이주자의 영역별 차별(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뷰 대상 : 충청남도 거주 결혼이주자 12명, 결혼이주남성 1명

- 인터뷰 대상은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

② 조사 기간 : 2020년 8월-12월

③ 조사 내용 :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등

④ 조사 방법 :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인터뷰 실시하였으며, 3번-13번은 건양대학교 이주민 사회통합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³⁷⁾

(1) 응답자 특성

심층면담에 응한 결혼이주자 13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72] 조사대상 결혼이주자 기본사항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국내 거주기간	자녀
1	여성	40대	홍성군	중국	17년	딸 1명, 아들 1명
2	여성	40대	홍성군	중국	19년	딸 4명
3	여성	20대	논산시	베트남	7년	아들 2명
4	여성	40대	논산시	베트남	14년	아들 1명, 딸 1명
5	여성	20대	서천군	캄보디아	6년	아들 2명, 딸 1명
6	여성	30대	서천군	베트남	9년	딸 1명
7	여성	40대	부여군	베트남	12년	없음
8	여성	30대	천안시	중국	5년	딸 1명

3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외국인들의 참여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는 건양대학교 이주민 사회통합연구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자이다.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어 가능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9	여성	30대	천안시	중국	5년	아들 1명, 딸 1명
10	여성	40대	천안시	베트남	8년	아들 1명
11	여성	30대	아산시	베트남	8년	아들 1명
12	여성	30대	공주시	베트남	6년	없음
13	남성	30대	논산시	카자흐스탄	8년	아들 1명, 딸 1명

①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으로 사회단체와 모임 참여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3] 결혼이주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사회단체/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무교여서 종교단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바쁘다 보니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2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사회단체/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3번 (여성, 20대, 논산거주)	남편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4번 (여성, 40대, 논산거주)	남편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고, 자조모임에 참여한다, 이중언어 강사 활동으로 사회적 참여가 많다.
5번 (여성, 20대, 서천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6번 (여성, 30대, 서천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남편 동료들과 부부동반 고향 방문,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한다.
7번 (여성, 40대, 부여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한다.
8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여한다. 회사모임이나 자조모임 등 참여, 지역사회축제나 행사에 참여한다.
9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10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자조모임에 참여한다, 이중언어 강사 활동으로 사회적 참여가 많다.
11번 (여성, 30대, 아산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한다.
12번 (여성, 40대, 공주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 회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한다.
13번 (남성, 30대, 논산거주)	특수작물재배로 한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에 모두 참여한다.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2명은 “없다”라는 응답을 하였다³⁸⁾. 그리고 결혼이주자 11명은 남편(부인)과 부부동반의 모임을 갖거나 회사에서의 모임 참여활동에 대하여 참여활동 “있다”로 응답하였다. 결혼이주자지역사회 단체/모임활동 참여가 없는 2명이 지역사회의 단체/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의 단체/모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응답의 기저에는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일상의 바쁨을 이유로 들었다. 1번과 2번 응답자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2번 응답자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는 싶으나, 강요하는 게 많아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3번-13번은 남편(부인)의 동료들과 모임에 자주 참여한다고 하였다. 특히 6번은 남편의 동료들과 함께 본국의 방문도 하였다. 4번과 10번은 이중언어 강사의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에는 한국 생활의 부적응과 어려움도 겪었으나 가족의 도움과 먼저 한국에 입국한 모국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고향의 13번, 14번은 특수작물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통과 정보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모임에 모두 참여한다고 하였다. 소식을 함께 나누고, 명절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적극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38) 본 심층면접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센터의 도움을 받은 관계로, 센터 활동에 대한 참여는 제외하였음.

[표 74] 결혼이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이웃과의 관계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아파트에서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주변의 이웃들이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할 때, 자신(의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도와줄 때이다.
2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이웃들과 band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웃 할머니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봐준다.
3번 (여성, 20대, 논산거주)	회사에서 늦게 오면 옆집에 살고 있는 한국 언니가 아이들을 돌봐 주기도 한다.
4번 (여성, 40대, 논산거주)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잘 챙겨주며, 먹을 것도 나누어준다고 한다. 베트남 음식을 해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한다.
5번 (여성, 20대, 서천거주)	같은 마을에 사는 분들이 아이가 예쁘다며 집에 놀러오기도 하고 아이들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한다. 일이 바쁠 때 아이를 돌봐주기도 한다.
6번 (여성, 30대, 서천거주)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가까운 이웃 친구들이나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 교육에서 어려운 점도 함께 이야기 한다.
7번 (여성, 40대, 부여거주)	남편 동료들과의 부부동반 모임할 때 즐겁고 좋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낀다.
8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딸의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과도 아이의 교육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준다.
9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이웃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
10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집 근처 마트나 옷가게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며 친절하게 대해주며 아이와 함께 예쁘다고 칭찬도 해 준다.
11번 (여성, 30대, 아산거주)	집 근처에 사는 한국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잘 나누는 편이다.
12번 (여성, 40대, 공주거주)	아이가 없어서 이웃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하거나 짧은 대화도 나눈다.
13번 (남성, 30대, 논산거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하여 살 펴주며 궁금한 것에 대하여 친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동네)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결혼이주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한 소속감은 자신이 주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 어려워하는 것들을 주변의 이웃들이 잘 도와 줄 때 자신의 지역(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소속감은

동시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있음과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 곳에서 지역사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이웃과의 관계의 돈독함과 친밀성이 쌓아지고 마을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도 높아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많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결혼이주자 남성의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으며,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②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심층면접에 응한 결혼이주자 13명의 업종을 살펴보면, 이종언어강사 3명, 회사원 6명, 전업주부 3명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자 남성이 1명이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였다. 또 다른 1명은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보고 있으며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회사원 6명은 제조업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자 남성은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75]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인터뷰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번 (여성, 20대, 논산거주)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한국 사람보다 비싸게 받는다.
4번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여성, 40대, 논산거주)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없다.
5번 (여성, 20대, 서천거주)	업무적으로 차별받은 경험 있다. (한국 사람들 8시 반부터 일하는데 우리는 8시 15분에 일 시작함)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6번 (여성, 30대, 서천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없다.
7번 (여성, 40대, 부여거주)	한국 사람보다 돈을 조금 받는다.(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음)
8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차별 받은 적 없다.
9번 (여성, 30대, 천안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없다.
10번 (여성, 40대, 홍성거주)	업무적으로 차별받은 적은 없다.
11번 (여성, 30대, 아산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없다.
12번 (여성, 40대, 공주거주)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없다.
13번 (남성, 30대, 논산거주)	차별을 받은 적 없다.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중언어강사 2명은 한국에 입국 한 후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강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자신들의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단지 그 나라 출신이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만 인정될 뿐, 자신들의 학력이라든지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의 나라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차별이라기보다는 자격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프리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한국인 선생님(프리랜서)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수당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신들이 요구·요청을 해야 행정처리를 해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들은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 1명은 이중언어 강사 일을 하며 번역도 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활동영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회사원 2명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함과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주말 수업의 한국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언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언어능력이 향상되면 자신의 경제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한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8번, 13번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였으나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8번은 전업주부이며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정찰제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13번은 자신의 특수 작물에 대한 가격을 외국인이라서 한국인과의 차별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프리랜서 언어강사 일을 하면서 어렵거나 개선을 바라는 점으로는 소개업체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소개업체를 통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2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보다 물건 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찰제 표시가 되어 있는 곳만 이용한다고 한다. 또한,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한국 사람보다 일을 더 하거나 임금을 조금 받는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는 많다는 응답도 있었다.

③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정치적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1번과 2번의 면담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체류자격은 영주(F-5)이다.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역사회에서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 충청도에서 정치적 활동에 경험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1번과 2번의 면담자는 그동안 충청도 지역 안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했다. 그 외 3번-12번의 면담자는 영주권이 아니어서 지역 안에서의 선거권이 없다. 1번과 2번 면담자는 선거권은 있지만 선거 외의 정치단체, 사회단체 활동에는 관심도 없고 적성에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3번-12번의 면담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부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많이 표현한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강사에게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정책 참여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정책, 본인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3번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부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자들은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후보자의 다문화정책이 자신이 거주하는 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투표를 할 때 또 다른 기준으로 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자신들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보육 정책과 관련된 공약과 내용도 관심 있게 살펴본다고 하였다.

3) 실태와 문제점

충남도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의 경우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는 2명이 사회적 참여가 없으며 5명은 사회적 참여로서 남편 동료들과의 부부모임과 회사에서의 행사 또는 모임 참여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라는 응답을 하였다.

결혼이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서의 참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일대일의 대화 참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한국인과의 다르다는 생각과 한국초기 한국에 대한 낯설음과 언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들을 단체모임 참여의 부족 현상과 소속감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충남도 결혼이주자는 다문화정책과 복지정책 및 육아정책을 고려하는 등 자신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와 사회적 참여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경제적 차별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결혼이주자는 직장에서의 노골적인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당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거주지역에서의 소속감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더해주는 역할이 이들을 서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차별에 대하여 업무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약 77%와 차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약 2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차별(배제)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으로 지역사회의 정치적

참여의 투표행사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도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단체/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결혼이주자의 투표 행위와 외국인들의 한국 안에서의 정치적 정책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한국에서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F-2, F-6의 국민의 배우자와 F-5의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과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4. 충남 북한이탈주민 실태 분석

1) 현황

충남은 수도권 제외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사망자, 거주지 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제외) 1,557명이 거주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다.

[표 76]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명)	2,246	2,541	774	261	220	247	145	244	338
여(명)	4,846	7,674	2,167	765	865	826	528	1,020	1,307
합계	7,092	10,215	2,941	1,026	1,085	1,073	673	1,264	1,645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명)	135	192	133	150	125	133	71	7,955	
여(명)	464	604	489	462	412	372	247	23,048	
합계	599	796	622	612	537	505	318	31,00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통계 (2019.12)

[표 77]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시군명	남	여	계	비율(%)
합 계	328	1,229	1,557	100.8
천안시	87	379	466	30.6
공주시	18	56	74	4.8
보령시	17	65	82	6.6
아산시	89	345	434	27.6
서산시	57	130	187	11.9
논산시	0	9	9	0.6
계룡시	0	3	3	0.1
당진시	24	80	104	6.6
금산군	1	13	14	0.9
부여군	12	32	44	3.1
서천군	0	11	11	0.6
청양군	4	24	28	2.0
홍성군	10	36	46	3.0
예산군	7	23	30	2.0
태안군	4	3	7	0.4

출처 :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충남은 2009년 전국 지자체 중 6번째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남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 서비스 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군별 맞춤형) 사업 등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 차원의 필수사업 추진과 함께 각 사·군별(9개 지역)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2) 인터뷰조사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영역별 차별(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인터뷰 대상 : 충청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15명,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정착 지원 기관 이해관계자 6명
- ② 조사 기간 : 2020년 8월 ~ 11월
- ③ 조사 내용 :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등
- ④ 조사 방법 :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가) 이해관계자 조사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정착 지원 기관 이해관계자 6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8]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이해관계자 기본사항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충청남도 거주기간	소속기관
1	남성	40대	안성시	출퇴근 3년	○○산업
2	여성	50대	천안시	25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	여성	40대	천안시	12년	남북하나재단
4	남성	30대	아산시	35년	○○주식회사
5	여성	40대	천안시	13년	남북하나재단
6	여성	30대	천안시	15년	충남하나센터

①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무관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말투, 문화적 차이’를 선택했으며, 그 외 ‘경제적 활동으로 여유가 없어서’, ‘남북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부족’ 등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답했다.

[표 7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기존 남한 교육 및 인식 자체가 북한은 적으로 간주 하거나 대부분 핵, 전쟁 등과 연결이 많이 되어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탈주민이라는 부분보다 “북한”이라는 글자나 말이 붙는 순간 부정적 선입견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그들에 대한 편견(그들이 이런 모임의 취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 또는 과연 잘 맞을까?)과 설령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말투와 문화적 차이는 모임에 대한 이해도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적응에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직장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직장 내에서 북한이탈직원들만의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 또는 경향이 대체로 부족하다. 직원들 간 대화에서 북한 특유의 거칠거나, 쏘는 듯한 말투 등이 간혹 적대적인 듯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정도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에서 사회통제 및 상호간의 감시 체계 속에서 ‘생활총화’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고와 방식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 상대방이 언제 자신의 단점을 들추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하다보면 뒷말이 나오고, 자신을 비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경력, 학력이 없는 탈북민이 주로 선택하는(충남지역에서) 직종은 생산직이 많으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서비스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자신의 여유시간에 단체활동이나 지역사회 모임을 할 수 있는 생활적 여건이나 심리적 여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민으로서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고 싶다거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정보의 부족,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모이는지도 모를뿐더러 지역사회 단체 모임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다. 인적자원 중 이러한 단체로 이끌어 줄 만 한 사람이 있다면 접근성이 높아지겠으나 이러한 남한사회의 인적자원도 만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활동 참여에의 접근에 대한 벽이 높은 편이다.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폐쇄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남한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가난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기적이다’ 등을 부정적 인식으로 답했다.

[표 80]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여전히 학창시절의 일방적 교육으로 북한은 주로 군사훈련 아니면 일 하는 이미지가 많아 교육시설 등이 부족 하고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생각되어 학력이 낮다면 능력도 낮다고 생각되는 편이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 타인을 믿지 않아 신뢰감이 낮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에서 제대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직업경험이 없어 일을 못할 거라는 편견이 많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채용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북한이탈직원들만의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남한 직원의 적극적인 ‘대시’ 가 없는 한, 북한이탈직원들의 선제적 모습을 찾기 힘들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사람과의 관계나 정서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물질적 도움만을 원하는 것 같다. 예컨대, 일반적인 안부 전화에는 무시하거나, 연락이 없다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한다.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현재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정보나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난해서 탈북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독재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수 인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배급의 부족-배급의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탈북-가난.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부족, 북한의 경제수준이 낮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사람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북한의 다양한 모습이나 기술 등에 대해 믿지 않거나 거짓정보, 홍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생활력이 강하다’를 긍정적 인식으로 답했다.

[표 81]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탈주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일거고 그래도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생활력은 강한 것 같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목숨을 걸고 탈북한 자체는 대단한 역경을 극복하였다고 생각되고, 특히 탈북 과정에서의 험난한 과정은 존경할 만하다. 언어를 빼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정착 하는 과정 자체는 역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상상 해봤을 때 생활력이나 정신력은 강하다고 생각된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런 강인한 정신력에서 생활력과 성실함이 높다고 평가한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직장 내에서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책임감)가 강하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자신이 살아온 배경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경외심, 목숨을 걸고 선택한 용기와 패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든다. 언론에 보도된 탈북 다큐멘터리와 예능, 유튜브 등에 영향이 큰 것 같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어려운 탈북의 과정을 지나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 남한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부정적인 모습)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도 힘든 일 인데 나라를 벗어나 탈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매체에서 전하는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탈북의 과정을 지나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한, 강한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민이 많이 않던 7~80년대의 경우는 귀순용사 등의 단어와 언론의 큰 보도 등이 있었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현재 남한 사회의 중년세대는 탈북민에 대한 강한 정신력과 용기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82]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한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 40대, 안성시거주)	탈주민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사도 별로 없다고 생각되며, 실제 본인이 아니면 어떤 지원이 충분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 부분이다.
2번 (여성, 50대, 천안시거주)	대부분의 지원이 초기에 쏠려있음은 어느 순간 복지절벽의 느낌이 들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지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3번 (여성, 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적응기간을 정부에서는 6개월로 보고 그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 수급비가 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지역에 전입 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준비(건강문제, 심리적인 상담 등)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문제되는 상황들을 정부나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한다. 상담사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짧게는 1년~20년까지 거주하다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 입국 후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 살던 자녀가 한국에 와서 한국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또는 학습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4번 (남성, 30대, 아산시거주)	남한은 영문표현이 생활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을 하는 경우 문화적 차이로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의 교육 또는 적응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번 (여성, 40대, 천안시거주)	미래행복통장, 취업장려금 등 북한이탈주민이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제도가 집중되어 있다. 연로하거나, 학력기 대상자, 임신과 출산, 중증질환자 등 상황상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 이후 전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의 지자체의 혜택을 느끼는 부분이 가전제품, 현금 등의 직접 지원을 받았을 때 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 물품(가전제품, 가구 등)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차등이 있다. 충청남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령시는 초기전입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원, 세종지역 50만원 물품 보조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개별에게 지원이 된다. 다른 지역은 교육 및 사업의 형태로 사업비가 운영되어서 북한이탈주민이 피부로 지원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국민임대의 빈집에 배정받는다. 하나원과 재단에서

	받은 일부 물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작지만 세심한 지원제도와 인적 자원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정착지원법과 지자체의 지원을 충분하다 생각한다.

②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북한이탈주민 채용 과정에 경험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을 어려운 이유로 답했다.

[표 83] 북한이탈주민 채용 과정에 경험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대부분 한국 초,중,고 교육을 받았다면 문제없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교육 자체가 다르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이해가 간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가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였기에 그 간격을 좁히기는 어려움이 많다. 초과근무, 이윤추구를 위한 성과주의, 복무 점검이나 의사소통의 창구 등 관련하여 극복하기엔 한계점이 너무 많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제조업이나 일반사무행정 등 업체에서는 일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나 탈북민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경험이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한국과 너무 달라 초기에 직업에 신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면접 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활한 면접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내국인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질문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돌아오나, 북한이탈직원의 경우 단답형 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 취업장려금 등 5년 안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초기정착 6개월 이내부터 자신의 경험, 흥미, 가치관 등과는 무관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직무훈련기간이 없거나, 짧은 직종으로 단순노무직(생산제조, 청소직 등)과 요양보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직장 예절과 문화, 대인관계 스킬 등이 낫다보니 오해가 쌓이는 일들이 있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탈북민은 남한사회에서의 경력, 학력이 없으므로 취업 시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의사간호사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도 다시 남한에서 교육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그 외

	<p>일반적인 탈북민의 경우 (특히 여성) 장사나 가사 및 육아 외에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어 다시 한국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p> <p>그 외에 언어의 경우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화와 역사 그리고 너무 오래 분단되어 온 시간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새로운 언어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어를 읽고 들을 수 는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사투리나 억양, 발음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등의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취업현장에서도 단어를 알아듣기 어렵거나 동료 및 직장 내에서 어휘선택, 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 나타난다.</p>
--	--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취업과정 또는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많다’고 주로 답변하였다.

[표 84]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취업과정 또는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는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어디서 고용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주더라와 같은 이야기는 흔히 듣는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한국은 능력위주의 조직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일 뿐 출신으로 인한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편견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 관련 일을 해보지 않았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주변의 자극요인들(관련 직무 종사자들의 성공담 같은 포탈 검색이나 직업정보 등)을 충분히 경험한 남한 사람들 중 남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취업지원을 하다보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탈북민 채용의사를 확인하는데 채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는 업체가 더러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채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거나 주위 업체에 채용한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간혹 채용의뢰 부서에서 북한이탈직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 간 면접에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5번 (여성,40대,	채용자 및 기업의 일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를 채용하기보다는 ‘말이 통하니깐’ 하는 단순한 이유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이

천안시거주)	기피하는 일자리로 근로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이니깐 수용할 것이라는 태도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채용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차별보다 근로 시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에 의한 차별은 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차별, 그리고 여성인구가 많은 특징에서 오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도 종종 발견되는 사례이다.

③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참여 또는 관련단체 활동이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적 활동으로 바빠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무관심’, ‘정치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답했다.

[표 85]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참여 또는 관련단체 활동이 어려운 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남한 적응이 어려워 경제적 활동에 바쁘다면 정치에 관심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남북 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나 관련 활동은 예민한 문제라고 본다. 또한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선 관심이 정치일까? 경제일까? 생각해볼 때 선행과제가 해결된 후에 정치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초기 전입 후 탈북민들은 경제활동이 가장 큰 목표다. 취업을 하고 직장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그 외의 다른 것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투표참여나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또한 투표가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를 교육으로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북한이탈직원 대부분은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인다. 이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치 참여 또는 관련단체 활동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취업과 생업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관심 분야가 낮은 편이며, 정치에 대한 분야도 그러하다. 북한에서 지도자와 정치활동은 받아들여야하는 입장으로 남한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인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

6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남한사회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활동할 수 있는 단체나 가입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지키고 활동하는 것이 탈북민 본인의 남한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탈북민의 대다수가 경제활동 및 자산형성, 중국 및 북한으로의 송금, 가족초청 등 개인적인 이유로 탈북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치 참여나 정치적인 단체활동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의 환경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정치성향은 비슷해 보이나 크게 관심이 없으며 경제적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면이 많다.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남) 등에서 제공하는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또는 정치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86]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남성,40대, 안성시거주)	직접 교육이나 정보를 접한 탈주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2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고, 단 일성이 아닌 다소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3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특별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탈북민들은 정보제공 책자나 리플렛에 거의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민의 정치성향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선거 및 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참여하는 경우 많지 않다.
4번 (남성,30대, 아산시거주)	대부분의 북한이탈직원은 경제적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갈 것으로 생각된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 언론 등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행보와 결과에 대한 실망이 반복된다.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카페와 카톡 등)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극단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누구를 뽑으면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에 보낸다더라 등
6번 (여성, 30대, 천안시거주)	선거에 대한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나 정부의 수준에서 제공하는 정치 활동에 대한 교육, 정보 등은 탈북민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여 보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 등이 더 빠르고 파급력이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조사

북한이탈주민 15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의 특징은 아래 [표 87]과 같다.

[표 87]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기본사항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충청남도 거주기간	북한 학력
1	여성	30대	천안시	2년	고졸
2	여성	40대	천안시	1년	전문대
3	여성	50대	천안시	1년	전문대
4	여성	60대	천안시	13년	중졸
5	여성	40대	천안시	5년	고졸
6	여성	50대	천안시	5년	대학교
7	여성	40대	천안시	5년	고졸
8	여성	40대	천안시	2년	전문대
9	여성	40대	천안시	5년	고졸
10	여성	30대	천안시	1년	고졸
11	여성	30대	서산시	4년	고졸
12	남성	20대	서산시	2년	중졸
13	여성	40대	아산시	1년	고졸
14	여성	40대	아산시	10년	고졸
15	여성	40대	아산시	5년	고졸

①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 경험에서 4명을 뺀 11명이 친목 및 사교 단체(4명), 종교 단체(3명), 취미 및 스포츠 단체(2명), 봉사 단체(2명) 등의 활동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인터뷰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다르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활동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모임 활동의 이유로 지역 사회의 정보를 얻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단체/모임 보다는 남한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단체/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다.

[표 88]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활동 참여 경험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친목 모임에 나가며,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얻기 위해 나간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성당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간다. 남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남한 정보도 얻고 남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지역 정보를 얻기 위해 모임 행사가 있으면 참여한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활동을 하고 있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남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며 지역사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정보를 얻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남한을 이해하고 싶어 여행모임 활동하고 있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남한 사람들과 교류가 남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도움만 요청해서 오히려 남한 사람이 편하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만 만나다 보면 정보를 얻는 게 없다. 서로 힘들다는 이야기 밖에 안 해 오히려 남한 사람들과 만나는 게 편하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외국인 남편이 취업을 못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없고, 일을 하느라 시간내기 어렵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주중에는 일 때문에 여유가 없고, 주말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모임 등에 나가지 않는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단체나 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친한 지인들끼리의 모임을 주로 갖는다. 단체활동도 과거에는 했었는데, 북한이탈주민끼리 교류에만 머물러 나가지 않는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남한의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친목 모임에 나간다.

“나는 소속되어 있다 또는 이곳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5명, ‘조금 그렇다’ 4명으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 선택을 했으며, 나머지 6명도 ‘보통’을 선택해 부정적 답변이 없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소속감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닌 본인 노력의 성과물로 보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9] 나는 이곳에 소속 혹은 이곳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아직까지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중이고, 문화의 차이를 느끼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지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뗏뗏이 살아가는데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남한의 언어, 문화, 습성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다. 생활하거나 일터에서 배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아직 이곳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한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사회에서 취업하고 일하는 동안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나 자신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남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색함이 있다. 언어와 말투에서 또는 문화적 차이로 모르는 것이 많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려고 한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남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지내다 보니 나 자신도 남한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소외나 편견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 태도에서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회사에서 남한 사람들이 색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많은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잘한다고 해주시고 나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어 나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남한 사람들은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할 뿐 내가 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출근하여 그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남한의 한 시민으로 다니고 있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대한민국 국민인게 너무 좋았다.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웃고 떠들고 할 때 나도 당당하게 이 곳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동료들과 나란히 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똑같이 일한만큼 월급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는 당당한 한국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한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기보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누가 물으면 북한에서 왔다가 말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취업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을 때 나는 남한의 몇몇한 국민 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다.

“주변 이웃들은 나를 이웃으로 인정한다”라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5명, ‘조금 그렇다’ 2명, ‘보통’이 5명이었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3명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인 경우(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많았다) 이웃과 교류할 시간이 적다는 답변이 많았고, 거주지 이웃 보다는 직장 동료들과의 친밀도나 유대감이 더 컸다.

[표 90] 주변 이웃들은 나를 이웃으로 인정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몇몇은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친하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아파트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류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다만 같이 일하는 분들로부터 친동생처럼 사랑을 받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정 다감하게 아려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처럼, 친동생처럼 살뜰히 도와 준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북한 말투와 문화 차이 때문에 남한 사람과 섞이는 게 쉽지 않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출퇴근 시 이웃하고 마주칠 때 서로 인사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사는 곳이 보통 임대아파트가 많아 거주자들이 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아 평상시 교류가 별로 없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들끼리 교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하소연만 하니).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다.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생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다 바쁜 것 같다. 특히 아파트에 살다보면 이웃을 만날 시간이 없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서로를 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승강기에서 마주칠 때나 이웃과 인사한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이웃과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건강에 대해서도 묻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웃이 많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주로 회사 동료들과 연락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을 좋게 봐서인지, 주변 이웃들이 잘해준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주변 이웃들과 따로 어울릴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 출퇴근시 일상적인 인사를 나눈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바쁘게 살다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는 이웃도 있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먼저 안부도 물어주고 필요한 물품도 챙겨주는 이웃도 있다. 열심히 살라며 격려해 주는 이웃도 있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이웃들이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가 5명, ‘조금 그렇다’가 1명, ‘별로 그렇지 않다’가 1명이었다. 옆집 이웃과 신뢰를 쌓을 기회가 없던 이유가 개인 소통의 적극성 문제라기보다는 남한에서의 일반적 생활 방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91] 나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2명 정도 이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를 가진 여자들끼리 육아 등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 하고 서로 상담도 해 주며 많이 의지도 한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남한사람의 대화 방법이 어렵다. 칭찬도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다(북한사람들은 직언을 한다). 남을 신뢰할 줄 알아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노력한다면 신뢰는 쌓이는 것이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남을 무작정 믿고 사귀는 것이 어렵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이웃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아 교류가 별로 없다. 살면서 별다른 일없이 이웃과 지낸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이웃과 교류나 만날 시간이 없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웃을 무작정 신뢰할 수 있을까?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아파트라는 특성상 이웃과 교류가 힘들다. 남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7번	승강기를 사용하다보면 먼저 인사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사는 곳의 이웃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이 생긴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아파트라 출퇴근 빠고는 이웃끼리 얼굴보기 힘들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웃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복도에서 인사 나누지만, 많은 시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남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 특별히 교류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남한은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낮선 환경에서 내가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기에 이웃을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기에 신뢰하고 있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이웃과 교류할 시간이 없어 신뢰한다고 안한다고도 할 수가 없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출퇴근 때 외에는 개인적 만남이 없어 이웃과 대화 시간이 없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이웃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그 뒤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자주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었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신뢰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한 번 더 말을 걸고 하다보면 이웃도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질문에서 ‘보통’ 5명, ‘매우 그렇다’ 5명, ‘조금 그렇다’ 5명으로 부정적 답변이 없었다. 앞의 질문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류가 없다는 답변들이 많았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을 때 이웃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이웃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대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졌다.

[표 92]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생각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남한에 정착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나 중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 오니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나도 남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옆집 도움도 받아봤고, 경비원 아저씨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남한에 오랫동안 살았다. 처음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좋은 곳 같았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솔직히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내가 어려움에 시달릴 때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 믿는다. 나 역시도 누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도와줄 거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친해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남한 사람들은 이웃을 비롯해 본인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남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경비원 아저씨에게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옆집은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도움을 받은 적이 많다. 나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다니는 교회 지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웃도 좋은 분들이 살고 있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응쾌히 도움을 주셨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도와줄 만한 상황이면 도와줄 수도 있고, 바쁘면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외면한 이웃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서로 바쁘게 살지만 누군가 급박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못 본척하고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한국 정착 과정에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언젠가는 도움주신 빚 갚겠다고 했더니 열심히 잘 정착해서 사는 것으로 보답하면 된다고 해 고맙다. 지금도 어렵거나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신다고들 하신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이웃에게 도움만 받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도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②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식 억양 때문에’와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93]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북한식 억양 때문에 많이 거절을 당했다.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이유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식 억양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남한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서 대화가 더 어려웠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구직 때문에 전화 걸면 억양 때문에 거절당했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나이가 많으면 취업하기 힘들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식당에 취직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관을 많이 겪었다. 단어 뜻이나 강한 억양 때문에 동료끼리 오해가 되기도 한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나이가 많으면 일단 잘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북한식 억양 때문이라도 취업이 힘들다. 요양보호사로 주로 취업한다. 하지만 급여가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된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다보니 쉽게 채용이 되지 않는다. 언어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언어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경력이 없다보니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 억양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고 그게 나에 대한 편견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회사, 식당 모든 일에서 경력이 없어서 자신감도 없어지다 보니 스스로 위축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 같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남한의 대부분의 직무들이 내가 경험해 본적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다 보니 힘들었다. 특히 육아와 경제활동을 함께해야 했기에 맞는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막상 회사에 취업을 해도 처음 하는 일이라 직무관련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식 억양 때문에도 취업이 쉽지 않았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에서 배운 지식으로 남한의 사무업종에 일할 수 없었다. 나이 때문에 경력 부족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경력이 없으니 구직활동이 쉽지 않았고, 공부하여 자격증도 많이 났지만 나이에 비해 관련 직무 경력이 적어 서류에서 많이 탈락되었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식 억양 때문에 취업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막상 취업이 되어 동료로 지내면서 서로 알아가다 보니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관이 사라졌다했다.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조사자 대부분이 ‘북한식 억양’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4] 취업 과정에서 차별 경험 시 차별 내용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작은 사업체에는 차별이 있음(종종 경험함). 큰 사업체는 북한이탈주민이라 차별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해야 한다고 남한 사람들은 말한다.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했는데 차별은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차별은 없는 것 같다. 작은 소규모 업체는 차별이 있다고 들었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신분증이 있다고 했는데도 억양을 듣고 내국민만 쓴다고 거절당했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왜 한국에 왔는가, 북한에서 그냥 살지, 그러니깐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북한사람들은 문화, 경제, 인식이 떨어진다고 말은 했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 사람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 외래어가 바로 이해되지 않아 대화를 중단하면 그걸 무시 받았던 경험이 있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북한식 억양을 문제 삼아 거절한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억양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안 된다는 경험에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엄연한 한국인인데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많다. 미디어나 SNS 등에 잘못된 정보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저 학력, 가난하다는 잘못된 편견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편견(외국인으로 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도 억양이 싸지만 북한이탈주민처럼 편견을 갖지 않는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억양을 들어보고 중국교포냐고 물어본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탈북민을 안 받는다고 거절한다. 이런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다. 언어(말투)에 대한 오해, 말투가 공격적이라 동료 간 갈등이 많아 안 뽑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 같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직접적인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다. 다만 서로가 다르다 보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식 억양 때문에 면접에서 조선족이나 물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니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었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취업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식 억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취업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없다’라는 답변이 주로 많았으나, ‘힘들고, 귀찮고, 한국 직원들은 안 시키는 일을 강요’ 받은 경험 등도 있었다.

[표 95] 취업 이후 차별 경험 내용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는데 한국 직원들은 주방 일을 절대 안 시키는데 나에게서는 여러 가지 한국 직원들이 안하는 일을 다 시켰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현장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은 북한사람들에게 시키려고 한다. 나도 쉬고 싶다고 하니 무시하고 하라고 강요했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북한에서는 외래어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 일 하면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무시를 받는다. 북한은 정시 퇴근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남한은 그게 아니라 서로 오해의 이유가 된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은 자기 일은 다 알아서 잘하는데도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욕을 먹기도 한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편견이 없다. 오히려 40대가 편견이 많다. 탈북민은 북한과 다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

주: 나머지 응답자는 차별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비교해서 임금을 덜 받은(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모두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있어 차별 대우 경험도 확인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동료보다 어려운 일을 맡거나, 위험한 일을 담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2명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업주에 의한 부당한 대우도 있지만 동료들에 의한 부당한 차별 경험도 확인되었다. 반면, 부당해고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두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96] 북한이탈주민이기에 어려운 일 또는 위험한 일 경험 여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같은 종업원이라도 어렵고 위험한 일은 중국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을 주로 시켰다.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힘든 일도 당연히 할 거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문화, 경제 등이 남한 보다 낮다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특히 작은 사업체일수록 더 함) 차별은 업주 보다는 현장 동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③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남한에서 투표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10명이 ‘있다’ 답했으며, 5명은 ‘없다’고 대답했다. 투표를 해 본 북한이탈주민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 투표를 해 본 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생업으로 바빠서나 후보 선택이 어려워 투표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표 97] 남한에서 투표 경험 여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30대, 천안시거주)	없음 (너무 바빠서)
2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북한은 투표에 무조건 참가해야 하며, 또한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와서 첫 투표를 하면서 내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제일 인상에 남았다.

3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없음 (관심이 없어서)
4번 (여성,60대, 천안시거주)	내 손으로 정치인을 뽑는 민주주의 의사,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내 의지에 의한 자유 투표권의 행사라 늘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한다.
5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투표권 행사가 남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 표현이고, 내가 통치자를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투표한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없음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라 선택이 어려워)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내가 뽑고 선출하여 정치가 실행됨으로써 후회가 없을 듯 했고, 더 믿음직하게 국민들을 위해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믿어주고 싶은 마음에 투표를 한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배우고, 투표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였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없음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없음 (정치에 관심이 없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남한에서 처음으로 참가하는 투표라 투표 방식이 너무 궁금하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에서 반강제적인 투표를 했다면, 남한에서의 투표는 떳떳하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거라 꼭 투표를 하고 싶었다.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느낌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북한에서는 강압적으로 무조건해야 하는 투표가 남한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좋았다. 내가 뽑은 사람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좋았다.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1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 운동에도 직접 참여한 경험 이야기 하였다. 나머지 9명은 육아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98] 남한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 여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9번 (여성, 40대, 천안시거주)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이 권해서 지방선거 때 참여하였는데, 남한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에 무척이나 실망하였다. 자유민주주의니까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남) 등에서 제공하는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서 15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표 99]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의 도움 여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1번 (여성, 30대, 천안시거주)	하나원에서 선거에 대한 교육은 받았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잘 와 닿지가 않았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선거나 정치활동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다.
2번 (여성, 40대, 천안시거주)	하나원에서 모의투표도 배워봤다. 여러 번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3번 (여성, 50대, 천안시거주)	하나원에서 남한의 정치와 선거참여 등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퇴소 이후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4번 (여성, 60대, 천안시거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긴 하나, 실제 현실에서 차이가 있다. 조금 더 교육이나 정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충남에서도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 못했다.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5번 (여성, 40대, 천안시거주)	남한의 정치는 서로 믿어주고 힘을 합쳐 잘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TV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만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없다.

6번 (여성,50대, 천안시거주)	선거참여나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남한 정치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이 더 높아질 것 같다.
7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모든 국민이 행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활동 교육이나 정보들은 정치체제 이해 또는 참여고 실질적으로 해야지만 옳고 틀리고 판단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8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하나원 외에는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
9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교육이나 정보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적인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해야 접할 수 있어 아쉽다.
10번 (여성,40대, 천안시거주)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람이 우리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과 능력이 있는지 몰라 투표를 선택하지 못했다. 관련 정보를 평소에도 제공받는다면 이러한 고민은 해결될 것 같다.
11번 (여성,30대, 서산시거주)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선거나 남한의 정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12번 (남성,20대, 서산시거주)	기존에 받은 교육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남한에 처음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남한의 정치에 대한 교육과 선거참여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13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선거참여 등에 관한 교육은 하나원에서 짧은 교육이 전부라, 남한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치체제 이해나 정치참여 등에 관한 지속적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14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15번 (여성,40대, 아산시거주)	선거참여나 정치참여에 대한 정보를 주로 미디어를 통해 얻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면 좋겠다.

3) 실태와 문제점

충남 지역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조사(사회지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도민이 이주민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0~10점)에 대한 조사에서 장애인이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게 조사되었다. 특히 10년 이상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그 이하 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이 충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표 100] 충남도 이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정도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타종교인	장애인
평균	6.3점	4.20점	4.16	3.94	3.71	3.36
순위	1	2	3	4	5	6

구분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거리감을 느낀다
5년 미만	46.7%	36.2%	17.1%
5~10년 미만	43.7%	37.1%	19.1%
10~15년 미만	44.7%	35.5%	19.8%
15~20년 미만	43.9%	34.9%	21.2%
20년 이상	43.1%	37.1%	19.8%

출처 :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017년 충청남도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차별을 받은 경험은 30.9%로 말투나 문화가 달라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차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0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 및 이유

차별경험 유무	빈도(명)	백분율(%)
있다	121	30.9
없다	270	69.1
합계	391	100

차별받은 이유	빈도(명)	백분율(%)
말투, 문화가 달라서	69	50.4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50	36.5
남한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인식	11	8.0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4	2.9
기타	3	2.2
무응답(차별받은 경험이 없음)	397	100

출처 : 충청남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2017)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생각하는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은 46.9%가 하류층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33.7%는 중하류층, 17.4%는 중간층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남한에서 취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43.2%가 남한의 학력과 경력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사회의 편견이라고 20.9%가 응답하였다.

[표 10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인식

생활수준 정도	빈도(명)	백분율(%)
상류층	5	1.3
중상류층	3	0.7
중간층	69	17.4
중하류층	134	33.7
하류층	186	46.9
합계	397	100

[표 103] 남한에서 취업 시 어려운 점

남한에서 취업 시 어려운 점	빈도(명)	백분율(%)
남한사회의 편견	81	20.9
남한의 학력과 경력 부족	167	43.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부족	28	7.2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60	15.5
기타	51	13.2
합계	387	100

출처 : 충청남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2017)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적응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23.7%), 취업 지원(21.7%), 의료 지원(20.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질문에서는 29.5%가 가족 및 친지를 꼽았으며, 26.0%가 전문상담사를 19.4%가 신변보호담당관이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표 104]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역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명)	백분율(%)
경제적 지원	93	23.7
취업 지원	85	21.7
의료 지원	80	20.4
교육 지원	59	15.1
주택관련 지원	30	7.7
남한 주민과 교류	21	5.4
여가 지원	18	4.6
기타	6	1.5

출처: 충청남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2017)

북한이탈주민이 더 나은 한국생활을 위해 거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편견과 오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안내 및 지원 부족, 정보와 소통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꼽았다.

[표 10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해결문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현재 거주지역의 해결문제	빈도(명)	우선순위
편견과 오해에 대한 인식	413	1
지역안내 및 지원 부족	192	2
정보와 소통의 어려움	169	3
자녀 교육환경의 부족	101	4
이웃과 지역사회의 무관심	97	5
문화, 여가시설의 부족	64	6
사회복지기관의 부족	34	7
기타	16	8

출처: 충청남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2017)

제6장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앞서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에서 주로 살펴보았듯이 ‘사회통합’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또는 이를 측정하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국민통합 위원회’ 혹은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처럼 이념과 지역, 세대와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은 국내외 사회통합의 이론과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충남도의 사회통합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통합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두를 포괄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보통 사회통합 연구는 크게 이념과 계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필요성,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신뢰, 사회포용, 사회참여 및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장애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 활동가(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FGI 포함)를 실시했다. 외국인이주민이 느끼는 차별과 배제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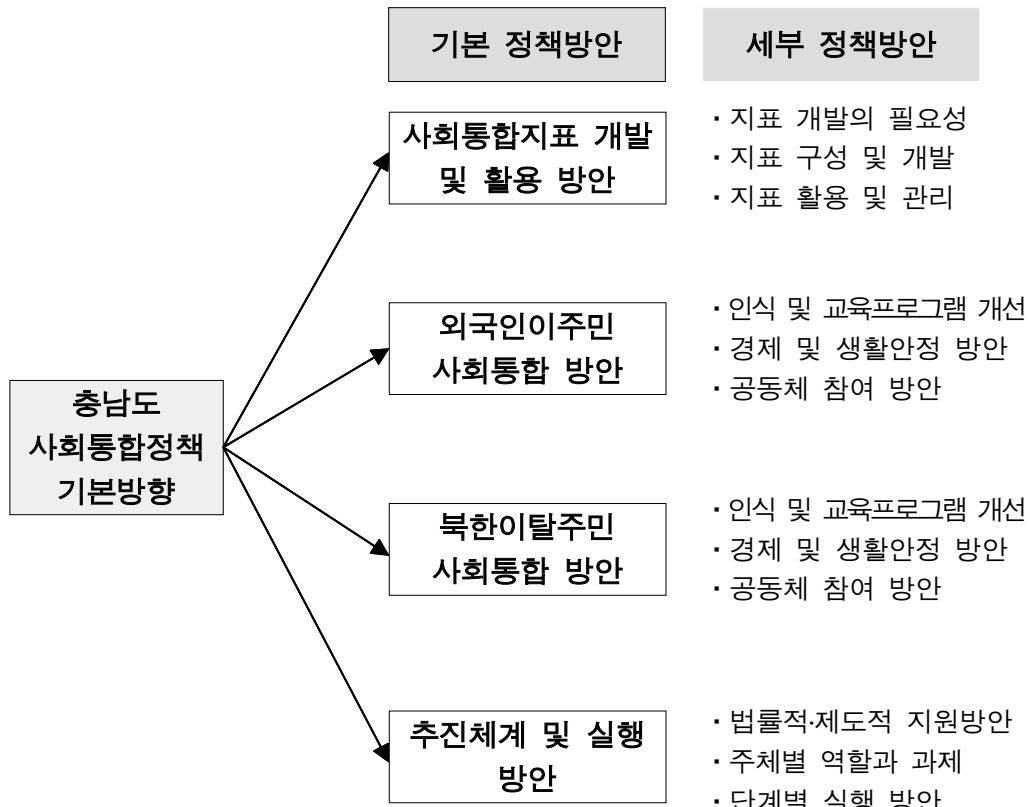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시이다. 사회통합연구는 크게 사회통합지표 측정에 관한 연구와 세부 대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 사회통합지표는 한 사회, 한 국가의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 때문에 OECD 등 국제기구와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해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지표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남도 또한 이들의 연구와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제시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세부 방안, 즉,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공동체 참여 방안이다. 첫 번째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도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다. 두 번째,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은 사회통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득을 통한 생활안정이다. 세 번째, 공동체 참여 방안은 외국인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제시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정책 방안 제시와 마찬가지로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공동체 참여 방안이다.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한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분, 언어, 정치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되 큰 범위에서는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는 유사점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부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체계 및 실행 방향의 제시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비롯해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림 10] 충남도 사회통합정책 기본 방향

2. 세부 정책 과제

1)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1) 충남도 사회통합지표 필요 논리 강화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상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사회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인 위협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평등과

권리, 기회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제기되어진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사회통합수준의 측정과 진단이 그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몇 차례 사회통합지수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OECD 국가 등과 비교하여 낮은 사회통합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국가적 측정과 비교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수준과 정책들과의 연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하위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남은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과 차원 중에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지표와 함께 충남의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남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지표개발과 함께 지수화를 위해 지표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의 현실에서 정책적 활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충남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의 선정은 결과의 활용성을 기대할 수 없고 수용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표들 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더 좋은 결과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충남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향후 충남의 사회통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사회통합 현실을 살펴보고 충남의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충남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이에 따른 개별지표를 만들고 충남의 현실이 반영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충남의 사회통합지표는 우리나라의 수준과 함께 충남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남의 사회통합 취약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및 개발과정

사회통합지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구성 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사회통합지표는 타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사항을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충남의 정책과 방안을 고려하여 충남의 특성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남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 복지, 문화 등 사회통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주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통합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토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 개발된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타 지역과 함께 사용가능한 지표들을 찾아내고 충남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두고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초로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최종모형을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충남의 현실을 검토한 후 사회통합의 각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도출하여 충남의 지표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표체계가 구성된 후 이를 위한 하위 지표 또는 충남도의 관련 정책들을 찾아봄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 및 조사 방법과 정책적 연계 및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사회통합지표의 활용 및 관리

① 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사회통합측정의 결과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서의 문제파악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통합지표의 결과를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책의 평가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보고서나 인터넷 상에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적 활용보다는 도민의 인식전환 역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도민들에게 우리 충남이 사회통합과 관련한 쟁점과 수준은 어떠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사회통합에 대한 도민의 의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활용을 강조하여 정책의 형성이나 평가, 우선순위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지표의 지속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사회통합지표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여야만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충남의 사회통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적 연구가 기반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지표의 결과 측정 및 도출과 함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그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지역의 사회통합지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해당 지방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즉, 사회통합지표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의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지표 조사를 통해 충청남도는 사회통합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원투입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지표가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구성되고 공유된 관심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충남도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통합지표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정책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쳐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방안들과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영역이 다양하고 폭 넓은 만큼 오랜 기간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시 된다. 아직 충남의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되기 전이기는 하나 개발된 이후 지속적인 조사와 측정 및 분석이 일정기간 이상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현재의 충남 수준에 있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와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통합의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이라는 변수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사회통합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지표가 지니게 될 추상성의 한계가 제시될 수 있다. 즉, 추상화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충남도의 노력과 단위 정책으로 쉽게 향상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의 정책만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지표일 경우 사회통합과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남도는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시 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사회통합지표는 도정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합을 위해 충남도가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노력의 성과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상화 수준이 높은 일반적인 지표와 지방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구체화 된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사회통합지표의 조사 및 운영방안의 강구

사회통합지표는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량지표의 경우 기존 통계 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정성지표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별도로 추진할 경우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충남사회조사에 사회통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또한, 이민자 등 사회조사에서 배제되어지는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사회통합지표는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질수록 그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 사회통합지표의 측정결과를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만 가능하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이 요구된다. 사회통합지표는 분석능력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연구원 및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충남연구원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도 고려될 수 있다.

아직 충남의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한번 개발된 지표라 하더라도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표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영향 요인들이 변할 수 있고 도정의 정책들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도민의 인식전환 유도

사회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통합에 대한 물리적 여건에서 반영하지 못한 요소들을 인식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도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만들어 대응해 나가는 시작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지표 및 결과를 통해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통합 지표의 조사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와 보고서 발간만으로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함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을 위해 작성결과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및 주민자치회 등과도 연계하여 결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단순한 결과제시가 아닌 조사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들도 필요시 된다.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들이 무엇을 측정한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모든 지표들에 대한 내용정리와 설명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영역별 주요 지표 및 충남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 지표들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인 설명과 교육이 필요시 된다.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인식개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지표개발 및 조사, 작성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언론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보도자료만을 이용하기보다는 브리핑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법들도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지표의 결과를 다양한 언론의 형태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2)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1)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① 충남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으로서의 다문화이해

한국사회의 문화는 단일문화로 이해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시발점으로 국제결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사회는 그 후 외국인들의 유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의 구성요소에는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른 개인차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연령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처럼 다문화를 인식함이 과거에 비해 다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원주민의 이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와 충남도가 안고 있는 다문화의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다문화의 범주가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인종화, 다민족화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양성과 다양화를 다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크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뿐 아니라 계층과 성별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편견과 갈등문제를 스스로 대처하고 상호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관계 형성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서 충남도민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인식개선의 교육 방안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으로서의 다른 주체와 낯선 문화와의 접촉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호문화이해 교육은 주류 사회 또는 주류 문화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지위로 바라보는 모든 문화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상호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공통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의지와 관련된 시민성의 긴밀함이 강조되며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 개선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잦은 만남과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주민과 외국인근로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접촉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② 국제결혼이주자의 충남도 사회통합으로의 노력

1990년대 후반 여가부의 국제결혼 지원정책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167,603명에 이른다. 이 중 충남도의 결혼이주자는 8,862명으로 전국 5번째로 많은 결혼이주자가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이주자의 한국으로의 입국과 함께 한국으로의 동화라고 보기보다는 국제결혼 가정 안에서의 상호문화교류의 한 장으로 한국의 삶, 충남도의 삶, 한국인 배우자가정에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삶과 한국과 충남도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정에서의 삶과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남도에서의 새로운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자가 충남도에서 생활하며 겪는 경험과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 국제결혼가정을 이해하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충남도의 분열과 갈등 심화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선주민과 결혼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과 충남도의 주소지 신고와 함께 선주민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선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한국 입국 초기 충남도민과의 멘티-멘토의 짝을 이루어 한국사회와 충남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③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진입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한국체류 외국인인 2,110,610명이며, 충남도의 외국인 체류 현황은 66,61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체류자격으로는 비전문 취업(E-9)의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의 농어촌 특성상 선원취업(E-10)의 외국인근로자 또한 충남도에 많이 체류하고 있다. 한국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최초 3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다. 그 후 1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의 한국에서의 체류를 하며 근로를 하게 된다. 그 후 본국에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재입국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한국에서의 법규와 질서를 잘 준수하며, 한국에서의 봉사활동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한다. 체류자격 변경에 한국어능력이 최대 20점을 차지하고 있고, 가점으로 사회 공헌의 점수가 표창 5점, 사회봉사 3점이 추가되면 이들의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에서 특정활동(E-7)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들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서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 안에서의 통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충청남도에서의 특정 활동으로 충청남도 안에서의 선주민과의 사회 통합 활동으로서의 봉사활동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의 장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체류하고 있는 국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장점을 살려 충청도민과의 언어교류 활동 등의 기초적인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순서로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 언어문제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요인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상의 문제로 부당행위·차별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문화생활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의 일부 시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남한국어교육원’ 혹은 ‘충남사회통합교육원’ 등을 설립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중도입국가족에 대한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숙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기본적인 법률, 제도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할 때, 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민으로서 또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쓰레기 문제를 들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또는 분리수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주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림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주민이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들에게 해당 언어로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외국어로 안내글을 적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이주자들이 많은 주요 국가의 언어를 쓰레기봉투에 짚막하게나마 적는다면 외국인이주자들이 지역생활에 적응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

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들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이 이들에게 가장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근로계약조건, 직장 내 안전교육, 차별대우, 지원제도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조건이 제대로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조건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연차 규정, 노동시간 규정 등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 노동시간 등 최초 근로계약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소방교육 등과 같은 직장단위 안전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만 작업장 유해환경, 건강교육, 작업관련 안전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사업장, 농촌의 농축 산업에서의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 작업관련 안전교육 미비는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흔히 말하는 3D업종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의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 문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차별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홍보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정착초기 생활비 지원

결혼이주자가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한국어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부족으로 한국에서 충남도에서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4년부터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세종학당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 후 한국으로 입국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입국 후 한국생활 적응과 임신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교육은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가족 안에서의 언어교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혹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부모와의 교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혼이주자는 한국 입국 초기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편만을 의지하며 한국생활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한 후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의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충남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바로 가족들의 일터로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입국 초기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족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초기의 활동으로 중요한 요인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 입국 초기 한국생활에 필요한 요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충남도 안에서의 경제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한국체류 지원에 차등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입국 국비 지원 유학생들은 한국 입국 초기 아르바이트를 찾기보다는 한국어의 향상과 한국문화이해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향상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 입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원의 진학도 가능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의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교육비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두어 한국 입국 결혼 이주자의 빠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 교통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남도에 빠른 적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자녀 교육에서 외국인 모의 한국어의 부족으로 언어발달의 부족을 느끼던 자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제2차, 3차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주거비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장 활동가 및 이주민 관련 센터의 장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형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태의 주택이거나 월세라는 것이었다. 신원 및 재정상태가 확실한 (또는 일정수준이상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

근로현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도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임금체불은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기타 무급노동 강요, 차별적 급여, 휴가, 나이제한 등 공정한 노동 권리를 위한 개선도 요구된다.

④ 기본적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 건설사업장이나 농촌의 소수 외국인근로자들은 간이 숙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은 이들의 보건·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체류 중에 업무상 혹은 경력상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국 모국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어 응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병원, 관공서에서 언어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숙소, 운전면허시험, 통역지원, 종교활동 등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3)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 필요

이주민이 단순히 우리 지역에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일상으로 된 것이 이주민들에게는 낯선 정책이 되고, 그로 인한 무단투기와 이로 인한 갈등 및 벌금부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행정적 지도, 홍보의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이주민-지역주민 간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이주민들의 생활적인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주민-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칭)이주민 반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활 일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이주민의 공동체 참여 방안 활성화는 주로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모이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지역주민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주민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들의 커뮤니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 하는지를 계속 지원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③ 지역 차원의 다문화축제 개최

결혼이민자는 지역별로 고향 모임이 이루어진다. 이를 자조 모임이라고 한다.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명절이나, 지역별로 모임 날짜를 정기적으로 정하여 본국의 음식을 해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타국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조 모임과 비슷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본국의 명절이나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본국의 요리를 즐기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의 자조 모임과 외국인근로자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충남도만의 문화행사로 이어가도록 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나라별 문화를 받아들여 충남도만의 나라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별 문화행사와 더불어 선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강화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이 당하는 인권차별적 요소를 인권적 시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권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 교육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욕설, 폭행, 성희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폭행, 성희롱과 같은 범법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업장 내 욕설은 아직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인권 행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자유권과 사회권 차원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의료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이라는 약점으로 공적영역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충남도 사회통합방안으로는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경제 및 생활 안전 방안, 공동체 참여방안의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6]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충남도 사회통합방안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충남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	
	한국어교육 강화	
	충남도 사회통합으로의 노력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진입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교육	
	근로현장관련 교육	
경제 및 생활안전방안	정착초기 생활지원	
		주거비지원방안마련
	노동조건개선	
		생활환경개선
공동체 참여방안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필요	
	이주민커뮤니티활성화방안	
	지역차원의 다문화축제 개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감수성 강화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1)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① 사회적 인식 개선

북핵사태 등과 연관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남한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몰이해와 냉대로 북한이탈주민은 외로움, 소외감을 느낀다. 특히, 남한 언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한 주민과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충남은 「2018년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문화충돌 해소를 목적으로 도민 인식개선 교육 및 토크쇼, 인식개선 포럼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하며 타 지자체 보다 선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성격이 1회성 또는 행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 다만 관 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간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및 지원의 총괄기능을 수행해 온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해 민관이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할 수 있다.

② 선주민-북한이탈주민 간 상호교류프로그램 확대

인터뷰를 진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신의 북한식 억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면접 시 북한식 말투나 억양 때문에 드러난 신분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가 되어 채용이 거절되는 이유가 된다.

사업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이라는 응답보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설적인 말투나 억양 때문에 상사나 동료부터 받는 부정적 인식을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으며 배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말투나 억양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배우고 익힌 말투나 억양을 우리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등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 충남의 ‘충청남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도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영상 방송 송출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충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한음식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선주민-북한이탈주민 간 상호교류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행복한 동행’ 멘도링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 이해의 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 더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내실화

북한이탈주민은 일자리를 구할 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는 차별을 겪는다. 소규모 작업장, 자영업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보다 차라리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 하나원에서의 집단생활을 끝내고 거주지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어려움에 부딪치는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과 받는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겪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가 여성이며,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여성이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출신’이라는 취약성과 함께 ‘여성’ 인력이 가지는 노동현장 내 취약성이 북한이탈여성에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낮고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적 소득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 직업훈련, 취업교육을 내실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지원과 관련 직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충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과 단체 및 기업체 등과의 취업협약 체결 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일자리의 질 제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② 법률·경제·재무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독재사회로부터 자본주의 민주사회로의 이주이기 때문에 사회 및 체제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차별을 받는 겪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 도착 이후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체제적응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정보, 행정정보가 부족하여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생활에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공무원의 무관심과 불친절을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경제·재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3)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지역사회 모임활동 및 참여 기회 보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정착 지원 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렵고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무관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말투, 문화적 차이’가 지역사회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남한 주민과 교류를 더 원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을 주변인으로 인식하고 오랜 편견과 사회적 배제 분위기 속에서 어찌면 우리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을 지금도 수동적인 객체로 변화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공동체는 새로 유입된 소수 집단들을 배제하거나 기존이 지배적 문화와 가치에 융해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고용, 교육, 주거 등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영역들에서 일정한 지원 정책을 유지해야 내부의 갈등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② 북한이탈주민 자조단체 지원 및 공생적 정책 마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참여 보장과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마련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조 단체를 지원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공생적 지역 사회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충청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향

1.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

1) 외국인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기존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계획은 정부주도형에 가깝다. 2007년 제정·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2008년 제정·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역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법공백을 예방·보완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특히 입국 이후 외국인주민의 생활은 국가가 아닌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 체감 효과를 생각한다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은 조례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2007년 7월에 제정·시행되었다. 당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③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④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 담겨 있다. 이후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12년 12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전부개정되어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③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외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논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서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도·시·군 등에서 제정·시행 중 이다.

그러나 위의 조례들 대부분이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주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인도적·시혜적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화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 한계로 존재한다. 또한 그 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거나, 외국인주민이 주민으로서 갖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선주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상호이해 및 사회통합의 목적을 둔 관련 교육 및 사업 내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법·제도 마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계획 역시 정부주도형에 가깝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해야 한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09년 6월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①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②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③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④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⑤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⑥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외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시·군 등에서 제정·시행 중 이다.

다만, 기존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들의 내용들이 사회통합적 접근을 넘어 다문화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년 남한으로 오는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가 여성이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들은 다문화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지원책에 배제되어 있으며, 자녀도 관련 지원 정책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해 이와 관련 된 조례들의 정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주체별 역할과 과제

1)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현재 충청남도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간에 이주민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현장 활동가 및 이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어떤 장소에, 어느 나라의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또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정책을 제때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의 고용·취업·노동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맺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충남소재 개별사업체에 몇 명이 취업해 있다는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인 정보라 함은 어떠한 사업체에 어느 나라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몇 명이 있다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가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 생활정책, 실질적인 노무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과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2)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충청남도는 외국인주민들의 상담 사각지대 해소,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인권보호, 상호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이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내 이주민들의 콜센터 이용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³⁹⁾.

이러한 현상은 콜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에서 기인한다. 콜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충남 외국인주민들의 생활고충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사업체에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체에 안내 공문을 한글(사업주를 위해서)과 외국인근로자 국가의 언어로 발송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필요한 시설인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콜센터를 홍보하는 안내문 및 의료기관 및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들이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주민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의료기관 및 관공서에 종사하는 분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중앙정부 및 충남도청에서는 거주 외국인근로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9) 상당수의 이용이 충남 외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군은 거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현장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현재 천안·아산, 당진, 홍성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도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3. 단계별 실행 방안

1) 충청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이다.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듯이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은 민주주의를 더욱 가치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다. 민주주의는 보통 다수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선택되면 다른 쪽은 소외되고 배제되기 쉽다. 집단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늘 갈등과 대립이 있어왔다. 특히 투표로 정치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선출직 정치지도자는 사회통합을 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핵심의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좌우로 나뉜 이념의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 영남과 호남의 간 지역갈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소외, 외국인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갈등 등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화로 인한 결과이자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결과물일 것이다.

충남도 또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좌우의 이념 갈등은 물론이고 충남의 북부와 남부 간의 발전 격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소득 격차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갈등이 심하고 최근 폐기물 매립지와 발전소 설립 등으로 인한 갈등 또한 심각한 편이다.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 빠른 발전을 이룩했지만 명암 또한 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미래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도의 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민선7기에 들어와 도정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정하고 도정 목표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로 설정했다. 충남도정의 비전 동정 목표에 사회통합의 이념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충남도는 2020년 8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도 ‘양극화 해결 비전 선포’(이하 비전 선포)를 실시했다. 이 비전 선포에서는 충남도 양극화 해결을 위한 3대 목표로 소득과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포용 성장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보다는 경제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를 수립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사회통합에 관한 명확한 비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사회정책 분야의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즉,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사회정책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07]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3대 비전	9대 전략
〈비전 1〉 사회통합의 강화	1.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비전 2〉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비전 3〉 사회혁신능력 배양	7.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8.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성경룡·윤황(2019)은 포용적 행복국가의 개념을 “개별의 행복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공동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교류-관계’의 상호작용(쌍방향)적 접근에 의한 ‘행복추구권 확보’의 ‘다양성’을 ‘포용적 리더십’의 발휘로 작동되는 국가”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비전을 토대로 충남도의 명확한 사회통합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의 비전으로 ‘더 포용적 행복충남’⁴⁰⁾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포용적 행복충남’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다 더 배려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



[그림 11] 충남도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2)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회통합은 한 국가와 사회의 중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도 중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다. 사회 각계 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35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초대 위원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⁴¹⁾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했다.

40)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은 충남도의 미래 비전으로 ‘포용적 행복충남’을 제시했다.

41)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의 조직편제는 위원장 아래 사회통합담당, 전문위원실(전문위원 3인), 기획총괄실, 계층분과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실제 어떤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통합’을 하나의 국가 의제로 설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박근혜 정부는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크게 4개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지역위원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 및 국민통합기획단을 두었고 그 주요한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통합 기반구축: 국민통합관련 객관적 실태파악 및 분석,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사회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참여형 사회갈등 관리방안 강구, 소통, 갈등관리, 통합 관련 역량제고
-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확산·국민통합 작은 실천 큰 보람

팀, 이념분과팀, 지역분과팀, 세대분과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구성되었다. 즉, 사회통합의 논의 대상을 크게 계층, 이념, 지역, 세대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 전개, 국민 상생·공감 프로젝트 추진

- 소통·공감을 통한 통합문화 확산: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협력체계 운용, 국민통합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문재인 정부는 앞선 정부와는 다르게 사회통합위원회 혹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지는 않았다. 대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포용사회전략회의를 주관하고 있다.⁴²⁾ 여기서 말하는 포용(inclusiveness)은 재분배 강화, 격차 완화, 계층 이동 증대를 통해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이고, 혁신(innovation)은 충실한 사회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혁신, 사회제도 혁신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과 혁신을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 사회통합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만큼 충남도에서도 사회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처럼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용사회전략회의처럼 ‘(가칭)충남 사회통합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는 ‘(가칭)충남사회통합포럼’ 방식도 있을 것이다. 운영방식이 위원회든 전략회의든 포럼이든 그 주요 내용은 계층(사회양극화문제), 이념(좌우대립+통일문제), 지역(지역불평등문제), 세대(고령화·청년문제), 다문화(외국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문제) 등을 포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통합 논의의 협의체를 만들어 충남도 사회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08] 충남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조직명(선택)	분과	주요 논의 영역
충남사회통합위원회	계층	사회양극화
(충남포용사회위원회)	이념	좌우대립·통일
충남포용사회전략회의	지역	지역불평등
충남사회통합포럼	세대	고령화·청년
(충남포용사회포럼)	다문화	외국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42)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두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 사회통합비서관이 있다.

3)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지표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추가해 실시했다.(한국행정연구원, 2020)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건·복지와 관련한 사회통합지표를 설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지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통합 지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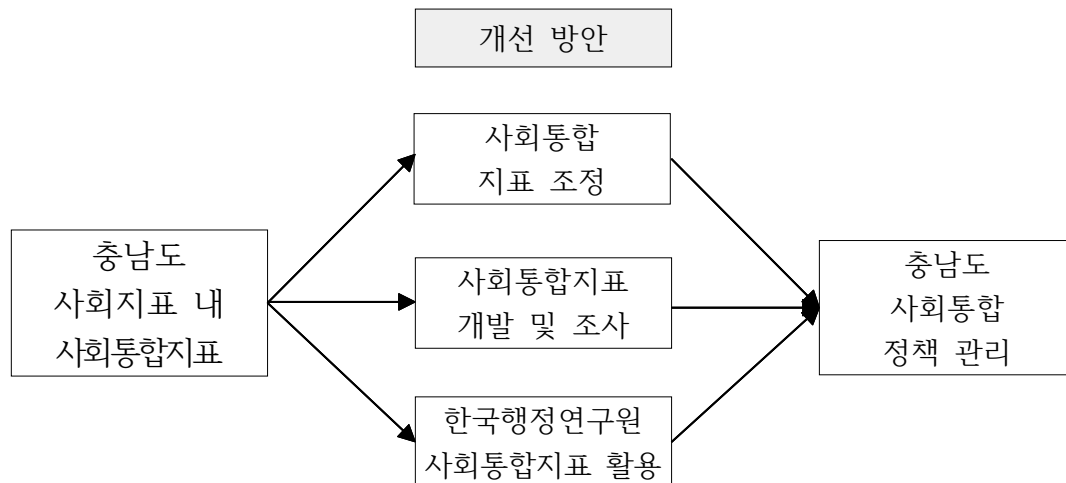
현재 충남도는 매년 사회지표(사회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12개 항목의 사회 지표가 있고 이들 사회지표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번째가 사회통합 항목이다. 사회통합 항목에는 다시 19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복지보전 예산의 비중, 2)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진율과 1인당 연평균 급여액, 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인당 급여액, 4)어린이집 원아수 및 시설수, 5)유치원 원아수 및 시설수, 6)사회복지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수용 인원, 7)장애인 성별, 등급별 현황, 8)장애인시설 이용 현황, 9)자살률, 10)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11)거주기간, 12)지역 정주의사(10년 후), 13)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14)주관적 귀속 계층, 15)일반인에 대한 신뢰, 16)미취약 아동보육 프로그램 선호도, 17)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18)돌봄 노동, 19)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등이다. 이들 지표를 살펴보면,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지표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표들이 있다. 대다수 지표들이 복지와 관련하고 있는데 복지는 사회통합의 일부분이지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 사회통합 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 사회지표(사회조사)의 사회통합항목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항목은 사회통합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중요 대상으로 여겨지는 다문화 분야는 사회통합 항목이 아니라 충남특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는 충남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 항목에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충남도 사회지표(사회조사)에

서의 사회통합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남도 사회지표(사회조사)와는 별도로 충남도 사회통합지표를 발간하는 것이다. 충남도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셋째, 충남도 자체의 사회통합지표 설정과 조사 등이 어렵다면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지표 자료를 활용해 충남도의 사회통합지표를 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2]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4) 외국인 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우리사회는 이미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경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다. 개방과 교류를 거부 하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이다. 충남도의 역사를 보면, 가장 개방화되고 대외 교류가 많았던 백제시기에 번성을 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 단절되고 폐쇄되던 시기에는 쇠락 했다. 그랬던 충남도가 오늘날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990년대 중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에 기인한다.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것도 환황해시대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민을 단순히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들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향후 충남도와 자산의 국가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국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을 알리고 다시 한국을 찾는 것처럼 외국인이주민과 그 후손들은 한국과 자신 혹은 부모의 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한국과 충남도를 알릴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약자이고 소수자이지만 그들은 초국경시대에는 주역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충남도의 국제화시대를 대비해 그들의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칭)충남도다문화국제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

충남도에 (가칭)충남도다문화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주민의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공간을 갖게 되어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학습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가진 인재로 육성될 것이다. 학습과정에는 충남도와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경제 등을 포함한다면 이들이 충남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높이면서도 부모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어 향후 충남도와 해당 국가와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학교로는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포천의 다문화국제학교, 안성의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등이 있다. 이들 다문화국제학교의 사례를 파악해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직접 설립이 어려우면 기존 학교 내에 다문화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 소외와 배제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감에 따라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사회통합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특히 충청도는 199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양극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충청도에서도 외국인 이주민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서 발생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충청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다. 갈수록 다원화, 다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충청도 차원에서도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사회통합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사회통합 논의를 고찰한 다음 실제 충청도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충청도 사회통합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두었다. 또한 제1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분석틀에 관해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충청도 사회통합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이론적 개념과 충청도 사회통합의 수준, 그리고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문헌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연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연구 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설정했고 개념 설명은 주로 사회통합, 이주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개념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틀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사회통합에 관한 정의를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통합의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서 각기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차이와 배제를 극복해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의 상태 또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사회통합지수(지표)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지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사회통합 정책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개념의 사회통합 논의는 우리나라보다는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구 유럽에서의 사회통합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정책은 역사가 깊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 특히 이주민 사회통합 논의 및 정책이 발전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동양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사례로는 포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도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충남도민 1050명으로 대상으로 2002년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약 40일 동안 실시됐으며 설문내용은 크게 사회통합 수준, 사회적 신뢰 수준, 사회참여와 지원 수준으로 나뉘 실시됐다. 특히 본 설문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충남도민의 포용수준, 신뢰수준, 사회참여와 지원 정도 등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충남도민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통합과 충남도의 사회통합에 대해 6.2점(10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해 우리사회가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포용수준에서 결혼이주자는 6.15점, 외국인근로자는 5.3점으로 낮아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회통합의 실질적 대상인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조사는 크게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소외와 배제의 측면에서 이뤄졌다. 조사결과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심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고향처럼 편하고 이웃주민들도 잘 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느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은 외국인근로자보다 2~3배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자주 이직을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탈북자’는 고난을 이겨낸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보통은 학력이 낮고 배고픔을 못 견뎌 떠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장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제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이다. 충남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 사회통합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통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1)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2)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3)공동체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제시한 사회통합 정책 제안에 대해 충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1)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2)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법·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둘째, 주체별 역할과 과제로는 1)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2)충남외국인이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셋째,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는 1) 충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2)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4) 외국인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을 제시했다.

2. 결론

본 연구는 사회통합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연구와 정책동향, 사례분석,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인식조사,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인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충남도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기본방향은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방안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03]과 같다.

첫 번째 기본 정책 방향은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이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지표의 필요 논리 강화, 사회통합지표 구성 및 개발, 사회통합지표 활용 및 관리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방안이 있고 세부 정책과제로는 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기본 정책 방향은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 방안이다. 여기에는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공동체 참여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방안이 있다. 첫 번째,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에는 충남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으로서의 다문화이해 등 5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에는 정착초기 생활비 지원 등 4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세 번째, 공동체 참여 방안에는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 실행 등 4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세 번째, 기본 정책 방향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이주민과 동일하게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공동체 참여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방안이 있다. 첫 번째,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2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내실화 등 2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세 번째, 공동체 참여 방안에는 지역사회 모임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 2가지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마지막 기본 정책 방향은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이다. 여기에는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주체별 역할 강화 방안, 단계별 실행 방안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등 7가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표 109] 충남도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기본 정책 방향	주요 정책 방안	세부 정책과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 사회통합지표의 필요 논리 강화	-
	· 사회통합지표 구성 및 개발	-
	· 사회통합지표 활용 및 관리	① 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② 사회통합지표의 조사 및 운영 방안 강구 ③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도민의 인식전환 유도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① 충남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으로서의 다문화이해 ② 국제결혼이주자의 충남도 사회통합으로의 노력 ③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진입 ③ 한국어 교육 강화 ④ 기본적인 법률, 제도에 대한 교육 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
	·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정착초기 생활비 지원 ② 주거비 지원 방안 마련 ③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 ④ 기본적 생활환경 개선
	·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 실행 ②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③ 지역 차원의 다문화축제 개최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강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①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선주민-북한이탈주민 간 상호교류프로그램 확대
	· 경제 및 생활안정 방안	①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내실화 ② 법률·경제·재무교육 실시
	· 공동체 참여 방안	① 지역사회 모임활동 및 참여 기회 보장 ② 북한이탈주민 자조단체 지원 및 공생적 정책 마련
추진체계 및 실행 방안	·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① 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의 법·제도 마련
	· 주체별 역할 강화	①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② 충남외국인이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③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 단계별 실행 방안	① 충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②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④ 외국인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동안 사회통합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이뤄져 왔다. 사회통합지표(지수)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하고 한 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런 점에 본 연구는 충남도라는 지방정부를 사례로 본 연구의 연구진이 개발한 사회통합지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지는 외국인이주민, 그리고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야기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및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의 개념 정립의 미흡이다. 사회통합의 개념은 서구에서 가져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social integration,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으로 표현되듯이 그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크게 사회통합, 사회 포용, 사회 참여와 지원으로 규정해 충남도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했으나 여전히 사회통합의 개념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통합의 범위의 한계이다. 한 사회의 갈등양상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연구대상을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이주민은 다문화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설문조사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통합 대상 집단인 외국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외국인이주민은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부족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적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 사회통합은 그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을 거론해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구체성이 부족했다. 충남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10. “OECD 사회통합지표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167(1), 122-127.
- 강주현. 2008.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 연구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 105-134.
- 김석향·박은정·장인숙·전미영·현인애·김미주·박서연. 2015.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안나·이은미.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30.
- 김영정·김진우·정은·황지성·김동현·김동현·김은실·김윤애·정근식. 2013. “2013 민주주의 연구과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김이천. 2012. “덴마크,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비교 연구”. 『독일언어문학』 57, 159-185.
- 김준현. 20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59-90.
- 김현주. 2018.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대상 이민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테러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3.6, 123-158.
- 김혜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IOM MRTC Working Paper No. 2010-05. IOM 이민정책연구원.
- 김화순·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연구원.
- 권숙도. 201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1), 101-126.
- 권숙도. 201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권숙도.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나영주.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한국민족연구원.
- 남북하나재단. 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라휘문. 2015.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9(2), 1-29.
- 라휘문. 김태희. 김승렬.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분석 및 추진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28(1), 1-23.
- 류지성. 2016.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문병기·라휘문·한승준. 2015.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민영·이종명·김미라·권오주. 2012. “이주민의 정치사회화: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심리적 성향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박명희. 2019. “[미래일본2030]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5) 2030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동아시아연구원
- 박선영. 201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11(1), 79-108.
- 박순일. 2009. “사회통합과 상생·균형 사회로의 발전”, 126-173. 박순일·황준성·박원출. 『21세기 한국사회의 통합과 정책이념의 방향』.
- 박영희·윤인진·윤여상·윤보영·박나래. 2016.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모색”. 통일부.
- 박지희.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학 및 공감의 필요성”. 『한민족문화연구』. 401-428.
- 박현선·전연숙·조재희. 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가족문화원.
- 박희진·박정란. 2012. “북한이탈주민 연구 동향과 과제; 주체, 방법, 내용”. KDI북한경제리뷰.
- 백운성. 2019. “충청남도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변미리. 2018,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 설동훈·김명아.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 성경륜·윤황. 2019. “포용국가: 정책과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포용국가위원회 발표자료.
- 성태규.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충남연구원.

- 성태규. 2005. “귀화·이주자 실태분석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충남연구원.
- 성태규. 2017.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충남연구원.
- 성태규. 2017.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연구”. 충남연구원.
- 신명숙. 2014. “장애인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스웨덴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34(0), 162-193.
- 송은희·설빈배. 2013.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67, 367-392.
- 신은경·이익섭·손주영. 2009.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9(2), 143-170.
- 엄한진. 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학술총서』. 106.
- 엄한진. 2009.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e-Journal Homo Migrants』 Vol.1 :47-7.
-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복남. 2015.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우복남. 2016. “충남 결혼이주자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우복남. 2016. “충남 외국인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유혜숙·이현숙. 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 윤여상. 201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 학술회의.
- 윤인진.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실태”. 『문화와 정치』6(1), 61-92.
- 윤인진·김춘석·김석향·김선화·김화순·윤여상·이원웅·임순희.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미연. 201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이병하. 2016.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한국연구재단
- 이산호. 2008.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2, 7-25.
- 이수정·양계민. 2013.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 이성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165-187.

- 이수정. 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 이재열·조병희·장덕진·유명순·우명숙·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21(2), 113-149.
- 이주호·배정환. 2011.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 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임동진. 2019.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57(4), 283-317.
- 임순희. 201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실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장창석·고승화·임다정. 2018.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 전정옥. 2013. “2012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요인: 통합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3(221), 23-35.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구혜란·김성아. 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37(4), 370-405.
-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권중. 2016.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 조항록. 201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5(2), 5-31.
- 주은주·오정수. 2011.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적지지 영향요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병두. 2011.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병두. 2009.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1)추진 과정과 지역적 현황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 최병두. 2010.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2)지역사회 다문화 공생 거버넌스-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 최병학. 2011.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 충남연구원.
- 최승호. 2010. “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정치정보연구』 13(1), 161-190.

- 최윤영·이경준·양정빈·양희택. 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최은석.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통일과 북한법학회.
- 최희철. 2013. “재가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39(2), 151-177.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명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 고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 허준영. 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271-300
- 황미혜. 2011. “결혼여성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복지 방안연구”. 『다문화와 평화』 5(1), 48-74.
- 황민철, 문병기. 2017.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55-85.
- 황준성. 2009.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이념의 변화”, 73-100. 박순일·황준성·박원출. 『21세기 한국사회의 통합과 정책이념의 방향』.
- Alidadi, F., Arias, J., Bintrim, R., Miller, M., Rotto, A., R., Tummino, A., 2015. The Social Inclusion Index 2015. Americas Quarterly, Vol 9, No 3.
- Americas Quarterly. 2012. The Social Inclusion Index 2012. Americas Quarterly, Spring.
- Dragolov, G., Lgnacz, Z., Lorenz, J., Delhey, J., Boehnke, k., 2013. Social Cohesion Radar: Measuring Common Groun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Cohesion . BertelsmannStiftung.

부 록

- 부록 1 : 충남도 사회통합 인식조사 설문조사표 / p.215
- 부록 2 : 결혼이주자 인터뷰 조사표 / p.224
- 부록 3 : 외국인근로자 인터뷰 조사표 / p.231
- 부록 4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조사표 / p.238
- 부록 5 : 충남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내용 / p.252

부록 1 : 충남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표

충남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 **사회통합**이란: 사회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해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함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충남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도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 연구책임 : 박경철 책임연구원(전체), 고승희 연구위원(설문조사)

■ 연 락 처 : 041-840-1206(충남 공주시 연수원길73-26)

응답자 일반사항

1-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3.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1-4. 귀하의 직업은?

- ① 일반 회사원 ②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③ 개인사업/자영업
④ 농어업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

1-5.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대 ③ 300만 원대
④ 400만 원대 ⑤ 500만 원 이상

1-6. 귀하의 거주 지역은?

-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1-7. 귀하의 거주지 형태는?

- ① 읍 ② 면 ③ 동

1-8. 귀하의 충청남도 거주 기간은?

-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25년 미만 ⑥ 25년-30년 미만
⑦ 30년 이상

사 회 포 용

※ 사회포용이란: 사회 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해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2-1.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통합 안 됨						완전히 통합됨				
0	1	2	3	4	5	6	7	8	9	10

2-2.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남의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통합 안 됨								완전히 통합됨		
0	1	2	3	4	5	6	7	8	9	10

2-3. 귀하께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안 느낌						매우 많이 느낌				
0	1	2	3	4	5	6	7	8	9	10

2-4. 귀하께서는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안 느낌						매우 많이 느낌				
0	1	2	3	4	5	6	7	8	9	10

2-5.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래 이주민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포용안함						매우 포용함					
결혼이주자	0	1	2	3	4	5	6	7	8	9	10
외국인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이탈주민	0	1	2	3	4	5	6	7	8	9	10

2-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남의 사회가 이주민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포용안함						매우 포용함					
결혼이주자	0	1	2	3	4	5	6	7	8	9	10
외국인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이탈주민	0	1	2	3	4	5	6	7	8	9	10

2-7.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허용수준에 따라 ○, △, × 표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것	우리나라에 사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되는 것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 자						
북한이탈주민						

2-8. 귀하께서는 이주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한국에서 출생	①	②	③	④	⑤
한국인 부모	①	②	③	④	⑤
생애 대부분 한국 거주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수준	①	②	③	④	⑤
한국 문화의 이해 및 수용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법, 제도 존중	①	②	③	④	⑤

2-9.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균형발전 ② 정치 안정 ③ 법치 확립
 ④ 기회 균등 ⑤ 시민의식 제고 ⑥ 부패와 특권의 타파
 ⑦ 기타()

사회적 신뢰

3-1.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음						매우 믿을 수 있음				
0	1	2	3	4	5	6	7	8	9	10

3-2.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남의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음						매우 믿을 수 있음				
0	1	2	3	4	5	6	7	8	9	10

3-3. 귀하께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이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매우 신뢰함				
0	1	2	3	4	5	6	7	8	9	10

3-4.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함						매우 신뢰함				
결혼이주자	0	1	2	3	4	5	6	7	8	9	10
외국인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이탈주민	0	1	2	3	4	5	6	7	8	9	10

3-5. 귀하께서는 충남 지역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함						매우 신뢰함					
결혼이주자	0	1	2	3	4	5	6	7	8	9	10
외국인근로 자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이탈주민	0	1	2	3	4	5	6	7	8	9	10

3-6. 귀하께서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⑤
충청남도	①	②	③	④	⑤
국회	①	②	③	④	⑤
지방의회	①	②	③	④	⑤
법원	①	②	③	④	⑤
검찰	①	②	③	④	⑤
경찰	①	②	③	④	⑤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교육기관	①	②	③	④	⑤
의료기관	①	②	③	④	⑤
언론	①	②	③	④	⑤

3-7.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공정성 제고 ② 엄격한 법·제도 집행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④ 정부 정보의 투명성 강화
⑤ 시민단체 역할 강화 ⑥ 기타()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 사회참여란: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의견을 내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

4-1.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음							매우 적극적 참여함			
0	1	2	3	4	5	6	7	8	9	10

4-2.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남의 도민이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음							매우 적극적 참여함			
0	1	2	3	4	5	6	7	8	9	10

4-3.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충남의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음							매우 적극적 참여함				
결혼이주자	0	1	2	3	4	5	6	7	8	9	10
외국인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이탈주민	0	1	2	3	4	5	6	7	8	9	10

4-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사회적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함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음			
0	1	2	3	4	5	6	7	8	9	10

- ①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② 중앙정부 역할 강화 ③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④ 복지예산 확대 ⑤ 법·제도적 보완 ⑥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4. 귀하는 자신이 사는 곳(거주하는 곳)에서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 또는 ‘나는 이곳 사람이다’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귀하는 자신이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주변 사람(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 귀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결혼이주자 대상

1. 귀하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국가기관·공공기관
- ② 대기업
- ③ 중소기업
- ④ 자영업
- ⑤ 영농업
- ⑥ 기타 (내용:)

2.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타 지역 억양 때문에
- ②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
- ③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 ④ 학력이 낮아
- ⑤ 사업체 관련 정보 부족
- ⑥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귀하는 본인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은 → 4번으로, ②번은 → 5번으로

4.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본인은 취업을 한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6번으로

6.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 본인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동료보다 비교해서 돈을 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8번으로

8.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 본인은 일을 하면서 결혼이주자라는 이유로 동료보다 어려운 일을 맡거나, 위험한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0번으로

10.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1. 본인은 일을 하면서 결혼이주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2번으로

12.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결혼이주자 대상

1. 귀하는 고향이 아닌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은 → 2번으로

2.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너무 바빠서
- ② 투표 방법, 장소 등 정보가 부족해서
- ③ 투표장으로 이동이 불편해서
- ④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해서
- ⑤ 관심이 없어서
- ⑥ 기타 (내용: _____)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은 → 4번으로

4. 정치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② 정치 단체 가입, 활동 정보가 부족해서
- ③ 지역 내 정치 단체가 없어서
- ④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까봐
- ⑤ 관심이 없어서
- ⑥ 기타 (내용:)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선거 또는 정치 단체(정당 등) 등에 대한 정보들은 본인이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정치참여 기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 귀하는 자신이 사는 곳(거주하는 곳)에서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 또는 ‘나는 이곳 사람이다’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귀하는 자신이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주변 사람(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 귀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외국인근로자 대상

1. 귀하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국가기관·공공기관
- ② 대기업
- ③ 중소기업
- ④ 자영업
- ⑤ 영농업
- ⑥ 기타 (내용:)

2.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타 지역 역양 때문에
- ②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
- ③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 ④ 학력이 낮아
- ⑤ 사업체 관련 정보 부족
- ⑥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귀하는 본인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은 → 4번으로, ②번은 → 5번으로

4.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본인은 취업을 한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6번으로

6.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 본인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동료보다 비교해서 돈을 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8번으로

8.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 본인은 일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동료보다 어려운 일을 맡거나, 위험한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0번으로

10.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1. 본인은 일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2번으로

12.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외국인근로자 대상

1. 귀하는 고향이 아닌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은 → 2번으로

2.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너무 바빠서

② 투표 방법, 장소 등 정보가 부족해서

③ 투표장으로 이동이 불편해서

④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은 → 4번으로

4. 정치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② 정치 단체 가입, 활동 정보가 부족해서

③ 지역 내 정치 단체가 없어서

④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까봐

⑤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내용:)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선거 또는 정치 단체(정당 등) 등에 대한 정보들은 본인이 현재 사는 곳(거주하는 곳)의 정치 참여 기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록4.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터뷰조사표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영역별 차별(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본 조사의 면담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 20명과 이해관계자 6명으로 구성한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용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북한(), 남한()
4.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만원
5. 귀하의 거주 지역은? (시)
6. 귀하의 충청남도 거주 기간은? ()년

1.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귀하의 소속은?
 - ① 공공기관 (기관명:)
 - ② 민간단체 (기관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말투, 문화의 차이
 -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③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무관심)

- ④ 남북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부족
- ⑤ 활동공간이나 거리가 불편해서
- ⑥ 경제적 활동으로 여유가 없어서
- ⑦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활동하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선택해 주세요. (우선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남한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 ② 북한이탈주민은 가난하다
- ③ 북한이탈주민은 학력이 낮다
- ④ 북한이탈주민은 폐쇄적이다
- ⑤ 북한이탈주민은 이기적이다
- ⑥ 기타 (내용:)

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 활동하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선택해 주세요. (우선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책임감이 강하다
- ②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다
- ③ 도전 정신이 강하다

- ④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 ⑤ 생활력이 강하다
- ⑥ 기타 (내용:)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5.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귀하의 소속은?

- ① 공공기관 (기관명:)
② 민간단체 (기관명:)

2. 북한이탈주민 채용 과정에 경험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의사소통의 문제
- ②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
- ③ 남북 문화의 차이

-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① 공공기관 (기관명:)

② 민간단체 (기관명:)

- ① 말투, 문화의 차이
- ② 북한이탈주민의 무관심

- ③ 정치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정치 참여 방법과 정보의 부족
- ⑤ 이념적 갈등
- ⑥ 경제적 활동으로 바빠서
- ⑦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남) 등에서 제공하는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또는 정치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용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북한(), 남한()

4.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만원

5. 귀하의 거주 지역은? (시)

6. 귀하의 총청남도 거주 기간은? ()년

1. 사회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은 → 2번으로, ②번은 → 3번으로

2. 어떤 단체/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① 친목 및 사교 단체 ② 종교 단체 ③ 취미, 스포츠 단체

④ 시민사회 단체(봉사 단체 등) ⑤ 학술 단체, ⑥ 이익 단체(노조 등)

⑦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⑧ 기타 (내용:)

3. 사회단체/모임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향을 준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①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 ③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활동공간이나 거리가 불편해서
- ⑤ 회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 ⑥ 리더(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 ⑦ 경제적 활동으로 여유가 없어서
- ⑧ 기타 (내용:)

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 아래의 문항에 \checkmark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소속되어 있다’ 또는 ‘이곳 사람이다’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 지고 있다.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5. 아래의 문항에 √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변 이웃들은 나를 이웃으로 인정한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6. 아래의 문항에 √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					

6-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7. 아래의 문항에 √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생각한다.					

7-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귀하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국가기관·공공기관
- ② 대기업
- ③ 중소기업
- ④ 자영업
- ⑤ 영농업
- ⑥ 기타 (내용:)

2.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순서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북한식 억양 때문에
- ② 직무관련 기술이나 경력 부족
- ③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 ④ 학력이 낮아
- ⑤ 구인 정보 부족
- ⑥ 근로조건에 맞지 않아서
- ⑦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귀하는 본인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4번으로

4.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5. 본인은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6번으로

6. 취업 이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7. 본인은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비교해서 임금을 덜 받은
(낮음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8번으로

8.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해 주세요.

9. 본인은 일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동료보다 어려운 일을 맡
거나, 위험한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0번으로

10.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11. 본인은 일을 하다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
을 그만둔(부당 해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번만 → 12번으로

12.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정치적 차별(배제) 관련 질문

(1) 북한이탈주민 대상

1. 귀하는 남한에서 투표를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만 → 2번으로

① 번을 답한 경우

1-1. 투표에 참여하게 된 동기,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너무 바빠서

② 투표 방법, 장소 등 정보가 부족해서

③ 투표장으로 이동이 불편해서

④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내용:)

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만 → 4번으로

① 번을 답한 경우

3-1. 참여하게 된 동기,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 정치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② 정치 단체 가입, 활동 정보가 부족해서

③ 지역 내 정치 단체가 없어서

④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까봐

⑤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내용:)

4-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은 본인이 남한의 정치체제 이해 또는 정치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5. 충남도 사회통합 인식조사 결과표

[표 110] 충남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도

		(사례수)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1.2	7.0	21.3	28.1	27.6	13.3	1.5	6.20
성별	남 성	(553)	1.1	7.1	20.3	27.2	28.1	14.8	1.4	6.24
	여 성	(497)	1.3	7.0	22.4	29.2	27.0	11.7	1.5	6.15
연령	20대 이하	(177)	2.0	6.7	29.9	33.1	21.7	6.6		5.85
	30대	(208)	2.3	9.6	15.5	30.1	31.0	10.6	0.9	6.14
	40대	(239)	0.2	4.6	22.2	28.9	31.2	12.5	0.3	6.25
	50대	(246)	1.6	5.9	19.6	26.1	29.0	15.9	2.0	6.31
	60대 이상	(180)		9.1	20.6	22.9	22.5	20.6	4.4	6.38
학력	중졸이하	(174)		6.9	22.2	22.0	25.1	19.2	4.6	6.41
	고졸	(477)	1.8	8.2	23.9	28.8	25.1	11.4	0.9	6.05
	대졸이상	(400)	1.1	5.6	17.8	30.1	31.6	13.1	0.8	6.28
직업	일반회사원	(334)	1.6	7.8	20.0	30.8	27.7	11.3	0.8	6.13
	공무원/공공기관	(112)		0.5	14.2	25.2	43.2	17.0		6.62
	개인사업/자영업	(228)	1.2	7.5	24.3	29.0	22.9	13.0	2.1	6.12
	농어업	(160)		5.0	22.9	23.9	25.3	19.3	3.6	6.42
	주부	(116)	2.2	9.8	19.6	28.1	25.3	13.2	1.8	6.11
	학생	(86)	2.4	8.6	27.8	28.3	24.7	8.3		5.89
	무직	(14)		25.0	17.6	21.4	36.1			5.6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8.6	22.7	26.7	27.8	10.0	4.2	6.21
	300만 원대	(238)		7.3	25.9	26.3	24.9	15.3	0.5	6.16
	400만 원대	(287)	2.5	7.1	21.1	27.3	29.3	12.4	0.3	6.12
	500만원이상	(335)	1.7	5.9	17.4	31.0	27.8	14.5	1.7	6.2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7	7.4	21.0	33.3	27.2	8.8	0.5	6.05
	15년-30년미만	(286)	0.9	5.9	27.1	25.5	27.0	13.2	0.4	6.13
	30년 이상	(465)	1.1	7.4	17.9	26.4	28.1	16.3	2.7	6.3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1	10.2	23.6	26.0	26.4	11.2	1.5	6.06
	면 지역	(311)	0.5	7.1	18.8	28.6	27.3	15.6	2.0	6.30
	동 지역	(498)	1.7	5.4	21.7	28.9	28.3	12.9	1.1	6.20
거주지	천안시	(334)	1.8	5.9	13.0	29.3	30.0	17.7	2.4	6.42
	공주시	(53)		7.2	28.3	27.5	28.5	7.1	1.5	6.04
	보령시	(49)		5.8	29.4	23.9	26.3	14.6		6.15
	아산시	(155)		5.3	30.4	30.3	26.1	7.0	0.8	6.02
	서산시	(84)	1.2	7.0	26.1	29.3	20.0	15.2	1.2	6.10
	논산시	(57)	1.6	7.0	21.8	30.3	29.4	9.9		6.09
	계룡시	(22)	2.3	8.8	19.1	27.4	29.4	13.0		6.12
	당진시	(81)	2.3	7.4	23.4	33.2	21.7	12.1		6.01
	금산군	(25)		11.6	17.0	28.7	25.8	14.7	2.3	6.22
	부여군	(31)	2.4	7.2	22.7	22.6	32.2	11.0	1.8	6.15
	서천군	(25)		9.0	22.3	25.4	28.5	12.6	2.3	6.20
	청양군	(19)		9.5	28.1	19.5	27.2	12.6	3.2	6.15
	홍성군	(48)	1.7	9.5	23.0	23.3	26.5	14.3	1.7	6.13
	예산군	(37)	1.4	11.1	18.0	23.0	32.3	12.6	1.7	6.18
	태안군	-30	1.7	11.5	21.3	18.3	32.7	12.1	2.5	6.15

[표 111] 국민으로서 자긍심

		(사례수)	3	4	5	6	7	8	9	10	평균 (점)
전체		(1050)	0.5	6.4	18.6	27.3	26.8	17.2	3.1	0.1	6.38
성별	남 성	(553)	0.4	6.0	18.7	25.4	28.1	18.2	3.0	0.1	6.42
	여 성	(497)	0.6	6.8	18.6	29.4	25.4	16.1	3.2		6.33
연령	20대 이하	(177)	1.1	5.3	31.0	31.5	22.6	8.3	0.3		5.95
	30대	(208)	0.3	7.4	18.6	28.6	25.7	18.3	1.2		6.32
	40대	(239)	0.2	6.3	16.1	30.8	25.6	19.3	1.6		6.39
	50대	(246)		5.5	12.7	28.6	33.8	17.0	2.5		6.52
	60대 이상	(180)	1.2	7.6	18.0	15.2	24.5	22.4	10.8	0.4	6.67
학력	중졸이하	(174)	0.6	5.0	17.1	20.9	25.1	20.4	10.4	0.4	6.70
	고졸	(477)	0.7	7.4	20.3	30.6	24.7	14.9	1.4		6.22
	대졸이상	(400)	0.2	5.8	17.3	26.1	30.1	18.6	1.9		6.43
직업	일반회사원	(334)	0.2	7.4	19.4	27.7	25.9	18.2	1.2		6.31
	공무원/공공기관	(112)		3.6	8.9	31.1	34.6	19.5	2.3		6.65
	개인사업/자영업	(228)		7.8	17.1	28.4	28.6	15.7	2.4		6.34
	농어업	(160)	1.3	6.2	14.9	22.3	21.3	24.1	9.4	0.4	6.68
	주부	(116)	0.4	5.6	20.7	28.5	27.5	13.0	4.4		6.33
	학생	(86)	1.5	3.7	33.5	26.9	24.1	10.4			6.00
	무직	(14)	4.9	5.8	38.7	16.3	34.3				5.6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1.9	7.8	21.9	21.2	25.8	15.6	5.8		6.32
	300만 원대	(238)	0.5	9.3	17.1	29.0	24.1	16.5	3.5		6.30
	400만 원대	(287)	0.2	4.5	22.1	25.4	28.4	17.7	1.6	0.2	6.38
	500만원이상	(335)		5.1	14.9	31.2	27.9	18.3	2.6		6.4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4	5.6	22.6	30.6	26.2	13.3	1.3		6.22
	15년-30년미만	(286)	0.7	8.1	17.8	32.8	23.4	15.9	1.2		6.23
	30년 이상	(465)	0.5	5.8	16.5	21.8	29.4	20.6	5.3	0.1	6.5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5	7.9	21.0	27.8	23.6	17.4	1.8		6.25
	면 지역	(311)	1.2	5.2	14.0	27.7	24.6	20.9	6.1	0.2	6.57
	동 지역	(498)		6.4	20.4	26.8	29.8	14.8	1.8		6.32
거주지	천안시	(334)		4.7	16.4	28.3	27.6	17.6	5.4		6.53
	공주시	(53)		12.0	26.5	20.4	19.6	18.5	3.0		6.15
	보령시	(49)	1.2	7.4	19.8	29.8	27.0	14.8			6.18
	아산시	(155)		4.4	19.0	33.9	26.9	14.0	1.8		6.32
	서산시	(84)	1.2	9.4	18.8	22.4	28.2	17.6	2.3		6.29
	논산시	(57)		5.1	20.5	31.0	27.7	15.7			6.28
	계룡시	(22)	2.3	7.3	19.8	27.0	25.8	17.9			6.20
	당진시	(81)		9.5	20.4	24.6	28.7	15.6	1.2		6.24
	금산군	(25)		2.7	17.4	34.9	23.6	21.5			6.44
	부여군	(31)	1.6	3.8	26.9	13.8	33.7	20.2			6.35
	서천군	(25)	2.7	8.6	4.4	38.6	24.7	16.1	5.0		6.42
	청양군	(19)	3.2	6.3	15.1	19.5	27.4	22.8	5.8		6.53
	홍성군	(48)	1.6	4.6	22.0	21.7	31.5	15.4	3.2		6.36
	예산군	(37)	1.4	10.4	17.0	23.0	13.9	27.2	7.2		6.48
	태안군	(30)		10.0	19.0	21.5	26.2	18.9	2.2	2.2	6.41

[표 112] 충남 도민으로서 자긍심

		(사례수)	3	4	5	6	7	8	9	10	평균 (점)
전체		(1050)	0.9	5.0	12.9	24.1	29.9	20.4	6.2	0.7	6.66
성별	남 성	(553)	0.8	5.9	13.8	23.3	30.1	19.3	6.6	0.3	6.62
	여 성	(497)	1.0	4.0	12.0	25.0	29.6	21.6	5.7	1.1	6.72
연령	20대 이하	(177)	1.3	4.9	14.1	24.4	32.9	18.2	4.0		6.53
	30대	(208)	1.7	6.8	11.4	26.3	25.6	18.8	8.8	0.6	6.62
	40대	(239)	0.7	5.9	14.1	23.1	29.1	20.9	6.1		6.61
	50대	(246)	0.2	4.1	10.6	23.9	33.4	24.0	3.2	0.6	6.74
	60대 이상	(180)	0.6	2.7	15.1	22.8	28.1	19.0	9.4	2.4	6.82
학력	중졸이하	(174)		1.1	13.3	23.6	27.5	23.8	8.6	2.2	6.94
	고졸	(477)	1.0	4.7	13.1	27.8	28.6	19.0	5.1	0.7	6.59
	대졸이상	(400)	1.1	6.9	12.6	19.9	32.5	20.7	6.3		6.63
직업	일반회사원	(334)	1.7	7.6	11.0	22.9	34.4	17.0	5.0	0.4	6.54
	공무원/공공기관	(112)		3.7	12.5	19.9	32.6	21.9	9.4		6.85
	개인사업/자영업	(228)	0.2	4.5	13.6	25.4	28.2	20.9	6.5	0.6	6.69
	농어업	(160)		3.1	12.9	21.1	29.7	22.4	8.1	2.7	6.91
	주부	(116)	1.3	2.1	16.1	30.8	24.0	21.8	3.9		6.55
	학생	(86)	1.9	5.2	14.0	22.2	26.2	25.3	5.1		6.62
	무직	(14)		2.4	18.0	54.0		20.1	5.5		6.3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0.5	2.5	11.6	28.4	30.7	21.7	3.5	1.1	6.71
	300만 원대	(238)	0.7	4.3	12.7	28.4	28.4	18.8	5.5	1.2	6.64
	400만 원대	(287)	0.5	7.0	12.6	21.5	28.2	22.3	7.3	0.7	6.69
	500만 원이상	(335)	1.5	5.1	14.1	20.8	32.0	19.3	7.2		6.6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8	8.7	12.4	24.5	29.9	19.6	4.0	0.2	6.49
	15년-30년미만	(286)	1.1	4.1	12.6	25.3	31.8	17.2	7.6	0.2	6.65
	30년 이상	(465)	0.8	3.1	13.5	23.0	28.7	22.9	6.7	1.3	6.7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7	5.9	15.4	27.0	27.5	18.6	4.6	0.3	6.50
	면 지역	(311)	0.4	4.0	11.7	23.3	32.0	20.1	7.0	1.6	6.79
	동 지역	(498)	1.3	5.1	12.5	23.2	29.7	21.5	6.4	0.3	6.67
거주지	천안시	(334)	0.6	3.5	11.2	20.6	33.5	20.5	9.4	0.6	6.85
	공주시	(53)		13.0	14.3	21.7	23.2	23.6	4.2		6.43
	보령시	(49)	1.2	6.7	14.9	27.6	26.8	16.5	6.3		6.47
	아산시	(155)		7.0	9.5	29.4	28.6	19.1	6.3		6.62
	서산시	(84)		8.2	15.5	30.7	24.2	20.1	1.2		6.36
	논산시	(57)	2.7	2.9	12.8	27.4	25.6	22.8	3.1	2.8	6.65
	계룡시	(22)	2.3	2.3	17.9	28.3	24.5	21.7	1.5	1.5	6.49
	당진시	(81)	3.5	4.8	15.6	20.1	32.1	21.4	2.5		6.47
	금산군	(25)		4.0	17.2	23.6	33.7	8.4	11.1	2.0	6.66
	부여군	(31)		5.3	12.2	23.0	28.9	23.4	7.2		6.75
	서천군	(25)	2.0		13.6	24.7	34.0	21.4	4.3		6.70
	청양군	(19)	3.2	3.2	10.2	24.9	26.3	29.6		2.6	6.70
	홍성군	(48)		3.1	14.3	25.9	33.2	17.5	4.6	1.5	6.67
	예산군	(37)		1.7	20.8	20.9	32.5	12.1	10.3	1.7	6.70
	태안군	(30)	2.2	3.3	12.4	17.7	23.8	34.7	3.6	2.2	6.87

[표 113]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3	4.7	7.9	18.7	24.0	27.1	14.3	3.1	6.15
성별	남 성	(553)	0.3	5.2	7.8	17.7	23.2	27.1	15.6	3.1	6.18
	여 성	(497)	0.3	4.1	8.0	19.9	24.8	27.1	12.8	3.0	6.13
연령	20대 이하	(177)	0.8	7.1	5.6	26.1	25.0	22.4	13.1		5.87
	30대	(208)	0.3	9.6	8.9	10.3	15.5	24.0	19.5	11.7	6.40
	40대	(239)		1.6	7.2	20.4	24.1	31.9	14.3	0.4	6.22
	50대	(246)	0.4	3.4	8.6	15.0	28.2	31.8	10.9	1.7	6.15
	60대 이상	(180)		2.3	8.8	24.0	26.9	22.5	14.0	1.5	6.07
학력	중졸이하	(174)		2.3	7.4	20.2	25.5	28.2	15.3	1.1	6.20
	고졸	(477)	0.6	5.3	9.8	21.0	26.5	22.5	12.1	2.3	5.95
	대졸이상	(400)		5.0	5.8	15.3	20.4	32.1	16.6	4.8	6.38
직업	일반 회사원	(334)	0.2	7.1	7.8	17.1	20.7	28.8	14.3	4.0	6.15
	공무원/공공기관	(112)			2.0	12.3	22.7	39.1	17.0	7.0	6.78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5.4	8.7	17.7	24.6	23.4	18.1	1.6	6.12
	농어업	(160)		1.2	9.7	17.2	28.7	27.3	13.9	2.0	6.21
	주부	(116)	0.6	2.2	10.8	25.6	31.4	20.2	5.9	3.4	5.86
	학생	(86)	0.9	8.9	4.8	25.8	18.2	27.1	14.3		5.90
	무직	(14)		4.9	16.7	42.1	25.0	5.8	5.5		5.2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0.7	5.9	10.5	19.5	26.7	24.0	11.5	1.1	5.89
	300만 원대	(238)	0.3	4.2	10.5	16.1	23.9	27.4	14.1	3.6	6.16
	400만 원대	(287)	0.3	4.1	6.9	20.1	24.0	21.8	18.6	4.2	6.24
	500만 원이상	(335)		4.7	5.4	18.9	22.5	33.3	12.3	2.9	6.2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5.2	7.5	12.1	25.1	28.8	14.4	6.5	6.33
	15년-30년미만	(286)	0.5	5.3	6.0	21.8	24.0	27.2	13.2	2.0	6.08
	30년 이상	(465)	0.1	3.9	9.3	21.0	23.2	25.9	14.9	1.5	6.09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8	5.6	10.2	16.1	26.8	30.2	7.2	3.1	5.97
	면 지역	(311)		2.7	9.2	14.6	26.2	25.6	18.1	3.6	6.31
	동 지역	(498)	0.2	5.4	5.9	22.5	21.3	26.6	15.4	2.7	6.14
거주지	천안시	(334)		4.1	6.5	20.0	23.0	25.2	13.6	7.6	6.30
	공주시	(53)		2.9	12.2	14.5	27.4	19.5	22.0	1.5	6.20
	보령시	(49)		1.4	8.8	13.6	34.8	26.2	15.2		6.21
	아산시	(155)		1.7	6.1	21.7	22.7	33.0	14.8		6.24
	서산시	(84)		5.8	9.4	19.0	18.7	29.3	16.5	1.2	6.10
	논산시	(57)	1.6	4.1	5.8	22.7	22.0	26.9	15.6	1.4	6.09
	계룡시	(22)		5.5	5.0	17.9	28.5	24.1	19.1		6.18
	당진시	(81)		11.5	7.1	16.9	21.3	26.4	15.5	1.2	5.95
	금산군	(25)		2.7	14.6	22.0	24.3	29.4	7.1		5.84
	부여군	(31)		2.4	16.9	11.0	31.0	27.4	11.2		5.98
	서천군	(25)		4.7	5.1	24.2	23.2	31.5	11.3		6.06
	청양군	(19)		9.5	8.4	7.5	29.3	33.7	8.4	3.2	6.07
	홍성군	(48)	1.6	3.1	7.8	18.4	30.0	34.2	4.8		5.94
	예산군	(37)	3.4	10.7	8.3	12.2	22.2	20.1	19.4	3.9	5.96
	태안군	(30)		9.4	13.8	17.7	23.1	17.7	14.3	4.1	5.85

[표 114]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2	3.2	9.6	15.4	25.0	23.4	16.5	6.3	0.5	5.32
성별	남 성	(553)	0.2	3.3	9.1	16.2	25.7	21.8	16.8	6.6	0.4	5.32
	여 성	(497)	0.2	3.0	10.1	14.6	24.4	25.2	16.2	5.9	0.6	5.33
연령	20대 이하	(177)	0.6	5.0	6.3	13.1	31.8	22.9	15.8	4.6		5.25
	30대	(208)		3.7	13.3	10.7	18.5	19.2	20.7	12.9	0.9	5.55
	40대	(239)		2.7	11.0	16.6	20.1	25.1	18.7	5.7		5.33
	50대	(246)	0.4	2.5	9.3	15.1	26.1	24.4	18.0	3.5	0.7	5.31
	60대 이상	(180)		2.2	6.9	21.9	31.0	25.1	7.4	4.7	0.8	5.15
학력	중졸이하	(174)		2.2	5.5	17.2	31.4	28.6	10.5	3.8	0.8	5.29
	고졸	(477)	0.2	4.5	11.3	16.3	24.9	19.4	16.0	7.0	0.4	5.21
	대졸이상	(400)	0.3	1.9	9.3	13.5	22.5	25.9	19.7	6.4	0.5	5.48
직업	일반 회사원	(334)	0.3	3.2	9.9	14.1	24.0	26.0	15.7	6.2	0.6	5.33
	공무원/공공기관	(112)			6.5	11.6	19.0	29.0	30.2	3.6		5.76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3.5	13.0	14.9	24.6	15.3	18.6	8.8	0.8	5.29
	농어업	(160)		2.0	4.0	20.3	32.0	25.0	10.5	5.3	0.9	5.31
	주부	(116)		4.1	15.6	18.2	19.4	27.0	10.1	5.7		5.03
	학생	(86)		6.6	6.7	12.2	29.4	20.6	18.5	5.9		5.30
	무직	(14)		5.8		25.0	45.4	15.9	2.4	5.5		4.9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0.3	5.0	12.0	16.1	27.0	23.3	11.9	3.9	0.4	5.04
	300만 원대	(238)		2.5	12.3	10.9	20.7	24.6	22.1	6.7	0.3	5.47
	400만 원대	(287)		2.2	9.8	19.3	24.3	20.5	15.1	8.5	0.3	5.32
	500만 원이상	(335)	0.4	3.4	6.1	14.8	27.7	25.1	16.3	5.4	0.9	5.3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4	3.1	11.0	10.1	22.1	24.3	20.4	8.5	0.3	5.49
	15년-30년미만	(286)		3.2	7.5	15.3	27.2	23.8	17.0	5.9		5.35
	30년 이상	(465)	0.2	3.2	9.9	18.9	25.6	22.6	13.7	5.1	0.9	5.20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2	6.1	9.5	14.6	27.5	19.3	16.9	4.8	1.0	5.19
	면 지역	(311)	0.2	2.0	7.7	15.9	24.9	24.7	16.2	8.2	0.2	5.45
	동 지역	(498)	0.2	2.4	10.8	15.5	24.0	24.5	16.5	5.8	0.4	5.31
거주지	천안시	(334)		0.6	8.2	15.9	28.3	26.5	14.7	5.3	0.6	5.40
	공주시	(53)		1.3	13.8	16.1	17.7	29.7	16.8	3.0	1.5	5.30
	보령시	(49)			13.0	10.7	23.0	32.1	18.8	2.4		5.40
	아산시	(155)		0.9	11.3	14.0	25.9	27.9	13.1	6.9		5.35
	서산시	(84)		2.4	10.6	16.5	24.6	19.9	17.9	7.0	1.2	5.37
	논산시	(57)		3.0	10.0	18.3	26.7	20.2	16.4	5.5		5.22
	계룡시	(22)	2.3	7.3	11.8	6.1	19.8	24.5	20.6	7.6		5.28
	당진시	(81)	1.1	8.2	10.6	9.7	23.8	16.6	22.7	7.3		5.24
	금산군	(25)		7.0	6.7	21.9	19.4	21.6	18.7	4.8		5.17
	부여군	(31)		6.0	7.8	20.3	21.7	21.3	13.8	9.1		5.22
	서천군	(25)		2.0	6.3	30.3	23.0	11.8	20.0	6.7		5.23
	청양군	(19)		5.8	8.9	22.6	22.1	13.9	20.9	5.8		5.15
	홍성군	(48)		14.1	1.5	17.5	23.2	14.2	24.6	4.9		5.15
	예산군	(37)	1.6	8.8	11.9	11.3	20.7	11.9	10.6	21.3	1.9	5.37
	태안군	(30)		6.3	11.9	11.4	26.7	21.3	16.2	3.9	2.2	5.20

[표 115]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2	3	4	5	6	7	8	9	10	평균 (점)
전체		(1050)	1.4	5.5	12.9	23.2	26.0	19.9	9.9	1.2	0.1	5.72
성별	남 성	(553)	1.5	5.4	13.9	20.3	25.7	21.2	10.8	1.0	0.1	5.76
	여 성	(497)	1.3	5.6	11.8	26.5	26.2	18.4	8.9	1.3		5.68
연령	20대 이하	(177)	3.7	6.3	10.7	24.6	22.5	22.7	7.1	2.5		5.65
	30대	(208)	1.4	11.3	7.5	22.1	20.1	20.2	17.4			5.78
	40대	(239)	0.6	4.8	13.8	21.7	30.0	15.1	12.8	1.2		5.79
	50대	(246)	0.8	3.7	13.0	22.4	30.2	22.4	5.8	1.4	0.3	5.77
	60대 이상	(180)	0.9	1.7	19.9	26.4	25.0	19.7	5.6	0.8		5.59
학력	중졸이하	(174)	0.6	1.8	15.3	23.8	29.3	22.9	5.2	1.1		5.74
	고졸	(477)	2.5	6.7	15.4	25.5	23.7	15.9	9.6	0.6	0.2	5.51
	대졸이상	(400)	0.3	5.7	8.8	20.3	27.2	23.4	12.4	1.9		5.97
직업	일반회직원	(334)	1.5	8.4	10.1	21.6	24.2	20.5	12.5	1.0		5.75
	공무원/공공기관	(112)		1.9	4.0	18.7	31.9	33.9	9.6			6.21
	개인사업/자영업	(228)	1.3	6.1	18.5	20.7	27.0	12.8	11.3	2.1	0.3	5.62
	농어업	(160)	0.7	1.3	17.3	25.4	26.0	21.4	7.6	0.4		5.71
	주부	(116)	1.4	4.7	15.3	29.8	25.9	16.0	5.7	1.2		5.51
	학생	(86)	2.6	7.1	9.1	23.8	23.1	23.9	8.1	2.3		5.73
	무직	(14)	10.7		11.7	57.9	19.7					4.7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4.2	5.4	16.5	26.9	25.6	16.5	4.7	0.3		5.34
	300만 원대	(238)	1.7	6.3	15.2	18.8	24.5	18.6	13.0	1.9		5.76
	400만 원대	(287)	0.7	5.2	11.8	22.0	26.6	21.7	10.9	0.9	0.3	5.83
	500만 원이상	(335)	0.2	5.3	10.2	25.3	26.6	21.2	9.8	1.3		5.82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2	6.4	11.5	18.0	25.1	23.8	12.5	1.3	0.3	5.89
	15년-30년미만	(286)	2.8	5.5	10.7	23.2	27.9	18.0	9.9	1.9		5.71
	30년 이상	(465)	0.6	5.0	15.1	26.6	25.3	18.5	8.2	0.6		5.6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9	6.4	11.8	23.1	25.5	18.7	10.6	0.7	0.3	5.66
	면 지역	(311)	0.6	3.9	13.7	21.7	25.6	22.2	11.2	1.2		5.85
	동 지역	(498)	1.1	6.1	12.9	24.3	26.4	19.0	8.7	1.3		5.67
거주지	천안시	(334)		4.7	11.1	26.6	25.3	23.6	7.6	1.2		5.79
	공주시	(53)		4.8	14.5	24.4	26.4	19.4	9.0		1.5	5.76
	보령시	(49)	1.4	1.2	13.7	21.3	29.6	29.8	1.6	1.4		5.79
	아산시	(155)	0.9	3.4	15.5	24.7	33.0	11.3	8.6	2.6		5.67
	서산시	(84)		8.2	15.3	16.5	29.3	17.6	11.9	1.2		5.73
	논산시	(57)	1.6	5.6	11.6	24.2	25.5	17.4	14.1			5.75
	계룡시	(22)	2.7	8.0	15.2	16.1	28.0	15.6	12.1	2.3		5.65
	당진시	(81)	4.7	10.5	10.7	14.3	25.0	22.6	12.2			5.61
	금산군	(25)		9.6	13.9	21.0	15.1	29.4	11.1			5.74
	부여군	(31)		8.6	12.3	30.4	17.2	19.6	12.0			5.63
	서천군	(25)	4.7	2.0	9.4	32.3	16.3	25.0	10.4			5.70
	청양군	(19)	3.2	2.6	21.1	14.2	30.4	11.2	17.4			5.69
	홍성군	(48)	4.7	4.8	7.9	26.7	26.3	18.6	9.3	1.7		5.67
	예산군	(37)	6.6	5.9	20.4	16.2	10.2	18.1	20.9	1.7		5.64
	태안군	(30)	2.2	9.6	11.3	22.0	24.9	13.2	14.9	1.9		5.66

[표 116]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6	3.5	9.3	19.0	25.1	23.9	15.7	2.9	6.14
성별	남 성	(553)	0.5	3.6	9.2	17.9	24.4	25.7	15.9	2.8	6.17
	여 성	(497)	0.7	3.5	9.3	20.3	25.9	21.9	15.5	2.9	6.09
연령	20대 이하	(177)	1.6	2.8	7.0	18.8	35.7	23.8	9.2	1.1	5.98
	30대	(208)	0.8	6.8	11.1	12.5	15.0	23.5	22.3	8.0	6.34
	40대	(239)	0.3	3.3	9.2	18.7	21.7	24.2	21.5	1.2	6.23
	50대	(246)	0.4	2.4	9.9	16.1	28.3	30.9	9.3	2.7	6.13
	60대 이상	(180)		2.3	8.5	31.2	26.6	14.5	15.6	1.2	5.94
학력	중졸이하	(174)		2.3	6.4	28.5	30.6	17.0	14.0	1.2	6.00
	고졸	(477)	1.3	4.1	10.4	21.0	26.1	21.3	12.7	3.0	5.96
	대졸이상	(400)		3.3	9.1	12.5	21.5	30.0	20.0	3.5	6.40
직업	일반회사원	(334)	0.5	5.1	10.2	16.5	24.1	24.4	16.5	2.8	6.12
	공무원/공공기관	(112)			0.4	10.8	18.9	44.1	21.2	4.6	6.89
	개인사업/자영업	(228)	0.7	4.6	12.7	18.2	20.5	19.9	19.2	4.1	6.10
	농어업	(160)		1.2	8.2	25.4	28.2	18.4	17.3	1.3	6.11
	주부	(116)	0.6	3.8	11.0	27.0	27.7	19.0	8.6	2.3	5.80
	학생	(86)	2.6	3.8	4.0	16.7	38.5	26.7	5.3	2.3	5.98
	무직	(14)			30.8	33.2	36.0				5.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2.0	4.7	10.2	24.1	25.2	21.0	12.8		5.80
	300만 원대	(238)	0.6	4.0	10.4	20.0	21.0	24.0	17.1	2.9	6.12
	400만 원대	(287)	0.3	2.9	9.1	20.2	27.0	17.3	19.5	3.6	6.19
	500만 원이상	(335)		3.1	8.1	14.5	26.4	31.1	13.1	3.9	6.2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5	5.0	10.3	11.4	21.3	26.8	19.8	5.0	6.32
	15년-30년미만	(286)	1.0	2.7	9.5	20.1	29.1	22.5	12.2	2.9	6.04
	30년 이상	(465)	0.4	3.1	8.5	23.3	25.1	22.9	15.3	1.5	6.07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4	4.9	11.3	17.1	25.4	23.9	13.2	2.7	5.99
	면 지역	(311)		2.8	8.7	20.5	24.4	21.6	19.2	2.9	6.22
	동 지역	(498)	0.6	3.3	8.6	19.1	25.4	25.3	14.7	3.0	6.15
거주지	천안시	(334)		1.8	8.2	17.8	23.0	25.2	19.4	4.7	6.39
	공주시	(53)		4.4	10.1	19.9	23.3	25.0	13.1	4.2	6.11
	보령시	(49)		1.2	7.6	24.0	29.8	19.8	16.0	1.5	6.14
	아산시	(155)		1.7	7.8	22.0	28.8	24.9	13.0	1.7	6.13
	서산시	(84)	1.2	4.7	8.3	17.6	22.4	25.9	16.3	3.6	6.16
	논산시	(57)	1.6	1.5	11.6	19.7	22.9	27.3	11.3	4.2	6.09
	계룡시	(22)		10.0	8.3	17.9	21.4	21.4	18.8	2.3	6.01
	당진시	(81)	1.2	9.5	8.9	20.6	22.6	20.2	14.4	2.5	5.85
	금산군	(25)		2.7	18.6	13.6	31.1	24.6	9.5		5.85
	부여군	(31)		2.4	11.0	29.3	23.1	24.7	9.5		5.85
	서천군	(25)		4.0	6.3	19.2	31.8	27.8	11.0		6.06
	청양군	(19)		6.3	11.6	13.3	26.8	33.5	5.3	3.2	5.98
	홍성군	(48)	1.6	4.7	12.5	16.9	34.2	19.1	11.1		5.79
	예산군	(37)	4.8	7.7	11.6	10.8	23.8	16.6	24.7		5.90
	태안군	(30)	2.5	7.5	13.2	17.4	24.4	13.8	19.0	2.2	5.82

[표 117]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3.2	5.9	14.1	26.3	23.5	17.4	8.8	0.8	5.52
성별	남 성	(553)	0.1	3.8	6.5	13.0	25.8	22.0	18.0	9.9	1.0	5.54
	여 성	(497)	0.2	2.6	5.2	15.2	26.8	25.2	16.8	7.5	0.5	5.50
연령	20대 이하	(177)	0.3	5.5	4.1	13.9	33.3	24.9	13.6	4.4		5.26
	30대	(208)		4.5	9.5	8.5	17.2	23.6	18.7	15.0	2.8	5.76
	40대	(239)		1.5	6.3	19.2	17.0	26.9	21.0	8.1		5.57
	50대	(246)	0.4	2.9	4.5	11.8	30.1	23.7	20.2	6.2	0.3	5.53
	60대 이상	(180)		2.3	4.6	16.8	36.7	17.1	11.2	10.5	0.8	5.41
학력	중졸이하	(174)		2.3	3.6	16.3	37.1	17.8	12.7	9.4	0.8	5.44
	고졸	(477)	0.2	4.4	7.7	15.1	25.6	21.8	15.7	8.1	1.4	5.38
	대졸이상	(400)	0.1	2.2	4.6	11.8	22.4	28.0	21.6	9.4		5.71
직업	일반회사원	(334)	0.1	3.3	7.4	12.7	23.4	24.0	19.3	9.2	0.6	5.54
	공무원/공공기관	(112)			2.1	7.7	20.0	43.8	20.2	6.2		5.91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3.9	7.1	13.8	22.1	21.2	17.3	13.1	1.2	5.59
	농어업	(160)		1.6	4.2	15.4	32.6	18.7	14.8	12.2	0.4	5.58
	주부	(116)		4.1	7.1	18.7	40.8	10.1	15.4	1.4	2.3	5.09
	학생	(86)		7.6	2.7	15.8	23.8	29.1	16.7	4.3		5.31
	무직	(14)			8.3	35.7	34.6	15.9	5.5			4.7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5.1	6.7	15.1	35.7	17.1	14.3	5.9		5.20
	300만 원대	(238)		2.3	8.1	14.2	24.5	21.3	19.9	8.4	1.4	5.55
	400만 원대	(287)		2.5	5.6	17.3	24.8	23.2	15.6	9.4	1.6	5.53
	500만원이상	(335)	0.4	3.4	4.0	10.6	23.5	28.9	19.0	10.2		5.6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2	3.9	6.0	11.3	20.1	28.1	20.1	8.6	1.8	5.66
	15년-30년미만	(286)		3.0	5.6	16.5	28.5	24.3	16.1	5.4	0.7	5.39
	30년 이상	(465)	0.2	2.9	5.9	14.4	28.9	20.1	16.5	11.0	0.1	5.51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6.5	6.9	16.1	23.4	22.4	15.6	8.9	0.3	5.32
	면 지역	(311)	0.2	2.6	5.8	12.4	27.7	21.1	17.7	11.7	0.8	5.63
	동 지역	(498)	0.2	2.0	5.4	14.1	26.8	25.5	18.2	6.9	0.9	5.55
거주지	천안시	(334)		0.6	3.5	14.1	26.0	23.6	21.8	8.7	1.8	5.77
	공주시	(53)			8.7	4.4	37.6	25.8	17.8	2.8	2.9	5.60
	보령시	(49)			5.9	11.6	30.8	26.6	12.5	12.5		5.66
	아산시	(155)			3.5	18.2	27.9	30.5	12.1	7.9		5.53
	서산시	(84)		3.5	7.1	16.5	21.2	24.7	19.9	7.1		5.45
	논산시	(57)		3.0	7.0	18.4	27.2	21.3	15.9	7.2		5.33
	계룡시	(22)	2.3	7.3	7.3	9.8	23.3	20.3	19.4	10.3		5.35
	당진시	(81)	1.1	9.6	9.2	10.9	20.0	22.6	17.0	9.6		5.23
	금산군	(25)		7.0	13.6	10.4	20.9	21.1	22.7	4.4		5.21
	부여군	(31)		4.0	6.0	17.2	30.4	23.1	7.6	11.5		5.32
	서천군	(25)		4.0	9.0	18.9	30.2	11.7	13.0	13.4		5.29
	청양군	(19)		2.6	9.5	15.3	34.2	17.9	14.7	5.8		5.23
	홍성군	(48)		9.4	4.6	17.1	26.4	14.0	20.6	7.9		5.24
	예산군	(37)		15.8	8.4	6.9	19.6	19.4	14.2	15.7		5.24
	태안군	(30)		9.7	10.5	9.0	24.5	19.0	9.6	15.4	2.2	5.34

[표 118]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2	3	4	5	6	7	8	9	10	평균 (점)
전체		(1050)	1.1	5.7	14.5	21.2	21.1	20.8	12.9	2.6	0.1	5.83
성별	남 성	(553)	0.9	6.1	14.0	19.7	20.9	22.2	12.8	3.3	0.1	5.89
	여 성	(497)	1.2	5.3	15.1	23.0	21.3	19.2	13.1	1.8		5.77
연령	20대 이하	(177)	1.9	7.4	14.6	23.8	21.5	23.4	6.9	0.4		5.55
	30대	(208)	1.0	9.2	12.7	14.3	19.1	18.1	18.5	7.2		6.05
	40대	(239)	1.0	5.4	11.6	19.8	23.0	26.2	10.9	2.0		5.91
	50대	(246)	0.4	3.4	16.2	23.2	23.3	18.5	13.7	1.0	0.3	5.83
	60대 이상	(180)	1.4	3.6	17.8	26.1	17.4	17.2	14.2	2.3		5.74
학력	중졸이하	(174)	0.9	2.0	17.3	27.2	14.7	19.9	15.9	1.9		5.86
	고졸	(477)	1.9	7.4	15.7	24.9	19.0	18.8	10.2	1.9	0.2	5.59
	대졸이상	(400)	0.1	5.3	11.8	14.2	26.3	23.6	14.9	3.7		6.10
직업	일반회사원	(334)	0.8	6.5	15.8	15.9	21.6	22.7	14.5	2.3		5.89
	공무원/공공기관	(112)			8.8	11.7	34.6	25.4	15.6	3.9		6.39
	개인사업/자영업	(228)	1.7	7.6	11.1	25.4	14.7	19.6	15.5	4.1	0.3	5.87
	농어업	(160)	0.5	2.9	18.5	26.4	15.9	18.5	15.3	1.9		5.81
	주부	(116)	1.4	5.1	20.8	28.0	21.3	15.3	5.8	2.3		5.43
	학생	(86)	2.6	6.7	11.0	26.9	23.2	25.5	3.9			5.54
	무직	(14)		34.2	8.3	7.3	50.2					4.7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3.9	7.7	18.7	21.9	22.8	15.5	8.1	1.4		5.38
	300만 원대	(238)	0.9	8.3	15.2	21.5	15.3	22.2	13.7	2.9		5.78
	400만 원대	(287)	0.7	4.5	12.9	22.8	18.9	22.1	14.6	3.3	0.3	5.98
	500만 원이상	(335)		3.8	12.9	19.4	26.1	21.6	13.7	2.5		6.0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8	6.7	9.6	17.1	20.9	26.1	13.9	4.6	0.3	6.09
	15년-30년미만	(286)	2.0	5.1	16.0	23.1	23.4	17.0	10.7	2.6		5.68
	30년 이상	(465)	0.7	5.4	16.7	22.8	19.8	19.7	13.7	1.3		5.7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9	6.4	14.7	20.7	21.3	18.3	13.2	3.1	0.3	5.79
	면 지역	(311)	0.9	4.8	14.4	20.9	19.2	21.4	15.4	3.1		5.94
	동 지역	(498)	0.8	6.0	14.5	21.7	22.2	21.6	11.3	2.1		5.79
거주지	천안시	(334)		4.7	15.9	18.3	22.3	20.0	13.5	5.2		5.99
	공주시	(53)		4.4	19.4	19.7	25.8	17.7	10.0	1.4	1.5	5.76
	보령시	(49)		4.0	13.6	27.7	22.9	19.0	9.6	3.1		5.81
	아산시	(155)		5.1	13.2	23.4	23.6	19.1	14.8	0.9		5.86
	서산시	(84)	2.4	8.2	10.6	20.0	17.5	30.6	8.2	2.4		5.79
	논산시	(57)	1.6	2.8	17.1	18.3	24.7	19.7	15.9			5.84
	계룡시	(22)		10.0	15.2	20.3	23.3	17.9	11.1	2.3		5.66
	당진시	(81)	2.5	8.2	15.2	17.1	17.4	26.3	12.1	1.2		5.72
	금산군	(25)		2.7	17.9	37.0	10.4	25.1	7.0			5.58
	부여군	(31)		11.6	9.6	30.5	19.3	16.1	12.9			5.58
	서천군	(25)		6.7	14.7	29.2	11.7	28.8	9.0			5.68
	청양군	(19)	2.6	3.2	21.1	21.4	23.2	8.9	19.6			5.65
	홍성군	(48)	4.8	4.9	9.4	25.8	25.0	14.1	14.2	1.7		5.69
	예산군	(37)	8.5	9.5	11.5	15.4	12.0	21.9	17.5	3.6		5.67
	태안군	(30)	1.7	8.1	11.5	25.8	16.6	19.0	15.6	1.7		5.76

[표 119] 허용수준 (1)결혼이주자

		(사례수)	허용수준 (1)결혼이주자_우리 나리를 들어오는 것			허용수준 (2)결혼이주자_우 리나라에 사는 것			허용수준 (3)결혼이주자_ 나의 이웃이 되는 것			허용수준 (4)결혼이주자_ 직장 동료가 되는 것			허용수준 (5)결혼이주자_ 나/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허용수준 (6)결혼이주자_국 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되는 것		
			○	△	x	○	△	x	○	△	x	○	△	x	○	△	x	○	△	x
전체		(1050)	96.8	2.3	0.9	96.6	2.4	0.9	90.3	8.5	1.3	66.7	29.7	3.6	17.0	41.0	42.0	13.8	26.6	59.6
성별	남 성	(553)	97.4	1.8	0.8	97.1	2.3	0.6	91.2	7.4	1.3	64.9	30.7	4.4	17.6	44.0	38.4	15.5	27.1	57.4
	여 성	(497)	96.2	2.7	1.0	96.2	2.6	1.2	89.2	9.6	1.2	68.7	28.6	2.7	16.2	37.7	46.1	11.9	26.1	62.0
연령	20대 이하	(177)	99.0		1.0	99.0		1.0	90.9	7.7	1.5	64.0	33.4	2.6	18.2	34.5	47.3	14.2	27.3	58.5
	30대	(208)	95.5	2.8	1.7	94.8	3.5	1.7	90.7	8.1	1.3	64.0	32.2	3.8	14.7	41.7	43.6	10.4	29.7	59.9
	40대	(239)	97.0	3.0		97.1	2.5	0.4	94.0	5.5	0.4	68.6	28.3	3.1	15.7	46.8	37.6	19.2	26.5	54.3
	50대	(246)	96.2	2.8	1.0	95.9	3.5	0.7	87.9	10.3	1.9	69.6	27.5	2.9	17.6	43.9	38.5	12.4	29.0	58.6
	60대 이상	(180)	96.9	2.1	1.0	96.9	2.1	1.0	87.6	11.0	1.4	66.0	28.0	6.0	19.3	35.0	45.8	12.2	19.2	68.5
학력	중졸이하	(174)	97.2	1.8	1.0	97.2	1.8	1.0	90.2	8.8	1.0	67.1	28.3	4.6	20.3	37.3	42.4	15.4	21.0	63.6
	고졸	(477)	96.8	2.3	0.9	96.4	2.7	0.9	88.7	9.0	2.3	66.3	29.8	3.9	17.3	36.7	46.0	8.2	27.7	64.2
	대졸이상	(400)	96.7	2.4	0.9	96.7	2.4	0.9	92.2	7.6	0.2	67.1	30.2	2.8	15.1	47.7	37.2	19.9	27.8	52.4
직업	일반 회사원	(334)	95.5	3.5	1.1	95.2	3.7	1.1	90.5	9.1	0.5	64.8	30.9	4.3	16.0	41.3	42.7	14.5	28.2	57.3
	공무원/공 공기관	(112)	99.1		0.9	99.1		0.9	91.3	8.7		66.7	31.4	1.9	7.2	62.5	30.3	18.7	31.8	49.6
	개인사업/ 자영업	(228)	96.6	2.4	1.0	95.9	3.1	1.0	89.0	8.4	2.6	67.8	30.2	2.0	17.1	44.0	38.9	14.9	25.2	59.9
	농어업	(160)	96.3	3.1	0.7	96.3	3.1	0.7	86.8	11.7	1.5	66.2	26.8	7.0	23.6	33.3	43.1	11.3	20.9	67.8
	주부	(116)	98.0	1.5	0.5	98.4	1.0	0.5	95.6	3.3	1.1	74.3	24.1	1.6	18.0	29.1	52.9	9.7	30.8	59.5
	학생	(86)	99.4		0.6	99.4		0.6	91.1	8.3	0.6	63.2	34.2	2.5	19.7	34.4	45.9	14.5	24.2	61.3
	무직	(14)	95.1		4.9	95.1		4.9	89.3		10.7	59.0	30.3	10.7	14.8	39.8	45.5		14.8	85.2
월평균 가구	200만 원대 이하	(190)	94.9	1.4	3.8	94.3	1.4	4.3	87.2	9.2	3.7	66.2	27.4	6.3	15.4	27.7	56.9	9.5	19.5	71.0

소득	300만 원대	(238)	98.5	1.3	0.3	98.0	1.7	0.3	89.5	9.5	1.0	65.0	30.3	4.7	15.9	45.0	39.1	10.6	27.7	61.8
	400만 원대	(287)	96.5	3.2	0.3	96.6	3.4		93.6	5.7	0.7	67.0	30.9	2.1	17.7	43.9	38.4	16.6	29.3	54.1
	500만 원 이상	(335)	97.0	2.7	0.3	97.0	2.7	0.3	89.7	9.7	0.6	67.9	29.5	2.6	18.0	43.2	38.9	16.2	27.5	56.2
거주기간	15년 미만	(299)	96.3	2.8	0.9	96.3	2.9	0.9	90.7	8.7	0.6	61.9	34.8	3.3	14.0	37.0	49.0	16.0	24.8	59.2
	15년-30년 미만	(286)	97.2	1.3	1.5	96.8	1.7	1.5	89.0	8.8	2.1	64.5	33.1	2.4	16.7	44.6	38.8	13.7	26.6	59.7
	30년 이상	(465)	96.9	2.5	0.6	96.8	2.6	0.6	90.8	8.1	1.1	71.2	24.3	4.5	19.1	41.4	39.6	12.5	27.8	59.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98.6	0.4	1.0	98.5	0.5	1.0	90.0	8.0	1.9	61.5	35.4	3.1	14.6	41.3	44.1	15.4	26.4	58.2
	면 지역	(311)	96.7	2.9	0.4	96.4	2.9	0.7	89.2	9.7	1.1	67.5	27.3	5.1	19.2	40.3	40.5	15.0	23.7	61.4
	동 지역	(498)	96.0	2.8	1.2	95.9	3.1	1.0	91.1	7.9	1.0	68.7	28.4	2.9	16.7	41.3	42.0	12.3	28.6	59.1
거주지	천안시	(334)	96.5	2.9	0.6	96.5	2.9	0.6	93.5	6.5		71.2	27.1	1.7	18.3	42.8	38.9	14.1	26.4	59.5
	공주시	(53)	98.5	1.5		98.5	1.5		89.9	10.1		70.8	27.7	1.5	15.7	38.8	45.4	9.9	25.6	64.4
	보령시	(49)	98.8		1.2	98.8		1.2	93.2	5.6	1.2	67.0	30.5	2.4	17.1	48.0	34.9	12.8	21.6	65.6
	아산시	(155)	98.3	1.7		98.3	1.7		94.8	4.4	0.8	72.3	25.1	2.6	16.4	47.0	36.6	16.5	32.1	51.4
	서산시	(84)	88.3	9.4	2.3	88.3	9.3	2.4	81.2	14.2	4.7	59.8	34.2	6.0	15.3	28.1	56.6	8.2	28.2	63.5
	논산시	(57)	100			97.0	3.0		87.1	12.9		61.3	35.7	2.9	19.9	41.2	38.8	12.7	25.8	61.5
	계룡시	(22)	97.3		2.7	97.3		2.7	77.4	19.8	2.7	54.5	35.0	10.5	13.3	41.7	45.0	15.6	19.4	65.0
	당진시	(81)	98.8		1.2	98.8		1.2	90.7	8.1	1.2	57.1	37.9	4.9	16.9	34.9	48.2	15.6	26.1	58.2
	금산군	(25)	96.0	4.0		96.0	4.0		92.7	7.3		60.7	37.3	2.0	16.1	53.6	30.3	12.3	28.6	59.1
	부여군	(31)	98.4		1.6	98.4		1.6	91.5	6.9	1.6	73.8	22.7	3.5	15.6	46.3	38.1	18.1	25.7	56.2
	서천군	(25)	97.3		2.7	97.3		2.7	88.0	9.4	2.7	67.7	25.2	7.1	10.4	49.5	40.1	9.7	34.7	55.6
	청양군	(19)	91.9	4.9	3.2	91.1	5.8	3.2	75.4	21.4	3.2	45.1	43.7	11.2	17.4	41.6	41.1	17.0	22.3	60.7
	홍성군	(48)	100			100			82.8	13.9	3.2	62.3	31.3	6.4	14.2	35.5	50.3	11.2	24.2	64.7
	예산군	(37)	93.2	1.9	4.9	93.2	1.9	4.9	86.4	6.7	6.8	60.0	29.7	10.3	23.0	27.9	49.1	19.3	15.8	64.9
	태안군	(30)	100			100			91.7	8.3		70.2	27.6	2.2	13.3	35.7	51.1	12.7	26.3	61.1

[표 120] 허용수준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허용수준 (1)외국인근로자_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것			허용수준 (2)외국인근로자_ 우리나라에 사는 것			허용수준 (3)외국인근로자_ 나의 이웃이 되는 것			허용수준 (4)외국인근로자_ 직장 동료가 되는 것			허용수준 (5)외국인근로자_ 나/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허용수준 (6)외국인근로자_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되는 것		
			○	△	x	○	△	x	○	△	x	○	△	x	○	△	x	○	△	x
전체		(1050)	94.0	4.4	1.6	93.5	4.9	1.7	79.4	16.9	3.8	51.2	41.0	7.9	11.8	28.2	60.0	5.7	17.3	77.0
성별	남 성	(553)	94.9	4.0	1.1	94.1	4.7	1.2	80.0	17.1	2.9	53.4	39.5	7.1	11.9	30.1	58.0	6.8	17.7	75.5
	여 성	(497)	93.0	4.8	2.2	92.8	5.0	2.2	78.7	16.6	4.7	48.7	42.5	8.7	11.6	26.1	62.2	4.5	16.9	78.6
연령	20대 이하	(177)	93.3	4.6	2.1	93.1	5.1	1.8	79.6	15.7	4.7	47.4	45.4	7.2	12.9	25.9	61.2	5.8	16.9	77.3
	30대	(208)	93.7	5.1	1.2	93.7	4.9	1.5	83.8	13.4	2.9	49.0	43.4	7.6	11.8	26.8	61.4	3.7	19.4	76.9
	40대	(239)	95.9	3.6	0.6	96.3	3.2	0.6	82.8	15.0	2.2	54.9	37.3	7.7	12.0	35.3	52.7	7.8	18.0	74.2
	50대	(246)	93.0	5.5	1.5	92.3	6.5	1.2	75.6	19.9	4.5	51.0	42.3	6.7	11.6	25.5	62.9	6.7	16.2	77.1
	60대 이상	(180)	94.0	3.0	3.0	91.4	4.8	3.8	74.5	20.6	4.9	52.7	36.8	10.5	10.7	26.1	63.2	3.9	16.0	80.1
학력	중졸이하	(174)	95.0	2.6	2.4	92.3	4.4	3.2	77.6	18.2	4.1	52.5	37.8	9.7	11.2	24.0	64.7	5.8	14.7	79.5
	고졸	(477)	92.3	6.1	1.6	92.2	6.1	1.6	76.2	18.3	5.6	51.1	40.8	8.1	11.3	29.6	59.1	4.7	17.2	78.1
	대졸이상	(400)	95.6	3.2	1.2	95.4	3.6	1.0	83.9	14.7	1.5	50.7	42.5	6.8	12.5	28.3	59.1	6.9	18.7	74.4
직업	일반회사원	(334)	92.8	5.8	1.4	92.8	6.3	0.9	78.6	18.0	3.4	49.6	42.4	8.0	13.6	24.6	61.8	5.0	18.4	76.6
	공무원/ 공공기관	(112)	99.1		0.9	99.1		0.9	83.9	14.4	1.7	50.9	43.5	5.6	6.9	31.1	62.0	5.0	19.4	75.7
	개인사업/ 자영업	(228)	93.6	5.1	1.3	93.1	5.3	1.6	79.6	15.9	4.4	54.6	40.3	5.1	11.6	38.3	50.2	8.5	18.3	73.3
	농어업	(160)	92.7	4.5	2.8	89.9	6.4	3.7	74.6	20.5	4.8	52.6	36.9	10.5	12.1	23.9	64.0	2.1	16.1	81.8
	주부	(116)	95.8	3.0	1.1	96.1	2.8	1.1	78.0	17.7	4.3	50.1	40.4	9.5	9.6	18.8	71.6	7.0	13.7	79.3
	학생	(86)	95.9	1.2	2.9	95.9	1.2	2.9	85.7	12.7	1.6	51.4	39.4	9.2	14.9	32.5	52.6	8.1	17.1	74.8
	무직	(14)	75.0	25.0		72.6	27.4		83.0	2.4	14.6	26.6	58.8	14.6	5.5	25.6	69.0		5.5	94.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86.8	5.9	7.3	84.1	7.9	8.0	71.5	20.7	7.8	51.6	35.1	13.3	10.8	14.0	75.2	4.6	10.2	85.1
	300만 원대	(238)	97.7	2.0	0.3	97.3	2.1	0.6	81.0	15.5	3.5	47.8	45.0	7.2	7.7	36.1	56.2	3.6	17.0	79.4

	400만 원대	(287)	95.4	4.6		95.7	4.3		84.7	12.7	2.6	55.1	39.5	5.3	13.1	33.8	53.1	8.0	18.2	73.7
	500만원 이상	(335)	94.2	5.1	0.7	94.1	5.6	0.3	78.0	19.3	2.6	49.9	42.7	7.4	14.1	25.8	60.1	5.9	20.8	73.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95.6	3.4	1.0	95.9	3.1	1.0	81.6	15.8	2.7	43.5	46.4	10.1	7.3	27.3	65.4	4.6	14.9	80.4
	15년-30년 미만	(286)	91.9	6.1	2.0	91.6	6.4	2.0	77.0	18.8	4.2	48.4	45.0	6.7	13.3	26.6	60.1	6.7	15.4	78.0
	30년 이상	(465)	94.2	4.0	1.8	93.0	5.1	1.9	79.4	16.4	4.2	57.9	35.0	7.1	13.7	29.7	56.6	5.8	20.1	74.1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95.2	2.5	2.3	93.7	3.5	2.9	76.2	19.0	4.8	47.7	43.7	8.6	9.5	25.9	64.6	7.3	11.6	81.1
	면 지역	(311)	94.7	3.9	1.4	93.8	4.7	1.5	79.0	17.5	3.5	52.1	39.0	8.8	12.6	27.8	59.6	4.6	16.3	79.1
	동 지역	(498)	93.0	5.6	1.4	93.2	5.7	1.2	81.1	15.5	3.4	52.3	40.8	6.9	12.3	29.5	58.1	5.6	20.8	73.6
거주지	천안시	(334)	93.5	5.9	0.6	93.0	6.5	0.6	85.2	11.2	3.6	54.0	40.6	5.3	13.5	33.4	53.1	5.9	21.7	72.4
	공주시	(53)	98.5	1.5		98.5	1.5		77.6	19.5	3.0	47.2	44.9	7.9	8.6	27.3	64.1	6.9	14.9	78.2
	보령시	(49)	95.9		4.1	95.9		4.1	74.8	18.4	6.9	42.2	48.2	9.6	14.0	33.0	53.0	3.3	16.7	79.9
	아산시	(155)	96.6	1.7	1.7	95.7	2.6	1.7	80.9	15.7	3.4	53.8	38.4	7.7	11.4	25.2	63.4	6.9	15.7	77.3
	서산시	(84)	83.5	12.9	3.6	84.7	11.7	3.6	75.2	17.7	7.0	43.4	47.1	9.5	12.7	18.9	68.4	3.6	9.4	87.0
	논산시	(57)	97.1	2.9		97.1	2.9		79.7	20.3		49.9	39.9	10.2	12.7	22.5	64.8	11.2	11.4	77.4
	계룡시	(22)	92.7	7.3		92.7	7.3		60.3	37.0	2.7	37.7	50.0	12.3	6.1	27.6	66.4	5.0	19.5	75.5
	당진시	(81)	98.8	1.2		98.8	1.2		77.4	22.6		49.0	40.3	10.8	13.2	33.5	53.3	8.5	19.1	72.4
	금산군	(25)	96.0	4.0		94.7	5.3		77.1	22.9		58.7	37.0	4.3	7.1	26.3	66.6	6.0	11.0	83.0
	부여군	(31)	93.1	5.3	1.6	93.1	5.3	1.6	82.2	16.2	1.6	56.0	38.7	5.3	9.6	29.2	61.2	3.8	19.5	76.7
	서천군	(25)	92.3	5.1	2.7	92.3	5.1	2.7	80.3	17.4	2.3	61.7	33.9	4.4	4.4	22.7	72.9		16.8	83.2
	청양군	(19)	84.9	10.2	4.9	81.2	13.9	4.9	49.1	37.5	13.3	43.7	37.5	18.8	5.8	20.5	73.7	5.8	5.8	88.4
	홍성군	(48)	93.8	3.2	3.1	93.8	3.2	3.1	73.5	21.7	4.8	55.8	36.5	7.7	6.1	28.3	65.6	1.7	13.7	84.7
	예산군	(37)	91.5	1.7	6.8	89.5	3.6	6.9	74.2	17.3	8.5	42.8	41.6	15.6	19.7	12.1	68.2	5.0	21.3	73.7
	태안군	(30)	95.9		4.1	90.4	3.8	5.8	79.9	13.8	6.3	55.1	39.1	5.8	7.5	31.9	60.6	1.7	20.9	77.4

[표 121] 허용수준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허용수준 (1)북한이탈주민_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것			허용수준 (2)북한이탈주민_ 우리나라에 사는 것			허용수준 (3)북한이탈주민_ 나의 이웃이 되는 것			허용수준 (4)북한이탈주민_ 직장 동료가 되는 것			허용수준 (5)북한이탈주민_ 나/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허용수준 (6)북한이탈주민_ 국회의원또는 지방의원 되는 것		
			○	△	x	○	△	x	○	△	x	○	△	x	○	△	x	○	△	x
전체		(1050)	95.8	2.5	1.7	95.0	3.1	1.9	81.7	14.3	4.0	60.5	31.3	8.2	16.1	40.4	43.5	7.8	30.9	61.3
성별	남 성	(553)	96.6	2.4	1.0	95.8	3.1	1.1	83.1	13.7	3.2	62.4	29.6	8.0	16.8	41.9	41.3	8.9	31.6	59.4
	여 성	(497)	94.8	2.6	2.5	94.1	3.1	2.7	80.2	14.9	4.8	58.4	33.2	8.4	15.4	38.8	45.8	6.5	30.0	63.4
연령	20대 이하	(177)	96.1	2.2	1.7	93.9	2.9	3.2	79.7	14.1	6.2	55.2	33.0	11.7	14.5	38.2	47.3	8.3	29.4	62.3
	30대	(208)	95.9	2.6	1.5	95.1	3.0	1.9	84.9	13.4	1.7	59.4	33.1	7.5	15.9	39.1	45.0	5.2	36.3	58.5
	40대	(239)	97.0	2.6	0.4	97.1	2.5	0.4	87.8	11.0	1.2	67.4	28.2	4.4	18.2	46.8	35.0	10.1	31.7	58.2
	50대	(246)	93.9	3.0	3.1	93.1	4.7	2.2	78.3	16.4	5.3	61.0	31.9	7.1	14.4	42.9	42.6	7.7	31.9	60.4
	60대 이상	(180)	96.2	1.8	2.0	95.9	2.1	2.0	76.7	17.1	6.3	57.1	30.8	12.1	17.5	32.2	50.2	7.3	23.5	69.2
학력	중졸이하	(174)	96.7	1.2	2.1	95.4	2.6	2.1	79.1	14.9	6.0	58.3	30.7	11.0	19.7	36.0	44.3	9.3	24.8	66.0
	고졸	(477)	95.2	2.4	2.3	94.5	2.9	2.6	79.2	15.5	5.3	58.1	32.3	9.5	13.3	40.7	46.0	4.9	27.8	67.3
	대졸이상	(400)	95.9	3.2	0.9	95.5	3.6	0.9	85.9	12.6	1.5	64.3	30.3	5.4	17.9	42.0	40.1	10.6	37.2	52.2
직업	일반회사원	(334)	94.4	4.2	1.4	93.4	4.8	1.8	80.4	16.1	3.5	61.4	29.6	9.0	16.3	38.0	45.7	8.3	32.3	59.4
	공무원/ 공공기관	(112)	99.1		0.9	99.1		0.9	90.3	9.1	0.5	64.7	31.6	3.7	13.2	51.2	35.5	7.9	42.8	49.2
	개인사업/ 자영업	(228)	96.0	2.0	2.0	94.8	3.3	1.9	84.7	11.9	3.4	63.7	31.7	4.6	19.0	39.9	41.1	9.3	30.5	60.3
	농어업	(160)	95.4	2.8	1.8	95.0	3.8	1.2	73.6	18.0	8.4	57.1	29.7	13.2	18.2	36.4	45.4	5.3	27.9	66.8
	주부	(116)	94.8	1.9	3.3	96.1	0.6	3.3	84.0	13.8	2.2	58.8	33.3	7.9	10.6	41.6	47.8	7.2	21.3	71.5
	학생	(86)	97.3	1.2	1.5	94.9	2.1	3.0	83.9	13.1	3.0	52.9	37.4	9.7	16.7	43.0	40.3	8.1	29.0	62.9
	무직	(14)	100			97.6	2.4		58.0	22.5	19.5	52.5	28.0	19.5	5.5	42.1	52.4		33.9	66.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93.6	2.1	4.3	91.4	2.4	6.2	68.1	20.6	11.3	51.6	30.2	18.2	11.8	28.5	59.7	6.7	20.9	72.4
	300만 원대	(238)	97.3	1.1	1.6	97.4	1.4	1.2	85.0	12.4	2.6	61.0	32.6	6.4	11.8	45.6	42.6	6.3	27.6	66.1

	400만 원대	(287)	96.5	2.7	0.8	95.9	3.7	0.3	86.9	11.3	1.7	64.8	28.6	6.7	17.8	46.1	36.2	10.8	32.2	57.0
	500만 원 이상	(335)	95.2	3.6	1.2	94.6	4.2	1.2	82.7	14.6	2.7	61.6	33.3	5.1	20.2	38.7	41.1	6.9	37.8	55.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96.1	2.8	1.0	96.2	2.7	1.0	85.7	12.7	1.5	56.6	36.2	7.3	14.2	37.0	48.8	8.0	27.8	64.2
	15년-30년 미만	(286)	93.9	2.6	3.5	92.8	3.6	3.6	78.8	16.0	5.2	58.8	32.5	8.6	15.8	41.1	43.1	8.8	31.2	59.9
	30년 이상	(465)	96.6	2.2	1.1	95.6	3.0	1.4	81.0	14.2	4.8	64.1	27.4	8.5	17.5	42.2	40.2	7.0	32.6	60.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98.4	0.6	1.0	97.8	1.2	1.0	81.4	13.0	5.6	56.6	36.1	7.3	15.1	42.1	42.8	9.3	27.4	63.3
	면 지역	(311)	95.5	2.9	1.5	95.4	3.9	0.8	81.0	13.9	5.1	61.3	28.8	9.9	17.6	40.3	42.1	8.2	28.9	62.9
	동 지역	(498)	94.6	3.1	2.2	93.5	3.6	3.0	82.4	15.2	2.4	61.9	30.5	7.6	15.7	39.7	44.6	6.8	33.8	59.4
거주지	천안시	(334)	95.3	3.5	1.2	95.3	3.5	1.2	78.2	18.3	3.5	57.0	34.1	8.9	17.0	34.7	48.3	6.4	38.8	54.8
	공주시	(53)	98.5	1.5		98.5	1.5		89.6	10.4		64.1	31.0	4.9	12.9	48.5	38.7	11.6	34.3	54.1
	보령시	(49)	94.4		5.6	94.4		5.6	83.8	9.0	7.2	51.1	42.0	6.9	15.7	34.2	50.1	4.9	28.9	66.3
	아산시	(155)	97.5	0.8	1.7	94.9	2.6	2.5	86.1	10.5	3.4	68.7	24.4	6.9	17.4	50.5	32.1	12.3	28.7	59.1
	서산시	(84)	85.9	8.2	5.8	84.7	9.3	6.0	78.8	14.1	7.1	59.0	32.7	8.3	10.6	39.9	49.5	4.8	21.1	74.1
	논산시	(57)	98.6	1.4		97.2	2.8		87.0	13.0		64.0	31.5	4.5	17.2	39.3	43.4	12.7	21.0	66.2
	계룡시	(22)	97.3		2.7	97.3		2.7	78.6	17.1	4.2	56.5	30.2	13.3	8.8	49.5	41.7	11.1	22.1	66.8
	당진시	(81)	100			100			85.9	14.1		59.7	35.4	4.9	12.1	51.0	37.0	7.4	22.7	69.9
	금산군	(25)	96.0	4.0		94.7	5.3		85.7	14.3		63.4	32.6	4.0	15.1	47.9	37.0	8.3	21.9	69.8
	부여군	(31)	94.9	3.5	1.6	96.5	1.8	1.6	87.8	10.6	1.6	69.4	27.1	3.5	23.9	41.8	34.3	7.9	37.2	54.9
	서천군	(25)	100			100			81.6	6.3	12.1	65.3	17.9	16.8	7.1	47.5	45.4	2.7	33.1	64.2
	청양군	(19)	80.9	10.7	8.4	77.7	13.9	8.4	65.3	25.4	9.3	55.8	26.0	18.2	24.2	36.1	39.6	8.9	36.1	54.9
	홍성군	(48)	100			96.8	3.2		76.4	15.7	7.8	57.4	31.5	11.1	17.2	32.5	50.4	1.7	32.1	66.2
	예산군	(37)	94.5	1.9	3.6	94.5	1.9	3.6	79.5	11.9	8.5	56.7	29.6	13.7	26.4	23.5	50.1	6.6	28.5	64.9
	태안군	(30)	100			100			83.7	10.5	5.8	66.3	23.7	9.9	16.0	39.9	44.1	9.7	23.1	67.2

[표 122]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1)한국에서 출생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11.8	41.1	23.7	20.7	2.7	2.62
성별	남 성	(553)	12.1	40.9	24.4	19.9	2.7	2.60
	여 성	(497)	11.4	41.3	22.8	21.6	2.8	2.63
연령	20대 이하	(177)	14.4	39.4	29.0	16.4	0.8	2.50
	30대	(208)	13.9	39.5	33.0	12.5	1.1	2.47
	40대	(239)	12.3	50.4	18.7	14.9	3.8	2.48
	50대	(246)	8.7	40.6	20.6	26.1	4.1	2.76
	60대 이상	(180)	10.4	32.9	18.5	34.7	3.5	2.88
학력	중졸이하	(174)	8.7	32.3	21.5	33.8	3.7	2.91
	고졸	(477)	14.2	41.6	25.8	17.0	1.3	2.50
	대졸이상	(400)	10.3	44.2	22.1	19.4	4.0	2.63
직업	일반회사원	(334)	11.2	45.5	23.8	16.9	2.7	2.54
	공무원/공공기관	(112)	11.2	38.9	25.0	23.1	1.8	2.65
	개인사업/자영업	(228)	11.0	45.9	18.2	21.1	3.8	2.61
	농어업	(160)	11.5	29.3	23.1	31.8	4.3	2.88
	주부	(116)	13.2	37.7	23.7	23.5	1.9	2.63
	학생	(86)	16.0	41.1	32.9	10.0		2.37
	무직	(14)	10.7	39.8	49.5			2.3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15.3	38.7	20.3	23.3	2.5	2.59
	300만 원대	(238)	9.2	42.2	26.6	20.4	1.6	2.63
	400만 원대	(287)	11.7	38.2	26.1	20.2	3.9	2.66
	500만 원 이상	(335)	11.8	44.1	21.4	19.9	2.8	2.5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3.4	41.7	27.9	16.2	0.8	2.49
	15년-30년 미만	(286)	10.9	42.1	23.5	20.1	3.4	2.63
	30년 이상	(465)	11.3	40.1	21.0	24.0	3.6	2.69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3.9	29.6	28.3	23.6	4.6	2.75
	면 지역	(311)	9.5	37.2	23.3	26.1	3.9	2.78
	동 지역	(498)	12.2	49.1	21.7	15.9	1.1	2.45
거주지	천안시	(334)	8.8	45.2	23.5	19.5	2.9	2.62
	공주시	(53)	13.2	42.3	22.2	19.4	2.9	2.56
	보령시	(49)	2.6	58.9	13.0	22.3	3.3	2.65
	아산시	(155)	6.1	46.9	26.0	21.0		2.62
	서산시	(84)	16.6	34.0	22.5	25.8	1.2	2.61
	논산시	(57)	18.9	40.4	25.2	14.2	1.4	2.39
	계룡시	(22)	11.4	40.8	26.8	21.1		2.58
	당진시	(81)	21.1	39.4	20.1	17.0	2.3	2.40
	금산군	(25)	11.6	35.1	27.9	21.4	4.0	2.71
	부여군	(31)	6.2	32.7	35.8	23.4	1.8	2.82
	서천군	(25)	14.4	33.0	25.3	22.7	4.7	2.70
	청양군	(19)	11.6	32.5	18.1	31.6	6.3	2.89
	홍성군	(48)	15.9	30.9	24.8	20.7	7.7	2.73
	예산군	(37)	21.8	26.8	19.1	23.2	9.1	2.71
	태안군	(30)	20.4	19.2	30.7	25.3	4.4	2.74

[표 123]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2)한국인 부모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11.7	34.5	29.7	17.2	7.0	2.73
성별	남 성	(553)	11.7	34.1	30.6	17.7	5.9	2.72
	여 성	(497)	11.7	34.9	28.7	16.6	8.1	2.75
연령	20대 이하	(177)	12.6	37.6	30.0	11.4	8.4	2.66
	30대	(208)	20.8	33.2	27.8	13.8	4.4	2.48
	40대	(239)	9.5	39.2	30.9	14.3	6.1	2.68
	50대	(246)	9.2	31.7	31.0	19.4	8.6	2.86
	60대 이상	(180)	6.6	30.4	28.1	27.5	7.4	2.99
학력	중졸이하	(174)	5.2	31.5	29.1	25.2	9.0	3.01
	고졸	(477)	15.0	35.6	30.2	14.3	4.9	2.59
	대졸이상	(400)	10.5	34.4	29.4	17.1	8.5	2.79
직업	일반회사원	(334)	14.5	35.1	28.3	13.8	8.4	2.66
	공무원/공공기관	(112)	7.7	33.4	34.0	19.7	5.2	2.81
	개인사업/자영업	(228)	9.7	38.2	26.2	18.3	7.5	2.76
	농어업	(160)	9.2	24.4	31.7	28.0	6.8	2.99
	주부	(116)	15.1	34.8	27.4	16.4	6.3	2.64
	학생	(86)	12.5	40.1	35.1	7.9	4.5	2.52
	무직	(14)	4.9	45.6	49.5			2.4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15.8	35.6	21.4	23.2	4.1	2.64
	300만 원대	(238)	11.8	32.5	32.1	17.0	6.6	2.74
	400만 원대	(287)	12.3	30.7	30.8	18.2	8.0	2.79
	500만 원 이상	(335)	8.8	38.4	31.7	13.1	7.9	2.7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6.2	33.2	31.0	12.6	6.9	2.61
	15년~30년 미만	(286)	11.6	33.9	30.3	15.6	8.6	2.76
	30년 이상	(465)	8.8	35.6	28.5	21.1	6.0	2.80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5.2	23.2	31.3	19.8	10.5	2.87
	면 지역	(311)	8.9	29.9	31.6	21.2	8.3	2.90
	동 지역	(498)	11.7	42.8	27.8	13.4	4.4	2.56
거주지	천안시	(334)	11.1	38.8	30.6	12.9	6.6	2.65
	공주시	(53)	17.8	23.6	31.9	19.0	7.6	2.75
	보령시	(49)	5.9	38.5	34.9	15.0	5.7	2.76
	아산시	(155)	7.8	38.4	28.5	17.6	7.7	2.79
	서산시	(84)	10.7	32.9	33.0	21.1	2.3	2.71
	논산시	(57)	17.3	28.1	32.7	18.9	3.0	2.62
	계룡시	(22)	9.1	32.4	35.6	22.9		2.72
	당진시	(81)	14.2	35.5	29.9	16.7	3.7	2.60
	금산군	(25)	16.3	25.4	19.4	25.2	13.7	2.95
	부여군	(31)	12.0	26.8	28.4	24.9	7.8	2.90
	서천군	(25)	12.1	39.9	13.9	20.3	13.7	2.84
	청양군	(19)	14.2	23.2	24.0	18.4	20.2	3.07
	홍성군	(48)	12.5	31.3	28.1	19.1	9.0	2.81
	예산군	(37)	14.7	23.0	27.0	24.8	10.5	2.93
	태안군	(30)	12.5	30.5	26.5	15.9	14.6	2.90

[표 124]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3)생애 대부분 한국 거주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2.5	18.8	37.0	29.3	12.3	3.30
성별	남 성	(553)	3.0	18.6	35.6	30.5	12.4	3.31
	여 성	(497)	2.0	19.1	38.7	28.1	12.2	3.29
연령	20대 이하	(177)	3.4	25.5	40.7	22.8	7.6	3.06
	30대	(208)	4.0	20.1	39.5	25.0	11.4	3.20
	40대	(239)	2.3	24.8	32.2	30.8	10.0	3.21
	50대	(246)	1.7	13.8	35.2	33.8	15.5	3.48
	60대 이상	(180)	1.3	9.8	39.5	32.8	16.6	3.53
학력	중졸이하	(174)	2.1	10.8	42.7	28.2	16.2	3.46
	고졸	(477)	3.9	18.9	39.0	29.2	8.9	3.20
	대졸이상	(400)	1.0	22.2	32.2	30.0	14.6	3.35
직업	일반회사원	(334)	2.6	21.5	35.1	31.3	9.5	3.24
	공무원/공공기관	(112)		24.1	35.9	20.4	19.6	3.36
	개인사업/자영업	(228)	2.2	15.1	35.8	32.4	14.5	3.42
	농어업	(160)	2.4	13.4	37.7	30.3	16.2	3.45
	주부	(116)	3.0	16.1	40.9	29.7	10.4	3.29
	학생	(86)	6.3	25.7	39.8	23.4	4.8	2.95
	무직	(14)		16.2	56.7	27.1		3.1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6.1	20.0	37.2	24.1	12.5	3.17
	300만 원대	(238)	3.9	16.9	43.0	27.0	9.2	3.21
	400만 원대	(287)	1.5	18.7	34.6	33.3	11.8	3.35
	500만 원 이상	(335)	0.3	19.6	34.8	30.6	14.7	3.4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3.4	21.7	38.8	26.3	9.8	3.17
	15년~30년 미만	(286)	2.9	19.0	37.6	30.8	9.6	3.25
	30년 이상	(465)	1.7	16.9	35.5	30.4	15.5	3.41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4.0	16.9	30.2	32.4	16.5	3.41
	면 지역	(311)	3.4	15.4	36.6	29.7	14.8	3.37
	동 지역	(498)	1.2	21.8	40.6	27.6	8.7	3.21
거주지	천안시	(334)		21.7	37.7	27.1	13.5	3.32
	공주시	(53)	3.0	19.0	37.6	25.2	15.1	3.30
	보령시	(49)	1.2	18.2	38.7	31.3	10.6	3.32
	아산시	(155)	2.6	17.2	37.5	35.0	7.8	3.28
	서산시	(84)	2.4	14.3	45.9	30.4	7.0	3.25
	논산시	(57)	1.4	14.7	46.1	30.8	6.9	3.27
	계룡시	(22)		21.7	47.7	21.8	8.8	3.18
	당진시	(81)	7.4	18.0	33.6	29.1	11.9	3.20
	금산군	(25)	10.0	15.7	25.0	34.3	15.0	3.28
	부여군	(31)	8.3	17.6	24.7	31.4	18.1	3.33
	서천군	(25)	8.7	19.5	21.2	35.5	15.1	3.29
	청양군	(19)	2.6	19.6	34.9	22.6	20.2	3.38
	홍성군	(48)	4.8	17.0	34.9	31.1	12.3	3.29
	예산군	(37)	1.4	17.5	35.0	23.0	23.1	3.49
	태안군	(30)	2.5	23.8	26.7	27.6	19.4	3.38

[표 125]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4)한국어 수준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2.7	19.7	53.5	24.2	3.99
성별	남 성	(553)	2.6	19.8	53.4	24.1	3.99
	여 성	(497)	2.7	19.5	53.5	24.3	3.99
연령	20대 이하	(177)	5.3	26.2	45.7	22.8	3.86
	30대	(208)	3.2	22.3	58.3	16.2	3.88
	40대	(239)	2.4	19.6	52.7	25.2	4.01
	50대	(246)	1.7	16.8	56.0	25.4	4.05
	60대 이상	(180)	1.1	14.2	53.0	31.6	4.15
학력	중졸이하	(174)	1.2	20.7	51.5	26.6	4.03
	고졸	(477)	2.7	16.5	57.0	23.8	4.02
	대졸이상	(400)	3.2	23.1	50.2	23.5	3.94
직업	일반회사원	(334)	3.8	18.1	57.7	20.4	3.95
	공무원/공공기관	(112)	2.5	25.6	45.3	26.6	3.96
	개인사업/자영업	(228)	2.5	19.0	52.6	26.0	4.02
	농어업	(160)	1.6	14.4	60.2	23.9	4.06
	주부	(116)		17.1	49.4	33.4	4.16
	학생	(86)	5.0	34.1	39.8	21.1	3.77
	무직	(14)		16.6	72.7	10.7	3.9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2.2	15.5	55.8	26.5	4.07
	300만 원대	(238)	3.2	18.4	54.5	23.9	3.99
	400만 원대	(287)	3.1	25.7	50.0	21.2	3.89
	500만 원 이상	(335)	2.1	17.8	54.5	25.6	4.0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5.5	25.4	48.0	21.1	3.85
	15년-30년 미만	(286)	1.8	20.7	52.8	24.7	4.00
	30년 이상	(465)	1.4	15.4	57.4	25.8	4.0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3.6	19.2	51.2	26.1	4.00
	면 지역	(311)	1.9	19.3	56.2	22.6	4.00
	동 지역	(498)	2.7	20.2	52.9	24.2	3.99
거주지	천안시	(334)	2.9	21.8	49.9	25.4	3.98
	공주시	(53)		17.4	58.9	23.7	4.06
	보령시	(49)		18.5	59.7	21.8	4.03
	아산시	(155)	1.7	20.1	50.5	27.7	4.04
	서산시	(84)		22.6	50.4	26.9	4.04
	논산시	(57)	1.6	24.6	54.2	19.7	3.92
	계룡시	(22)	5.3	21.8	54.1	18.8	3.86
	당진시	(81)	5.8	15.6	61.9	16.7	3.89
	금산군	(25)		19.7	56.6	23.6	4.04
	부여군	(31)		19.8	58.2	22.0	4.02
	서천군	(25)	5.0	22.7	47.0	25.4	3.93
	청양군	(19)		25.4	53.2	21.4	3.96
	홍성군	(48)	7.8	10.7	58.0	23.4	3.97
	예산군	(37)	5.6	8.3	57.3	28.9	4.09
	태안군	(30)	5.6	14.6	59.2	20.7	3.95

[표 126]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5)한국 문화의 이해 및 수용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7.0	12.1	39.1	41.8	4.16
성별	남 성	(553)	5.5	13.1	37.1	44.4	4.20
	여 성	(497)	8.7	11.1	41.3	38.9	4.10
연령	20대 이하	(177)	6.1	12.8	28.6	52.5	4.28
	30대	(208)	15.0	15.1	38.5	31.4	3.86
	40대	(239)	8.3	14.2	38.7	38.7	4.08
	50대	(246)	4.0	8.1	45.2	42.7	4.27
	60대 이상	(180)	1.1	10.6	42.2	46.1	4.33
학력	중졸이하	(174)	2.8	13.2	39.5	44.5	4.26
	고졸	(477)	7.0	7.5	40.8	44.7	4.23
	대졸이상	(400)	8.9	17.2	36.9	37.1	4.02
직업	일반회사원	(334)	8.1	13.6	36.9	41.4	4.12
	공무원/공공기관	(112)	9.9	21.0	38.0	31.2	3.90
	개인사업/자영업	(228)	8.7	10.1	42.1	39.2	4.12
	농어업	(160)	3.0	6.7	45.4	44.9	4.32
	주부	(116)	4.0	9.7	42.2	44.1	4.26
	학생	(86)	7.4	15.8	24.8	52.1	4.22
	무직	(14)			38.1	61.9	4.6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3.3	12.2	43.9	40.6	4.22
	300만 원대	(238)	9.9	7.9	41.6	40.5	4.13
	400만 원대	(287)	7.5	12.9	37.9	41.7	4.14
	500만 원 이상	(335)	6.7	14.4	35.5	43.4	4.16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5.0	15.5	31.8	37.8	3.92
	15년-30년 미만	(286)	3.5	11.5	37.3	47.7	4.29
	30년 이상	(465)	4.0	10.3	44.9	40.8	4.22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6.7	11.5	38.0	43.9	4.19
	면 지역	(311)	4.7	13.0	41.7	40.6	4.18
	동 지역	(498)	8.6	11.9	38.0	41.6	4.12
거주지	천안시	(334)	17.0	18.7	30.0	34.3	3.82
	공주시	(53)		7.6	49.5	42.9	4.35
	보령시	(49)		13.6	38.9	47.6	4.34
	아산시	(155)	0.9	12.2	39.4	47.5	4.34
	서산시	(84)		7.1	46.0	46.9	4.40
	논산시	(57)	2.7	10.3	47.1	39.9	4.24
	계룡시	(22)	5.3	11.1	41.4	42.3	4.21
	당진시	(81)	4.6	7.3	45.4	42.7	4.26
	금산군	(25)	7.7	5.0	41.3	46.1	4.26
	부여군	(31)	4.0	12.4	34.0	49.6	4.29
	서천군	(25)	6.7	7.0	44.7	41.7	4.21
	청양군	(19)		1.8	58.4	39.8	4.38
	홍성군	(48)		10.9	43.7	45.4	4.34
	예산군	(37)	7.2		44.9	47.9	4.33
	태안군	(30)	5.6	8.3	39.3	46.9	4.28

[표 127]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6)한국의 법, 제도 존중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
전체		(1050)	1.9	4.4	45.5	48.2	4.40
성별	남 성	(553)	1.4	6.0	46.4	46.2	4.37
	여 성	(497)	2.4	2.7	44.5	50.5	4.43
연령	20대 이하	(177)		4.9	43.0	52.1	4.47
	30대	(208)	9.4	9.4	43.7	37.5	4.09
	40대	(239)		2.9	49.9	47.2	4.44
	50대	(246)		4.1	45.1	50.7	4.47
	60대 이상	(180)		0.8	44.4	54.8	4.54
학력	중졸이하	(174)		2.0	45.0	53.1	4.51
	고졸	(477)	2.5	3.4	45.1	49.1	4.41
	대졸이상	(400)	1.9	6.8	46.2	45.1	4.34
직업	일반회사원	(334)	2.3	6.5	44.3	46.9	4.36
	공무원/공공기관	(112)	3.5	6.1	49.3	41.1	4.28
	개인사업/자영업	(228)	1.7	4.1	47.9	46.3	4.39
	농어업	(160)		2.1	44.0	53.9	4.52
	주부	(116)	3.4		43.0	53.7	4.47
	학생	(86)		6.5	43.3	50.2	4.44
	무직	(14)			55.8	44.2	4.4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3.5	45.5	51.1	4.48
	300만 원대	(238)	1.6	6.5	41.3	50.6	4.41
	400만 원대	(287)	3.4	3.7	47.4	45.5	4.35
	500만 원 이상	(335)	1.7	4.2	46.8	47.3	4.4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4.6	9.4	44.2	41.9	4.23
	15년-30년미만	(286)	1.4	3.1	41.9	53.6	4.48
	30년 이상	(465)	0.4	2.1	48.5	49.0	4.4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6	5.2	40.7	52.5	4.44
	면 지역	(311)	1.3	4.1	44.9	49.7	4.43
	동 지역	(498)	2.4	4.3	48.1	45.2	4.36
거주지	천안시	(334)	5.8	8.2	48.7	37.3	4.17
	공주시	(53)			44.6	55.4	4.55
	보령시	(49)			45.5	54.5	4.55
	아산시	(155)		0.9	47.1	52.0	4.51
	서산시	(84)			44.8	55.2	4.55
	논산시	(57)		8.8	39.3	51.9	4.43
	계룡시	(22)		5.0	42.0	53.0	4.48
	당진시	(81)		3.6	40.8	55.6	4.52
	금산군	(25)		2.7	50.7	46.6	4.44
	부여군	(31)		1.9	47.1	50.9	4.49
	서천군	(25)		5.0	43.3	51.8	4.47
	청양군	(19)		1.8	40.7	57.5	4.56
	홍성군	(48)		9.3	37.8	52.9	4.44
	예산군	(37)		1.7	46.5	51.8	4.50
	태안군	(30)		3.6	41.6	54.8	4.51

[표 128] 우리 사회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

		(사례수)	지역 균형 발전	정치 안정	법치 확립	기회 균등	시민 의식 제고	부패와 특권의 타파
전체		(1050)	14.5	19.6	15.6	17.8	16.3	16.3
성별	남 성	(553)	15.0	20.2	15.0	16.5	15.1	18.2
	여 성	(497)	13.9	18.9	16.2	19.2	17.7	14.2
연령	20대 이하	(177)	12.8	18.0	12.2	21.0	19.3	16.7
	30대	(208)	15.7	15.9	12.0	18.3	18.6	19.5
	40대	(239)	13.4	20.1	15.6	16.9	16.5	17.6
	50대	(246)	14.6	20.0	18.5	18.0	13.8	15.0
	60대 이상	(180)	16.0	23.9	19.1	14.8	14.0	12.1
학력	중졸이하	(174)	13.4	20.5	19.1	18.9	14.5	13.6
	고졸	(477)	14.0	20.5	14.2	19.1	16.3	16.0
	대졸이상	(400)	15.5	18.0	15.7	15.8	17.2	17.8
직업	일반회사원	(334)	18.9	16.1	14.7	19.1	15.4	15.8
	공무원/공공기관	(112)	12.5	19.3	18.4	11.6	20.6	17.5
	개인사업/자영업	(228)	13.1	20.4	13.8	15.5	15.3	22.1
	농어업	(160)	12.5	23.6	21.1	15.6	14.9	12.2
	주부	(116)	14.5	26.8	13.3	21.0	15.7	8.8
	학생	(86)	8.8	15.3	11.8	23.7	23.5	16.9
	무직	(14)	5.8	10.4	21.5	34.6		27.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15.1	22.1	13.0	23.3	13.0	13.4
	300만 원대	(238)	16.7	20.2	16.9	18.0	11.6	16.7
	400만 원대	(287)	12.0	20.7	19.0	12.9	19.7	15.7
	500만 원이상	(335)	14.7	16.7	13.2	18.7	18.7	18.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9.6	20.4	13.6	16.2	19.4	20.8
	15년-30년미만	(286)	17.2	15.8	13.4	22.3	15.4	15.8
	30년 이상	(465)	16.0	21.3	18.2	16.0	14.9	13.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5.3	17.5	13.8	17.7	16.1	19.7
	면 지역	(311)	11.4	25.0	17.8	16.0	14.1	15.7
	동 지역	(498)	16.1	17.1	15.0	19.0	17.8	15.0
거주지	천안시	(334)	15.3	17.7	10.6	17.7	24.1	14.6
	공주시	(53)	14.8	16.0	19.1	17.6	16.4	16.1
	보령시	(49)	14.7	13.9	15.7	15.4	16.6	23.7
	아산시	(155)	12.2	24.3	12.2	20.0	15.7	15.7
	서산시	(84)	16.2	23.5	15.4	18.9	10.6	15.4
	논산시	(57)	12.6	18.6	18.5	20.2	8.5	21.5
	계룡시	(22)	8.0	33.9	23.5	5.3	9.1	20.2
	당진시	(81)	14.3	17.6	25.0	19.3	11.9	11.9
	금산군	(25)	11.1	19.4	23.1	17.9	9.3	19.2
	부여군	(31)	15.6	19.0	22.9	10.9	9.7	22.0
	서천군	(25)	19.2	28.7	22.4	16.7	4.3	8.7
	청양군	(19)	15.1	15.3	20.2	12.1	16.5	20.9
	홍성군	(48)	16.9	16.1	20.4	24.6	7.8	14.2
	예산군	(37)	10.6	18.6	19.3	17.3	13.6	20.6
	태안군	(30)	18.1	19.2	11.6	9.7	20.6	20.7

[표 129] 동의정도_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사례수)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5	4.0	16.2	29.2	35.1	12.7	2.3	6.42
성별	남 성	(553)	0.8	4.3	18.6	26.0	36.3	12.0	2.1	6.37
	여 성	(497)	0.2	3.6	13.6	32.8	33.7	13.5	2.5	6.47
연령	20대 이하	(177)	1.4	3.5	16.8	31.3	35.9	11.0		6.30
	30대	(208)		1.9	15.3	32.9	25.7	17.0	7.2	6.62
	40대	(239)	0.6	3.5	15.2	28.7	40.4	10.7	0.9	6.40
	50대	(246)	0.2	3.8	17.9	28.3	37.0	10.6	2.2	6.39
	60대 이상	(180)	0.3	7.7	15.7	24.8	35.6	15.1	0.9	6.36
학력	중졸이하	(174)	1.1	5.9	16.9	23.9	36.8	14.1	1.3	6.37
	고졸	(477)	0.7	3.6	17.3	30.4	35.0	11.2	1.8	6.36
	대졸이상	(400)		3.6	14.5	30.2	34.5	13.9	3.3	6.50
직업	일반회사원	(334)		4.1	17.0	32.7	29.8	14.1	2.4	6.40
	공무원/공공기관	(112)		2.1	10.4	25.4	47.7	7.6	6.8	6.69
	개인사업/자영업	(228)	0.5	3.2	18.5	28.0	33.4	14.5	1.9	6.42
	농어업	(160)	0.4	5.9	16.1	23.9	41.0	11.7	1.0	6.38
	주부	(116)	0.9	5.1	11.7	35.4	32.3	12.4	2.1	6.39
	학생	(86)	3.0	3.4	16.6	23.6	39.6	13.7		6.35
	무직	(14)			44.0	41.4	14.6			5.7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0.3	5.0	15.7	29.8	38.8	9.9	0.4	6.33
	300만 원대	(238)	0.3	4.1	16.3	31.4	32.7	14.1	1.1	6.39
	400만 원대	(287)	1.4	3.5	17.8	27.4	33.1	13.6	3.2	6.41
	500만 원이상	(335)		3.7	15.0	28.9	36.4	12.6	3.4	6.4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4	3.9	12.5	32.2	35.6	11.2	4.2	6.49
	15년-30년미만	(286)	0.7	2.6	16.9	30.0	34.3	14.2	1.4	6.43
	30년 이상	(465)	0.5	4.8	18.1	26.9	35.3	12.8	1.6	6.37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5	4.3	19.9	28.2	31.5	14.2	1.4	6.34
	면 지역	(311)	0.2	4.9	16.5	26.5	36.3	13.2	2.4	6.43
	동 지역	(498)	0.7	3.2	14.3	31.4	36.1	11.7	2.6	6.45
거주지	천안시	(334)		2.4	15.3	24.1	39.4	14.2	4.7	6.62
	공주시	(53)		5.6	16.3	34.0	32.8	10.0	1.3	6.29
	보령시	(49)		6.3	16.1	30.6	37.3	9.7		6.28
	아산시	(155)	1.6	4.5	13.9	32.1	36.6	9.5	1.7	6.33
	서산시	(84)	1.2	3.6	17.6	34.3	31.5	11.8		6.27
	논산시	(57)		4.1	19.2	32.5	28.9	14.0	1.3	6.34
	계룡시	(22)	5.0	6.1	11.4	28.5	32.3	15.3	1.5	6.29
	당진시	(81)		3.7	16.7	34.1	35.8	9.7		6.31
	금산군	(25)		2.3	22.7	31.3	33.8	6.0	4.0	6.31
	부여군	(31)		7.2	14.3	30.2	31.9	12.9	3.5	6.40
	서천군	(25)		2.0	22.3	34.7	23.4	17.6		6.32
	청양군	(19)	3.2	6.3	17.7	27.2	26.0	13.3	6.3	6.32
	홍성군	(48)		7.9	14.3	27.9	34.1	14.3	1.5	6.37
	예산군	(37)		3.0	20.3	24.7	31.7	20.2		6.46
	태안군	(30)		5.5	19.3	29.5	27.8	17.9		6.33

[표 130] 동의정도_충남의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사례수)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3.1	16.1	31.2	28.1	19.3	2.2	6.51
성별	남 성	(553)	2.8	15.1	31.8	28.0	20.4	2.0	6.54
	여 성	(497)	3.4	17.3	30.5	28.2	18.1	2.4	6.47
연령	20대 이하	(177)	3.1	20.8	27.9	30.2	17.1	0.8	6.40
	30대	(208)	4.8	13.4	27.0	27.5	20.8	6.6	6.66
	40대	(239)	3.0	11.6	34.6	31.3	16.8	2.6	6.55
	50대	(246)	2.8	15.9	32.7	26.4	22.2		6.49
	60대 이상	(180)	1.6	21.0	32.6	24.9	19.1	0.8	6.41
학력	중졸이하	(174)	1.8	20.6	29.1	28.7	19.3	0.4	6.44
	고졸	(477)	1.6	18.7	34.9	24.6	17.8	2.4	6.46
	대졸이상	(400)	5.4	11.1	27.6	32.1	21.1	2.7	6.60
직업	일반회사원	(334)	4.9	15.0	29.6	32.8	15.1	2.6	6.46
	공무원/공공기관	(112)		10.8	21.7	33.8	30.3	3.5	6.94
	개인사업/자영업	(228)	3.2	14.8	38.4	20.9	20.1	2.6	6.47
	농어업	(160)	1.6	19.3	31.4	27.4	19.5	0.9	6.46
	주부	(116)	2.2	19.7	33.8	25.3	17.4	1.7	6.41
	학생	(86)	3.9	18.9	24.3	26.8	24.9	1.2	6.53
	무직	(14)	2.4	23.8	44.9	28.8			6.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1.5	18.5	32.0	33.3	13.9	0.8	6.42
	300만 원대	(238)	3.9	16.0	32.5	27.0	18.5	2.1	6.46
	400만 원대	(287)	4.1	16.3	30.5	26.1	20.1	2.9	6.50
	500만 원이상	(335)	2.5	14.7	30.4	27.7	22.3	2.5	6.6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4.1	12.1	28.8	30.9	21.2	2.9	6.62
	15년-30년미만	(286)	2.8	15.2	31.5	30.1	16.6	3.7	6.54
	30년 이상	(465)	2.6	19.3	32.5	25.1	19.7	0.7	6.42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3.5	15.2	32.4	28.5	19.3	1.2	6.49
	면 지역	(311)	1.9	17.6	33.1	27.2	17.8	2.3	6.48
	동 지역	(498)	3.6	15.7	29.4	28.5	20.2	2.5	6.54
거주지	천안시	(334)	2.9	16.0	25.3	31.2	19.4	5.3	6.64
	공주시	(53)	5.9	11.7	33.8	28.0	20.6		6.46
	보령시	(49)	1.6	19.7	36.7	19.1	22.9		6.42
	아산시	(155)	2.5	14.9	36.5	26.8	18.4	0.9	6.46
	서산시	(84)	3.6	19.0	31.5	26.9	17.7	1.2	6.40
	논산시	(57)	4.1	20.3	33.2	25.5	17.0		6.31
	계룡시	(22)	5.0	13.3	37.7	19.8	21.8	2.3	6.47
	당진시	(81)	2.5	17.8	36.8	29.5	12.2	1.2	6.35
	금산군	(25)	1.3	18.7	33.9	25.0	21.1		6.46
	부여군	(31)		13.2	42.2	21.0	23.7		6.55
	서천군	(25)	2.0	11.9	33.5	31.9	20.7		6.57
	청양군	(19)	9.5	13.3	16.8	29.5	30.9		6.59
	홍성군	(48)	4.5	13.1	26.4	38.9	17.1		6.51
	예산군	(37)	1.7	21.1	28.5	19.9	24.9	3.9	6.57
	태안군	(30)	3.3	11.8	35.8	25.9	23.1		6.54

[표 131] 동의정도_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이웃을 신뢰한다

		(사례수)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2.9	13.0	25.3	38.3	16.0	4.3	6.64
성별	남 성	(553)	0.2	2.6	15.2	24.4	38.2	16.1	3.4	6.60
	여 성	(497)		3.3	10.6	26.3	38.5	15.9	5.4	6.69
연령	20대 이하	(177)		3.7	10.2	29.1	41.2	15.8		6.55
	30대	(208)		1.4	13.4	22.4	36.5	15.5	10.8	6.84
	40대	(239)		2.9	10.2	25.7	41.7	13.4	6.1	6.71
	50대	(246)	0.5	1.6	14.4	27.8	38.1	15.3	2.3	6.57
	60대 이상	(180)		5.6	17.3	20.9	33.5	21.2	1.5	6.52
학력	중졸이하	(174)		4.4	15.0	21.8	36.2	21.5	1.1	6.59
	고졸	(477)	0.1	3.1	12.3	27.2	38.9	13.9	4.5	6.61
	대졸이상	(400)	0.2	2.0	13.0	24.5	38.6	16.1	5.5	6.70
직업	일반회사원	(334)	0.2	3.1	13.3	27.2	40.5	12.5	3.2	6.55
	공무원/공공기관	(112)		1.2	8.4	22.9	36.7	23.2	7.6	6.95
	개인사업/자영업	(228)	0.3	2.0	16.4	24.3	36.3	13.3	7.5	6.64
	농어업	(160)		5.1	15.9	21.9	34.5	19.7	2.9	6.56
	주부	(116)		1.3	8.3	29.8	39.1	17.6	3.9	6.75
	학생	(86)		5.2	9.2	20.7	43.7	21.1		6.66
	무직	(14)			19.0	41.7	39.2			6.2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2.7	14.2	24.2	40.7	16.5	1.7	6.59
	300만 원대	(238)	0.5	2.2	13.9	25.3	36.1	18.5	3.5	6.64
	400만 원대	(287)		5.2	11.0	27.7	34.9	14.1	7.2	6.63
	500만 원이상	(335)		1.5	13.5	23.7	41.6	15.6	4.0	6.6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2.8	10.8	25.4	39.5	14.3	7.1	6.73
	15년-30년미만	(286)	0.2	2.0	12.1	24.6	41.7	16.0	3.3	6.67
	30년 이상	(465)	0.1	3.5	15.0	25.6	35.5	17.1	3.2	6.57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2	3.8	12.4	22.6	42.0	15.8	3.0	6.62
	면 지역	(311)		3.7	13.6	23.6	38.5	16.0	4.6	6.63
	동 지역	(498)	0.1	2.0	12.9	27.6	36.5	16.1	4.8	6.66
거주지	천안시	(334)		2.3	10.5	22.5	40.6	13.5	10.5	6.84
	공주시	(53)		4.2	12.9	25.2	38.4	17.8	1.5	6.57
	보령시	(49)		1.7	15.4	31.9	32.8	18.2		6.50
	아산시	(155)		3.5	15.7	17.4	49.4	13.1	0.8	6.56
	서산시	(84)		4.8	13.0	32.9	30.6	16.3	2.4	6.48
	논산시	(57)			14.7	36.6	32.8	15.9		6.50
	계룡시	(22)	2.7	3.8	16.8	28.2	21.8	26.7		6.43
	당진시	(81)		2.5	16.7	26.1	37.7	15.8	1.2	6.51
	금산군	(25)		4.0	12.3	28.7	38.2	16.8		6.52
	부여군	(31)		3.5	13.4	25.6	34.3	23.2		6.60
	서천군	(25)		2.0	12.6	25.4	39.8	17.6	2.7	6.66
	청양군	(19)	3.2	3.2	14.2	24.0	31.6	17.5	6.3	6.56
	홍성군	(48)		1.5	11.1	28.2	40.7	17.1	1.5	6.65
	예산군	(37)		3.3	10.1	30.7	32.0	18.7	5.3	6.69
	태안군	(30)		7.7	13.8	25.0	22.7	28.6	2.2	6.57

[표 132]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8	4.0	11.0	27.6	25.6	19.8	8.8	2.4	5.80
성별	남 성	(553)	0.9	4.1	9.8	29.4	24.5	21.0	7.7	2.5	5.79
	여 성	(497)	0.6	4.0	12.3	25.5	26.9	18.5	10.0	2.3	5.81
연령	20대 이하	(177)	1.5	4.2	14.2	24.9	34.0	17.6	3.6		5.53
	30대	(208)	1.3	5.7	9.1	19.4	23.5	19.7	13.3	8.0	6.10
	40대	(239)		2.5	9.3	33.9	22.1	18.9	12.0	1.2	5.87
	50대	(246)	1.1	3.3	10.6	29.3	23.4	22.7	7.7	1.9	5.79
	60대 이상	(180)		5.0	12.5	28.9	27.7	19.4	5.7	0.8	5.64
학력	중졸이하	(174)	0.5	2.7	12.6	25.5	28.8	22.5	6.9	0.4	5.77
	고졸	(477)	1.1	5.3	11.2	30.3	27.0	14.3	7.6	3.2	5.66
	대졸이상	(400)	0.5	3.1	9.9	25.3	22.7	25.1	10.9	2.4	5.98
직업	일반회사원	(334)	0.8	4.6	11.2	26.5	26.3	17.7	10.7	2.3	5.80
	공무원/공공기관	(112)			5.1	24.3	23.3	34.0	9.9	3.5	6.30
	개인사업/자영업	(228)	0.5	6.2	10.2	32.1	21.0	18.2	7.3	4.4	5.73
	농어업	(160)	1.0	3.1	13.4	27.5	25.2	19.9	8.7	1.3	5.73
	주부	(116)	0.6	4.1	8.6	30.4	28.2	17.0	9.5	1.7	5.79
	학생	(86)	0.6	3.8	16.3	17.6	39.9	18.4	3.4		5.61
	무직	(14)	10.7		22.9	46.7		14.2	5.5		4.9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2.5	6.1	12.9	28.7	28.4	13.6	7.1	0.8	5.47
	300만 원대	(238)	1.4	3.7	13.5	25.1	25.5	17.9	10.2	2.9	5.78
	400만 원대	(287)		3.8	8.0	26.0	26.0	21.7	11.9	2.6	6.00
	500만 원이상	(335)		3.3	10.5	30.2	23.9	23.1	6.0	3.0	5.8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7	3.7	11.7	22.7	28.0	18.8	10.6	3.9	5.92
	15년-30년미만	(286)	1.1	3.2	11.2	26.8	26.5	22.6	6.2	2.4	5.79
	30년 이상	(465)	0.6	4.8	10.3	31.2	23.6	18.7	9.2	1.5	5.7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1	4.7	11.2	25.6	25.8	21.5	6.4	2.7	5.72
	면 지역	(311)	0.7	2.8	11.1	28.9	21.0	23.0	9.8	2.6	5.88
	동 지역	(498)	0.1	4.5	10.7	27.7	28.5	17.0	9.2	2.2	5.79
거주지	천안시	(334)	0.6	2.9	7.6	30.1	26.0	18.8	9.4	4.7	5.95
	공주시	(53)			14.2	23.7	34.4	20.4	7.2		5.83
	보령시	(49)	1.5	2.6	10.4	22.0	26.2	28.0	9.3		5.90
	아산시	(155)			17.5	26.0	27.8	20.9	7.0	0.8	5.76
	서산시	(84)		2.4	10.5	26.0	32.9	16.5	9.4	2.4	5.88
	논산시	(57)		7.5	9.6	24.8	33.8	14.8	8.0	1.6	5.69
	계룡시	(22)	2.7	9.5	8.8	23.9	22.6	22.1	10.3		5.62
	당진시	(81)	1.1	8.1	14.3	30.2	15.2	18.0	8.4	4.8	5.62
	금산군	(25)	2.3	8.0	9.9	20.3	22.0	26.4	11.1		5.75
	부여군	(31)		6.2	10.9	38.7	12.3	26.2	5.7		5.59
	서천군	(25)	2.7	9.0	9.6	26.7	17.6	23.1	11.3		5.62
	청양군	(19)			20.5	24.9	26.7	18.9	5.8	3.2	5.74
	홍성군	(48)	1.7	7.8	11.1	26.5	24.7	23.4	4.8		5.54
	예산군	(37)	4.8	5.6	8.3	30.0	17.3	18.1	12.2	3.9	5.72
	태안군	(30)		14.9	5.2	25.3	23.7	15.4	15.4		5.66

[표 133]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2	2.8	7.0	22.2	31.9	19.7	11.2	4.7	0.2	5.12
성별	남 성	(553)	0.3	3.5	6.2	24.1	30.2	18.4	11.8	5.3	0.3	5.11
	여 성	(497)	0.2	2.1	7.9	20.1	33.8	21.2	10.7	4.0	0.1	5.12
연령	20대 이하	(177)	0.8	4.9	7.2	15.3	35.3	25.8	9.7	1.1		5.01
	30대	(208)		3.4	7.2	21.6	30.2	14.3	13.8	9.6		5.25
	40대	(239)	0.3	1.3	6.1	24.2	28.1	23.2	13.5	3.1	0.2	5.18
	50대	(246)		2.4	7.6	25.6	30.3	18.5	10.6	5.1		5.07
	60대 이상	(180)		2.8	6.8	22.4	37.8	17.2	7.9	4.0	1.1	5.05
학력	중졸이하	(174)		2.3	7.3	18.7	38.3	18.0	11.0	3.7	0.7	5.14
	고졸	(477)	0.5	4.2	8.9	23.8	30.8	17.9	8.8	4.9	0.3	4.95
	대졸이상	(400)		1.5	4.5	21.8	30.4	22.7	14.3	4.9		5.31
직업	일반회사원	(334)	0.4	2.4	6.8	22.3	33.9	17.3	12.3	4.5		5.10
	공무원/공공기관	(112)			2.1	19.2	28.9	27.5	17.9	4.4		5.53
	개인사업자영업	(228)	0.3	3.4	6.5	25.8	29.6	16.8	10.1	7.5		5.09
	농어업	(160)		2.2	6.6	24.6	34.3	16.9	10.9	3.3	1.2	5.09
	주부	(116)		3.5	11.9	19.6	35.0	18.7	6.9	4.0	0.4	4.92
	학생	(86)		5.4	10.2	8.2	27.5	36.6	9.9	2.3		5.18
	무직	(14)		10.7	2.4	66.8	20.1					3.9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0.7	3.3	11.5	23.8	33.3	15.3	8.4	2.7	1.0	4.85
	300만 원대	(238)		2.6	7.7	21.1	34.1	14.0	15.3	5.2		5.16
	400만 원대	(287)	0.3	2.8	5.2	20.4	33.7	22.7	10.8	4.1		5.16
	500만 원이상	(335)		2.8	5.4	23.6	27.9	23.8	10.4	6.0	0.1	5.2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3.7	8.0	16.9	30.4	21.6	14.5	4.8		5.20
	15년-30년미만	(286)	0.2	2.8	6.2	19.0	35.7	22.5	10.9	2.6		5.11
	30년 이상	(465)	0.2	2.3	6.8	27.6	30.5	16.9	9.3	5.9	0.5	5.0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6	5.9	8.6	18.5	35.4	20.1	7.0	3.4	0.5	4.91
	면 지역	(311)	0.2	2.0	7.2	21.7	30.8	18.1	13.9	5.8	0.4	5.22
	동 지역	(498)		1.8	6.1	24.3	30.9	20.6	11.6	4.6		5.16
거주지	천안시	(334)		0.6	5.9	23.5	31.3	22.4	9.4	7.0		5.25
	공주시	(53)			7.2	17.0	37.4	23.9	10.2	4.2		5.26
	보령시	(49)			7.2	24.0	30.3	21.6	14.2	2.8		5.20
	아산시	(155)			4.3	21.6	40.2	19.2	13.0	1.7		5.20
	서산시	(84)			14.3	16.5	28.0	16.6	18.7	6.0		5.27
	논산시	(57)		5.7	4.3	21.4	29.0	18.7	15.2	5.8		5.19
	계룡시	(22)		9.5	5.0	19.8	33.2	23.3	7.6	1.5		4.85
	당진시	(81)		11.7	4.7	19.5	31.1	16.4	10.6	6.0		4.92
	금산군	(25)		5.0	12.6	23.3	32.3	14.5	12.3			4.76
	부여군	(31)		4.3	8.9	31.9	35.5	8.0	9.8		1.6	4.72
	서천군	(25)		7.0	13.7	31.4	16.2	19.5	12.3			4.64
	청양군	(19)		2.6	17.9	27.7	18.8	20.9	8.9	3.2		4.77
	홍성군	(48)	1.7	4.9	7.7	25.2	29.8	22.8	6.3	1.7		4.78
	예산군	(37)	1.6	10.4	5.2	22.8	28.2	13.3	8.7	5.8	3.9	4.92
	태안군	(30)	2.5	6.3	7.1	16.7	30.6	19.2	8.0	7.7	1.7	5.05

[표 134]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1.0	5.9	13.3	32.3	23.7	14.1	7.7	2.0	5.54
성별	남 성	(553)	0.3	1.2	5.0	14.1	30.3	24.2	15.7	6.2	3.1	5.58
	여 성	(497)		0.8	6.9	12.3	34.6	23.1	12.2	9.3	0.8	5.50
연령	20대 이하	(177)	0.8	1.8	6.1	13.1	36.4	25.2	11.5	4.0	1.1	5.31
	30대	(208)		1.3	6.5	13.0	21.9	22.1	20.2	10.9	4.2	5.82
	40대	(239)		0.3	5.1	12.4	36.7	19.2	16.9	7.1	2.4	5.60
	50대	(246)		1.1	5.3	13.7	30.0	30.1	11.4	7.4	1.2	5.52
	60대 이상	(180)		0.9	6.8	14.2	37.9	21.2	9.4	8.6	1.0	5.39
학력	중졸이하	(174)		2.1	5.4	9.2	34.9	24.5	14.5	8.7	0.8	5.56
	고졸	(477)	0.3	1.1	7.0	17.1	36.4	22.0	8.6	5.3	2.3	5.29
	대졸이상	(400)		0.5	4.8	10.5	26.3	25.4	20.4	10.0	2.1	5.83
직업	일반 회사원	(334)	0.2	0.8	6.8	11.1	30.4	24.6	15.8	8.8	1.4	5.61
	공무원/공공기관	(112)			0.6	8.9	21.4	31.1	23.7	10.9	3.5	6.15
	개인사업/자영업	(228)		0.9	7.6	16.6	32.3	19.2	14.1	6.3	3.0	5.44
	농어업	(160)		1.8	6.5	12.8	32.5	26.6	10.7	8.0	1.1	5.45
	주부	(116)		0.6	5.8	16.4	39.6	20.3	7.6	8.1	1.7	5.37
	학생	(86)		2.2	4.6	12.5	44.1	20.7	11.1	2.5	2.3	5.31
	무직	(14)	5.8	4.9		29.0	30.9	27.0	2.4			4.6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0.7	3.2	12.5	15.3	30.6	23.4	8.0	6.0	0.2	5.05
	300만 원대	(238)		1.4	4.9	16.1	30.7	20.5	15.9	7.4	3.1	5.57
	400만 원대	(287)		0.5	3.5	13.2	33.1	23.6	16.3	7.6	2.3	5.66
	500만 원이상	(335)			4.9	10.1	33.8	26.1	14.3	8.8	2.0	5.6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9	4.3	11.7	29.0	21.5	19.7	10.2	2.8	5.80
	15년-30년미만	(286)	0.5	1.1	5.9	13.1	33.5	28.1	11.0	3.8	3.1	5.43
	30년 이상	(465)		1.0	6.9	14.3	33.8	22.4	12.3	8.4	0.8	5.4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6	3.0	3.0	15.0	26.4	29.6	13.8	7.4	1.2	5.52
	면 지역	(311)		0.9	5.7	12.1	29.4	25.1	15.4	9.6	1.8	5.66
	동 지역	(498)		0.2	7.4	13.1	37.0	20.0	13.3	6.5	2.5	5.48
거주지	천안시	(334)		0.6	4.7	12.3	34.4	23.5	12.3	7.6	4.7	5.66
	공주시	(53)			1.5	19.4	33.1	21.6	8.6	14.4	1.3	5.65
	보령시	(49)			11.9	8.0	25.8	29.6	14.1	9.2	1.5	5.60
	아산시	(155)			1.7	12.2	39.1	25.3	17.4	4.3		5.57
	서산시	(84)			7.1	14.2	30.6	22.1	17.7	7.0	1.2	5.55
	논산시	(57)			7.0	17.4	35.5	22.0	9.7	6.8	1.6	5.37
	계룡시	(22)		4.2	14.1	9.5	19.4	24.5	21.4	5.3	1.5	5.39
	당진시	(81)		1.1	12.8	12.3	31.3	13.8	15.5	11.9	1.2	5.44
	금산군	(25)		5.3	4.0	12.9	27.1	27.5	21.3	2.0		5.39
	부여군	(31)		2.4	7.2	8.8	32.5	29.8	15.7	3.5		5.41
	서천군	(25)		9.3	4.4	9.2	27.0	27.6	17.8	4.7		5.31
	청양군	(19)			8.9	19.1	29.5	24.0	15.3	3.2		5.27
	홍성군	(48)	1.7	1.5	8.2	14.0	25.1	29.2	14.1	6.3		5.35
	예산군	(37)	1.6	5.1	5.5	14.8	28.2	21.2	5.3	18.3		5.39
	태안군	(30)			4.7	23.1	22.3	26.4	13.7	7.5	2.2	5.53

[표 135]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6	4.2	11.5	22.2	27.6	21.2	11.2	1.5	5.88
성별	남 성	(553)	0.8	4.3	11.7	22.2	27.2	19.5	12.2	2.1	5.89
	여 성	(497)	0.4	4.2	11.1	22.3	28.0	23.1	10.0	0.9	5.87
연령	20대 이하	(177)	1.0	5.1	10.0	27.0	28.0	22.7	6.3		5.69
	30대	(208)	1.3	4.6	13.3	18.4	18.6	25.2	13.4	5.2	6.04
	40대	(239)		4.2	10.6	21.3	28.2	20.9	13.9	0.8	5.96
	50대	(246)	0.6	5.0	10.6	21.5	29.6	20.1	11.7	0.8	5.86
	60대 이상	(180)	0.4	1.8	13.1	24.2	33.9	17.0	9.0	0.6	5.79
학력	중졸이하	(174)	0.9	1.7	13.2	19.3	37.4	18.2	9.1	0.3	5.83
	고졸	(477)	0.6	6.1	12.1	27.2	27.5	14.6	10.0	1.9	5.68
	대졸이상	(400)	0.5	3.0	10.0	17.6	23.5	30.4	13.5	1.6	6.14
직업	일반 회사원	(334)	0.8	5.1	12.0	20.1	24.7	26.1	9.7	1.5	5.87
	공무원/공공기관	(112)			7.1	16.6	24.2	29.0	20.9	2.3	6.47
	개인사업/자영업	(228)	0.6	4.9	11.0	23.6	24.6	19.8	13.9	1.7	5.90
	농어업	(160)	0.6	4.3	11.9	21.2	33.0	17.1	11.1	0.7	5.81
	주부	(116)	0.6	4.1	8.6	28.0	34.4	15.2	6.3	2.9	5.77
	학생	(86)	0.6	4.0	15.2	26.0	33.9	14.8	5.5		5.55
	무직	(14)	4.9	5.8	36.7	36.7	15.9				4.5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1.8	9.0	16.0	22.9	28.9	13.7	7.5	0.3	5.41
	300만 원대	(238)	1.4	4.1	10.1	23.2	28.7	19.7	9.8	3.1	5.88
	400만 원대	(287)		2.6	10.3	22.0	26.3	23.6	13.4	1.9	6.06
	500만 원이상	(335)		3.0	10.9	21.4	27.2	24.5	12.3	0.8	5.9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7	4.6	9.0	18.5	26.3	25.1	12.6	3.3	6.07
	15년-30년미만	(286)	0.8	4.5	11.2	24.5	24.8	24.1	8.9	1.2	5.82
	30년 이상	(465)	0.5	3.7	13.2	23.2	30.2	16.9	11.7	0.6	5.79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8	4.8	12.7	25.1	22.0	23.3	9.2	1.0	5.72
	면 지역	(311)	0.5	3.8	7.5	20.7	32.4	19.2	14.1	1.8	6.04
	동 지역	(498)	0.1	4.2	13.3	21.8	27.3	21.4	10.3	1.6	5.85
거주지	천안시	(334)	0.6	1.8	11.1	21.3	31.2	22.3	9.4	2.3	5.97
	공주시	(53)			12.8	27.4	24.0	25.8	10.0		5.93
	보령시	(49)		2.8	12.3	21.6	22.6	25.6	15.2		6.01
	아산시	(155)		0.8	11.4	20.0	34.8	24.3	8.7		5.96
	서산시	(84)		3.6	9.4	24.7	25.9	14.1	17.7	4.7	6.09
	논산시	(57)		8.6	13.8	17.3	27.4	18.6	14.2		5.76
	계룡시	(22)	2.7	11.8	4.5	25.2	23.3	21.4	11.1		5.63
	당진시	(81)	1.1	11.9	10.8	25.3	17.6	20.3	10.7	2.3	5.62
	금산군	(25)		12.3	5.6	22.7	26.0	22.7	10.7		5.73
	부여군	(31)		8.1	12.4	27.9	13.9	21.8	12.3	3.5	5.80
	서천군	(25)	2.7	4.7	13.3	24.1	24.6	22.0	8.7		5.64
	청양군	(19)		5.3	21.1	15.6	26.8	14.7	13.3	3.2	5.77
	홍성군	(48)		8.0	10.9	22.3	27.8	24.8	6.2		5.69
	예산군	(37)	6.7	3.6	10.0	24.5	26.2	12.7	16.4		5.63
	태안군	(30)		8.6	19.6	21.2	19.6	10.5	18.7	1.9	5.68

[표 136]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3.1	6.1	19.0	28.4	24.5	13.5	5.2	0.0	5.26
성별	남 성	(553)	0.2	3.4	5.3	19.4	29.1	22.2	14.7	5.6		5.27
	여 성	(497)		2.8	7.0	18.5	27.6	26.9	12.3	4.8	0.1	5.25
연령	20대 이하	(177)	0.5	4.8	6.1	14.0	32.1	30.8	9.2	2.4		5.14
	30대	(208)		3.4	6.5	19.0	23.5	23.9	17.0	6.8		5.36
	40대	(239)		2.9	5.7	21.8	26.0	21.5	14.8	7.4		5.31
	50대	(246)		2.8	6.2	18.8	30.1	22.1	15.5	4.5		5.27
	60대 이상	(180)	0.3	1.8	6.0	20.5	31.3	26.1	9.4	4.3	0.3	5.20
학력	중졸이하	(174)	0.3	1.8	5.7	20.4	31.8	25.6	10.3	3.8	0.3	5.20
	고졸	(477)	0.2	4.8	7.3	21.8	27.9	19.9	12.7	5.5		5.10
	대졸이상	(400)		1.7	4.8	15.1	27.5	29.4	15.9	5.6		5.48
직업	일반회사원	(334)	0.2	2.6	5.8	17.5	29.9	26.5	13.6	3.9		5.27
	공무원/공공기관	(112)			0.9	17.0	23.2	35.3	15.5	8.0		5.71
	개인사업/자영업	(228)		4.3	6.2	20.1	28.9	16.1	16.5	7.9		5.27
	농어업	(160)	0.3	2.3	5.3	22.7	27.7	26.2	10.4	5.1		5.21
	주부	(116)		3.6	11.0	20.3	27.9	20.7	13.5	2.6	0.4	5.04
	학생	(86)		5.5	9.2	13.1	27.1	29.7	11.1	4.3		5.17
	무직	(14)		10.7	2.4	34.3	47.1	5.5				4.3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0.4	4.2	8.0	24.9	27.6	22.1	9.5	3.2	0.3	4.96
	300만 원대	(238)	0.2	3.0	5.7	20.4	30.1	18.2	15.6	6.7		5.28
	400만 원대	(287)		2.9	5.3	17.6	29.9	24.8	13.5	5.9		5.33
	500만 원이상	(335)		2.7	6.0	15.8	26.4	30.0	14.4	4.7		5.3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3.9	5.9	18.5	23.4	23.5	17.9	6.8		5.37
	15년-30년미만	(286)		3.1	6.5	17.0	30.1	30.6	9.3	3.4		5.20
	30년 이상	(465)	0.1	2.6	6.0	20.5	30.6	21.4	13.4	5.4	0.1	5.2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3	5.5	7.4	19.5	28.9	22.7	11.6	3.9	0.2	5.06
	면 지역	(311)	0.2	3.2	4.9	19.1	26.2	25.7	13.4	7.5		5.36
	동 지역	(498)		1.9	6.2	18.7	29.6	24.6	14.6	4.5		5.30
거주지	천안시	(334)		0.6	5.3	18.1	28.2	29.6	11.2	7.0		5.42
	공주시	(53)			8.8	19.5	25.4	31.7	11.9	2.8		5.27
	보령시	(49)			2.8	23.9	28.1	26.9	15.2	3.0		5.37
	아산시	(155)			2.5	17.4	41.9	18.2	15.7	4.3		5.40
	서산시	(84)		3.6	7.1	21.3	19.8	25.8	13.0	9.4		5.34
	논산시	(57)		7.0	2.9	19.9	24.2	27.8	16.9	1.4		5.19
	계룡시	(22)		9.5	7.3	13.8	24.7	22.9	16.5	5.3		5.15
	당진시	(81)		8.4	10.3	18.4	19.2	22.1	19.3	2.3		5.04
	금산군	(25)		5.0	10.0	22.3	33.0	15.7	11.4	2.7		4.89
	부여군	(31)		4.0	13.2	18.4	40.9	4.3	15.8	1.8	1.6	4.91
	서천군	(25)	2.0	9.6	6.4	23.0	19.6	18.4	14.0	7.0		4.95
	청양군	(19)		2.6	14.7	22.8	23.7	15.3	16.0	4.9		5.02
	홍성군	(48)	1.7	4.9	6.2	23.8	27.8	24.7	9.6	1.4		4.91
	예산군	(37)		11.7	5.6	13.5	24.8	26.2	14.4	3.9		5.07
	태안군	(30)		8.8	9.6	16.7	24.6	17.7	9.4	13.2		5.13

[표 137]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1.3	4.2	16.9	27.8	22.7	16.4	9.0	1.7	5.60
성별	남 성	(553)		1.7	3.6	16.3	27.7	21.9	18.9	8.0	1.8	5.62
	여 성	(497)	0.1	0.9	4.7	17.5	27.9	23.6	13.6	10.2	1.5	5.57
연령	20대 이하	(177)		3.3	3.2	20.0	28.0	22.2	15.1	8.1		5.41
	30대	(208)	0.3	1.4	5.4	14.8	25.1	23.5	14.9	11.7	2.8	5.69
	40대	(239)		0.4	3.7	14.2	26.5	26.7	20.5	6.1	1.9	5.71
	50대	(246)		1.2	3.5	16.9	29.1	23.1	15.0	8.7	2.4	5.62
	60대 이상	(180)		0.6	5.3	19.6	30.6	16.5	15.8	11.0	0.7	5.52
학력	중졸이하	(174)		0.6	5.5	19.0	29.5	16.8	16.7	10.1	1.8	5.56
	고졸	(477)	0.1	2.2	5.0	18.6	30.8	23.8	11.1	7.7	0.6	5.35
	대졸이상	(400)		0.5	2.5	13.9	23.4	24.0	22.6	10.1	3.0	5.91
직업	일반회사원	(334)		1.3	4.7	16.1	25.6	26.2	15.7	9.1	1.4	5.61
	공무원/공공기관	(112)				10.1	23.6	23.4	31.0	10.1	1.7	6.13
	개인사업/자영업	(228)		1.7	4.8	17.9	25.7	22.9	14.6	8.9	3.3	5.60
	농어업	(160)		0.6	6.6	16.0	35.3	14.7	14.8	11.5	0.4	5.50
	주부	(116)	0.6		3.6	20.7	28.7	22.5	12.2	9.2	2.5	5.54
	학생	(86)		3.4	2.7	17.6	30.7	25.9	15.8	3.9		5.36
	무직	(14)		10.7		46.0	37.8	5.5				4.2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4.6	8.9	23.7	31.7	9.9	13.0	7.8	0.3	5.05
	300만 원대	(238)	0.3	1.5	4.2	18.8	25.8	22.9	13.4	10.6	2.5	5.59
	400만 원대	(287)		0.5	2.9	12.9	26.5	27.4	19.2	8.1	2.6	5.80
	500만 원이상	(335)			2.5	15.1	28.0	25.8	18.1	9.3	1.1	5.7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7	3.8	12.7	24.4	26.5	20.2	9.9	1.9	5.82
	15년-30년미만	(286)		2.9	2.6	18.5	29.3	23.1	14.9	7.0	1.7	5.48
	30년 이상	(465)	0.1	0.7	5.3	18.6	29.1	20.0	14.9	9.7	1.5	5.5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3	2.9	3.0	18.5	25.5	23.8	14.3	9.8	2.0	5.56
	면 지역	(311)		0.7	5.8	11.3	30.0	20.9	19.7	9.8	1.7	5.71
	동 지역	(498)		0.9	3.7	19.6	27.5	23.3	15.3	8.2	1.5	5.55
거주지	천안시	(334)		0.6	1.8	20.6	28.3	22.3	15.8	8.3	2.3	5.62
	공주시	(53)			2.8	11.9	40.7	19.4	12.3	10.2	2.8	5.68
	보령시	(49)			2.9	18.1	26.2	19.9	24.3	8.6		5.70
	아산시	(155)			4.4	14.8	23.6	29.3	18.3	7.9	1.8	5.73
	서산시	(84)		2.4	4.8	14.1	29.2	23.6	15.4	7.0	3.6	5.59
	논산시	(57)			4.4	18.1	28.9	24.4	14.0	10.2		5.56
	계룡시	(22)		7.0	4.5	15.9	26.8	17.9	21.4	6.5		5.34
	당진시	(81)		3.5	7.0	15.6	29.1	18.7	13.0	12.1	1.1	5.45
	금산군	(25)		2.7	4.7	15.9	27.7	20.8	14.6	11.7	2.0	5.60
	부여군	(31)		2.4	9.4	17.1	25.7	12.4	20.8	12.2		5.47
	서천군	(25)		5.3	5.3	13.7	19.4	31.5	22.2	2.7		5.44
	청양군	(19)			8.4	20.9	17.9	30.0	13.3	6.3	3.2	5.51
	홍성군	(48)		1.7	8.1	10.9	31.3	27.6	15.7	4.8		5.41
	예산군	(37)	1.8	4.9	2.0	13.2	27.9	17.6	19.6	13.1		5.57
	태안군	(30)			10.8	17.6	24.8	11.5	12.1	21.0	2.2	5.68

[표 138] 기관 신뢰도 (1)중앙정부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2.6	20.6	33.2	39.2	4.4	3.22
성별	남 성	(553)	2.2	22.3	32.4	38.9	4.3	3.21
	여 성	(497)	3.2	18.6	34.2	39.6	4.5	3.23
연령	20대 이하	(177)	2.8	19.6	39.0	36.8	1.8	3.15
	30대	(208)	9.2	22.5	33.2	30.1	5.0	2.99
	40대	(239)	0.5	29.6	32.5	34.8	2.7	3.10
	50대	(246)	0.2	13.5	35.7	49.3	1.3	3.38
	60대 이상	(180)	1.1	17.0	25.1	44.1	12.7	3.50
학력	중졸이하	(174)	1.2	16.8	27.2	46.8	8.0	3.44
	고졸	(477)	3.2	19.5	35.5	38.8	3.2	3.19
	대졸이상	(400)	2.7	23.5	33.1	36.4	4.3	3.16
직업	일반회사원	(334)	2.7	25.2	36.1	32.1	3.9	3.09
	공무원/공공기관	(112)	3.9	17.2	28.1	47.2	3.6	3.29
	개인사업/자영업	(228)	2.6	21.4	33.2	38.5	4.3	3.20
	농어업	(160)		19.0	27.4	46.8	6.8	3.41
	주부	(116)	3.9	14.8	38.7	36.4	6.2	3.26
	학생	(86)	3.7	15.5	33.3	46.3	1.2	3.26
	무직	(14)	5.8	19.1	24.9	50.2		3.1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1.0	15.7	36.8	40.1	6.4	3.35
	300만 원대	(238)	0.8	20.9	35.4	40.0	2.9	3.23
	400만 원대	(287)	3.9	23.4	34.8	35.0	2.9	3.10
	500만 원이상	(335)	3.8	20.6	28.2	41.8	5.5	3.2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5.3	27.0	33.1	31.3	3.4	3.00
	15년-30년미만	(286)	2.6	19.9	37.2	36.9	3.4	3.19
	30년 이상	(465)	1.0	16.8	30.8	45.7	5.6	3.3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3.2	22.5	32.9	37.0	4.4	3.17
	면 지역	(311)	1.4	19.6	33.6	39.5	5.9	3.29
	동 지역	(498)	3.2	20.2	33.1	40.1	3.4	3.20
거주지	천안시	(334)	5.3	28.1	29.4	29.5	7.8	3.06
	공주시	(53)		19.8	34.4	42.8	2.9	3.29
	보령시	(49)		30.4	37.2	30.8	1.6	3.04
	아산시	(155)		16.4	38.2	41.9	3.4	3.32
	서산시	(84)	3.6	20.1	38.7	34.0	3.6	3.14
	논산시	(57)		16.0	38.3	43.1	2.6	3.32
	계룡시	(22)	2.3	11.8	38.5	41.4	6.1	3.37
	당진시	(81)	1.2	20.2	28.6	47.5	2.5	3.30
	금산군	(25)	2.7	4.7	41.2	51.5		3.42
	부여군	(31)		17.9	28.5	49.8	3.8	3.39
	서천군	(25)	4.4	14.3	28.2	51.8	1.3	3.31
	청양군	(19)		7.5	38.2	51.1	3.2	3.50
	홍성군	(48)	5.0	14.0	24.5	54.9	1.6	3.34
	예산군	(37)	1.4	12.6	33.9	52.1		3.37
	태안군	(30)	3.6	9.9	36.7	44.0	5.8	3.39

[표 139] 기관 신뢰도 (2)충청남도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1.2	14.7	39.8	40.1	4.1	3.31
성별	남 성	(553)	1.4	15.3	41.3	39.1	3.0	3.27
	여 성	(497)	1.1	14.2	38.2	41.2	5.3	3.36
연령	20대 이하	(177)	2.3	15.1	49.4	31.8	1.4	3.15
	30대	(208)	1.2	19.2	39.4	36.3	3.9	3.23
	40대	(239)	0.7	16.4	40.7	40.0	2.2	3.27
	50대	(246)	1.0	9.9	38.6	48.9	1.7	3.40
	60대 이상	(180)	1.3	13.7	31.5	40.6	12.8	3.50
학력	중졸이하	(174)	1.4	11.8	32.0	43.7	11.2	3.52
	고졸	(477)	1.5	15.4	43.4	37.4	2.3	3.24
	대졸이상	(400)	0.9	15.2	39.0	41.8	3.2	3.31
직업	일반회사원	(334)	1.2	15.4	45.0	36.2	2.3	3.23
	공무원/공공기관	(112)	0.4	11.0	33.7	53.0	1.8	3.45
	개인사업/자영업	(228)	1.7	13.6	41.9	39.0	3.8	3.29
	농어업	(160)	0.4	17.2	37.2	40.9	4.2	3.31
	주부	(116)	1.3	13.4	32.6	38.8	13.9	3.51
	학생	(86)	1.9	18.9	36.3	40.6	2.3	3.22
	무직	(14)	5.8	4.9	44.6	44.7		3.2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1.1	14.5	39.3	36.3	8.8	3.37
	300만 원대	(238)	0.7	12.7	45.0	39.4	2.1	3.30
	400만 원대	(287)	1.2	16.3	42.1	36.7	3.7	3.25
	500만 원이상	(335)	1.6	15.0	34.6	45.6	3.2	3.3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9	19.1	48.3	27.9	2.8	3.11
	15년-30년미만	(286)	1.1	15.4	38.4	43.3	1.9	3.30
	30년 이상	(465)	0.9	11.6	35.3	46.0	6.3	3.4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5	16.3	44.4	33.7	3.1	3.19
	면 지역	(311)	0.9	15.1	38.4	41.1	4.6	3.33
	동 지역	(498)	0.8	13.8	38.5	42.6	4.3	3.36
거주지	천안시	(334)		12.3	35.2	44.1	8.4	3.49
	공주시	(53)		19.8	36.2	41.0	3.0	3.27
	보령시	(49)		19.4	47.6	30.2	2.9	3.17
	아산시	(155)		18.4	44.1	34.9	2.7	3.22
	서산시	(84)	2.3	16.6	48.4	30.4	2.4	3.14
	논산시	(57)	3.0	15.7	38.5	41.5	1.3	3.23
	계룡시	(22)	4.5	19.7	35.9	38.3	1.5	3.13
	당진시	(81)	1.2	20.0	33.5	44.0	1.2	3.24
	금산군	(25)	2.7	9.1	40.8	45.5	2.0	3.35
	부여군	(31)		16.6	43.2	38.6	1.6	3.25
	서천군	(25)	4.4	9.3	45.5	38.8	2.0	3.25
	청양군	(19)		13.7	44.6	36.0	5.8	3.34
	홍성군	(48)	5.0	9.0	42.1	42.3	1.6	3.26
	예산군	(37)	3.6	8.4	46.5	41.5		3.26
	태안군	(30)	6.1	7.7	37.5	46.8	1.9	3.31

[표 140] 기관 신뢰도 (3)국회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6.8	20.9	40.1	27.2	5.0	3.03
성별	남 성	(553)	7.0	22.6	39.3	26.6	4.5	2.99
	여 성	(497)	6.6	19.1	41.0	27.8	5.4	3.06
연령	20대 이하	(177)	9.3	39.4	36.0	11.3	3.9	2.61
	30대	(208)	8.8	28.4	41.4	17.7	3.7	2.79
	40대	(239)	6.3	20.3	41.5	25.7	6.2	3.05
	50대	(246)	4.7	13.3	40.6	33.6	7.8	3.27
	60대 이상	(180)	5.7	5.5	40.2	46.7	1.8	3.33
학력	중졸이하	(174)	5.1	7.7	41.0	41.5	4.7	3.33
	고졸	(477)	8.6	26.5	37.5	23.9	3.6	2.87
	대졸이상	(400)	5.5	20.1	42.9	24.7	6.7	3.07
직업	일반회사원	(334)	8.5	28.3	40.1	18.3	4.7	2.82
	공무원/공공기관	(112)	0.4	8.4	52.4	31.5	7.3	3.37
	개인사업/자영업	(228)	7.9	18.2	36.1	31.4	6.3	3.10
	농어업	(160)	4.3	8.9	41.3	43.6	1.9	3.30
	주부	(116)	7.5	18.4	35.5	32.9	5.7	3.11
	학생	(86)	8.6	38.1	40.0	8.8	4.5	2.63
	무직	(14)	10.7	44.6	34.3	10.4		2.4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4.6	17.1	42.4	34.5	1.4	3.11
	300만 원대	(238)	7.7	18.6	37.9	31.5	4.3	3.06
	400만 원대	(287)	6.6	22.4	36.1	29.8	5.1	3.04
	500만 원이상	(335)	7.6	23.5	43.9	17.7	7.3	2.9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8.4	22.7	38.4	23.7	6.8	2.98
	15년-30년미만	(286)	8.0	22.8	43.7	19.9	5.6	2.92
	30년 이상	(465)	5.0	18.7	39.1	33.8	3.4	3.12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9.3	20.7	33.5	29.2	7.3	3.05
	면 지역	(311)	6.2	12.9	37.4	38.1	5.5	3.24
	동 지역	(498)	6.0	26.1	45.1	19.4	3.5	2.88
거주지	천안시	(334)	4.7	28.8	40.0	21.2	5.3	2.94
	공주시	(53)	6.1	21.6	43.2	26.1	3.0	2.98
	보령시	(49)	7.6	15.7	44.4	30.6	1.7	3.03
	아산시	(155)	6.1	12.8	45.2	29.8	6.1	3.17
	서산시	(84)	10.6	11.9	50.4	23.5	3.6	2.98
	논산시	(57)	8.4	19.1	43.2	29.2		2.93
	계룡시	(22)	9.8	22.3	34.7	23.6	9.5	3.01
	당진시	(81)	4.9	26.4	37.7	26.3	4.7	2.99
	금산군	(25)	4.0	22.6	32.9	36.5	4.0	3.14
	부여군	(31)	10.1	23.9	20.3	37.7	8.1	3.10
	서천군	(25)	13.1	12.1	24.4	48.4	2.0	3.14
	청양군	(19)	8.4	16.0	37.7	27.7	10.2	3.15
	홍성군	(48)	9.5	15.3	36.1	35.8	3.3	3.08
	예산군	(37)	6.6	16.7	35.0	32.9	8.7	3.20
	태안군	(30)	11.4	16.7	32.5	29.6	9.8	3.10

[표 141] 기관 신뢰도 (4)지방의회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1.4	19.8	45.8	27.8	5.2	3.16
성별	남 성	(553)	0.9	22.0	43.1	29.0	4.9	3.15
	여 성	(497)	1.9	17.3	48.9	26.5	5.5	3.16
연령	20대 이하	(177)	1.8	27.6	51.1	15.3	4.2	2.93
	30대	(208)	1.9	21.9	47.3	24.1	4.7	3.08
	40대	(239)	0.8	15.2	52.7	25.2	6.2	3.21
	50대	(246)	1.4	18.4	40.6	35.2	4.4	3.23
	60대 이상	(180)	1.1	17.6	37.1	37.6	6.6	3.31
학력	중졸이하	(174)	1.7	17.9	37.0	35.6	7.8	3.30
	고졸	(477)	1.4	23.6	50.0	22.0	2.9	3.01
	대졸이상	(400)	1.2	16.0	44.7	31.3	6.8	3.26
직업	일반회사원	(334)	1.7	20.7	49.4	24.1	4.0	3.08
	공무원/공공기관	(112)	0.4	10.1	42.8	39.1	7.5	3.43
	개인사업/자영업	(228)	1.5	20.4	41.3	30.1	6.7	3.20
	농어업	(160)	1.2	21.6	38.2	34.0	5.0	3.20
	주부	(116)	1.1	15.1	50.6	28.3	4.8	3.21
	학생	(86)	1.8	31.7	51.8	10.3	4.5	2.84
	무직	(14)		10.7	69.6	19.7		3.0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0.3	20.8	41.3	34.4	3.2	3.20
	300만 원대	(238)	2.0	16.0	48.4	29.7	3.9	3.17
	400만 원대	(287)	1.8	21.1	47.1	23.5	6.5	3.12
	500만 원이상	(335)	1.2	20.8	45.5	26.3	6.2	3.1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4	21.2	46.2	25.3	6.0	3.13
	15년-30년미만	(286)	1.6	18.5	48.7	25.4	5.9	3.16
	30년 이상	(465)	1.3	19.7	43.9	30.8	4.3	3.17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3	18.0	42.1	31.1	6.4	3.21
	면 지역	(311)	1.6	19.7	42.0	30.5	6.2	3.20
	동 지역	(498)	0.8	20.7	50.0	24.5	4.0	3.10
거주지	천안시	(334)	1.2	16.5	47.6	26.5	8.3	3.24
	공주시	(53)		29.1	37.5	29.0	4.3	3.09
	보령시	(49)		25.5	47.5	22.0	4.9	3.06
	아산시	(155)		23.2	46.2	26.2	4.3	3.12
	서산시	(84)	2.3	20.1	48.2	25.9	3.6	3.08
	논산시	(57)	1.4	15.7	50.0	32.9		3.14
	계룡시	(22)	2.3	31.7	33.6	27.9	4.5	3.01
	당진시	(81)	1.2	24.1	45.7	25.4	3.6	3.06
	금산군	(25)	4.0	4.0	55.8	31.9	4.3	3.28
	부여군	(31)	1.9	21.4	41.7	28.5	6.5	3.16
	서천군	(25)	2.0	18.4	43.8	33.5	2.3	3.16
	청양군	(19)	2.6	18.2	39.6	33.7	5.8	3.22
	홍성군	(48)	3.2	15.7	43.8	34.4	3.0	3.18
	예산군	(37)	1.4	19.2	47.3	28.5	3.7	3.14
	태안군	(30)	5.8	19.8	34.2	36.0	4.1	3.13

[표 142] 기관 신뢰도 (5)법원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0.5	25.1	39.7	24.8	9.9	3.18
성별	남 성	(553)	0.4	23.5	40.9	26.3	8.9	3.20
	여 성	(497)	0.7	26.9	38.3	23.2	10.9	3.17
연령	20대 이하	(177)	1.9	33.1	42.8	19.4	2.8	2.88
	30대	(208)	0.8	25.4	43.2	22.9	7.8	3.12
	40대	(239)	0.3	24.2	41.8	24.9	8.8	3.18
	50대	(246)		21.0	39.6	28.1	11.4	3.30
	60대 이상	(180)		23.7	30.1	27.8	18.5	3.41
학력	중졸이하	(174)		23.2	33.5	26.4	16.9	3.37
	고졸	(477)	0.7	26.7	45.3	22.6	4.7	3.04
	대졸이상	(400)	0.5	24.1	35.7	26.7	13.0	3.27
직업	일반회사원	(334)	0.9	25.6	41.7	23.3	8.4	3.13
	공무원/공공기관	(112)		22.7	28.3	32.9	16.1	3.42
	개인사업/자영업	(228)	0.2	25.1	42.9	21.9	9.8	3.16
	농어업	(160)		24.0	33.5	29.4	13.1	3.32
	주부	(116)		21.5	43.2	23.4	11.8	3.26
	학생	(86)	2.5	35.0	43.7	18.8		2.79
	무직	(14)		12.8	48.0	39.2		3.2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0.5	15.5	43.5	29.3	11.2	3.35
	300만 원대	(238)	0.3	29.0	37.3	24.1	9.2	3.13
	400만 원대	(287)	0.5	27.4	39.9	23.8	8.5	3.12
	500만 원이상	(335)	0.8	25.8	39.0	23.7	10.7	3.1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8	24.6	41.3	23.5	9.8	3.17
	15년-30년미만	(286)	0.9	27.6	42.1	22.9	6.5	3.07
	30년 이상	(465)	0.2	23.9	37.2	26.8	11.9	3.2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1	18.8	42.9	24.5	12.7	3.29
	면 지역	(311)	0.4	23.7	35.1	26.8	14.0	3.30
	동 지역	(498)	0.4	29.0	41.0	23.7	5.8	3.06
거주지	천안시	(334)		20.0	42.8	27.2	10.0	3.27
	공주시	(53)		26.4	34.9	30.1	8.6	3.21
	보령시	(49)		32.4	35.7	19.5	12.4	3.12
	아산시	(155)		26.1	39.1	26.0	8.8	3.18
	서산시	(84)		28.4	41.0	23.5	7.1	3.09
	논산시	(57)	1.4	31.5	35.4	21.7	10.1	3.08
	계룡시	(22)		38.9	42.0	10.0	9.1	2.89
	당진시	(81)	1.2	34.1	35.6	21.9	7.1	3.00
	금산군	(25)	2.7	20.3	33.6	28.8	14.6	3.32
	부여군	(31)		20.8	42.9	26.7	9.6	3.25
	서천군	(25)		21.0	45.8	26.3	7.0	3.19
	청양군	(19)		16.3	46.5	27.7	9.5	3.30
	홍성군	(48)	3.2	24.9	40.5	20.4	11.0	3.11
	예산군	(37)	1.4	24.1	36.5	23.6	14.4	3.26
	태안군	(30)	3.9	25.9	32.5	20.1	17.7	3.22

[표 143] 기관 신뢰도 (6)검찰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2.8	35.8	30.8	18.0	12.5	3.02
성별	남 성	(553)	3.0	36.1	32.7	16.3	12.0	2.98
	여 성	(497)	2.7	35.5	28.8	19.9	13.1	3.05
연령	20대 이하	(177)	3.9	45.2	26.6	16.4	7.9	2.79
	30대	(208)	2.6	39.4	29.5	17.8	10.8	2.95
	40대	(239)	2.0	38.9	24.6	22.4	12.1	3.04
	50대	(246)	2.9	29.5	39.7	13.7	14.2	3.07
	60대 이상	(180)	3.0	27.0	32.8	19.9	17.3	3.22
학력	중졸이하	(174)	2.0	27.0	36.2	18.3	16.6	3.21
	고졸	(477)	3.5	42.5	30.9	15.8	7.3	2.81
	대졸이상	(400)	2.4	31.7	28.5	20.6	16.9	3.18
직업	일반회사원	(334)	3.0	40.2	27.6	19.3	9.9	2.93
	공무원/공공기관	(112)	2.0	15.3	37.9	20.1	24.6	3.50
	개인사업/자영업	(228)	2.6	34.8	30.9	17.4	14.3	3.06
	농어업	(160)	2.7	34.9	28.5	20.3	13.6	3.07
	주부	(116)	3.7	35.3	36.8	12.8	11.5	2.93
	학생	(86)	2.3	49.1	30.1	15.0	3.4	2.68
	무직	(14)	5.5	46.0	34.0	14.6		2.5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1.7	35.8	32.1	20.2	10.1	3.01
	300만 원대	(238)	3.7	35.1	32.9	16.6	11.6	2.97
	400만 원대	(287)	3.3	41.9	24.6	17.2	13.0	2.95
	500만 원이상	(335)	2.4	31.1	34.0	18.5	14.1	3.1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2.7	35.8	26.9	21.1	13.5	3.07
	15년~30년미만	(286)	3.3	39.8	30.1	15.7	11.1	2.92
	30년 이상	(465)	2.6	33.4	33.9	17.4	12.7	3.0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4.8	27.6	31.5	22.0	14.1	3.13
	면 지역	(311)	2.1	31.0	28.8	21.6	16.5	3.19
	동 지역	(498)	2.3	42.8	31.8	13.9	9.2	2.85
거주지	천안시	(334)		38.7	34.8	14.1	12.4	3.00
	공주시	(53)	2.8	40.1	31.4	6.3	19.5	3.00
	보령시	(49)	3.4	50.5	20.1	13.2	12.8	2.82
	아산시	(155)	0.9	40.0	30.3	19.1	9.6	2.97
	서산시	(84)	6.0	34.0	32.8	20.2	7.0	2.88
	논산시	(57)	7.0	43.4	26.8	11.2	11.7	2.77
	계룡시	(22)	11.1	40.5	21.1	13.3	14.1	2.79
	당진시	(81)	6.2	35.0	23.0	28.5	7.3	2.96
	금산군	(25)	2.7	22.0	34.6	24.4	16.3	3.30
	부여군	(31)	1.9	30.2	28.1	24.6	15.3	3.21
	서천군	(25)	6.0	20.8	29.3	14.4	29.5	3.41
	청양군	(19)	3.2	21.4	29.5	34.4	11.6	3.30
	홍성군	(48)	6.5	20.1	39.3	15.0	19.2	3.20
	예산군	(37)	1.4	18.9	30.8	34.2	14.7	3.42
	태안군	(30)	5.8	24.6	25.2	31.3	13.0	3.21

[표 144] 기관 신뢰도 (7)경찰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2.3	24.1	38.5	29.1	5.9	3.12
성별	남 성	(553)	1.9	23.8	40.5	28.0	5.8	3.12
	여 성	(497)	2.7	24.4	36.3	30.5	6.0	3.13
연령	20대 이하	(177)	3.4	33.1	35.6	25.9	2.1	2.90
	30대	(208)	2.7	28.5	39.5	26.2	3.1	2.98
	40대	(239)	2.2	19.1	43.3	30.3	5.1	3.17
	50대	(246)	1.4	22.4	34.8	31.5	9.8	3.26
	60대 이상	(180)	2.0	18.9	39.2	31.0	8.9	3.26
학력	중졸이하	(174)	2.1	19.6	41.0	27.7	9.7	3.23
	고졸	(477)	0.4	25.0	42.8	28.8	3.0	3.09
	대졸이상	(400)	4.6	25.0	32.4	30.2	7.8	3.12
직업	일반회사원	(334)	3.7	29.7	35.4	27.9	3.3	2.97
	공무원/공공기관	(112)	5.2	12.4	37.0	30.8	14.5	3.37
	개인사업/자영업	(228)	0.3	19.8	40.5	34.6	4.8	3.24
	농어업	(160)	2.3	23.6	37.1	26.9	10.1	3.19
	주부	(116)		21.9	44.1	26.9	7.1	3.19
	학생	(86)	1.4	32.7	43.1	22.8		2.87
	무직	(14)		24.1	37.8	38.1		3.1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1.7	25.9	44.7	23.3	4.4	3.03
	300만 원대	(238)	2.6	24.5	39.3	26.7	6.9	3.11
	400만 원대	(287)	2.2	22.9	36.7	32.5	5.7	3.17
	500만 원이상	(335)	2.5	23.8	36.1	31.3	6.4	3.1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3.6	27.0	42.5	22.1	4.8	2.98
	15년-30년미만	(286)	1.9	27.3	34.9	32.5	3.3	3.08
	30년 이상	(465)	1.7	20.2	38.2	31.6	8.3	3.2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2	22.5	41.7	28.1	5.6	3.12
	면 지역	(311)	2.0	22.5	38.2	29.7	7.6	3.18
	동 지역	(498)	2.5	25.9	37.2	29.3	5.1	3.09
거주지	천안시	(334)	3.0	21.2	36.4	31.2	8.2	3.21
	공주시	(53)	7.8	15.0	46.8	26.1	4.4	3.04
	보령시	(49)	1.6	22.8	43.6	22.7	9.3	3.15
	아산시	(155)	4.4	24.4	34.0	35.5	1.8	3.06
	서산시	(84)		25.6	41.5	28.2	4.7	3.12
	논산시	(57)		40.2	31.1	23.0	5.8	2.94
	계룡시	(22)		35.8	32.1	23.8	8.3	3.05
	당진시	(81)		38.1	30.7	24.1	7.1	3.00
	금산군	(25)	2.7	17.6	49.9	22.4	7.3	3.14
	부여군	(31)		18.5	50.9	26.8	3.8	3.16
	서천군	(25)	2.0	18.3	45.1	29.9	4.7	3.17
	청양군	(19)		16.5	60.2	15.8	7.5	3.14
	홍성군	(48)		20.3	47.1	31.2	1.5	3.14
	예산군	(37)	1.4	22.0	35.5	35.5	5.6	3.22
	태안군	(30)	2.2	21.7	43.8	25.7	6.6	3.13

[표 145] 기관 신뢰도 (8)종교단체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1.1	12.7	40.5	38.1	7.7	3.39
성별	남 성	(553)	1.5	12.4	44.8	34.2	7.1	3.33
	여 성	(497)	0.7	13.0	35.6	42.4	8.2	3.45
연령	20대 이하	(177)	0.9	19.8	49.4	26.6	3.2	3.11
	30대	(208)	1.9	11.6	30.3	39.8	16.4	3.57
	40대	(239)	1.9	9.7	42.6	41.2	4.6	3.37
	50대	(246)	0.7	10.7	42.4	40.0	6.3	3.41
	60대 이상	(180)		13.4	38.0	40.7	7.8	3.43
학력	중졸이하	(174)		10.8	36.8	44.1	8.3	3.50
	고졸	(477)	1.5	14.3	44.6	34.2	5.3	3.28
	대졸이상	(400)	1.1	11.4	37.1	40.2	10.2	3.47
직업	일반회사원	(334)	1.2	14.2	42.2	34.1	8.3	3.34
	공무원/공공기관	(112)		10.9	31.5	45.9	11.7	3.58
	개인사업/자영업	(228)	2.0	11.4	41.5	37.2	7.9	3.38
	농어업	(160)		8.2	39.9	44.4	7.5	3.51
	주부	(116)	1.3	13.8	33.1	43.6	8.2	3.44
	학생	(86)	1.0	18.6	53.7	26.8		3.06
	무직	(14)	5.8	15.9	40.1	38.1		3.1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0.9	14.2	39.0	40.3	5.6	3.35
	300만 원대	(238)	1.8	12.9	40.6	35.1	9.6	3.38
	400만 원대	(287)	0.5	10.7	38.7	41.8	8.2	3.46
	500만 원이상	(335)	1.2	13.2	42.7	35.9	7.0	3.34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9	12.6	39.9	33.3	12.2	3.41
	15년~30년미만	(286)	0.8	13.9	41.9	38.8	4.6	3.32
	30년 이상	(465)	0.8	11.9	40.0	40.8	6.6	3.41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8	13.3	39.0	36.6	9.4	3.39
	면 지역	(311)	0.4	10.5	38.5	42.3	8.2	3.47
	동 지역	(498)	1.2	13.7	42.4	36.2	6.5	3.33
거주지	천안시	(334)		7.1	42.8	39.5	10.6	3.53
	공주시	(53)	4.5	19.1	46.6	26.6	3.3	3.05
	보령시	(49)		16.3	42.2	38.5	3.0	3.28
	아산시	(155)	0.9	13.9	31.8	42.9	10.5	3.48
	서산시	(84)		19.0	35.4	44.4	1.2	3.28
	논산시	(57)	3.0	19.3	38.9	34.3	4.5	3.18
	계룡시	(22)		16.1	51.5	22.9	9.5	3.26
	당진시	(81)	2.5	15.4	46.2	28.8	7.1	3.23
	금산군	(25)		11.5	37.3	47.9	3.3	3.43
	부여군	(31)		17.8	43.4	30.7	8.1	3.29
	서천군	(25)	2.4	9.0	38.7	37.3	12.7	3.49
	청양군	(19)		19.1	25.8	47.0	8.1	3.44
	홍성군	(48)	3.2	9.4	45.6	34.1	7.7	3.34
	예산군	(37)	3.6	9.1	34.0	48.0	5.3	3.42
	태안군	(30)	2.5	13.7	49.8	32.3	1.7	3.17

[표 146] 기관 신뢰도 (9)시민단체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2.2	21.9	44.8	27.8	3.3	3.08
성별	남 성	(553)	2.8	21.1	43.9	28.7	3.4	3.09
	여 성	(497)	1.6	22.7	45.7	26.8	3.2	3.07
연령	20대 이하	(177)	3.3	20.3	48.0	26.1	2.3	3.04
	30대	(208)	2.9	19.8	43.4	30.5	3.4	3.12
	40대	(239)	2.0	19.4	44.4	32.1	2.2	3.13
	50대	(246)	1.4	25.2	41.5	27.0	5.0	3.09
	60대 이상	(180)	2.0	24.4	48.3	22.0	3.2	3.00
학력	중졸이하	(174)	1.5	20.0	50.3	23.2	4.9	3.10
	고졸	(477)	2.0	26.4	43.0	26.0	2.6	3.01
	대졸이상	(400)	2.8	17.2	44.6	32.1	3.3	3.16
직업	일반 회사원	(334)	3.0	21.3	42.4	29.6	3.7	3.10
	공무원/공공기관	(112)		13.9	47.6	35.8	2.7	3.27
	개인사업/자영업	(228)	1.2	27.6	42.3	25.3	3.6	3.02
	농어업	(160)	3.0	20.3	47.0	25.6	4.1	3.07
	주부	(116)	2.6	26.3	43.1	24.1	4.0	3.01
	학생	(86)	2.3	18.0	53.4	26.3		3.04
	무직	(14)	5.8	10.3	56.5	27.4		3.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이하	(190)	3.4	22.0	49.3	22.0	3.3	3.00
	300만 원대	(238)	1.9	19.3	46.6	29.5	2.8	3.12
	400만 원대	(287)	1.9	24.2	40.0	30.6	3.3	3.09
	500만 원이상	(335)	2.1	21.6	45.1	27.6	3.6	3.0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2.7	18.3	45.6	30.1	3.3	3.13
	15년-30년미만	(286)	2.4	24.0	40.6	28.7	4.3	3.08
	30년 이상	(465)	1.9	22.8	46.8	25.9	2.7	3.0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8	24.6	40.0	25.5	7.1	3.10
	면 지역	(311)	2.9	20.5	42.9	30.5	3.2	3.10
	동 지역	(498)	1.5	21.4	48.3	27.3	1.5	3.06
거주지	천안시	(334)	1.7	17.6	49.5	28.8	2.4	3.12
	공주시	(53)	2.9	18.8	46.4	30.4	1.4	3.09
	보령시	(49)	1.2	20.0	46.1	31.1	1.6	3.12
	아산시	(155)	0.9	17.2	54.8	25.3	1.8	3.10
	서산시	(84)	3.6	23.7	32.8	34.0	6.0	3.15
	논산시	(57)	2.7	24.6	34.4	36.9	1.5	3.10
	계룡시	(22)	6.8	25.9	33.0	29.2	5.0	3.00
	당진시	(81)	1.2	30.0	31.6	31.1	6.0	3.11
	금산군	(25)	2.7	23.5	49.6	22.2	2.0	2.97
	부여군	(31)		30.2	44.0	17.2	8.7	3.04
	서천군	(25)	2.4	31.0	40.3	19.6	6.7	2.97
	청양군	(19)	2.6	44.4	22.8	15.8	14.4	2.95
	홍성군	(48)	4.7	25.3	40.8	24.6	4.6	2.99
	예산군	(37)	4.8	18.6	53.9	22.6		2.94
	태안군	(30)	4.7	32.5	42.7	18.2	1.9	2.80

[표 147] 기관 신뢰도 (10)교육기관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0.2	5.1	32.5	51.4	10.8	3.68
성별	남 성	(553)	0.3	5.3	32.3	50.0	12.1	3.68
	여 성	(497)		4.9	32.7	52.9	9.4	3.67
연령	20대 이하	(177)	0.5	8.3	43.0	41.5	6.7	3.46
	30대	(208)	0.5	2.5	38.0	51.9	7.1	3.62
	40대	(239)		4.1	29.6	58.8	7.5	3.70
	50대	(246)		4.9	28.7	50.9	15.5	3.77
	60대 이상	(180)		6.6	25.0	51.3	17.1	3.79
학력	중졸이하	(174)		5.3	27.9	52.6	14.3	3.76
	고졸	(477)	0.4	4.6	35.3	53.3	6.4	3.61
	대졸이상	(400)		5.7	31.2	48.5	14.5	3.72
직업	일반회사원	(334)	0.3	5.8	35.8	49.5	8.6	3.60
	공무원/공공기관	(112)		5.4	25.9	48.0	20.7	3.84
	개인사업/자영업	(228)		5.2	30.9	50.7	13.2	3.72
	농어업	(160)		5.2	27.0	56.9	10.9	3.74
	주부	(116)		1.8	29.7	57.8	10.7	3.77
	학생	(86)	1.0	7.5	46.2	43.8	1.6	3.38
	무직	(14)			34.6	65.4		3.6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이하	(190)		2.6	31.8	56.2	9.3	3.72
	300만 원대	(238)		6.0	34.8	51.3	7.8	3.61
	400만 원대	(287)	0.6	6.5	29.9	49.5	13.5	3.69
	500만 원이상	(335)		4.7	33.5	50.3	11.4	3.6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6.5	38.6	46.2	8.4	3.56
	15년~30년미만	(286)	0.3	5.5	32.0	51.6	10.5	3.67
	30년 이상	(465)		4.0	28.9	54.6	12.5	3.7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4	5.2	26.6	52.8	15.0	3.77
	면 지역	(311)		6.6	31.0	53.3	9.1	3.65
	동 지역	(498)	0.2	4.2	36.3	49.5	9.8	3.65
거주지	천안시	(334)		1.7	36.5	44.1	17.7	3.78
	공주시	(53)	1.6	10.8	27.9	46.5	13.3	3.59
	보령시	(49)		4.7	36.0	52.6	6.7	3.61
	아산시	(155)		1.8	37.9	51.7	8.6	3.67
	서산시	(84)	1.2	7.0	36.6	48.2	7.0	3.53
	논산시	(57)		11.3	21.7	61.4	5.6	3.61
	계룡시	(22)		5.5	42.6	47.4	4.5	3.51
	당진시	(81)		10.4	27.8	53.3	8.5	3.60
	금산군	(25)		4.7	31.6	55.4	8.3	3.67
	부여군	(31)		12.0	19.3	64.7	4.0	3.61
	서천군	(25)		2.0	25.5	65.6	7.0	3.77
	청양군	(19)		8.9	19.1	64.9	7.0	3.70
	홍성군	(48)		6.5	28.6	60.3	4.7	3.63
	예산군	(37)		6.4	22.7	62.2	8.8	3.73
	태안군	(30)		8.5	24.6	60.5	6.4	3.65

[표 148] 기관 신뢰도 (11)의료기관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0.1	5.7	34.9	50.0	9.3	3.63
성별	남 성	(553)		6.0	31.7	53.9	8.3	3.64
	여 성	(497)	0.2	5.4	38.4	45.6	10.4	3.61
연령	20대 이하	(177)		3.2	42.0	46.9	7.9	3.59
	30대	(208)		1.0	48.0	43.5	7.5	3.58
	40대	(239)		15.0	33.4	42.9	8.7	3.45
	50대	(246)		2.4	30.1	57.6	9.8	3.75
	60대 이상	(180)	0.6	5.9	21.2	59.4	13.0	3.78
학력	중졸이하	(174)		4.6	22.9	61.2	11.3	3.79
	고졸	(477)	0.2	5.2	38.9	48.3	7.4	3.58
	대졸이상	(400)		6.8	35.3	47.2	10.7	3.62
직업	일반회사원	(334)		3.4	42.4	44.5	9.7	3.60
	공무원/공공기관	(112)		10.3	26.1	53.3	10.3	3.64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8.7	29.7	50.3	11.0	3.63
	농어업	(160)		7.0	23.9	60.3	8.8	3.71
	주부	(116)		0.8	42.6	47.0	9.6	3.66
	학생	(86)		6.1	39.6	50.1	4.2	3.52
	무직	(14)			42.9	57.1		3.5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4.2	30.1	54.9	10.9	3.72
	300만 원대	(238)		6.6	37.9	49.0	6.6	3.55
	400만 원대	(287)	0.3	4.7	38.3	48.9	7.8	3.59
	500만 원이상	(335)		6.8	32.5	48.9	11.7	3.6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8.6	43.1	39.3	8.9	3.49
	15년-30년미만	(286)		4.4	39.6	48.5	7.5	3.59
	30년 이상	(465)	0.2	4.7	26.7	57.8	10.6	3.7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6.7	33.6	45.9	13.9	3.67
	면 지역	(311)	0.3	5.6	28.9	55.6	9.7	3.69
	동 지역	(498)		5.3	39.3	48.5	6.9	3.57
거주지	천안시	(334)		11.7	41.2	41.8	5.3	3.41
	공주시	(53)		1.3	41.5	44.1	13.0	3.69
	보령시	(49)		3.1	35.3	46.0	15.6	3.74
	아산시	(155)		1.7	38.4	49.5	10.4	3.68
	서산시	(84)		3.6	37.7	47.0	11.8	3.67
	논산시	(57)		3.1	42.1	43.3	11.6	3.63
	계룡시	(22)		7.7	25.6	55.6	11.1	3.70
	당진시	(81)	1.2	1.2	27.4	60.7	9.5	3.76
	금산군	(25)		2.0	11.2	72.7	14.0	3.99
	부여군	(31)		7.1	19.7	59.4	13.7	3.80
	서천군	(25)		4.4	15.3	73.7	6.6	3.82
	청양군	(19)		2.6	25.8	58.2	13.3	3.82
	홍성군	(48)		1.5	31.9	57.3	9.4	3.75
	예산군	(37)		6.5	16.2	68.5	8.8	3.80
	태안군	(30)		4.1	24.5	60.9	10.5	3.78

[표 149] 기관 신뢰도 (12)언론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평균 (점)
전체		(1050)	3.1	28.6	40.5	23.1	4.7	2.98
성별	남 성	(553)	2.9	28.6	40.5	23.7	4.3	2.98
	여 성	(497)	3.4	28.5	40.5	22.4	5.2	2.98
연령	20대 이하	(177)	3.0	36.0	41.2	16.2	3.7	2.82
	30대	(208)	2.5	33.4	39.1	23.4	1.6	2.88
	40대	(239)	4.4	31.6	32.3	28.0	3.8	2.95
	50대	(246)	1.1	23.1	47.9	22.0	5.8	3.08
	60대 이상	(180)	5.1	19.1	42.2	24.5	9.1	3.13
학력	중졸이하	(174)	4.6	19.1	40.4	25.7	10.1	3.18
	고졸	(477)	3.7	32.7	44.3	16.9	2.3	2.81
	대졸이상	(400)	1.8	27.7	35.9	29.3	5.3	3.09
직업	일반회사원	(334)	3.9	31.3	39.1	22.2	3.4	2.90
	공무원/공공기관	(112)	0.8	21.9	39.9	30.4	7.0	3.21
	개인사업/자영업	(228)	4.9	26.6	36.8	28.4	3.4	2.99
	농어업	(160)		20.2	48.2	25.4	6.2	3.17
	주부	(116)	3.2	34.8	38.7	14.1	9.2	2.91
	학생	(86)	5.0	36.3	44.1	12.3	2.3	2.71
	무직	(14)		43.8	42.0	14.2		2.7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대 이하	(190)	1.7	24.6	45.8	21.1	7.0	3.07
	300만 원대	(238)	3.2	33.5	38.7	21.2	3.4	2.88
	400만 원대	(287)	3.1	26.7	45.6	20.3	4.3	2.96
	500만 원이상	(335)	4.0	28.8	34.3	28.0	4.8	3.0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4.2	30.3	34.9	26.1	4.5	2.96
	15년-30년미만	(286)	3.0	32.4	42.4	18.5	3.7	2.88
	30년 이상	(465)	2.6	25.0	42.9	24.0	5.5	3.0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4.1	26.0	39.3	25.0	5.6	3.02
	면 지역	(311)	1.6	21.6	44.9	26.0	5.9	3.13
	동 지역	(498)	3.7	34.2	38.3	20.3	3.6	2.86
거주지	천안시	(334)	3.6	28.9	37.6	23.4	6.5	3.00
	공주시	(53)	1.6	31.9	42.5	16.7	7.3	2.96
	보령시	(49)	6.7	28.2	42.3	21.2	1.7	2.83
	아산시	(155)	2.6	31.3	38.1	22.8	5.2	2.97
	서산시	(84)	7.1	18.7	41.2	30.5	2.4	3.02
	논산시	(57)	1.4	32.9	50.0	11.5	4.2	2.84
	계룡시	(22)	4.5	33.6	31.4	25.9	4.5	2.92
	당진시	(81)	2.5	35.2	38.5	22.6	1.2	2.85
	금산군	(25)		19.4	49.6	27.1	4.0	3.16
	부여군	(31)	2.2	17.1	53.9	24.9	1.9	3.07
	서천군	(25)		27.1	36.7	29.3	7.0	3.16
	청양군	(19)	2.6	22.3	43.0	29.5	2.6	3.07
	홍성군	(48)		32.6	42.4	18.6	6.3	2.99
	예산군	(37)	3.2	23.7	38.8	30.7	3.6	3.08
	태안군	(30)	1.9	27.6	48.7	20.1	1.7	2.92

[표 150] 우리 사회를 신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사례수)	정부의 공정성 제고	엄격한 법제도 집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정부 정보의 투명성 강화	시민단체 역활강화
전체		(1050)	19.8	30.6	23.1	16.4	10.1
성별	남 성	(553)	18.9	31.0	22.8	15.7	11.7
	여 성	(497)	20.9	30.1	23.4	17.2	8.4
연령	20대 이하	(177)	25.5	24.4	14.6	24.7	10.8
	30대	(208)	26.0	26.6	18.7	17.6	11.0
	40대	(239)	18.3	32.3	21.9	16.5	11.0
	50대	(246)	16.0	34.7	28.7	12.3	8.3
	60대 이상	(180)	14.3	33.4	30.5	12.1	9.8
학력	중졸이하	(174)	17.4	31.4	25.1	15.2	10.9
	고졸	(477)	21.5	30.6	24.5	16.5	6.9
	대졸이상	(400)	18.9	30.2	20.6	16.8	13.6
직업	일반회사원	(334)	20.6	31.8	17.9	18.6	11.0
	공무원/공공기관	(112)	17.8	30.0	26.2	17.8	8.2
	개인사업/자영업	(228)	17.3	31.8	24.7	14.4	11.8
	농어업	(160)	19.0	28.5	30.4	11.8	10.3
	주부	(116)	17.2	29.1	31.0	16.8	5.8
	학생	(86)	30.1	26.6	9.9	21.7	11.7
	무직	(14)	25.9	46.7	27.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20.4	29.1	20.3	20.9	9.2
	300만 원대	(238)	17.9	29.5	26.9	16.5	9.3
	400만 원대	(287)	20.1	30.9	22.6	17.4	9.1
	500만원 이상	(335)	20.7	31.9	22.4	12.9	12.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9.9	27.0	25.7	16.5	10.9
	15년-30년미만	(286)	22.7	29.8	17.1	18.3	12.1
	30년 이상	(465)	18.0	33.4	25.1	15.1	8.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9.8	28.0	26.8	13.5	11.9
	면 지역	(311)	18.7	29.2	23.5	16.0	12.5
	동 지역	(498)	20.5	32.7	21.0	18.0	7.7
거주지	천안시	(334)	18.9	37.0	25.2	12.4	6.4
	공주시	(53)	27.5	37.3	20.2	9.3	5.7
	보령시	(49)	16.6	28.5	14.1	26.9	13.9
	아산시	(155)	23.6	26.8	17.6	14.6	17.4
	서산시	(84)	18.7	22.3	26.0	24.8	8.2
	논산시	(57)	18.9	28.7	25.9	16.6	10.0
	계룡시	(22)	15.3	34.2	25.8	17.1	7.6
	당진시	(81)	19.1	21.0	20.6	25.2	14.1
	금산군	(25)	18.0	33.3	29.4	13.5	5.9
	부여군	(31)	31.6	24.2	22.7	8.0	13.6
	서천군	(25)	16.0	28.9	32.4	8.7	14.0
	청양군	(19)	23.7	29.8	8.1	22.3	16.1
	홍성군	(48)	14.0	25.3	26.4	22.0	12.3
	예산군	(37)	14.6	32.8	22.2	25.4	5.0
	태안군	(30)	19.0	31.6	31.7	10.5	7.1

[표 151]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 참여도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0	0.1	3.3	13.2	26.6	31.6	21.7	3.4	6.65
성별	남 성	(553)	0.1	0.2	2.6	14.6	25.7	31.1	22.7	2.9	6.64
	여 성	(497)			4.1	11.7	27.6	32.2	20.5	3.9	6.65
연령	20대 이하	(177)		0.4	3.6	16.9	27.8	30.9	20.0	0.5	6.47
	30대	(208)	0.2		4.4	12.3	29.4	26.8	25.0	1.9	6.60
	40대	(239)			3.8	13.7	21.9	38.5	18.7	3.3	6.65
	50대	(246)		0.2	2.5	10.5	29.2	31.5	23.4	2.7	6.70
	60대 이상	(180)			2.2	13.9	25.0	28.9	21.1	9.1	6.80
학력	중졸이하	(174)			2.9	11.7	18.6	33.7	25.3	7.8	6.90
	고졸	(477)	0.1	0.3	2.2	14.9	31.7	28.9	18.8	3.0	6.55
	대졸이상	(400)			4.8	11.8	24.1	33.9	23.5	1.9	6.65
직업	일반회사원	(334)	0.1		4.8	15.7	28.8	30.8	18.7	1.0	6.45
	공무원/공공기관	(112)				4.2	21.2	40.7	31.5	2.4	7.07
	개인사업/자영업	(228)		0.3	4.1	11.6	25.8	27.5	25.1	5.7	6.74
	농어업	(160)			1.5	12.3	26.3	29.2	23.2	7.4	6.83
	주부	(116)			2.4	16.8	31.5	35.7	10.3	3.2	6.44
	학생	(86)		0.8	5.0	13.6	18.6	35.5	25.5	0.9	6.63
월평균 가구 소득	무직	(14)				30.8	43.7	14.6	10.9		6.06
	200만 원대 이하	(190)			2.4	14.3	33.7	30.2	14.4	5.1	6.55
	300만 원대	(238)		0.3	2.0	12.9	27.8	30.7	22.8	3.5	6.69
	400만 원대	(287)	0.2	0.2	5.5	13.3	24.1	32.1	22.1	2.6	6.58
	500만 원 이상	(335)			3.0	12.7	23.9	32.7	24.6	3.1	6.72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4.3	13.1	26.5	34.5	20.6	0.9	6.57
	15년~30년미만	(286)	0.2	0.4	3.4	14.4	26.4	34.2	17.4	3.6	6.57
	30년 이상	(465)			2.6	12.6	26.8	28.2	24.9	4.9	6.7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3	4.6	17.3	25.9	31.0	17.6	3.2	6.49
	면 지역	(311)	0.2		2.7	12.3	25.4	31.2	23.6	4.7	6.74
	동 지역	(498)		0.1	3.1	11.8	27.8	32.2	22.4	2.6	6.67
거주지	천안시	(334)			2.3	6.5	24.1	33.5	28.8	4.8	6.94
	공주시	(53)			4.3	18.1	23.1	26.7	22.2	5.6	6.61
	보령시	(49)			2.8	8.0	35.6	28.9	24.7		6.65
	아산시	(155)			1.7	17.4	31.4	33.8	12.2	3.6	6.48
	서산시	(84)			6.0	14.2	30.6	27.1	18.7	3.5	6.49
	논산시	(57)			2.7	11.7	30.2	32.5	20.2	2.8	6.64
	계룡시	(22)		2.7	4.5	11.1	24.2	28.6	26.1	2.7	6.61
	당진시	(81)			3.7	15.4	27.6	29.0	23.0	1.2	6.56
	금산군	(25)		2.7	2.7	19.9	27.4	26.4	21.0		6.35
	부여군	(31)			2.4	16.9	34.2	27.4	19.1		6.44
	서천군	(25)			4.0	15.2	26.4	39.4	15.0		6.46
	청양군	(19)	2.6		6.3	14.9	8.4	44.4	23.3		6.53
	홍성군	(48)			7.6	17.5	24.7	36.1	14.2		6.32
	예산군	(37)			3.6	24.8	24.6	23.3	14.7	9.0	6.48
	태안군	(30)			5.5	29.6	11.8	29.4	18.3	5.5	6.42

[표 152] 충남 도민의 사회 참여도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0.6	6.1	15.9	29.5	30.4	14.8	2.5	6.37
성별	남 성	(553)	0.1	0.6	7.5	16.0	26.5	32.6	14.6	2.1	6.35
	여 성	(497)		0.6	4.6	15.9	32.9	27.9	15.1	3.1	6.41
연령	20대 이하	(177)		1.1	8.0	20.1	27.6	31.4	10.2	1.6	6.17
	30대	(208)		0.4	6.7	20.9	27.7	27.2	14.6	2.4	6.28
	40대	(239)		0.8	5.1	9.3	38.9	33.7	11.5	0.7	6.37
	50대	(246)	0.2	0.2	3.8	15.9	27.9	35.2	14.6	2.1	6.46
	60대 이상	(180)		0.6	8.2	14.9	23.4	22.0	24.3	6.6	6.57
학력	중졸이하	(174)		0.7	9.2	11.9	25.7	21.5	24.5	6.5	6.57
	고졸	(477)	0.1	0.3	4.4	19.2	29.7	30.6	13.7	1.9	6.34
	대졸이상	(400)		0.8	6.9	13.8	31.0	34.0	12.0	1.5	6.32
직업	일반회사원	(334)		1.0	7.0	18.8	33.7	28.5	9.7	1.3	6.16
	공무원/공공기관	(112)			3.3	8.1	20.9	51.0	14.9	1.7	6.71
	개인사업/자영업	(228)	0.3		4.1	17.9	29.1	28.4	17.0	3.3	6.45
	농어업	(160)		0.6	8.6	13.6	25.2	22.1	24.9	5.0	6.54
	주부	(116)			4.0	15.3	35.3	29.8	12.1	3.4	6.41
	학생	(86)		2.3	8.8	11.8	26.2	37.3	12.6	0.9	6.29
월평균 가구 소득	무직	(14)			14.2	35.6	28.8		21.4		5.79
	200만 원대 이하	(190)		0.5	8.9	16.0	31.1	25.4	15.6	2.5	6.29
	300만 원대	(238)	0.3	0.3	4.9	18.3	26.0	27.7	19.9	2.7	6.46
	400만 원대	(287)		1.4	7.3	16.9	31.4	29.7	12.8	0.5	6.21
	500만원 이상	(335)		0.2	4.4	13.4	29.5	35.8	12.5	4.2	6.5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9	7.5	16.4	34.8	31.0	8.8	0.6	6.16
	15년-30년미만	(286)	0.2	0.7	4.1	18.5	31.5	31.5	12.0	1.5	6.31
	30년 이상	(465)		0.3	6.5	14.1	24.9	29.3	20.5	4.4	6.5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9	6.6	20.1	30.1	29.2	11.5	1.7	6.21
	면 지역	(311)		0.3	5.4	17.8	27.5	26.8	18.9	3.2	6.45
	동 지역	(498)	0.1	0.6	6.4	12.7	30.5	33.2	13.9	2.5	6.41
거주지	천안시	(334)		0.6	4.6	11.2	29.4	34.7	14.1	5.4	6.57
	공주시	(53)			7.4	25.4	20.0	32.9	13.0	1.3	6.23
	보령시	(49)			6.1	15.6	27.7	38.5	12.0		6.35
	아산시	(155)		0.8	6.1	14.8	34.4	26.1	16.9	0.9	6.33
	서산시	(84)		1.2	7.1	16.6	27.1	32.7	14.2	1.2	6.30
	논산시	(57)			5.8	18.7	25.3	31.6	17.1	1.4	6.40
	계룡시	(22)	2.7		6.8	16.1	24.7	30.9	16.1	2.7	6.31
	당진시	(81)			6.0	14.7	32.5	30.0	15.6	1.2	6.38
	금산군	(25)		2.7		29.5	24.3	32.8	10.7		6.17
	부여군	(31)			9.9	19.6	30.8	29.1	9.1	1.6	6.13
	서천군	(25)			9.0	19.6	37.2	14.3	17.2	2.7	6.19
	청양군	(19)		3.2	6.3	19.8	27.7	26.0	17.0		6.18
	홍성군	(48)		1.7	11.0	14.3	32.7	24.8	15.6		6.15
	예산군	(37)			7.3	25.0	25.0	23.0	18.1	1.7	6.25
	태안군	(30)			7.7	25.1	35.3	12.6	15.2	4.1	6.15

[표 153]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1)결혼이주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5	3.2	11.6	14.9	20.3	21.8	16.0	9.7	2.1	5.41
성별	남 성	(553)	0.5	3.5	10.2	15.4	19.7	22.2	15.6	10.5	2.4	5.46
	여 성	(497)	0.5	2.9	13.1	14.3	21.1	21.3	16.3	8.8	1.7	5.36
연령	20대 이하	(177)	0.8	4.3	12.5	15.8	22.7	22.6	15.4	6.1		5.15
	30대	(208)		3.1	14.0	13.8	20.2	22.6	17.9	5.4	3.0	5.35
	40대	(239)	0.3	4.7	9.5	13.3	23.4	20.2	18.0	10.2	0.4	5.41
	50대	(246)		1.7	10.5	16.9	18.4	24.3	14.0	12.9	1.2	5.53
	60대 이상	(180)	2.0	2.5	12.0	14.5	16.8	18.5	14.2	13.1	6.4	5.58
학력	중졸이하	(174)	0.8	2.0	11.1	13.2	17.1	21.0	16.3	14.3	4.1	5.68
	고졸	(477)	0.7	4.2	12.4	19.2	22.0	19.8	13.6	6.7	1.4	5.13
	대졸이상	(400)	0.2	2.6	10.7	10.5	19.8	24.4	18.6	11.2	2.0	5.63
직업	일반회사원	(334)		3.7	12.3	16.5	24.5	22.2	13.4	5.5	1.9	5.21
	공무원/공공기관	(112)	0.7	0.4	5.0	4.8	11.7	30.0	30.8	14.9	1.7	6.24
	개인사업/자영업	(228)	0.9	4.1	10.9	13.9	21.7	19.7	13.7	13.0	2.1	5.43
	농어업	(160)	0.9	2.1	10.2	16.5	20.0	17.3	18.3	12.8	1.9	5.53
	주부	(116)		3.8	17.1	18.4	18.3	20.2	8.5	8.8	4.9	5.19
	학생	(86)	1.6	2.6	14.3	11.9	15.2	28.7	18.6	7.2		5.33
	무직	(14)		10.7	10.9	44.0	19.7		14.6			4.3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1.0	5.8	11.5	19.4	14.3	15.8	20.3	7.4	4.4	5.32
	300만 원대	(238)		3.5	9.2	18.8	18.0	21.8	14.0	13.5	1.2	5.47
	400만 원대	(287)	1.0	3.6	12.0	13.0	26.0	22.8	13.2	7.1	1.3	5.24
	500만원 이상	(335)	0.2	1.2	13.0	11.2	20.5	24.2	17.3	10.5	2.0	5.5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3.6	12.2	12.1	17.0	23.3	21.9	8.4	1.4	5.51
	15년-30년미만	(286)	0.5	3.4	12.4	16.2	22.4	21.3	15.2	8.3	0.3	5.25
	30년 이상	(465)	0.9	2.9	10.7	15.9	21.2	21.0	12.6	11.4	3.6	5.4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2	3.3	11.9	16.7	18.6	21.6	17.5	8.1	2.2	5.39
	면 지역	(311)	0.5	2.1	9.2	15.0	20.2	22.5	19.1	10.2	1.3	5.55
	동 지역	(498)	0.7	3.9	12.9	14.0	21.3	21.4	13.2	10.1	2.5	5.34
거주지	천안시	(334)	0.6	0.6	8.3	12.3	25.9	19.9	17.7	10.6	4.2	5.71
	공주시	(53)	1.6	1.6	10.2	12.2	29.5	21.1	16.7	7.1		5.32
	보령시	(49)		1.7	16.2	15.4	18.9	18.1	14.5	15.1		5.39
	아산시	(155)	0.9	5.2	9.6	18.2	12.2	32.1	13.9	7.0	0.9	5.28
	서산시	(84)		2.4	15.5	14.0	21.1	20.1	16.5	8.1	2.4	5.35
	논산시	(57)	1.3	3.1	10.1	15.4	20.5	16.9	20.0	12.6		5.45
	계룡시	(22)		9.5	6.8	14.5	19.2	18.6	17.9	13.3		5.38
	당진시	(81)		8.0	15.6	14.5	13.3	15.2	16.5	14.4	2.5	5.32
	금산군	(25)		2.0	17.9	19.0	14.0	31.5	9.2	6.4		5.08
	부여군	(31)		4.6	16.6	16.7	21.3	22.4	13.2	3.8	1.6	5.03
	서천군	(25)		2.7	19.0	15.6	15.6	21.0	14.4	9.7	2.0	5.25
	청양군	(19)			7.9	38.1	13.9	19.5	15.8	4.9		5.12
	홍성군	(48)		4.6	15.9	13.7	18.6	28.4	15.8	1.4	1.7	5.12
	예산군	(37)	1.4	4.8	15.5	15.6	19.6	18.4	10.4	12.4	1.9	5.18
	태안군	(30)		10.3	12.3	14.6	19.8	16.0	13.5	13.5		5.13

[표 154]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0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3	2.1	9.4	15.7	22.2	19.5	12.6	11.9	5.6	0.8	4.65
성별	남 성	(553)		2.0	9.3	16.2	21.2	18.9	13.3	12.0	7.0	0.2	4.70
	여 성	(497)	0.5	2.2	9.5	15.3	23.3	20.2	11.7	11.9	3.9	1.5	4.59
연령	20대 이하	(177)	0.5	3.5	11.0	16.3	15.9	25.8	11.8	10.5	4.7		4.49
	30대	(208)	0.5	2.1	10.5	17.2	18.7	18.7	13.3	12.0	7.0		4.63
	40대	(239)		0.5	11.3	13.4	23.6	19.3	14.2	13.7	3.5	0.4	4.67
	50대	(246)		1.5	8.4	15.2	23.7	20.7	9.9	14.6	5.7	0.4	4.72
	60대 이상	(180)	0.5	3.6	5.2	17.2	28.3	13.0	13.9	7.4	7.4	3.6	4.70
학력	중졸이하	(174)	0.5	3.8	4.3	17.8	23.2	16.8	15.0	10.6	4.4	3.7	4.75
	고졸	(477)	0.2	2.5	12.9	16.7	24.6	18.0	7.9	11.2	5.9	0.2	4.41
	대졸이상	(400)	0.3	0.9	7.4	13.8	18.9	22.4	17.0	13.5	5.7	0.3	4.89
직업	일반회사원	(334)	0.3	1.3	9.7	16.3	23.9	22.1	10.8	11.4	4.3		4.54
	공무원/공공기관	(112)		0.7	3.4	7.6	13.8	23.2	29.7	18.3	3.4		5.34
	개인사업/자영업	(228)		2.2	12.4	16.6	21.7	15.5	9.4	12.6	8.7	0.9	4.63
	농어업	(160)	0.5	2.6	6.7	16.9	26.4	15.9	13.4	9.4	8.2		4.64
	주부	(116)		2.6	11.9	13.7	32.8	17.6	4.6	8.3	3.0	5.5	4.46
	학생	(86)	0.9	5.7	8.3	17.3	7.1	26.0	14.4	15.7	4.5		4.65
	무직	(14)			16.2	49.5	10.4	9.3	14.6				3.5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3.2	11.3	20.8	21.1	11.4	13.2	7.1	8.5	3.4	4.57
	300만 원대	(238)	0.5	1.5	7.4	16.8	21.6	21.1	12.8	14.4	3.5	0.4	4.68
	400만 원대	(287)	0.2	3.4	9.9	14.4	25.9	20.5	11.4	8.7	5.6		4.46
	500만원 이상	(335)	0.3	0.8	9.2	13.3	19.9	22.1	13.0	15.7	5.4	0.3	4.8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1.5	10.0	16.2	14.5	22.1	15.4	14.6	4.9	0.3	4.76
	15년-30년미만	(286)	0.3	2.5	10.2	14.7	22.3	24.5	12.2	9.7	3.6		4.49
	30년 이상	(465)	0.2	2.2	8.5	16.1	27.0	14.7	10.9	11.6	7.2	1.6	4.6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8	10.9	15.4	19.8	23.9	12.9	8.7	4.5	1.0	4.53
	면 지역	(311)	0.3	2.0	7.5	14.2	24.4	17.0	14.7	12.0	7.5	0.6	4.79
	동 지역	(498)	0.4	1.8	9.8	16.9	21.9	18.9	11.1	13.5	4.9	0.8	4.62
거주지	천안시	(334)		0.6	2.9	12.9	28.7	20.6	11.8	13.0	8.2	1.3	5.02
	공주시	(53)		1.6	7.3	22.3	23.8	20.1	8.7	10.5	4.3	1.4	4.52
	보령시	(49)			6.2	19.8	22.9	24.8	11.4	12.3	2.7		4.63
	아산시	(155)		2.7	8.6	18.2	18.3	25.2	12.3	12.1	1.7	0.9	4.54
	서산시	(84)		1.1	10.7	21.2	16.5	20.2	11.7	12.8	3.5	2.4	4.62
	논산시	(57)	1.4	2.7	12.6	14.6	19.9	11.6	19.0	12.5	5.5		4.56
	계룡시	(22)	1.5	4.5	17.3	14.1	10.8	12.1	11.1	21.8	6.8		4.59
	당진시	(81)	1.2	3.2	20.2	12.2	11.9	12.9	16.7	16.9	4.8		4.49
	금산군	(25)	2.0	2.7	13.2	14.7	24.4	17.6	12.0	7.1	6.3		4.31
	부여군	(31)		2.4	16.9	13.3	28.2	17.7	10.3	7.8	3.5		4.21
	서천군	(25)		4.3	8.4	17.6	29.1	15.1	6.7	9.5	9.3		4.47
	청양군	(19)			11.6	24.2	18.8	20.5	17.4	1.8	5.8		4.36
	홍성군	(48)		4.9	12.5	16.8	19.9	15.8	17.3	9.3	3.4		4.36
	예산군	(37)		4.7	20.5	12.7	18.0	22.6	5.0	3.7	12.7		4.27
	태안군	(30)		8.0	18.5	12.9	17.9	13.5	17.6	8.0	3.6		4.13

[표 155]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1.5	4.5	13.3	15.8	21.2	18.3	15.7	8.7	1.2	5.19
성별	남 성	(553)	1.1	4.9	12.9	16.2	20.3	17.3	18.0	8.1	1.2	5.21
	여 성	(497)	1.8	4.0	13.7	15.3	22.2	19.4	13.1	9.2	1.1	5.16
연령	20대 이하	(177)	1.6	6.0	14.9	15.3	20.6	24.5	10.4	5.5	1.1	4.96
	30대	(208)	1.1	3.2	16.9	14.4	15.3	23.3	16.8	8.9		5.21
	40대	(239)	1.7	4.2	12.7	15.6	20.8	18.9	17.0	8.7	0.4	5.20
	50대	(246)	0.4	5.3	10.6	17.1	25.6	13.6	19.3	6.3	1.9	5.23
	60대 이상	(180)	2.9	3.6	12.0	16.2	23.2	12.1	12.8	14.6	2.6	5.29
학력	중졸이하	(174)	2.6	2.8	12.3	12.4	23.9	15.1	15.3	12.1	3.5	5.40
	고졸	(477)	1.6	6.7	14.4	21.1	21.5	16.2	11.7	5.6	1.0	4.84
	대졸이상	(400)	0.8	2.5	12.4	10.8	19.7	22.1	20.5	10.8	0.3	5.50
직업	일반회사원	(334)	0.8	4.2	17.1	13.3	22.7	19.2	14.6	8.2		5.10
	공무원/공공기관	(112)	0.7	0.4	6.4	5.6	15.9	28.2	31.8	11.0		6.02
	개인사업/자영업	(228)	1.6	6.2	12.0	17.1	21.8	15.3	15.9	8.1	1.9	5.13
	농어업	(160)	2.0	5.3	10.2	17.3	23.5	12.3	16.3	10.2	2.9	5.26
	주부	(116)	2.1	3.3	14.0	26.7	22.4	12.7	8.3	9.3	1.2	4.89
	학생	(86)	3.3	5.0	14.1	13.5	16.4	29.3	9.6	6.5	2.3	5.07
	무직	(14)		10.7	25.2	39.1	10.4	14.6				3.9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2.2	9.8	16.3	15.1	20.1	13.7	10.9	10.5	1.4	4.87
	300만 원대	(238)	1.7	2.7	14.9	15.9	21.1	14.2	22.5	5.6	1.5	5.21
	400만 원대	(287)	2.3	4.5	10.0	18.0	25.0	18.8	13.1	8.3		5.09
	500만원 이상	(335)	0.2	2.6	13.3	14.1	18.7	23.3	15.7	10.1	1.9	5.43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8	3.1	13.3	12.9	14.6	26.9	20.7	7.2	0.5	5.39
	15년-30년미만	(286)	1.8	6.3	13.1	15.6	23.7	21.1	9.8	8.0	0.7	5.00
	30년 이상	(465)	1.7	4.2	13.4	17.7	24.0	11.0	16.0	10.0	1.9	5.17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9	3.8	12.0	15.1	20.4	22.0	13.1	10.3	1.3	5.26
	면 지역	(311)	1.3	4.0	10.1	16.6	22.2	16.2	17.9	10.8	1.0	5.34
	동 지역	(498)	1.4	5.1	16.0	15.5	21.0	17.8	15.5	6.5	1.2	5.05
거주지	천안시	(334)	0.6	1.8	10.0	15.2	25.4	18.8	18.9	7.6	1.8	5.44
	공주시	(53)		2.9	14.8	17.9	25.1	16.2	14.6	8.5		5.15
	보령시	(49)		6.4	13.3	24.7	12.3	18.4	14.5	10.4		5.08
	아산시	(155)	4.4	3.5	15.5	12.0	21.9	20.1	14.8	5.3	2.6	5.05
	서산시	(84)		3.6	18.8	14.0	15.4	28.5	11.7	6.9	1.2	5.15
	논산시	(57)	1.3	7.2	12.7	21.6	17.7	13.1	12.3	14.0		5.06
	계룡시	(22)		12.3	11.8	14.1	20.8	14.1	13.6	13.3		5.07
	당진시	(81)	2.3	10.4	14.3	13.3	16.5	10.6	19.3	13.2		5.06
	금산군	(25)	2.0	9.0	10.8	19.8	14.4	19.7	13.7	10.6		5.03
	부여군	(31)		6.5	18.3	14.9	24.1	14.5	11.0	10.6		4.97
	서천군	(25)	3.3	2.7	11.0	16.3	31.0	13.6	12.8	9.3		5.08
	청양군	(19)			12.1	26.3	28.1	13.9	16.5	3.2		5.06
	홍성군	(48)	1.5	4.7	17.1	15.2	18.8	18.6	16.0	8.0		5.05
	예산군	(37)	5.1	4.7	15.8	13.9	17.5	14.4	14.0	11.1	3.6	5.10
	태안군	(30)		12.4	10.7	18.2	13.7	26.2	7.5	11.3		4.98

[표 156]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사례수)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2	2.1	11.6	22.6	36.6	23.6	3.3	6.77
성별	남 성	(553)	0.3	1.6	11.5	22.7	35.5	25.3	3.1	6.80
	여 성	(497)		2.6	11.8	22.5	37.9	21.8	3.5	6.75
연령	20대 이하	(177)	0.5	1.9	15.0	27.0	41.5	13.6	0.6	6.50
	30대	(208)		1.2	10.6	28.4	34.1	23.0	2.7	6.75
	40대	(239)		3.6	10.8	20.4	35.5	28.2	1.5	6.79
	50대	(246)	0.4	2.6	10.6	17.8	38.8	24.8	5.1	6.87
	60대 이상	(180)		0.6	12.0	21.3	33.2	26.5	6.4	6.92
학력	중졸이하	(174)		0.6	10.6	19.0	39.4	25.0	5.4	6.94
	고졸	(477)	0.4	1.7	12.7	25.9	35.4	21.8	2.2	6.69
	대졸이상	(400)		3.2	10.8	20.4	36.8	25.2	3.6	6.81
직업	일반회사원	(334)		3.1	12.8	26.0	34.6	20.4	3.1	6.66
	공무원/공공기관	(112)			4.5	11.8	43.8	36.4	3.5	7.22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2.2	11.2	23.0	32.6	26.7	3.9	6.81
	농어업	(160)		1.6	9.5	22.6	37.7	25.7	2.9	6.85
	주부	(116)		2.5	16.1	23.1	31.2	21.4	5.7	6.70
	학생	(86)	1.0	1.0	13.7	18.8	52.4	13.2		6.60
	무직	(14)			22.5	43.2	28.8	5.5		6.1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1.1	10.5	30.7	32.7	18.9	6.0	6.76
	300만 원대	(238)		0.8	12.9	24.9	37.3	20.5	3.6	6.75
	400만 원대	(287)	0.6	2.5	13.6	24.1	33.2	25.4	0.7	6.66
	500만원 이상	(335)		3.2	9.6	15.2	41.2	27.0	3.8	6.9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2.5	14.3	22.0	40.2	19.7	1.2	6.64
	15년-30년미만	(286)	0.3	2.5	12.5	25.0	37.2	20.1	2.4	6.66
	30년 이상	(465)	0.2	1.5	9.3	21.6	33.9	28.3	5.2	6.9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2	14.3	23.6	36.1	21.5	2.2	6.67
	면 지역	(311)		2.1	10.2	22.6	38.0	23.5	3.6	6.82
	동 지역	(498)	0.3	2.0	11.2	22.2	36.0	24.7	3.6	6.80
거주지	천안시	(334)		0.6	8.8	15.3	39.9	27.7	7.7	7.08
	공주시	(53)	1.6	7.4	7.3	24.6	30.1	29.0		6.61
	보령시	(49)		2.8	12.4	23.4	35.8	25.6		6.69
	아산시	(155)		2.6	11.2	27.9	39.0	18.4	0.9	6.62
	서산시	(84)		2.4	16.3	24.7	30.7	22.3	3.6	6.65
	논산시	(57)	1.6	3.0	13.2	23.2	33.6	21.1	4.3	6.65
	계룡시	(22)			19.7	21.4	32.9	26.1		6.65
	당진시	(81)		2.5	10.9	30.9	33.1	20.3	2.3	6.65
	금산군	(25)		2.0	10.3	28.7	33.9	25.1		6.70
	부여군	(31)			18.0	19.6	41.2	21.2		6.66
	서천군	(25)		2.3	10.6	30.4	34.7	22.0		6.64
	청양군	(19)		2.6	14.4	20.7	47.0	15.3		6.58
	홍성군	(48)		3.1	15.9	21.9	41.5	17.7		6.55
	예산군	(37)			18.2	25.3	33.0	23.5		6.62
	태안군	(30)		5.6	10.0	35.0	23.6	25.9		6.54

[표 157] 충남에서 경제적·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사례수)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2	4.8	15.5	27.5	37.7	13.3	1.0	6.42
성별	남 성	(553)	0.3	4.5	16.3	26.1	38.2	13.6	1.0	6.42
	여 성	(497)	0.1	5.2	14.6	29.0	37.1	13.0	1.0	6.41
연령	20대 이하	(177)	0.5	5.3	15.9	37.4	23.8	17.2		6.30
	30대	(208)		3.8	15.3	29.3	43.4	6.4	1.8	6.39
	40대	(239)		5.2	12.3	28.8	43.9	9.7		6.41
	50대	(246)	0.2	3.8	15.6	26.4	39.6	12.9	1.4	6.46
	60대 이상	(180)	0.3	6.3	19.3	15.5	33.9	23.0	1.7	6.52
학력	중졸이하	(174)	0.3	5.7	19.6	18.7	35.4	19.6	0.7	6.45
	고졸	(477)	0.3	4.7	15.4	30.1	34.3	14.1	1.1	6.40
	대졸이상	(400)		4.5	13.8	28.2	42.8	9.8	1.0	6.42
직업	일반회사원	(334)		5.6	17.1	32.5	32.7	11.3	0.8	6.29
	공무원/공공기관	(112)		1.4	5.4	26.8	56.1	8.0	2.3	6.71
	개인사업/자영업	(228)	0.5	5.2	14.2	25.0	40.4	14.0	0.8	6.45
	농어업	(160)		6.2	20.5	16.0	36.1	20.0	1.1	6.47
	주부	(116)		2.6	19.3	28.1	37.4	11.5	1.1	6.39
	학생	(86)	1.0	4.7	11.1	32.3	32.9	18.0		6.45
	무직	(14)		10.7	15.6	54.0	14.2	5.5		5.8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0.3	6.4	19.8	27.9	32.9	12.2	0.4	6.25
	300만 원대	(238)	0.3	4.1	19.8	28.6	33.6	12.0	1.7	6.34
	400만 원대	(287)	0.3	6.4	15.2	27.1	36.6	14.1	0.3	6.37
	500만원 이상	(335)		3.1	10.1	26.8	44.2	14.3	1.4	6.61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6.7	14.9	31.1	40.5	6.3	0.6	6.27
	15년-30년미만	(286)	0.5	4.1	14.9	30.9	36.1	13.2	0.3	6.39
	30년 이상	(465)	0.1	4.0	16.3	23.1	36.8	18.0	1.6	6.5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2	6.8	16.0	28.4	35.1	12.5	0.9	6.32
	면 지역	(311)		5.6	17.3	22.1	40.4	13.7	0.8	6.42
	동 지역	(498)	0.3	3.3	14.1	30.4	37.3	13.5	1.1	6.46
거주지	천안시	(334)		4.7	5.9	30.6	44.6	13.0	1.2	6.59
	공주시	(53)	1.6	3.0	28.2	23.1	26.6	16.1	1.4	6.24
	보령시	(49)		3.0	19.8	22.0	41.7	13.6		6.43
	아산시	(155)		3.4	13.2	32.9	42.6	7.9		6.38
	서산시	(84)		6.0	20.1	29.2	34.2	10.5		6.23
	논산시	(57)		2.8	22.1	22.3	37.9	13.5	1.4	6.41
	계룡시	(22)	2.7	4.5	29.7	21.8	27.9	11.8	1.5	6.09
	당진시	(81)		4.7	19.4	18.7	37.9	16.9	2.3	6.50
	금산군	(25)			20.6	29.6	28.4	21.4		6.51
	부여군	(31)		7.2	21.7	23.0	27.7	16.8	3.5	6.36
	서천군	(25)	2.3	13.1	19.6	20.7	31.0	10.7	2.7	6.08
	청양군	(19)		12.1	18.6	25.4	29.5	14.4		6.15
	홍성군	(48)		4.7	22.3	30.6	23.2	17.5	1.7	6.32
	예산군	(37)		4.4	26.1	26.7	24.5	18.3		6.26
	태안군	(30)		11.8	17.4	21.0	32.5	17.3		6.26

[표 158]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1)결혼이주자

		(사례수)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5	3.9	11.4	32.4	24.9	18.8	7.9	0.3	5.67
성별	남 성	(553)	0.5	3.6	11.9	34.0	22.9	18.5	8.1	0.4	5.65
	여 성	(497)	0.5	4.2	10.8	30.5	27.1	19.1	7.6	0.3	5.68
연령	20대 이하	(177)	0.5	4.3	12.8	35.4	26.6	16.5	3.2	0.7	5.49
	30대	(208)		4.4	15.1	33.4	19.5	17.8	9.8		5.60
	40대	(239)	0.8	4.3	11.3	34.3	25.0	18.7	5.2	0.4	5.58
	50대	(246)	0.6	3.1	10.0	31.9	27.8	16.6	9.8	0.3	5.73
	60대 이상	(180)	0.7	3.3	7.7	26.3	25.3	25.2	11.1	0.3	5.94
학력	중졸이하	(174)	0.8	2.5	10.3	27.8	22.2	27.6	8.6	0.3	5.87
	고졸	(477)	0.8	4.5	11.2	37.4	25.7	14.4	6.1		5.50
	대졸이상	(400)	0.1	3.8	12.1	28.3	25.1	20.2	9.6	0.8	5.77
직업	일반회사원	(334)		3.6	14.9	33.3	25.3	14.7	7.2	0.9	5.58
	공무원/공공기관	(112)		3.6	5.3	27.0	25.1	30.0	8.9		5.99
	개인사업/자영업	(228)	1.3	3.8	8.2	33.1	24.1	17.4	12.1		5.75
	농어업	(160)		4.7	10.9	26.2	26.6	23.4	8.2		5.78
	주부	(116)	1.6	4.7	10.2	34.4	27.1	16.1	5.5	0.4	5.53
	학생	(86)		2.2	14.9	40.0	22.4	19.7	0.7		5.45
	무직	(14)	5.8	5.5	22.5	45.4	4.9	10.4	5.5		4.9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1.1	3.5	10.7	33.6	26.0	18.9	6.1	0.3	5.62
	300만 원대	(238)	0.4	2.8	13.7	31.9	25.7	18.5	6.6	0.4	5.64
	400만 원대	(287)	0.6	5.4	10.2	32.3	27.7	16.4	7.0	0.3	5.60
	500만원 이상	(335)	0.2	3.5	11.2	32.1	21.3	20.9	10.5	0.4	5.7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5	4.3	15.1	31.9	23.1	19.9	5.1		5.53
	15년-30년미만	(286)	0.6	3.8	10.5	28.4	31.1	18.8	5.8	1.1	5.70
	30년 이상	(465)	0.5	3.6	9.6	35.1	22.2	18.0	10.9	0.1	5.7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2	5.0	12.6	25.1	26.1	23.0	6.4	0.6	5.68
	면 지역	(311)	0.4	4.0	8.6	31.8	24.1	22.7	8.1	0.2	5.77
	동 지역	(498)	0.3	3.3	12.5	36.2	24.8	14.3	8.4	0.3	5.60
거주지	천안시	(334)			10.5	42.3	24.2	14.8	8.2		5.68
	공주시	(53)	1.4	3.0	15.0	25.7	26.5	21.0	7.3		5.65
	보령시	(49)	1.7	10.2	8.9	23.9	26.9	21.9	6.4		5.56
	아산시	(155)		4.3	14.6	28.5	26.2	19.3	6.2	0.8	5.63
	서산시	(84)		3.5	10.7	32.7	29.7	14.0	8.3	1.2	5.70
	논산시	(57)		4.3	12.4	34.7	25.9	11.1	10.2	1.4	5.63
	계룡시	(22)	4.5	6.8	9.2	24.1	18.6	25.6	11.1		5.67
	당진시	(81)	1.1	8.5	10.6	31.1	15.2	25.2	8.4		5.60
	금산군	(25)		9.0	12.7	22.3	18.1	27.0	11.0		5.74
	부여군	(31)		7.8	12.1	20.5	23.3	22.0	12.6	1.6	5.84
	서천군	(25)	2.3	2.0	8.4	27.8	28.4	29.8	1.3		5.73
	청양군	(19)		3.2	16.5	26.7	22.8	26.0	4.9		5.67
	홍성군	(48)	1.7	4.8	12.1	23.7	26.7	26.2	4.9		5.67
	예산군	(37)	1.7	6.8	10.6	19.9	31.9	18.8	10.3		5.71
	태안군	(30)		10.0	3.8	28.7	28.7	21.4	7.4		5.70

[표 159]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2)외국인근로자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3	4.2	8.0	22.1	28.7	21.3	9.6	5.3	0.5	5.06
성별	남 성	(553)	0.1	4.5	8.4	22.9	24.9	22.9	10.5	5.5	0.3	5.08
	여 성	(497)	0.6	3.9	7.4	21.3	33.0	19.5	8.7	5.1	0.7	5.05
연령	20대 이하	(177)		5.6	6.2	23.9	36.1	16.6	8.2	3.3		4.90
	30대	(208)	0.4	2.7	11.3	24.4	22.9	23.9	7.3	6.2	0.9	5.04
	40대	(239)	0.2	5.9	7.3	21.7	24.5	24.0	13.4	2.9		5.05
	50대	(246)	0.6	3.5	6.1	22.2	33.1	20.9	8.8	4.6		5.05
	60대 이상	(180)	0.3	3.3	9.3	18.2	27.9	19.5	9.7	10.2	1.6	5.28
학력	중졸이하	(174)	0.3	4.4	8.0	21.8	27.9	19.5	9.4	7.0	1.6	5.14
	고졸	(477)	0.4	5.4	9.7	21.1	30.2	21.1	6.9	5.1		4.92
	대졸이상	(400)	0.2	2.7	5.8	23.5	27.4	22.2	13.0	4.8	0.5	5.20
직업	일반 회사원	(334)	0.2	4.4	7.8	24.1	31.0	18.5	8.9	4.5	0.6	4.98
	공무원/공공기관	(112)		1.2	3.8	18.2	23.7	32.1	16.2	4.9		5.50
	개인사업/자영업	(228)	0.7	5.6	7.6	18.9	26.3	25.1	9.1	6.8		5.10
	농어업	(160)		3.2	10.1	18.2	30.2	19.8	9.9	6.9	1.8	5.20
	주부	(116)	0.9	4.8	11.1	23.6	31.1	16.7	9.0	2.8		4.79
	학생	(86)		4.8	7.0	26.2	28.8	19.8	7.2	6.3		4.98
	무직	(14)		5.8	5.5	68.6	20.1					4.0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0.3	4.3	4.3	23.2	31.3	21.1	9.9	4.8	0.8	5.12
	300만 원대	(238)	0.4	3.6	11.6	20.8	24.1	24.9	8.8	5.2	0.6	5.04
	400만 원대	(287)	0.2	6.1	9.9	20.3	32.7	18.2	6.1	6.6		4.91
	500만원 이상	(335)	0.4	3.0	5.8	24.0	27.2	21.4	13.1	4.6	0.6	5.1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6	5.1	9.3	20.7	25.4	25.8	10.4	2.7		4.98
	15년-30년미만	(286)	0.3	3.9	5.2	23.8	31.5	21.7	10.0	3.6		5.05
	30년 이상	(465)	0.1	3.9	8.8	22.0	29.2	18.1	8.9	8.1	1.0	5.13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2	5.8	7.7	20.9	27.5	20.4	12.2	3.7	0.6	5.00
	면 지역	(311)	0.2	3.1	8.5	19.2	26.3	22.3	12.2	7.8	0.5	5.26
	동 지역	(498)		4.1	7.7	24.5	30.9	21.0	6.8	4.5	0.4	4.98
거주지	천안시	(334)		1.2	7.0	22.4	36.0	22.3	5.9	4.8	0.6	5.11
	공주시	(53)		2.9	8.8	29.0	28.6	14.6	10.2	5.8		4.97
	보령시	(49)		3.3	8.6	19.9	24.6	29.4	12.8	1.5		5.12
	아산시	(155)		6.0	3.5	29.4	27.1	16.4	7.8	7.9	1.8	5.09
	서산시	(84)		2.4	14.1	22.5	25.6	17.6	10.7	7.0		5.02
	논산시	(57)		5.7	8.5	22.8	27.2	20.2	12.9	2.7		4.97
	계룡시	(22)	2.3	14.1	4.5	17.3	26.1	29.7	2.3	3.8		4.68
	당진시	(81)	1.1	7.1	13.1	15.6	26.7	22.9	7.3	6.2		4.88
	금산군	(25)		7.0	11.4	17.8	23.2	27.1	7.6	6.0		4.99
	부여군	(31)		6.2	11.0	20.6	21.4	13.8	25.4	1.6		5.08
	서천군	(25)	2.3	6.4	8.7	12.7	20.6	29.5	17.2	2.7		5.14
	청양군	(19)		8.9	4.9	16.8	24.4	24.2	14.4	6.3		5.18
	홍성군	(48)	1.7	4.9	9.2	12.8	24.9	26.4	17.1	3.1		5.17
	예산군	(37)	1.7	4.9	5.7	27.1	17.7	22.3	10.0	10.6		5.14
	태안군	(30)		8.3	5.8	17.3	24.0	19.8	20.9	3.9		5.20

[표 160]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3)북한이탈주민

		(사례수)	1	2	3	4	5	6	7	8	9	평균 (점)
전체		(1050)	0.1	1.0	5.2	17.5	34.9	20.4	12.4	7.1	1.4	5.41
성별	남 성	(553)		1.3	5.8	16.0	33.9	20.1	14.2	7.2	1.4	5.44
	여 성	(497)	0.2	0.7	4.4	19.2	36.1	20.8	10.3	7.0	1.4	5.37
연령	20대 이하	(177)		0.8	4.9	20.7	36.9	21.9	14.1	0.7		5.19
	30대	(208)		0.2	7.0	18.4	38.0	18.0	6.9	8.6	2.8	5.36
	40대	(239)		2.0	4.8	15.9	37.8	18.1	13.0	7.0	1.5	5.39
	50대	(246)	0.4	1.1	3.4	18.2	30.1	24.6	13.0	7.4	1.8	5.50
	60대 이상	(180)		0.7	6.2	14.4	32.4	19.2	15.3	11.4	0.5	5.57
학력	중졸이하	(174)		0.7	6.0	13.8	31.6	22.0	15.0	10.9		5.57
	고졸	(477)	0.2	1.8	5.6	20.3	38.1	18.2	9.7	5.2	0.9	5.19
	대졸이상	(400)		0.3	4.3	15.8	32.6	22.4	14.4	7.6	2.5	5.59
직업	일반회사원	(334)		0.6	4.8	19.4	36.3	19.4	9.8	7.9	1.7	5.39
	공무원/공공기관	(112)			3.5	6.5	30.8	29.5	20.1	7.3	2.3	5.87
	개인사업/자영업	(228)	0.4	1.6	5.0	16.9	33.9	19.7	13.2	6.5	2.8	5.43
	농어업	(160)		0.8	5.5	16.8	33.9	19.7	14.7	8.5		5.45
	주부	(116)		2.2	5.5	25.4	33.9	17.2	6.5	9.2		5.15
	학생	(86)		0.8	4.8	18.1	38.1	22.6	15.1	0.7		5.25
	무직	(14)		5.8	25.6	7.3	54.0	7.3				4.3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1.5	10.1	15.9	35.6	16.8	11.3	8.7		5.25
	300만 원대	(238)	0.4	1.0	3.6	20.6	34.0	20.2	14.0	5.6	0.8	5.36
	400만 원대	(287)		1.7	4.1	20.3	36.2	18.7	8.4	8.3	2.3	5.36
	500만원 이상	(335)		0.2	4.4	13.8	34.2	24.1	15.1	6.2	1.8	5.5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0.3	6.1	17.9	35.0	21.7	11.7	6.4	0.9	5.37
	15년-30년미만	(286)	0.3	1.2	3.8	17.2	36.3	23.8	13.0	2.5	2.0	5.36
	30년 이상	(465)		1.4	5.4	17.5	34.1	17.6	12.4	10.3	1.4	5.4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0.4	1.6	4.7	17.7	28.1	24.4	13.6	7.5	1.9	5.48
	면 지역	(311)		0.6	4.6	16.2	32.8	21.8	13.5	8.7	2.0	5.56
	동 지역	(498)		1.0	5.8	18.2	39.6	17.7	11.0	5.9	0.8	5.28
거주지	천안시	(334)			1.2	15.3	43.5	21.3	9.3	6.5	2.9	5.53
	공주시	(53)		2.9	7.4	13.6	34.3	21.1	12.0	8.7		5.34
	보령시	(49)		3.3	7.5	13.7	31.6	21.9	16.0	6.1		5.34
	아산시	(155)			6.1	25.3	30.4	20.0	11.1	7.1		5.26
	서산시	(84)			10.6	22.5	29.3	16.2	10.7	8.2	2.4	5.28
	논산시	(57)			5.7	25.0	31.5	18.0	9.9	8.6	1.4	5.33
	계룡시	(22)		9.5	6.8	16.4	18.5	21.1	21.7	6.1		5.24
	당진시	(81)	1.1	2.3	8.6	18.8	26.0	16.7	19.2	7.3		5.29
	금산군	(25)		4.7	4.7	9.7	46.3	9.1	17.2	8.3		5.35
	부여군	(31)		1.9	9.3	15.1	33.0	12.9	20.2	5.6	1.9	5.38
	서천군	(25)			2.0	15.8	32.7	30.8	14.4	4.4		5.53
	청양군	(19)			9.5	16.5	26.7	16.3	21.6	9.5		5.52
	홍성군	(48)		1.7	4.8	6.1	42.4	32.6	7.8	2.9	1.7	5.43
	예산군	(37)		1.7	6.8	16.4	22.9	25.7	13.9	10.9	1.7	5.58
	태안군	(30)		1.7	5.2	14.3	30.8	21.6	16.5	9.8		5.54

[표 161] 기관 및 단체 참여도 (1)정당 등 정치단체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79.4	14.9	4.8	0.9	1.27
성별	남 성	(553)	80.1	15.1	4.0	0.8	1.25
	여 성	(497)	78.6	14.7	5.7	1.0	1.29
연령	20대 이하	(177)	88.5	11.5			1.12
	30대	(208)	84.4	13.2	2.1	0.3	1.18
	40대	(239)	74.8	19.4	5.2	0.6	1.32
	50대	(246)	75.9	14.2	9.3	0.6	1.35
	60대 이상	(180)	75.6	15.3	6.1	3.0	1.37
학력	중졸이하	(174)	76.5	16.7	4.4	2.4	1.33
	고졸	(477)	80.9	14.3	4.3	0.5	1.24
	대졸이상	(400)	78.9	14.9	5.6	0.7	1.28
직업	일반 회사원	(334)	82.6	14.3	2.9	0.2	1.21
	공무원/공공기관	(112)	77.1	18.3	2.9	1.7	1.29
	개인사업/자영업	(228)	72.3	17.7	9.0	1.1	1.39
	농어업	(160)	73.5	19.4	4.6	2.5	1.36
	주부	(116)	85.2	6.3	8.5		1.23
	학생	(86)	88.7	11.3			1.11
	무직	(14)	100.0				1.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76.7	16.8	4.6	1.9	1.32
	300만 원대	(238)	79.7	15.8	4.0	0.5	1.25
	400만 원대	(287)	79.9	15.3	4.1	0.7	1.26
	500만원 이상	(335)	80.2	12.9	6.1	0.8	1.2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77.8	19.3	2.8	0.2	1.25
	15년-30년미만	(286)	81.1	14.9	3.1	0.9	1.24
	30년 이상	(465)	79.4	12.1	7.2	1.3	1.30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78.3	15.3	5.3	1.1	1.29
	면 지역	(311)	75.6	16.8	5.8	1.8	1.34
	동 지역	(498)	82.3	13.6	4.0	0.2	1.22
거주지	천안시	(334)	80.5	13.5	6.0		1.25
	공주시	(53)	85.4	11.7	1.5	1.4	1.19
	보령시	(49)	87.3	10.9		1.7	1.16
	아산시	(155)	72.9	24.5	2.6		1.30
	서산시	(84)	71.9	26.9	1.2		1.29
	논산시	(57)	78.8	17.0	4.2		1.25
	계룡시	(22)	79.8	18.6		1.5	1.23
	당진시	(81)	82.0	13.2	4.8		1.23
	금산군	(25)	86.3	7.7	2.0	4.0	1.24
	부여군	(31)	82.4	4.1	9.4	4.1	1.35
	서천군	(25)	82.0	4.0	9.7	4.3	1.36
	청양군	(19)	78.1	4.4	14.4	3.2	1.43
	홍성군	(48)	75.0	9.4	14.1	1.5	1.42
	예산군	(37)	82.4	6.8	6.9	3.9	1.32
	태안군	(30)	85.5	9.0	1.7	3.8	1.24

[표 162] 기관 및 단체 참여도 (2)종교단체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51.3	16.0	29.4	3.3	1.85
성별	남 성	(553)	54.8	15.7	26.2	3.3	1.78
	여 성	(497)	47.3	16.4	32.9	3.4	1.92
연령	20대 이하	(177)	55.8	17.3	26.9		1.71
	30대	(208)	59.7	9.7	27.3	3.3	1.74
	40대	(239)	51.0	16.4	27.4	5.2	1.87
	50대	(246)	45.6	18.6	33.5	2.3	1.93
	60대 이상	(180)	45.2	18.0	31.3	5.5	1.97
학력	중졸이하	(174)	44.5	19.7	33.0	2.8	1.94
	고졸	(477)	54.5	16.4	25.4	3.6	1.78
	대졸이상	(400)	50.3	13.9	32.6	3.2	1.89
직업	일반회사원	(334)	57.6	13.8	27.4	1.2	1.72
	공무원/공공기관	(112)	45.2	14.0	36.4	4.4	2.00
	개인사업/자영업	(228)	51.7	14.3	28.0	6.0	1.88
	농어업	(160)	39.7	23.8	33.9	2.7	2.00
	주부	(116)	47.3	14.2	31.4	7.1	1.98
	학생	(86)	57.6	18.2	24.2		1.67
	무직	(14)	70.3	23.9	5.8		1.3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48.7	16.4	30.0	4.9	1.91
	300만 원대	(238)	48.5	22.0	27.8	1.8	1.83
	400만 원대	(287)	52.8	16.4	27.6	3.1	1.81
	500만원 이상	(335)	53.5	11.1	31.7	3.7	1.86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47.8	20.6	28.9	2.7	1.86
	15년~30년미만	(286)	53.8	14.9	30.4	0.9	1.78
	30년 이상	(465)	51.9	13.8	29.1	5.3	1.88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44.1	17.7	32.4	5.7	2.00
	면 지역	(311)	43.0	22.0	32.6	2.3	1.94
	동 지역	(498)	59.9	11.4	25.9	2.8	1.72
거주지	천안시	(334)	56.4	10.0	28.8	4.7	1.82
	공주시	(53)	64.5	16.4	19.1		1.55
	보령시	(49)	39.3	21.8	37.3	1.5	2.01
	아산시	(155)	48.6	18.2	31.5	1.8	1.86
	서산시	(84)	43.5	16.3	33.0	7.1	2.04
	논산시	(57)	48.2	19.7	27.6	4.4	1.88
	계룡시	(22)	44.2	34.8	20.9		1.77
	당진시	(81)	55.0	17.3	25.2	2.5	1.75
	금산군	(25)	35.4	27.2	37.4		2.02
	부여군	(31)	40.3	20.9	36.9	1.8	2.00
	서천군	(25)	47.7	19.0	33.4		1.86
	청양군	(19)	30.4	23.7	42.8	3.2	2.19
	홍성군	(48)	66.0	10.9	18.6	4.5	1.62
	예산군	(37)	50.8	15.8	29.9	3.4	1.86
	태안군	(30)	44.6	22.5	31.2	1.7	1.90

[표 163] 기관 및 단체 참여도 (3)시민단체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79.7	14.9	4.8	0.2	1.27
성별	남 성	(553)	79.5	14.8	5.0		1.28
	여 성	(497)	79.9	15.0	4.7	0.4	1.26
연령	20대 이하	(177)	85.8	10.3	4.0		1.18
	30대	(208)	78.8	15.4	3.0	0.9	1.32
	40대	(239)	76.8	15.8	7.4		1.31
	50대	(246)	78.6	16.3	5.1		1.26
	60대 이상	(180)	80.0	15.9	4.1		1.24
학력	중졸이하	(174)	77.2	17.9	4.8		1.28
	고졸	(477)	82.7	12.5	4.0	0.4	1.23
	대졸이상	(400)	77.0	16.5	5.9		1.30
직업	일반회사원	(334)	81.5	12.6	5.3		1.26
	공무원/공공기관	(112)	71.1	20.9	6.2		1.40
	개인사업/자영업	(228)	77.1	16.4	5.7	0.9	1.30
	농어업	(160)	78.1	19.7	2.2		1.24
	주부	(116)	82.9	12.2	4.9		1.22
	학생	(86)	85.7	9.7	4.6		1.19
	무직	(14)	100.0				1.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82.7	15.8	1.5		1.19
	300만 원대	(238)	75.2	18.8	6.0		1.31
	400만 원대	(287)	80.2	13.0	5.4	0.7	1.29
	500만원 이상	(335)	80.6	13.4	5.4		1.27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74.2	19.0	4.8	0.7	1.36
	15년-30년미만	(286)	83.2	11.9	4.9		1.22
	30년 이상	(465)	81.0	14.2	4.8		1.2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82.8	14.1	3.1		1.20
	면 지역	(311)	74.9	21.7	3.5		1.29
	동 지역	(498)	81.1	11.1	6.6	0.4	1.29
거주지	천안시	(334)	81.2	12.3	4.7	0.6	1.28
	공주시	(53)	79.4	17.6	3.0		1.24
	보령시	(49)	81.1	15.7	3.2		1.22
	아산시	(155)	84.2	8.8	6.9		1.23
	서산시	(84)	63.4	26.0	10.6		1.47
	논산시	(57)	80.1	12.9	7.0		1.27
	계룡시	(22)	68.0	32.0			1.32
	당진시	(81)	77.6	16.5	5.9		1.28
	금산군	(25)	86.6	13.4			1.13
	부여군	(31)	77.1	19.2	3.8		1.27
	서천군	(25)	89.6	8.4	2.0		1.12
	청양군	(19)	72.3	25.1	2.6		1.30
	홍성군	(48)	78.2	20.2	1.6		1.23
	예산군	(37)	88.0	12.0			1.12
	태안군	(30)	81.3	16.8	1.9		1.21

[표 164] 기관 및 단체 참여도 (4)문화단체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66.8	20.4	10.8	2.0	1.48
성별	남 성	(553)	66.0	19.8	12.7	1.5	1.50
	여 성	(497)	67.7	21.0	8.8	2.5	1.46
연령	20대 이하	(177)	72.2	15.8	9.8	2.3	1.42
	30대	(208)	66.9	20.6	10.3	2.2	1.48
	40대	(239)	64.8	21.8	12.0	1.3	1.50
	50대	(246)	61.2	21.0	14.1	3.7	1.60
	60대 이상	(180)	71.7	21.9	6.3		1.35
학력	중졸이하	(174)	65.9	23.6	8.1	2.3	1.47
	고졸	(477)	73.0	18.3	7.1	1.5	1.37
	대졸이상	(400)	59.8	21.4	16.4	2.4	1.61
직업	일반회직원	(334)	67.8	16.5	13.7	2.0	1.50
	공무원/공공기관	(112)	50.0	27.2	19.4	3.5	1.76
	개인사업/자영업	(228)	64.2	23.4	9.7	2.8	1.51
	농어업	(160)	68.6	24.3	7.2		1.39
	주부	(116)	73.6	20.4	6.0		1.32
	학생	(86)	76.6	12.2	6.6	4.7	1.39
	무직	(14)	84.9	15.1			1.1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77.2	16.8	5.9		1.29
	300만 원대	(238)	64.4	26.3	9.0	0.3	1.45
	400만 원대	(287)	63.6	22.0	13.5	0.8	1.52
	500만원 이상	(335)	65.3	16.8	12.6	5.3	1.58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66.0	21.7	10.1	2.2	1.48
	15년~30년미만	(286)	67.8	19.6	11.2	1.4	1.46
	30년 이상	(465)	66.7	20.0	11.1	2.2	1.49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65.2	20.3	12.9	1.5	1.51
	면 지역	(311)	62.2	26.7	10.8	0.2	1.49
	동 지역	(498)	70.4	16.4	9.8	3.3	1.46
거주지	천안시	(334)	73.5	11.7	10.0	4.7	1.46
	공주시	(53)	76.2	17.8	6.0		1.30
	보령시	(49)	63.9	26.7	9.4		1.46
	아산시	(155)	67.9	20.1	11.2	0.8	1.45
	서산시	(84)	56.6	29.2	14.2		1.58
	논산시	(57)	66.6	27.4	4.4	1.6	1.41
	계룡시	(22)	50.5	42.7	4.5	2.3	1.59
	당진시	(81)	68.0	17.6	13.2	1.2	1.48
	금산군	(25)	63.7	24.0	12.3		1.49
	부여군	(31)	62.2	23.0	14.8		1.53
	서천군	(25)	53.0	36.0	11.0		1.58
	청양군	(19)	60.0	22.1	17.9		1.58
	홍성군	(48)	59.7	23.3	15.4	1.6	1.59
	예산군	(37)	59.7	29.8	10.5		1.51
	태안군	(30)	55.2	29.6	13.0	2.2	1.62

[표 165] 기관 및 단체 참여도 (5)친목단체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23.8	30.1	39.3	6.8	2.29
성별	남 성	(553)	22.4	30.8	39.8	6.9	2.31
	여 성	(497)	25.3	29.3	38.7	6.6	2.27
연령	20대 이하	(177)	56.4	24.7	18.8		1.62
	30대	(208)	25.8	27.9	42.5	3.8	2.24
	40대	(239)	17.0	32.0	44.4	6.6	2.41
	50대	(246)	11.7	35.1	44.8	8.4	2.50
	60대 이상	(180)	14.8	28.6	41.6	15.0	2.57
학력	중졸이하	(174)	18.7	33.3	38.2	9.9	2.39
	고졸	(477)	27.9	31.4	34.1	6.5	2.19
	대졸이상	(400)	21.1	27.2	46.0	5.7	2.36
직업	일반 회사원	(334)	27.4	29.5	39.7	3.5	2.19
	공무원/공공기관	(112)	15.0	26.2	48.2	10.7	2.55
	개인사업/자영업	(228)	19.9	30.3	41.1	8.7	2.39
	농어업	(160)	10.9	35.5	42.2	11.3	2.54
	주부	(116)	19.8	29.5	42.2	8.4	2.39
	학생	(86)	59.4	23.8	16.8		1.57
	무직	(14)	36.3	53.3	10.4		1.7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30.4	29.6	30.3	9.6	2.19
	300만 원대	(238)	22.9	32.3	41.4	3.5	2.26
	400만 원대	(287)	22.3	29.7	42.1	5.9	2.32
	500만원 이상	(335)	21.9	29.2	40.6	8.3	2.3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9.8	28.3	49.2	2.8	2.35
	15년~30년미만	(286)	40.1	24.2	32.9	2.8	1.98
	30년 이상	(465)	16.4	34.9	36.9	11.8	2.44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16.6	31.0	46.7	5.7	2.42
	면 지역	(311)	18.6	33.5	39.5	8.4	2.38
	동 지역	(498)	30.5	27.5	35.7	6.3	2.18
거주지	천안시	(334)	29.9	29.9	31.8	8.3	2.19
	공주시	(53)	27.5	19.0	47.9	5.6	2.32
	보령시	(49)	19.2	28.7	48.9	3.2	2.36
	아산시	(155)	21.5	23.4	50.7	4.4	2.38
	서산시	(84)	18.9	25.6	44.8	10.6	2.47
	논산시	(57)	19.6	37.5	37.1	5.8	2.29
	계룡시	(22)	17.6	24.8	53.8	3.8	2.44
	당진시	(81)	22.2	38.1	33.6	6.0	2.23
	금산군	(25)	21.4	30.9	41.4	6.4	2.33
	부여군	(31)	30.6	23.9	36.6	8.8	2.24
	서천군	(25)	11.3	58.1	28.3	2.3	2.22
	청양군	(19)	21.4	21.9	47.7	8.9	2.44
	홍성군	(48)	17.1	43.9	34.1	4.9	2.27
	예산군	(37)	20.0	35.8	38.9	5.2	2.29
	태안군	(30)	21.0	27.6	41.0	10.4	2.41

[표 166] 기관 및 단체 참여도 (6)행정기관

		(사례수)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 (점)
전체		(1050)	75.2	18.0	6.7	1.31
성별	남 성	(553)	72.4	18.2	9.4	1.37
	여 성	(497)	78.3	17.9	3.8	1.25
연령	20대 이하	(177)	84.6	14.3	1.1	1.17
	30대	(208)	79.1	15.9	5.1	1.26
	40대	(239)	73.6	20.5	5.9	1.32
	50대	(246)	72.4	17.3	10.3	1.38
	60대 이상	(180)	67.7	21.9	10.4	1.43
학력	중졸이하	(174)	69.7	23.1	7.2	1.37
	고졸	(477)	77.6	15.5	7.0	1.29
	대졸이상	(400)	74.8	18.9	6.2	1.31
직업	일반회사원	(334)	82.7	15.3	2.0	1.19
	공무원/공공기관	(112)	54.6	26.7	18.7	1.64
	개인사업/자영업	(228)	74.3	17.1	8.5	1.34
	농어업	(160)	65.0	23.9	11.1	1.46
	주부	(116)	82.3	14.5	3.2	1.21
	학생	(86)	81.6	16.2	2.3	1.21
	무직	(14)	97.6	2.4		1.0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75.5	17.0	7.5	1.32
	300만 원대	(238)	70.3	25.2	4.5	1.34
	400만 원대	(287)	76.9	15.8	7.3	1.30
	500만원 이상	(335)	77.1	15.5	7.4	1.30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76.2	19.5	4.3	1.28
	15년-30년미만	(286)	78.3	16.0	5.6	1.27
	30년 이상	(465)	72.7	18.4	8.9	1.3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73.4	19.5	7.2	1.34
	면 지역	(311)	70.3	20.8	8.9	1.39
	동 지역	(498)	79.2	15.7	5.1	1.26
거주지	천안시	(334)	80.0	11.9	8.2	1.28
	공주시	(53)	83.8	8.9	7.2	1.23
	보령시	(49)	66.0	32.6	1.5	1.35
	아산시	(155)	75.6	17.3	7.1	1.31
	서산시	(84)	68.5	29.2	2.3	1.34
	논산시	(57)	73.9	20.3	5.8	1.32
	계룡시	(22)	74.4	23.3	2.3	1.28
	당진시	(81)	72.7	21.3	6.0	1.33
	금산군	(25)	73.7	22.3	4.0	1.30
	부여군	(31)	65.3	25.3	9.4	1.44
	서천군	(25)	77.0	17.6	5.3	1.28
	청양군	(19)	64.4	23.5	12.1	1.48
	홍성군	(48)	73.7	15.1	11.1	1.37
	예산군	(37)	71.5	22.7	5.8	1.34
	태안군	(30)	72.8	19.8	7.4	1.35

[표 167] 사회참여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사례수)	시민의식 향상	지방 자치제도 활성화	법제도 개선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관련사업 지원강화	선거제도 개선
전체		(1050)	21.2	24.0	21.7	10.6	12.9	9.7
성별	남 성	(553)	20.4	24.6	24.1	11.7	10.6	8.6
	여 성	(497)	22.1	23.3	19.0	9.4	15.3	10.9
연령	20대 이하	(177)	24.4	27.0	11.2	12.9	12.6	11.9
	30대	(208)	20.6	26.4	14.2	13.0	13.5	12.3
	40대	(239)	21.4	23.7	23.0	10.2	12.6	9.1
	50대	(246)	19.6	22.8	25.2	10.4	13.9	8.1
	60대 이상	(180)	20.8	20.0	34.0	6.4	11.4	7.4
학력	중졸이하	(174)	19.9	19.3	31.9	7.0	13.9	8.1
	고졸	(477)	24.5	25.8	20.7	9.3	11.6	8.1
	대졸이상	(400)	17.8	23.8	18.5	13.6	14.0	12.3
직업	일반회사원	(334)	22.6	25.3	18.7	10.0	11.9	11.6
	공무원/공공기관	(112)	17.3	23.0	23.5	14.1	13.4	8.7
	개인사업/자영업	(228)	21.6	23.0	20.6	10.8	12.3	11.8
	농어업	(160)	17.3	20.4	34.0	10.7	13.3	4.3
	주부	(116)	22.6	23.7	21.9	7.7	16.7	7.5
	학생	(86)	25.9	31.8	10.3	11.0	11.5	9.5
	무직	(14)	18.7	10.9	23.5	14.2	14.6	18.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24.3	19.5	29.4	6.3	13.7	6.8
	300만 원대	(238)	20.3	28.0	22.0	10.5	9.7	9.5
	400만 원대	(287)	17.5	26.6	17.6	13.2	13.7	11.4
	500만원 이상	(335)	23.3	21.4	20.6	10.8	13.9	9.9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16.3	28.5	15.0	16.6	13.5	10.1
	15년~30년미만	(286)	27.6	24.1	18.2	7.7	12.8	9.6
	30년 이상	(465)	20.5	20.9	28.2	8.5	12.5	9.5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3.5	20.8	23.9	11.0	10.5	10.3
	면 지역	(311)	19.5	25.8	23.5	10.2	11.4	9.6
	동 지역	(498)	21.2	24.3	19.5	10.6	14.9	9.5
거주지	천안시	(334)	22.4	24.7	19.4	11.7	15.3	6.5
	공주시	(53)	25.3	27.0	20.6	7.5	12.1	7.5
	보령시	(49)	13.3	23.2	28.3	4.6	18.5	12.0
	아산시	(155)	26.2	17.1	19.2	12.2	12.2	13.2
	서산시	(84)	16.6	25.9	23.4	10.5	11.8	11.9
	논산시	(57)	18.6	23.8	31.6	5.8	11.6	8.5
	계룡시	(22)	7.3	28.5	31.4	7.3	15.6	10.0
	당진시	(81)	21.1	25.3	16.7	9.6	15.4	11.9
	금산군	(25)	25.4	30.0	24.6	11.1	2.0	7.0
	부여군	(31)	25.3	28.8	16.1	14.2	10.2	5.5
	서천군	(25)	20.4	25.0	25.6	10.7	2.0	16.4
	청양군	(19)	23.5	13.9	29.6	10.2	11.6	11.2
	홍성군	(48)	21.9	21.8	26.5	11.1	4.9	13.8
	예산군	(37)	18.9	26.9	22.1	12.9	12.3	6.9
	태안군	(30)	10.0	29.8	21.2	11.5	13.5	14.0

[표 168]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사례수)	지방 자치단체 역할강화	중앙정부 역할강화	지역 공동체 역할강화	복지예산 확대	법제도적 보완	기타
전체		(1050)	26.4	24.3	16.6	16.2	16.5	0.1
성별	남 성	(553)	26.0	25.5	13.7	17.6	17.3	
	여 성	(497)	26.9	22.9	19.9	14.6	15.6	0.1
연령	20대 이하	(177)	32.5	13.5	21.5	17.8	14.3	0.4
	30대	(208)	25.9	21.4	20.5	19.3	12.9	
	40대	(239)	27.6	24.7	17.1	16.1	14.5	
	50대	(246)	24.8	27.3	14.2	14.4	19.3	
	60대 이상	(180)	21.5	33.4	9.9	13.6	21.5	
학력	중졸이하	(174)	25.4	27.9	10.4	13.8	22.4	
	고졸	(477)	25.8	26.9	16.0	14.6	16.6	0.1
	대졸이상	(400)	27.5	19.6	20.0	19.1	13.8	
직업	일반회사원	(334)	27.3	21.7	19.2	18.7	13.2	
	공무원/공공기관	(112)	27.4	24.0	16.8	17.0	14.9	
	개인사업/자영업	(228)	24.3	30.8	13.5	15.5	15.9	
	농어업	(160)	23.9	28.2	13.8	12.7	21.4	
	주부	(116)	23.1	22.6	17.1	16.5	20.8	
	학생	(86)	36.3	16.0	17.8	14.3	14.8	0.8
	무직	(14)	25.3		25.5	12.9	36.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대 이하	(190)	28.6	23.8	14.1	15.7	17.4	0.4
	300만 원대	(238)	24.0	28.9	13.2	17.0	16.9	
	400만 원대	(287)	24.1	23.8	16.3	19.2	16.6	
	500만원 이상	(335)	28.8	21.6	20.7	13.3	15.5	
거주 기간	15년 미만	(299)	27.4	23.0	19.1	16.8	13.4	0.2
	15년-30년미만	(286)	27.8	19.5	19.3	18.8	14.6	
	30년 이상	(465)	24.9	28.0	13.4	14.2	19.6	
거주지 형태	읍 지역	(241)	22.1	23.3	19.1	17.0	18.4	
	면 지역	(311)	28.6	25.9	13.0	14.8	17.7	
	동 지역	(498)	27.1	23.7	17.6	16.7	14.8	0.1
거주지	천안시	(334)	34.1	18.8	18.2	13.0	15.8	
	공주시	(53)	28.4	21.6	17.7	13.8	18.5	
	보령시	(49)	30.9	26.9	8.9	19.2	14.2	
	아산시	(155)	26.1	28.7	14.8	18.3	12.1	
	서산시	(84)	25.6	23.6	10.7	19.9	20.1	
	논산시	(57)	13.0	28.2	18.3	27.7	12.8	
	계룡시	(22)	20.5	26.5	16.4	14.4	19.2	3.0
	당진시	(81)	22.6	27.5	20.3	12.8	16.7	
	금산군	(25)	10.0	36.9	9.1	24.3	19.7	
	부여군	(31)	21.4	20.6	19.7	17.8	20.6	
	서천군	(25)	16.4	37.3	11.3	20.0	15.0	
	청양군	(19)	18.6	23.9	16.5	11.6	29.5	
	홍성군	(48)	25.2	19.9	23.5	18.5	12.9	
	예산군	(37)	15.6	27.5	16.5	16.5	23.9	
	태안군	(30)	20.7	31.4	17.9	6.6	23.3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연 구 진 ·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 김병준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 이홍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 구 진 ·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 구 진 · 신혜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목소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20-14 ·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글쓴이·박경철, 성태규, 고승희, 김용현, 김진영, 윤향희
전지훈, 김병준, 이홍택, 장창석, 신혜지, 목소리
발행자·윤 황 / 발행처·충남연구원

인쇄·2020년 12월 31일 / 발행·2020년 12월 31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041-840-1206(사회통합연구실)

전화·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99(대표)

ISBN·978-89-6124-550-0-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